

2022

공공기관 현황편람

2022. 11.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 공공기관 현황편람

2022. 11.

기 획 재 정 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발간사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기반은 1990년대 이후 주요국 대비 급속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는 2019년 말부터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코로나19의 영향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성장 둔화와 물가 상승이라는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재정 중심 대응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국가 채무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공공기관은 급증한 인력 대비 수익성과 부채 규모가 꾸준히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공공부문의 비대화 및 비효율성이 또 다른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경제·사회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정비전으로 설정하고 6대 국정목표 아래 11대 국정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공공부문의 비대화와 비효율성 개선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하고 공공기관 효율화 및 재무건전성 확보와 함께 공공기관의 자율·책임 경영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기관 역량 강화에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2022년 1월 기준 350개의 기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전기, 가스, 도로·공항·항만, 금융, 의료·사회복지서비스, 4대 보험, 안전관련 공적검사, R&D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우리 사회의 경제·사회적 기반 구축부터 국민 개개인의 일상생활 전반에 밀접하게 자리 잡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공공기관이 본연의 고유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사업수행을 통한 성과가 무엇인지, 그 과정에서 방만함은 없는지 등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 관심과 모니터링이 매우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공공기관의 실질적 주인인 국민에게 공공기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꾸준히 제공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동시에 국민에 의한 일상적 감시가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06년부터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www.alio.go.kr)’을 통해 개별 기관의 경영정보를 상세히 제공하는 한편 2019년부터는 ‘공공기관 혁신 포털(ALIOPUS+, www.alioplus.go.kr)’을 개통하여 국민이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각종 고유 사업, 서비스 및 시설물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현황편람』은 알리오시스템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주요정보를 국민이 보다 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2012년부터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가 공동으로 발간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본 책자를 통해 공공기관 일반현황과 최근 시행된 주요 공공기관 관리 정책을 소개함으로써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제고하는 한편, 알리오시스템을 통해 공개되는 다양한 경영정보 중 국민의 관심이 높고 경영관리적 측면에서 유의미한 주요 정보(인력·손익·재무현황, 보수수준 및 외부평가결과)를 분석하여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국민에 의한 공공기관 모니터링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일반 국민의 공공기관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분석 및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매년 공공기관 현황편람을 발간하고 지속적으로 내용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본 책자를 통하여 일반국민의 공공기관 주요 정보로의 접근 용이성과 경영정보의 비교 가능성을 보다 제고하고 더 나아가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확대시켜 공공기관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본 책자가 향후 공공기관 관리정책과 연구의 기초자료로써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목 차

I 2022년 공공기관 지정 현황

1.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구분 제도	17
가. 공공기관의 지정	17
나. 공공기관의 유형 구분	18
다. 공공기관의 지정 절차	24
2. 2022년 공공기관 지정 현황	24
가. 2022년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구분 결과	24
나. 전년 대비 주요 변동내역	32

II 공공기관 관리정책 주요 동향

1. 공공기관 윤리경영 강화	37
가. 제4차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37
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	41
다. 공공기관 윤리경영 표준모델	42
2.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	50
가.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50
나. 재무위험기관 선정결과	66
3.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77
가.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운영	77

Ⅲ 2022년 공공기관의 주요 경영정보

1. 일반현황	97
가.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분포	97
나. 공공기관 설립형태	100
다. 공공기관 자회사 현황	113
라. 공공기관의 지역별 분포 및 지역발전계획 주요 내용	115
2. 인력현황	128
가. 임직원 수 현황	128
나. 신규채용 현황	135
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현황	142
라. 비정규직 현황 및 정규직 전환 실적	145
3. 재무현황	150
가. 총평	150
나. 부채 현황	153
다. 자산 현황	163
4. 손익현황	168
5. 보수수준	174
가. 직원 평균보수 수준	174
나. 상임임원 연봉 수준	178
다. 복리후생비 수준	185
6. 외부 평가결과	191
가. 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191
나.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217
다.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	244
라.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270

참고문헌	291
〈부록 1〉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현황	299
〈부록 2〉 공공기관 일반현황	305
〈부록 3〉 「국가재정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 현황	371
〈부록 4〉 2021년도 기관 경영실적 평가지표체계	379

표 차례

- <표 I-1> 공공기관 유형 구분 요건 19
- <표 I-2> 「공운법」상 공공기관 유형구분 기준 20
- <표 I-3> 2022년 공공기관(350개, 2022. 1월 기준) 26
- <표 I-4> 2022년 공공기관 유형별 기관 현황(2022. 1월 기준) 30
- <표 I-5> 2022년 연구개발목적기관(75개) 30
- <표 I-6> 공공기관 부설기관(분원) 현황(20개 기관, 2022년 4월말 기준) 31
- <표 I-7> 공공기관 유형별 기관수 변동(2022. 1월 기준) 32
- <표 I-8> 2022년 공공기관 지정 변동 내역(2022. 1월 기준) 33
- <표 I-9> 2022년 신규 지정 공공기관 34

- <표 II-1> 제4차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39
- <표 II-2> 수사의뢰 및 징계 대상자 현황 40
- <표 II-3>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안
(명예퇴직수당 지급 및 성과평가 제한 관련) 41
- <표 II-4> 2019년~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지수 44
- <표 II-5> 윤리경영 표준모델 활용 추진일정 48
- <표 II-6>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및 제출 근거법령 50
- <표 II-7> 2021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 52
- <표 II-8>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 변동내역 52
- <표 II-9> 공공기관 부채규모 및 부채비율 현황 54
- <표 II-10>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 공공기관의 자산 전망 55
- <표 II-11> 총 부채 및 부채비율 전망치 비교 56
- <표 II-12>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 공공기관의 부채·부채비율 전망 57
- <표 II-13> 금융부채 전망치 비교 57
- <표 II-14> 당기순이익 및 이자보상배율 전망 58
- <표 II-15>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 대상 공공기관의 재무 전망(2021~2025년) .. 58

<표 II-16> 정부 총지출 대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 현황(2016~2022년) ……	67
<표 II-17> 2022년도 공공기관 재무상황평가 대상기관 현황(27개) ……	68
<표 II-18> 한국전력공사·6개 발전자회사 주요 재무지표(연결기준) 추이 (2018~2022년) ……	70
<표 II-19>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가스공사, 대한석탄공사 재무현황추이(2017~2021년) ……	71
<표 II-20> 2022년 재무위험기관 선정결과 주요내용 ……	72
<표 II-21> 2021~2026년 재정건전화계획을 통한 부채감축 및 자본확충 규모 ……	74
<표 II-22>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 조치 단계 ……	76
<표 II-23> 위험요소별 개별 안전평가 적용방법 ……	80
<표 II-24> 안전경영책임보고서 구성항목 ……	81
<표 II-25> 2021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대상 선정 기준 ……	81
<표 II-26> 2021년도 안전관리등급 심사대상기관(99개) ……	82
<표 II-27> 2021년도 보유 위험요소별 심사대상 기관(99개) ……	83
<표 II-28> 심사범주별 주요 평가내용 ……	84
<표 II-29> 위험요소 및 우선순위별 가중치표 ……	85
<표 II-30> 심사지표 총괄표 ……	85
<표 II-31> 2020~2021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등급 분포 ……	87
<표 II-32> 2021년도 공공기관 유형별 안전관리 종합등급의 전년 대비 변동내역 ·	88
<표 II-33> 2021년도 공공기관 위험요소별 종합등급 분포 ……	89
<표 II-34> 2021년도 공공기관 유형별 종합등급 분포 ……	89
<표 II-35> 2021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결과 ……	90
<표 III-1>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분포(2022. 1월 기준) ……	97
<표 III-2> 주무부처별 연구개발목적기관 분포(2022. 1월 기준) ……	99
<표 III-3> 2022년 주무부처별 산하 공공기관 수 변동 내역 ……	100
<표 III-4> 「민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공기관(30개 기관) ……	103
<표 III-5> 「상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공기관(27개 기관) ……	104
<표 III-6> 출자 방식으로 설립된 공공기관(64개 기관) ……	106
<표 III-7> 상장 공공기관 개요 ……	107

<표 III-8> 출자 주체별 보유지분 현황(2021. 12월말 기준) 108

<표 III-9> 출자 방식으로 설립된 공공기관 구분(설립근거법령 기준) 112

<표 III-10> 공공기관 자회사 현황(29개 기관) 114

<표 III-11> 지역별 이전대상 공공기관 분포(2022년 공공기관 기준) 116

<표 III-12> 지역별 공공기관 분포(2022. 4월 기준) 119

<표 III-13> 지역인재 채용비율 121

<표 III-14> 지역인재 의무채용 신규 대상기관 121

<표 III-15> 지역인재 의무채용 신규 대상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 122

<표 III-16> 2021년도 이전 지역별 지역인재 의무채용 실적 123

<표 III-17> 이전 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 주요 수립 항목 125

<표 III-18> 2022년 지역별 발전계획 126

<표 III-19> 2022년 지역별 발전계획 주요 내용 126

<표 III-20> 공공기관 임직원 및 국가행정공무원 현황(2017~2021년) 128

<표 III-21> 공공기관 유형별 임직원 수 현황(2017~2021년) 130

<표 III-22>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임직원 수 현황(2017~2021년) 131

<표 III-23> 2021년 인력증원 100명 이상인 기관 133

<표 III-24> 2021년 인력 감원 기관 134

<표 III-25>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2017~2021년) 136

<표 III-26> 신규 채용 현황(2017~2021년) 136

<표 III-27>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신규 채용 현황(2017~2021년) 137

<표 III-28> 2021년 신규 채용 규모 상위 10개 기관 139

<표 III-29> 2021년 신규 채용 100명 이상 증가한 기관 140

<표 III-30> 사회형평적 채용 규모(2017~2021년) 141

<표 III-31>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추이(2011~2021년) 142

<표 III-32> 청년 신규고용 현황(2016~2021년) 144

<표 III-33> 청년고용의무제 이행기관 현황(2016~2021년) 144

<표 III-34> 공공기관 비정규직 현황(2017~2021년) 145

<표 III-35>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결정 및 전환완료 현황 147

<표 III-36>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결정 및 전환완료 현황 148

<표 III-37> 파견 근로자 정규직 전환결정 및 전환완료 현황 149

<표 III-38> 공공기관의 자산, 부채 및 자본 현황(2017~2021년)	151
<표 III-39> 부채 규모 및 부채비율 현황(2017~2021년)	154
<표 III-40>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부채 현황(2017~2021년)	160
<표 III-41> 2021년도 부채 규모 상위기관 현황	162
<표 III-42> 공공기관 유형별 자산 현황(2017~2021년)	163
<표 III-43>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자산 현황(2017~2021년)	166
<표 III-44> 2021년도 자산 규모 상위기관 현황	167
<표 III-45> 당기순이익 현황(2017~2021년)	169
<표 III-46> 2021년도 당기순이익·순손실 상위기관 현황	171
<표 III-47> 정부 배당수입 추이(2018~2022년)	172
<표 III-48> 39개 정부출자기관의 정부배당 현황	173
<표 III-49> 직원 평균보수 현황(2017~2021년, 정규직 기준)	175
<표 III-50> 상임임원 평균연봉 현황(2017~2021년)	180
<표 III-51> 기관 복리후생비 지원 규모 현황(2017~2021년)	186
<표 III-52> 복리후생비 주요항목 현황(2017~2021년)	189
<표 III-53>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규모(2017~2021년)	190
<표 III-54> 2021년도 경영실적 평가 대상기관(130개)	194
<표 III-55> 2021년도 평가유형별 종합등급 분포	199
<표 III-56> 2021년도 종합등급별 기관 현황	200
<표 III-57> 전년 대비 2021년도 평가등급 변동 요약	204
<표 III-58> 전년 대비 2021년도 평가등급 변동 현황	205
<표 III-59> 2021년도 주무부처별 소관 공공기관 평가등급 분포	206
<표 III-60> 2021년도 주무부처별 소관 공공기관 평가등급 현황	207
<표 III-61> 2021년도 기관 평가결과 현황(공기업 유형)	211
<표 III-62> 2021년도 기관 평가결과 현황(위탁집행형·기금관리형 유형)	212
<표 III-63> 2021년도 기관 평가결과 현황(강소형 유형)	214
<표 III-64> 2021년도 경영실적 평가 성과급 지급률(공기업·준정부기관)	217
<표 III-65> 「공운법」 제13조	218
<표 III-66> PCSI 모델과 PCSI 2.0 모델 비교	220
<표 III-67>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통합조사 경영실적평가 반영안	222

<표 III-68> 2021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대상기관 현황 224

<표 III-69> 2021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대상기관(2022. 4월 기준) 225

<표 III-70> 2021년도 고객만족도 수준 등급별 분포 229

<표 III-71> 2021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요약(수준 등급) 232

<표 III-72> 전년 대비 2021년도 고객만족도 수준 등급 변동 비교 234

<표 III-73> 전년 대비 2021년도 고객만족도 수준 등급 변동 현황 234

<표 III-74> 전년 대비 2021년도 고객만족도 수준 등급 변동 내역 235

<표 III-75> 2021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목표달성도 등급별 분포 238

<표 III-76> 2021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요약(목표달성도) 240

<표 III-77> 2021년도 수준등급과 목표달성도 비교 240

<표 III-78> 전년 대비 2021년도 고객만족도 목표달성도 비교 242

<표 III-79> 전년 대비 2021년도 고객만족도 목표달성도 변동 내역 242

<표 III-80> 2021년도 청렴도 측정 유형별 대상기관 분포 245

<표 III-81> 2021년도 청렴도 측정 대상 공공기관 분포 252

<표 III-82> 2020년 측정대상 공공기관 중 2021년 변동사항이 있는 기관 253

<표 III-83> 2021년도 유형별 청렴도 측정 대상 공공기관 254

<표 III-84> 2021년도 청렴도 측정 대상 유형 변경 현황 256

<표 III-85> 2020년도 및 2021년도 종합청렴도 등급 분포 비교 258

<표 III-86> 2021년도 청렴도 측정 유형별 종합청렴도 등급 현황 259

<표 III-87> 2021년도 종합청렴도 등급 분포 및 전년 대비 등급 개선수준 262

<표 III-88> 2021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등급 현황 264

<표 III-89> 주무부처별 소관 공공기관의 2021년도 종합청렴도 등급 분포 및
전년 대비 개선 수준 266

<표 III-90> 주무부처별 소관 공공기관의 2021년도 종합청렴도 등급 현황 267

<표 III-91> 공공기관 통합공시항목 관련 「공운법」 조항 및 주요 변동내역 271

<표 III-92> 공공기관 통합공시항목 구분(2022. 9월 기준) 273

<표 III-93>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별점 부과 체계 278

<표 III-94> 통합공시 점검 별점에 따른 사후조치 279

<표 III-95> 우수공시기관과 공시향상기관 지정 요건 및 사후조치 280

<표 III-96> 2021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항목 281

<표 Ⅲ-97> 공공기관 통합공시 별점 현황(2014~2021년)	282
<표 Ⅲ-98> 2021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	284
<표 Ⅲ-99> 2021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 별점 분포 현황	286
<표 Ⅲ-100> 주무부처별 소관 공공기관의 2021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 별점 분포 ·	288
<표 Ⅲ-101> 2021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 전년 대비 변동 현황	289

그림 차례

[그림 I-1] 공공기관 지정 추이(2007~2022년)	25
[그림 II-1] 채용실태 조사방식 변경	38
[그림 II-2] 윤리경영 표준모델의 4단계 계층적 구조	47
[그림 II-3] 공공기관 윤리경영시스템 구축 프로세스	47
[그림 II-4] 윤리경영 표준모델 체계도	49
[그림 II-5] 공공기관 부채 규모 및 부채비율 현황	54
[그림 II-6] 부채 규모 및 부채 비율 전망치 비교	56
[그림 II-7] 2021년 재무상황평가 점수 비교 및 재무위험기관의 자산·부채규모 ..	69
[그림 II-8] 2021~2026년 재정건전화계획에 따른 재무위험기관 부채규모 전망	74
[그림 II-9] 2021~2026년 재정건전화계획에 따른 재무위험기관 부채비율 전망	75
[그림 II-10] 2021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체계도	79
[그림 II-11] 2021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절차	80
[그림 III-1] 공공기관 설립형태 분포(설립근거법령 기준)	101
[그림 III-2] 공공기관 임직원 및 국가행정공무원 현황(2017~2021년)	128
[그림 III-3] 사회형평적 채용 추이(2017~2021년)	141
[그림 III-4] 공공기관의 자본 및 부채 규모 추이(2017~2021년)	152
[그림 III-5] 공공기관의 자산, 부채 및 자본 증감액 추이(2018~2021년)	152
[그림 III-6] 부채 규모 추이(2017~2021년)	155
[그림 III-7] 부채 증감 추이(2018~2021년)	155
[그림 III-8] 부채비율 추이(2017~2021년)	156
[그림 III-9] 부채비율 증감 추이(2018~2021년)	157
[그림 III-10] 공공기관 유형별 부채 현황(2017~2021년)	158
[그림 III-11] 공공기관 유형별 부채 증가율 추이(2018~2021년)	158
[그림 III-12] 공공기관 유형별 부채비율 현황(2017~2021년)	159

[그림 III-13]	공공기관 유형별 부채비율 증감 추이(2018~2021년)	159
[그림 III-14]	공공기관 유형별 자산 현황(2017~2021년)	164
[그림 III-15]	공공기관 유형별 자산 증가율 추이(2018~2021년)	165
[그림 III-16]	공공기관 유형별 당기순손익 추이(2017~2021년)	169
[그림 III-17]	직원 평균보수 추이(2017~2021년, 정규직 기준)	176
[그림 III-18]	직원 평균보수 증가율 추이(2018~2021년, 정규직 기준)	177
[그림 III-19]	기관장(상임) 평균연봉 추이(2017~2021년)	182
[그림 III-20]	상임이사 평균연봉 추이(2017~2021년 추이)	182
[그림 III-21]	상임감사 평균연봉 추이(2017~2021년)	183
[그림 III-22]	기관장(상임) 평균연봉 증감률(2018~2021년)	184
[그림 III-23]	상임이사 평균연봉 증감률(2018~2021년)	184
[그림 III-24]	상임감사 평균연봉 증감률(2018~2021년)	185
[그림 III-25]	복리후생비 지원 규모 현황(2017~2021년, 무상지원 기준)	187
[그림 III-26]	복리후생비 지원 규모 증감률 추이(2018~2021년, 무상지원 기준)	188
[그림 III-27]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규모(2017~2021년)	191
[그림 III-28]	전년 대비 2021년도 평가등급별 분포	201
[그림 III-29]	최근 3년 평균 대비 2021년도 평가등급별 분포	201
[그림 III-30]	2021년도 평가유형별 등급 분포	203
[그림 III-31]	평가유형별 전년 대비 평가등급 분포 비교	203
[그림 III-32]	고객만족도 조사 설문개편(2018년)	221
[그림 III-33]	2021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수준 등급 분포	233
[그림 III-34]	202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모형	248
[그림 III-35]	2021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모형	249
[그림 III-36]	2021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모형	251
[그림 III-37]	2021년도 공공기관 유형별 종합청렴도 등급 분포	263
[그림 III-38]	공공기관 통합공시 평균 별점(2014~2021년)	283
[그림 III-39]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현황(2014~2021년)	283
[그림 III-40]	2021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 별점 분포 현황(전체 기관)	287
[그림 III-41]	2021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 별점 분포 현황(유형별)	287

2022 공공기관 현황편람

I

2022년 공공기관 지정 현황

1.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구분 제도
2. 2022년 공공기관 지정 현황

I 2022년 공공기관 지정 현황

1.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구분 제도

가. 공공기관의 지정

- 공공기관이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제4조 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의미함.
 - 「공운법」 제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서 개별기관의 설립근거 및 설립주체, 개별기관에 대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재정지원 형태와 규모 등과 관련한 공공기관의 지정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법 시행령 제2조~제6조 및 <별표1>을 통해 공공기관 지정요건별 산정기준 및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있음.

- 「공운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제6호에 이르는 공공기관 지정요건은 다음과 같음.
 - 제1호에 의한 공공기관: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1회 이상)한 기관
 - 제2호에 의한 공공기관: 정부지원액¹⁾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정부지원액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기관)
 - 제3호에 의한 공공기관: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예산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 제4호에 의한 공공기관: 정부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예산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1) 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

- 제5호에 의한 공공기관: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 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예산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 제6호에 의한 공공기관: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기관이 출연(1회 이상)한 기관
- 그러나 「공운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공공기관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이라 할 지라도 동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은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됨.
- 구성원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대표적인 기관으로 경찰공제회, 군인공제회 등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으로 지방공기업이 이에 해당함.
 -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이에 해당함.
-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기관은 「공운법」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관리의 대상이 됨.
-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공통적으로 동법 제11조의 경영공시, 제12조의 통합공시, 제13조의 고객현장과 고객만족도조사, 제14조의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제15조의 공공기관의 혁신, 제52조의3 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제52조의4 채용비위 행위자 명단 공개, 제52조의5 채용비위 관련자 합격취소 등, 제52조의6 인사감사 등의 적용대상이 됨.
 - 이외에도 「공운법」 보칙 제53조에서 제53조의3에 이르는 규정과 별칙 조항(제55조 및 제56조)을 적용받음.
 -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된 기관은 「공운법」에 따른 공통된 관리·감독대상이 되지 않고 소관 주무부처의 재량적 관리대상이 됨.

나. 공공기관의 유형 구분

- 「공운법」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기관의 규모 및 업무 특성 등을 반영한 맞춤형 지배구조와 관리·감독 수준의 설계를 위해 동법 제5조의 기준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됨.

- 공공기관의 유형에 따라 「공운법」 적용범위가 달라짐.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상기한 공통사항²⁾ 이외에도 이사회, 임원 임명 및 구성, 예산회계, 경영감독 등 「공운법」 제16조에서 제52조의2에 이르는 규정과 보칙 제54조의 적용대상이 됨.
- 공공기관 유형 구분 요건을 살펴보면 <표 I-1>과 <표 I-2>와 같음.
 -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구분 기준과 유형별 세부 유형 구분 요건 등은 「공운법」 제5조와 이에 근거한 시행령 제7조 및 제7조의2에서 구체적으로 정함.

<표 I-1> 공공기관 유형 구분 요건

유형 구분	지정요건
① 공기업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 총수입액이 30억 원 이상, 그리고 자산규모가 10억 원 이상인 공공기관 중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공공기관
	시장형 자산규모가 2조 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85% 이상인 공기업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준시장형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한국도로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② 준정부기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 총수입액이 30억 원 이상, 그리고 자산규모가 10억 원 이상인 공공기관 중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미만(「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의 경우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85% 미만)인 공공기관
	기금관리형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기술보증기금,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등)
	위탁집행형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장학재단 등)
③ 기타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 - 「공운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공공기관 - 「공운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시행령 제7조의2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기관의 성격 및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중 일부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공공기관 현황'과 「공운법」 및 동법 시행령을 참고하여 작성

2) 전체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공운법」 조항은 제3장 공공기관의 경영공시등(제11조~제15조), 제4장의2 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제52조의3~제52조의6), 보칙 제53조~제53조3 및 벌칙 제55조~제56조임

〈표 I-2〉 「공운법」상 공공기관 유형구분 기준

현행 「공운법」(시행 2022. 8. 4.) [법률 제18795호, 2022. 2. 3., 일부개정]	「공운법」 시행령(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32호, 2022. 8. 2., 일부개정]
<p>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기업·준정부기관: 직원 정원, 수입액 및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2. 기타공공기관: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 이외의 기관 <p>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른 법률에 따라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거나 기관 운영의 독립성, 자율성 확보 필요성이 높은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관은 공기업으로 지정하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은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한다.</p> <p>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기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시장형 공기업: 자산규모와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기업 나. 준시장형 공기업: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2. 준정부기관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p>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중 일부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p>	<p>제7조(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지정기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원 정원: 50명 이상 2. 수입액(총수입액을 말한다): 30억 원 이상 3. 자산규모: 10억 원 이상 <p>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50(「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의 경우 100분의 85) 이상인 공공기관을 공기업으로 지정한다.</p> <p>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공기업으로 지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산규모: 2조 원 2.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 100분의 85 <p>제7조의2(기타공공기관의 지정기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른 법률에 따라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또는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나.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또는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별도의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표 I-2〉의 계속

<p>현행 「공운법」(시행 2022. 8. 4.) [법률 제18795호, 2022. 2. 3., 일부개정]</p>	<p>「공운법」 시행령(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32호, 2022. 8. 2., 일부개정]</p>
<p>⑥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자체수입액 및 총수입액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방법 및 제5항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의 종류와 분류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2. 기관 운영의 독립성, 자율성 확보 필요성이 높은 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p> <p>가. 공공기관이 출연 또는 출자하여 설립한 교육기관</p> <p>나. 법무·준사법 업무, 합의·조정 업무나 국제 규범이 적용되는 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p> <p>다. 민간기업과의 경쟁을 고려해 자율경영 필요성이 높은 기관</p> <p>라. 연구개발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p> <p>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과 유사한 기관으로서 기관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의 필요성이 높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p> <p>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으로서 법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기관</p> <p>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기타공공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p> <p>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p> <p>3. 그 밖에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기관</p>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http://www.law.go.kr/법령/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 공공기관은 「공운법」 제5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됨.
- 「공운법」은 동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구분하기 위해 시행령 제7조 제1항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 유형의 기관 규모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공공기관 중 직원 정원 50인, 총수입액 30억 원, 그리고 자산규모 10억 원 이상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을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구분함.
 - 「공운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 이외의 공공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우선 분류됨.
-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공운법」 제5조 제4항의 기준에 따라 세부 유형을 구분함.
- 공기업은 직원 정원 50인, 총수입액 30억 원 및 자산규모 10억 원 이상인 공공기관 중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으로 지정하며 아래 기준에 따라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유형을 세분함.
 - 시장형 공기업: 공기업 중 자산규모가 2조 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85%이상인 기관
 - 준시장형 공기업: 시장형 공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공기업
 -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 50인, 총수입액 30억 원 및 자산규모 10억 원 이상인 공공기관 중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미만인 기관(「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공공기관³⁾의 경우 100분의 85)으로 지정하며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유형을 세분함.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 공공기관 중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 아닌 나머지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함.
- 「공운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직원 정원(50인 이상), 총수입액(30억 원 이상) 및 자산규모(10억 원 이상)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우선 구분됨.
 - 「공운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모 기준(직원 정원, 총수입액, 자산규모)을 충족하는 기관일지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거나 기관 운영의 독립성 및 자율성 확보 필요성이 높은 기관 등은 동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됨.
 - 제5조 제2항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표 I-2>와 같이 동법 시행령 제7조2 제1항 제1호에서 제3호에 규정되어 있음.

3) 「국가재정법」 제5조 및 [별표2]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총 68개로 이 중 36개 기금을 공공기관이 직접 또는 위탁 관리하고 있음(<부록 3> 참고)

- 기타공공기관은 「공운법」 제5조 제5항에 따라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중 일부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음.
- 기타공공기관의 세부유형인 연구개발목적기관을 구분하는 기준은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규정 되어 있음.
- 제1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정부출연기관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제2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과기출연기관법')」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제3호: 그 밖의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기관
- 제3호에 의한 연구개발목적기관은 설립근거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 및 고유업무와 실제 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업무의 비중(예산, 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류함.
- 기획재정부는 연구개발목적기관의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이하 '공공기관 혁신지침')」의 일부 조항에서 연구개발목적기관에 대한 고려사항과 예외적용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지침 제6조 제5항은 연구개발목적기관의 기능조정 계획 수립 및 경영혁신 추진 시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을 반영하도록 함.
 - 지침 제10조 제2항은 연구개발목적기관의 경영혁신 진단 시 기획재정부장관이 주무기관의 장에게 연구기관의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에 대한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경영혁신 진단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 지침 제19조 제2항에서는 고객만족도조사 기본계획 수립 시에 연구개발목적기관의 성격과 업무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지침 제22조 제3항은 공정채용을 위한 채용 면접 시 지원자의 인적사항 정보를 활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연구개발목적기관은 우수 연구인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연구실적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지침 제24조는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의 운영을 제한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연구개발목적기관에서 연수를 목적으로 하는 박사후연구원, 학생연구원 등은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비정규직과 달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지침 제46조 제9항은 복리후생 제도와 관련하여 연구개발목적기관의 국제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해외 우수 연구인력을 유치·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주무기관의 장과 지원 대상 및 조건 등을 협의하여 별도의 주거지원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 공공기관의 지정 절차

- 기획재정부장관은 「공운법」 제6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하여 지정하며, 회계연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음.
 - 「공운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이 신설된 경우, 해당 기관을 신규 지정함.
 -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민영화, 기관의 통합·폐지·분할 또는 관련 법령의 개정·폐지 등에 따라 「공운법」의 적용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지정을 해제하거나 유형을 변경하여 지정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지정하는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이하 '주무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협의한 후,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의 심의·의결을 거침.

2. 2022년 공공기관 지정 현황⁴⁾

가. 2022년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구분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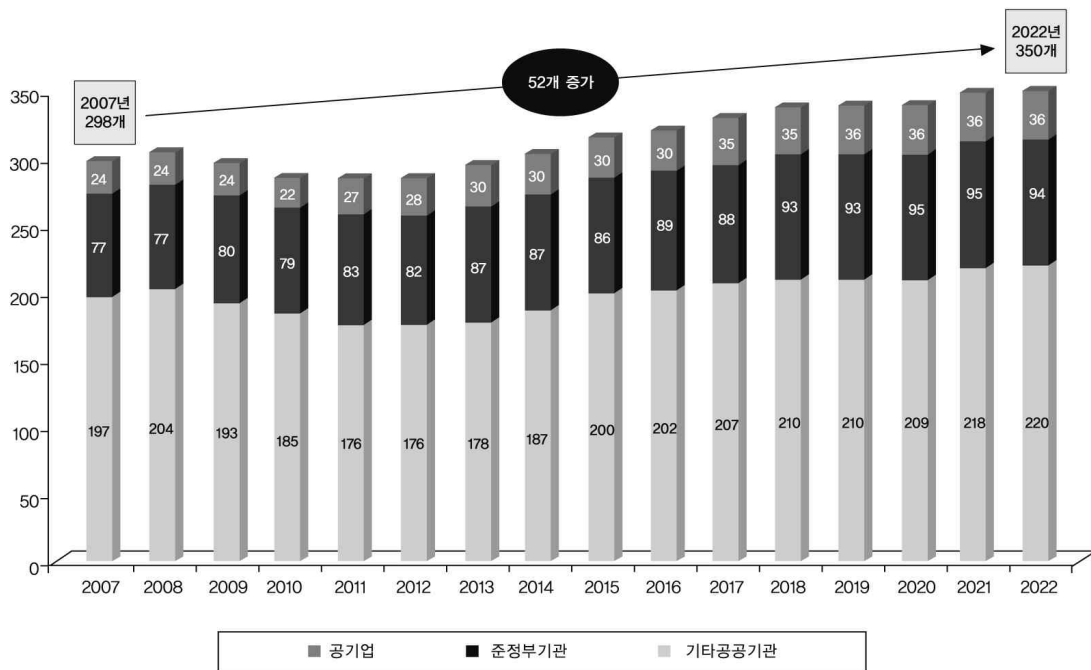
- 2022년 1월 총 350개 기관이 「공운법」상 관리대상인 공공기관으로 지정됨.
 - 2022년 공공기관의 수(350개)는 「공운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최초로 지정된 2007년의 298개보다 52개 기관이 증가한 것임.

4) 기획재정부, 「2022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22. 1. 28., 기획재정부, 「2022년도 공공기관 지정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2022. 1. 28.을 참고하여 작성

- 2007년 최초 지정부터 2022년 1월까지의 공공기관 지정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I-1]과 같음.
- 2022년 공공기관 수는 2021년(349개, 12월 기준) 대비 1개 기관이 증가함.
 - 2021년 1월 지정된 350개 공공기관 중 한국광물자원공사(시장형 공기업)와 한국광해관리공단(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 통합되어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신설 출범함에 따라 2021년 12월 기준 공공기관은 349개로 조정됨.
 - 2022년 공공기관 지정결과, 2021년 공공기관 중 2개 기관이 지정 해제되고 3개 기관⁶⁾이 신규 공공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전년 대비 1개 기관이 증가함.
- 2022년 1월 현재 공공기관(350개)은 <표 I-3>과 같음.

[그림 I-1] 공공기관 지정 추이(2007~2022년)

(단위: 개)



주: 2016년, 2017년 및 2021년은 연중 수시 또는 변경 지정된 공공기관을 반영한 12월말 기준 기관수로 당해연도 1월 지정된 공공기관 수와 다름

자료: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공공기관 현황 편람』, 2021. 11. 및 기획재정부, 「2022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22. 1. 28.을 참고하여 작성

5) 2021년 제16차 공운위 의결(2021. 12. 8.)을 통해 통합 신설기관인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지정함

6) <표 I-7> 참고

〈표 I-3〉 2022년 공공기관(350개, 2022. 1월 기준)

유형구분	기관명
시장형 공기업 (15개)	(산업부) (주)강원랜드,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해수부)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21개)	(기재부) 한국조폐공사 (문체부)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농식품부) 한국마사회 (산업부) (주)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DN, 한전KPS(주)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국토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식회사 에스알,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수부)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해양환경공단 (방통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3개)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문체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산업부) 한국무역보험공사 (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중기부)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금융위)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사처) 공무원연금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81개)	(기재부) 한국재정정보원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과기부)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재)우체국물류지원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문체부)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관광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농식품부)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산업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표 I-3〉의 계속

유형구분	기관명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81개)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고용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여가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토부) 국가철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해수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행안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중기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금융위) 서민금융진흥원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방통위) 시청자미디어재단 (보훈처) 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식약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농진청)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특허청)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타공공기관 (220개)	(기재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교육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과기부) (재)우체국시설관리단,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광주과학기술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기초과학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표 I-3〉의 계속

유형구분	기관명
기타공공기관 (220개)	<p>(통일부)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국방부) 국방전직교육원,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행안부)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문체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세종학당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예술의전당, 재단법인 국악방송,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농식품부) (재)축산환경관리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식진흥원, (산업부)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한전MCS(주),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복지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아동권리보장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재단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 (환경부) 수자원환경산업진흥(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환경보건협회 (고용부)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여가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국토부)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립항공박물관, 새만금개발공사, 재단법인 건설기술교육원, 주택관리공단(주),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항공안전기술원 (해수부)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해양진흥공사 (중기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주)공영홈쇼핑,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p>

〈표 I-3〉의 계속

유형구분	기관명
기타공공기관 (220개)	(국조실) 건축공간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금융위)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공정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보훈처) 88관광개발(주) (식약처)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관세청) (재)국제원산지정보원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문화재청) 한국문화재단 (산림청)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정보원 (기상청) (재)APEC기후센터,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주: 밑줄 표시된 기관(3개)은 2022년 1월 신규 지정된 기관임
 자료: 기획재정부, 「2022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22. 1. 28.

- 2022년 공공기관 유형별 기관 분포(〈표 I-4〉)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공기업은 총 36개 기관으로 이 중 시장형 공기업이 15개 기관이고, 준시장형 공기업이 21개 기관임.
 - 준정부기관은 총 94개 기관으로 이 중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13개 기관이고,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 81개 기관임.
 - 기타공공기관은 220개 기관이며 이 중 연구개발목적기관(〈표 I-5〉)은 75개임.
 - 연구개발목적기관의 62.7%인 47개 기관은 연구회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공운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의 1호7)와 제2호8)에 해당하는 기관임.
 - 이외 28개의 연구개발목적기관은 「공운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의 제3호에 따라 공운위 의결을 거쳐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지정된 부처 직할 연구기관에 해당하며 2022년 신규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도 이에 해당함.

7) 「정부출연기관법」에 따라 설립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24개 정부출연연구기관

8) 「과기출연기관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21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표 I-4〉 2022년 공공기관 유형별 기관 현황(2022. 1월 기준)

(단위: 개, %)

전체 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소계	시장형	준시장형	소계	기금 관리형	위탁 집행형	소계	연구개발 목적기관
350 (100)	36 (10.3)	15 (4.3)	21 (6.0)	94 (26.9)	13 (3.7)	81 (23.1)	220 (62.9)	75 (21.4)

주: () 안은 비중임
 자료: 기획재정부, 「2022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22. 1. 28.

〈표 I-5〉 2022년 연구개발목적기관(75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속기관 (25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속기관 (22개)	부처 직할 연구원 등 기타기관 (28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건축공간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재)APEC기후센터 광주과학기술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기초과학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울산과학기술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국방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주: 1. 연구개발목적기관은 기타공공기관에 해당
 2. 밑줄 표시된 기관(1개)은 2022년에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신규 분류된 기관임
 자료: 기획재정부, 「2022년도 공공기관 지정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2. 1. 28.

- 2022년 지정된 350개 공공기관 중 16개 기관이 알리오시스템을 통해 20개 부설기관에 대한 경영정보를 공시하고 있으며 2022년 4월 기준 공공기관 부설기관 현황⁹⁾을 요약하면, <표 I-6>과 같음.
- 다만, 한국특허정보원의 부설기관인 특허정보진흥센터가 2022년 8월 4일자로 모기관으로부터 분리되어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한국특허기술진흥원으로 신규 출범함에 따라 공공기관 부설기관 수는 19개로 줄어듦.

<표 I-6> 공공기관 부설기관(분원) 현황(20개 기관, 2022년 4월말 기준)

부설기관명	주무부처	모기관인 공공기관	
		기관명	공공기관 유형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육부	서울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기초과학연구원	기타공공기관 (연구개발목적기관)
한국뇌연구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기타공공기관 (연구개발목적기관)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기타공공기관 (연구개발목적기관)
녹색기술센터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기타공공기관 (연구개발목적기관)
고등과학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원	기타공공기관 (연구개발목적기관)
나노융합기술원			
한국과학영재학교			
세계김치연구소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식품연구원	기타공공기관 (연구개발목적기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원자력의학원	기타공공기관
안전성평가연구소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화학연구원	기타공공기관 (연구개발목적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서울요양원			
극지연구소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타공공기관 (연구개발목적기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9) 알리오시스템에 경영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공공기관 부설기관을 대상으로 정리하였으며, 부설기관 일반현황은 <부록 2> 참고

〈표 I-6〉의 계속

부설기관명	주무부처	모기관인 공공기관	
		기관명	공공기관 유형
KDI국제정책대학원	국무조정실	한국개발연구원	기타공공기관 (연구개발목적기관)
육아정책연구소	국무조정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타공공기관 (연구개발목적기관)
특허정보진흥센터	특허청	한국특허정보원	기타공공기관

주: 한국특허정보원의 부설기관인 특허정보진흥센터는 2022년 8월 4일자로 민법상 재단법인((재)한국특허기술진흥원)으로 전환(독립법인화)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1. 일반현황'의 기관별 공시내용(2022. 4. 29. 기준) 및 기관별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

나. 전년 대비 주요 변동내역

- 2022년 공공기관 수는 2021년 12월말 기준 349개보다 1개 기관 증가한 350개임.
- 2021년 공공기관 중 2개 기관이 지정 해제되고 3개 기관이 신규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¹⁰⁾ 2022년 공공기관 수가 전년 대비 1개 증가함.
- 2021년 12월 대비 2022년 공공기관 유형별 기관수와 신규지정, 지정해제, 유형변경 등 기관수 변동은 <표 I-7>과 같음.

〈표 I-7〉 공공기관 유형별 기관수 변동(2022. 1월 기준)

(단위: 개)

유형구분	2021년 12월 (A)	2022년 (B)	증감 (B-A)	(전년 대비 변동내역)		
				신규	해제	유형 변경
① 공기업	36	36	-	-	-	-
시장형	15	15	-	-	-	-
준시장형	21	21	-	-	-	-
② 준정부기관	95	94	△1	-	△1	-
기금관리형	13	13	-	-	-	-
위탁집행형	82	81	△1	-	△1	-
③ 기타공공기관	218	220	+2	+3	△1	-
계	349	350	+1	+3	△2	-

주: 2021년 12월말 기준 공공기관 수는 연중 변경 지정된 공공기관(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통합 출범)을 반영한 12월말 기준 기관수로 2021년 1월 지정된 공공기관 수(350개)와 다름
 자료: 기획재정부, 「2022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22. 1. 28.

10) <표 I-7> 참고

- 공공기관 유형별로 기관수 변화 및 변동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022년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및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기관수는 2021년 12월 기준 기관수와 동일함.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경우, 아시아문화원이 공공기관에서 해제됨에 따라 전년 대비 1개 기관이 감소함.
 - 2021년 3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아시아문화원의 해산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조직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의 신설이 결정됨¹¹⁾에 따라 아시아문화원은 2022년 공공기관에서 지정 제외함.
 - 2022년 기타공공기관은 지정 해제(1건)와 신규 지정(3건)이 발생하여 전년 대비 기관수가 2개 증가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의 영향으로 한국예탁결제원의 정부지원액비중이 50% 미만으로 하락하여 공운법상 지정요건(제2호에 의한 공공기관)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됨.
 - 2022년 신규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은 보건복지부 산하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제품안전관리원과 한국탄소산업진흥원 등 3개 기관임.
 - 2022년 공공기관 지정 변동 내역은 <표 I-8>과 같음.

<표 I-8> 2022년 공공기관 지정 변동 내역(2022. 1월 기준)

구 분	주무부처	기관명	지정 결과	비고
신규 지정 (3개)	복지부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	기타 공공기관	-
	산업부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해제 (2개)	문체부	아시아문화원	지정해제	기관 해산 및 지정요건 미해당
	금융위	한국예탁결제원		

자료: 기획재정부, 「2022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22. 1. 28.

11)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의 신설 시 아시아문화원-문화전당이라는 이원체계로 운영함에 따른 의사결정의 혼선, 비효율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직체계의 일원화가 요구됨에 따라 종전 아시아문화원을 해산하고 그 사업·조직을 문화전당재단으로 흡수·통합하여 운영하기로 함

- 2022년 신규로 공공기관에 지정된 3개 기관의 현황을 요약하면 <표 I-9>와 같음.
 - 2019년 9월 출범한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민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표준 마련 및 표준의 적용에 대한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품질향상을 통한 환자안전 및 환자 진료의 연속성 지원 등 보건의료정보와 관련된 사업지원을 목적으로 함.
 - 2018년 9월 출범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제품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기업이 안전한 제품을 제조·유통하도록 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2021년 3월 출범한 한국탄소산업진흥원¹²⁾은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산업 육성과 발전의 효율적인 지원 및 사업 수행을 통해 탄소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확산시켜 국가 산업의 고도화를 목적으로 함.

<표 I-9> 2022년 신규 지정 공공기관

(단위: 명, 백만 원)

주무부처	기관명	공공기관 유형	설립 시기	설립근거	기관규모('21년말)	
					직원 정원	자산 규모
복지부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	기타 공공기관	'19. 9월	「민법」 제32조	59	282
산업부	한국제품안전관리원		'18. 9월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2	70	3,315
	한국탄소산업진흥원		'21. 3월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103	31,960

주: '직원 정원'은 2022년 4월 말 알리오시스템에 공개된 2021년 말 기준 일반 정규직 정원(무기계약직 정원 불포함)으로 2022년 3분기 현재 일반 정규직 정원과 다를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의 기관별 공시정보(2022. 4. 29.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12)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2003년 3월 재단법인 전주기계산업리서치센터로 최초 설립하였으며, 2021년 3월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법정법인으로 출범한 기관에 해당함

2022 공공기관 현황편람

Ⅱ

공공기관 관리정책 주요 동향

1. 공공기관 윤리경영 강화
2.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
3.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II 공공기관 관리정책 주요 동향

1. 공공기관 윤리경영 강화

가. 제4차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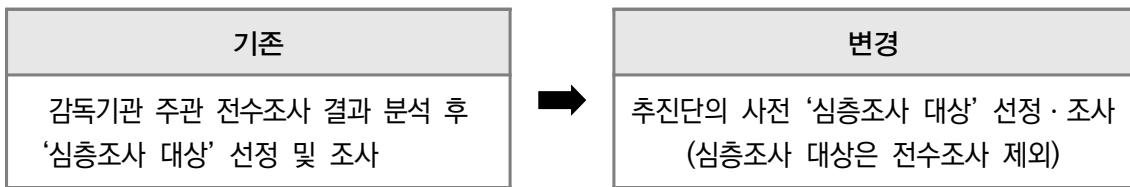
-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과정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채용비위를 근절하고, 공정채용 문화를 확립하고자 2021년 제4차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음.
 -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채용 건전성에 대한 기대수준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임.
 - 일부 공공기관의 채용비위가 이슈화되면서 2017년 10월부터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제1차 전수조사)을 실시하고, 2018년 11월, 체계적·상시적으로 채용비리 근절 업무를 전담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출범함.
 - 추진단 출범 이후 제2차·제3차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에 이어 제4차 정기 전수조사¹⁴⁾를 실시함.
 - 본 전수조사는 채용비위 적발에 국한하지 않고, 그간의 공공기관 공정채용을 위한 제도개선 이행여부까지 점검하여 향후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 2021년 제4차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는 2019년 12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 실적이 있는 1,243개 기관을 대상으로 함.
 - 대상기관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운법」상 공공기관 318개(기획재정부 주관), 지방공공기관 670개(행정안전부 주관) 및 기타공직유관단체 255개(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본 전수조사를 통해 정규직·계약직·공무직·비정규직 등 신규채용 전반을 살펴 보고, 정규직 전환대상 선정 및 전환절차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였음.

13) 관계부처합동, 「제4차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2022. 5.를 참고하여 작성

14) 조사기간: 2021. 7. ~ 2021. 11.

- 제4차 조사도 원칙적으로는 전수조사(감독기관 주관)와 심층조사(추진단 주관)를 분리 및 병행하여 실시하는 기존 방식을 유지하였음.
- 다만, 기존 조사와 달리 추진단 주관 하에 심층조사 대상을 사전 선정하여 전수 조사에서 제외함으로써 조사기간을 단축하고 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전수조사는 공공기관의 관리·감독 부처에서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의 최초 채용 및 전환과정의 적정성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 심층조사는 추진단에서 채용비위 언론보도, 신규지정 공공기관 여부 등의 기준을 통해 조사대상을 사전 선정한 후 별도 점검반을 투입하여 기관의 채용실태를 심층적으로 조사하는 방식으로 추진함.

[그림 II-1] 채용실태 조사방식 변경



자료: 관계부처합동, 「제4차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2022. 5.

- 2021년 채용비위 적발건수는 수사의뢰 5건, 징계요구 71건 등 총 76건임.¹⁵⁾
 - 「공운법」 제29조의 3에 따르면, 수사의뢰 사항은 법령이나 정관·내규 등을 위반하여 채용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주는 행위로서 인사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치는 채용비위 행위를 의미함.
 - 추진단의 「채용비위자 징계기준」에 의해 채용공고, 서류·면접 전형위원 구성, 전형단계별 합격인원의 결정 등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순위가 바뀔 수 있는 주요 채용절차를 위반한 경우, 징계요구 사항에 해당됨.
 - 제4차 전수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공공기관은 318개 기관 중 수사의뢰 1건 및 징계요구 24건, 지방공공기관은 670개 기관 중 수사의뢰 4건 및 징계요구 41건, 기타공직유관단체는 255개 기관 중 징계요구 6건으로 나타남.
 - 최근 3년간 채용비위 적발건수를 비교해 보면, 2021년 적발건수는 2019년 182건(수사의뢰 36건, 징계요구 146건), 2020년 83건(수사의뢰 9건, 징계요구 74건)에 비해 각각 58.2%, 8.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¹⁶⁾

15) 관계부처합동, 「제4차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2022. 5.를 참고하여 작성

- 수사의뢰 사항은 정규직 채용시 면접 점수 조작 후 특정인 추가합격, 서류전형 결과 조작, 기간제 채용 시 공고 절차 없이 특별채용 실시 등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치는 채용비위 행위 5건을 적발하였음.
- 응시자격 검증부실, 보훈 가산점·전형점수 부여·예비합격자 운영·서류전형 부적정, 부적격자 합격처리 등 응시자의 평정순위가 바뀔 수 있는 주요 채용절차의 위반 행위 71건을 징계요구 사항으로 적발하였음.
- 채용과정의 규정적용 단순 오류, 경미한 절차 위반, 제도개선 사항 사규 미반영 등 업무 부주의 사항도 799건 지적됨.

〈표 II-1〉 제4차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단위: 개, 건)

기관유형	조사 대상	적발 기관	적발 후 조치 사항		
			수사의뢰	징계요구	주의경고
계	1,243	547	5	71	799
공공기관	318	146	1	24	191
지방공공기관	670	305	4	41	465
기타공직유관단체	255	96	0	6	143

주: 주의·경고는 규정적용 단순 오류, 경미한 절차위반, 제도개선 사항 사규 미반영 등 업무부주의 사항이 포함
 자료: 관계부처합동, 「제4차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2022. 5.

- 정부는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적발된 채용비위 연루자 및 부정합격자를 제재하고, 채용비위 피해자를 구제하는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고자 함.
- 적발된 채용비위 연루자(117명)는 즉시 직무에서 배제하고, 수사결과에 따라 파면·해임 등 조치하며, 징계대상은 채용비위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신분상 조치를 취함으로써 엄정하게 책임을 묻도록 함.
- 적발된 채용비위 연루자가 임원에 해당할 경우, 직무의 종류와 관계없이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일반직원에 해당할 경우, 감사·인사업무 담당자는 해당 업무에서 배제하되, 그 외 다른 직무를 맡고 있는 경우는 현 업무수행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부정합격자(잠정 8명)에 대해서는 수사결과 및 기관별 징계결과에 따라 합격 취소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

16) 관계부처합동, 「2019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2020. 7. 24. 및 관계부처합동, 「제4차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2022. 5.

- 본인이 기소된 경우, 채용비위 직접 가담자에 해당되므로 기소 즉시 퇴출을 추진하고, 채용비위 관련 임직원·청탁자가 기소된 경우 일정 절차를 거쳐 퇴출¹⁷⁾ 하도록 함.
- 중징계가 확정된 경우, 관련 부정합격자를 재조사하고, 필요시 수사의뢰를 통해 본인 및 관련자가 기소될 경우 기소 시의 절차를 적용하여 조치하도록 함.
- 채용비위 피해자(잠정 81명)에 대해서는 필기시험, 면접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등 신속한 구제조치를 취하도록 함.
- 피해자 특정이 가능한 경우,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부정행위가 발생한 다음 채용단계에 재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함.
- 반면, 피해자 특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가 발생한 채용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을 재실시하도록 함.

〈표 II-2〉 수사의뢰 및 징계 대상자 현황

(단위: 명, 건)

구 분	적발 건수 (건)	대상자(명)						
		합 계	현직			퇴직		
			계	임원	직원	계	임원	직원
합 계	76	123	117	2	115	6	3	3
수사의뢰	5	11	10	0	10	1	1	0
징계(문책)	71	112	107	2	105	5	2	3

자료: 관계부처합동, 「제4차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2022. 5.

- 정부는 2021년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된 채용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공정채용 문화 정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 공공기관 공정채용 규정상 인사위원회 운영을 의무화하고, 인사위원의 채용전형(서류·면접 등) 중복위촉을 금지하며, 인사위원회 개최 시 개별 위원의 발언내역 기록을 의무화하는 등 인사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함.
- 공무원 채용 규정을 준용하여 ‘기관장, 채용담당·채용부서장’의 서류·면접위원 위촉을 제한하는 조항을 공공기관 공정채용 규정에 반영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을 제고함.
- 공공기관에 보훈(국가유공자) 가산점 적용과 관련하여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공정채용

17) 업무배제, 기관별 재조사, 징계위원회를 통한 퇴출 등

규정상 관련 내용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취업보호대상자에 대한 가점부여 시 혼선을 방지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매뉴얼」의 예외사항을 준용하여 감사 및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를 위해 탈락자 관련 서류도 포함하여 영구보존하도록 공공기관 공정채용 규정에 반영함.

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

- 최근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서도 공무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윤리경영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공운위 의결(2021. 4. 9.)을 거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이하 '경영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함.
- 지침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공무원에 대한 규정 등을 참고하여 징계를 받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직원의 성과급 및 명예퇴직수당을 제한하는 내용을 지침에 반영함.
 - 징계처분으로 승진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해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함.
 - 중대비위(금품수수·성비위·음주운전·채용비위)로 인한 징계 또는 중징계를 받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직원에 대해서는 성과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는 내부 규정을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음.

〈표 II-3〉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안
(명예퇴직수당 지급 및 성과평가 제한 관련)

현 행	개 정 안
<p>제22조(승진의 제한) ①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징계처분요구 및 징계의결요구 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진행 중인 직원에 대하여는 승진심사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p> <p>②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징계처분의 집행이 완료된 직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 채용비위, 제26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 동안 승진을 제한한다. 다만, 해당 기관이 아래에서 정한 기간보다 승진 제한</p>	<p>제22조(승진의 제한) ①(현행과 같음)</p> <p>②(현행과 같음)</p>

〈표 II-3〉의 계속

현 행	개 정 안
<p>기간을 더 늘려서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자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3.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강등·정직: 18개월 2. 감봉: 12개월 3. 견책: 6개월 <p>< 신 설 ></p> <p>제26조(징계 등 복무관리) ①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과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하여야 한다.</p> <p>②~⑥ (생략)</p> <p>< 신 설 ></p> <p>⑦~⑨ (생략)</p>	<p>③ 징계처분으로 ②항의 승진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외에 명예퇴직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21. 4. 9.></p> <p>제26조(징계 등 복무관리) ①(현행과 같음)</p> <p>②~⑥ (현행과 같음)</p> <p>⑦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성과평가 대상 기간 중 중징계 처분을 받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 성과평가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도록 내부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0조제1항의 징계시효가 5년인 행위 2. 제29조제3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신설 2020. 4. 9.> <p>⑧~⑩ (현행 ⑦~⑨와 같음)</p>

자료: 기획재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2021. 4. 9.

다. 공공기관 윤리경영 표준모델¹⁸⁾

1) 윤리경영 추진현황

- 최근 몇 년간 공공기관의 윤리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 부처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18) 기획재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2021. 4. 9., 「공공기관 윤리경영 표준모델 구축방안(중간보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2021. 8. 31., 「공공기관 윤리문화 확립을 위한 윤리경영 표준모델」,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2021. 12. 8., 「공공기관 윤리경영 표준모델 확정 - 핵심위험 맞춤형 통제방안 등으로 공공기관 윤리문화 강화 추진 -」, 보도자료, 2021. 12. 12.,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공공기관 현황 편람』, 2021. 11.

- 2018년 4월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실시함.
 - 2017년 (주)강원랜드 등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이후, 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 산하에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추진단을 설치하고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근절하고자 노력함.
- 2018년 7월에는 국정현안 조정회의에서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함.
 - 이에 따라 개별 공공기관은 갑질 근절 방안을 수립하여 매년 이행실태를 제출하고 있으며 300인 이상인 공공기관은 갑질피해 신고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음.
- 2018년 9월에 「공운법」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 채용비리 엄중 제재 및 상시감독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¹⁹⁾
 - 해당 개정안은 2018년 2월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핵심 골자로 하는 「공운법」이 개정(「공운법」 제52조의6, '18. 9월)됨에 따라 동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해 의결됨.²⁰⁾
-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경영지침 개정²¹⁾을 통해 공공기관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공정성 제고를 위한 통제장치를 강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실시함.
 - 승진제한기간 내 비위발생 시 가해자를 가중 징계하며, 성범죄를 임용결격사유에 포함시킴.
 - 성범죄를 직권면직에 근거하여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인사관리를 규정해 징계부가금을 부과함.
- 2018년 이후부터는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배점을 신설·확대하여 경영실적평가를 통한 윤리경영 관리를 강화함.
 - 2018년 「사회적 가치 구현」 항목을 주요지표에 새로이 반영(22점)하고 윤리경영 지표(3점)를 신설하였으며, 2020년에는 「사회적 가치 구현」 항목 배점을 24점으로 확대하였음.
- 공기업을 중심으로 국제기준(COSO)²²⁾에 따른 내부통제제도의 도입을 추진함

19)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엄중 제재 및 상시감독체계 구축」, 보도자료, 2018. 9. 18.

20) 제52조의3(비위행위자 수사 의뢰 등), 제52조의4(채용비위 행위자 명단 공개), 제52조의5(채용비위 관련자 합격 취소 등), 제52조의6(인사감사 등)

21) 2018년 3월, 2019년 3월, 2019년 12월, 2020년 3월, 2020년 12월

22) COSO(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s of the Treadway Commission): 효과적 내부통제체계 확립을 위해 美 AICPA 등 5개 기관이 공동 설립한 단체. COSO의 내부통제체계는 ① 통제환경 ② 리스크관리 ③ 통제활동

- 로써 현재 36개 공기업 중 34개 기관이 내부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COSO의 내부통제는 재무제표 중심인 회계적 관점, 조직목표 달성 중심인 관리적 관점, 사회적 책임 중심인 조직전반의 위험관리 순으로 대상을 확대함.

- 공공기관 윤리경영 강화를 위해 전 부처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채용비위 감소, 청렴도 지수 상승 등 일부 성과를 도출하였음.
 - 2019년 채용비위 적발건수는 총 40건으로 2018년(84건)에 비해서는 52.4%, 2017년(170건)에 비해서는 76.5% 감소하였음.
 - 청렴도 지수는 2018년 8.40점, 2019년 8.46점, 2020년 8.53점으로 매년 상승하였음.
 - 2020년 청렴도 지수는 8.53점으로 2019년(8.46점)에 비해서는 0.8%, 2018(8.40점)에 비해서는 1.6% 상승하였음.
 - 반부패 계획 수립부터 취약분야 개선, 차질 없는 이행까지 적극적으로 노력한 공공기관일수록 청렴도가 상승함.

〈표 II-4〉 2019년~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지수

구 분	종합청렴도(점)			외부청렴도(점)		
	'19년	'20년	증감	'19년	'20년	증감
전체기관	8.19	8.27	+0.08	8.47	8.53	+0.06
공직유관단체	8.46	8.53	+0.07	8.75	8.84	+0.09

주: 1.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과 공공기관 직원(내부청렴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와 기관별 부패사건 발생통계를 종합하여 청렴도를 산정함.
 2.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렴도 측정 대상인 공직유관단체에는 「공운법」상 공공기관, 지방공단·공사 및 그 외 측정필요성이 있는 기관(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이 포함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윤리경영 표준모델 구축방안(중간보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1. 8. 31.

2) 공공기관 윤리경영 모델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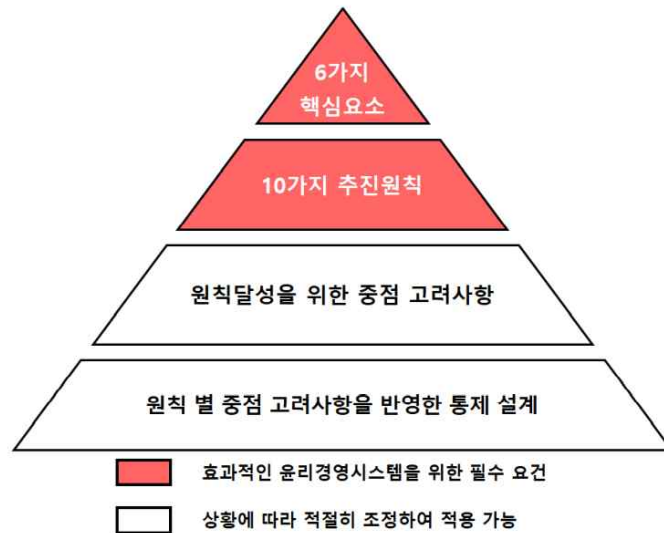
-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례를 계기로 국민들의 높아진 공공기관 윤리경영에 대한 기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윤리경영 표준모델(이하 '표준 모델')」을 마련하였음.
 - 표준모델은 2021년 6월부터 전문기관 연구용역, 국내외 모범사례 분석, 공공기관 인터뷰, 20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대한 체계적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됨.

④ 정보 및 의사소통 ⑤ 모니터링으로 구성되며, 전사적 위험관리체계 구성을 요구함

- 공공기관은 2022년 6월 표준모델을 바탕으로 기관별 특성과 미션에 맞는 윤리 경영 시행방안을 시범 작성하고, 2023년 초에 '2022년 윤리경영 실적보고서'를 작성·제출해야함.
- 4단계의 계층적 구조를 갖춘 윤리경영 표준모델은 필수요소인 6가지 핵심요소와 10개의 추진원칙이 있으며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한 고려사항과 통제수단으로 구성되어 있음.
 - 윤리경영시스템의 6대 핵심요소는 윤리의식 확립, 관리체계 구축, 윤리위험 파악, 윤리위험 통제활동, 내·외부 신고제도, 윤리경영시스템 모니터링으로 구성됨.
 - 6가지 핵심요소는 기관의 고유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되어 사용될 수 있으며, 6대 핵심요소와 10대 추진원칙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경계선이 존재하는 것은 아님.
- 6대 핵심요소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윤리의식 확립을 위해 최고 경영진의 의사를 반영한 구체적인 윤리강령을 모든 임직원이 지속적으로 숙지해야 함.
 - 윤리위반 행위를 축소·은폐하지 않고 적극적인 개선조치를 통해 윤리문화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을 강조함.
 - 윤리경영은 궁극적으로 공공기관 운영 효율성 제고와 경영성과 향상이 동반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
 - 둘째, 윤리경영을 전담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적절한 권한과 책임 및 예산 등을 부여하도록 함.
 - 최고윤리경영자 지정, 윤리경영 비상임 이사 지정, 중요한 윤리문제 검토 시 외부전문가 참여 등 기관 실정에 맞는 조직 및 운영방법을 선택함.
 - 셋째, 윤리위험 파악을 위해 윤리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을 식별하고 중요도와 심각성이 큰 핵심위험과 기타 일반위험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함.
 - 개발사업 수행기관의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에너지 기관의 핵심부품 개발비리, 국책연구기관의 연구비 유용 등이 기관 고유 핵심위험으로 구분됨.
 - 사회 환경 변화로 이전보다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는 음주운전, 성비위, 갑질 행위 등과 같은 기관 공통 핵심위험의 경우, 모든 공공기관의 윤리경영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외부 환경 변화도 신속하게 식별·분석하도록 함.

- 넷째, 윤리위험 통제활동 측면에서 식별된 윤리위험별로 통제활동을 일치시켜 윤리위험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기관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는 핵심위험을 집중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통제 활동을 적용하도록 함.
 - 법적 의무 외에 기관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통제활동의 사례로 사적 이해관계자 회피, 직무관련 부동산 신고,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퇴직자 사적 접촉 금지, 구매계약 체결 절차통제 등을 개발하거나 적용할 수 있음.
 - 경영권 침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 등을 통해 외부서비스 제공자, 자회사, 소속기관 등 공공기관 협력업체도 공공기관과 같이 윤리경영을 준수하도록 적용을 확대함.
- 다섯째, 내·외부 신고제도와 관련하여 현재화된 위험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내·외부관계자와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익명성이 보장된 신고채널을 마련하도록 함.
 - 집중 신고기간 지정, 비위신고 접수 시 처리기한 설정 및 구체적 처리절차 통보 등 내부신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수립하도록 함.
 - 익명 신고를 위해 홈페이지 등에 전담 창구를 마련하고 신고방법, 처리절차, 신고자 보호 등을 구체적으로 공지함.
 - 서비스 대상자, 규제기관, 외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외부 관계자와 윤리경영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의사소통 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도록 함.
 - 모든 외부관계자가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분리된 의사소통 채널 구축하여 임직원과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함.
- 마지막으로 윤리경영시스템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자체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윤리경영시스템이 적절하게 기능하는지를 판단하여 기관에 맞는 윤리경영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함.
 - 기관별로 운영 중인 기존 시스템을 보완·강화하여 기관 상황에 맞는 윤리경영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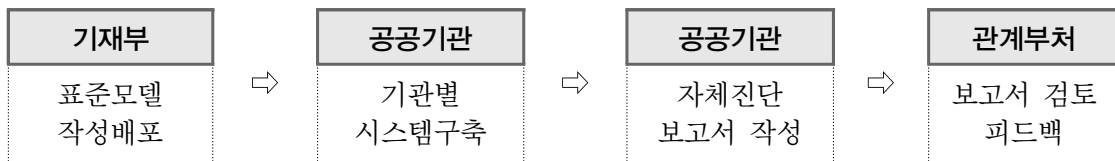
[그림 II-2] 윤리경영 표준모델의 4단계 계층적 구조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윤리문화 확립을 위한 윤리경영 표준모델」,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1. 12. 8.

- 표준모델은 공공기관이 윤리경영시스템을 설계·운영하는데 필요한 기본원칙·절차 등을 제시하여 공공기관의 합리적 윤리경영시스템의 구축을 지원하고자 함.
- 공공기관은 윤리경영시스템에 필요한 원칙과 절차 등이 제대로 구축되었는지 표준모델에서 제공하는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 가능함.

[그림 II-3] 공공기관 윤리경영시스템 구축 프로세스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윤리경영 표준모델 구축방안(중간보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1. 8. 31.

- 각 공공기관은 표준모델을 바탕으로 기관별로 상이한 환경과 특성을 고려하여 자체 윤리경영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내부통제시스템이 이미 구축된 기관은 윤리경영 표준모델을 고려하여 기존 시스템의 윤리 경영 분야를 보완·강화하고, 내부통제시스템이 구축되어있지 않은 기관은 윤리경영 표준모델에 따라 기관 상황에 맞는 윤리경영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3) 공공기관 윤리경영 표준모델 활용 및 추진 계획

- 공공기관은 표준모델에 따라 윤리경영시스템을 수립하고, 운영현황·결과·개선계획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윤리경영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시해야 함.
- 공공기관은 주기적인 내부평가결과, 외부기관 의견, 기타 대내외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차년도 윤리경영시스템을 개선해야 함.
- 주무부처 및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에서 제출한 윤리경영보고서를 검토하여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개선을 권고함.
 - 「공운법」 제56의2 제1항23)에 근거하여 보고서 검토 및 국회·언론 지적 등을 고려하여 윤리경영 위반 혐의가 있는 기관에 대해 합동(인사)감사를 실시함.
 - 「공운법」 제52의3 제2항24)에 근거하여 윤리위반 행위로 윤리경영을 중대하게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원에 감사의뢰 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함.

〈표 II-5〉 윤리경영 표준모델 활용 추진일정

윤리경영시스템 설계개선	윤리경영시스템 운영	보고서 작성 (연1회)	보고서 공시 (연1회)
직전연도(12월)	연중(1월~12월)	다음연도(~3월)	다음연도(4월)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윤리경영 표준모델 구축방안(중간보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1. 8. 31.

- 경영진의 윤리경영 의사결정, 업무프로세스 평가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윤리위험을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음.
 - 「이해충돌방지법」 등 관련 법규 요구사항의 구체적인 실천과 함께 윤리위반 행위를 조직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구성원의 인식을 전환하고자 함.
- 정부는 윤리경영 실적보고서를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와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기관별 윤리경영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해 공공기관 윤리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

23) 기획재정부·주무부처는 채용비위의 근절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인사운영의 적정성을 감사

24) 기획재정부·주무부처는 공공기관 임원이 비위행위 등으로 윤리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임원에 대해 수사 또는 감사 의뢰함

[그림 II-4] 윤리경영 표준모델 체계도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윤리경영 표준모델 확정-핵심위험 맞춤형 통제방안 등으로 공공기관 윤리문화 강화 추진-」, 보도자료, 2021. 12. 12.

2.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

가.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²⁵⁾

1)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 과거 공공기관 부채가 급증함에 따라 이러한 공공기관의 부채가 국가재정 부담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었으나 공공기관의 재무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관리시스템이 부재한 실정이었음.
- 이에 정부는 자산 2조 원 이상인 공공기관에 대하여 2012년부터 중장기(5개년)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함(「국가재정법」 제9조의2).
-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향후 5년간의 경영목표 및 투자방향, 부채 등 재무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작성하여야 함.
 - 계획에는 전년 계획(2020~2024년) 대비 변동 사항, 재무관리 방안 등 종합적 평가·분석이 포함됨.

〈표 II-6〉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및 제출 근거법령

[공운법 제3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 자산 2조 원 이상이거나 자본잠식 또는 손실보전규정이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은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

[국가재정법 제9조의2(재정관련 자료의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은 공운법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국회에 제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http://www.law.go.kr/법령/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및 「국가재정법」(<http://www.law.go.kr/법령/국가재정법>)

- 기획재정부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을 통해 공공기관의 부채수준을 점검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공공기관의 재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25) 기획재정부, 「'14~'18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도자료, 2014. 9. 22., 「'15~'19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도자료, 2015. 9. 16., 「'16~'20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도자료, 2016. 9. 2., 「'17~'21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도자료, 2017. 8. 30., 「'18~'22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도자료, 2018. 8. 31., 「'19~'23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도자료, 2019. 9. 2. 및 「2020~2024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주요 내용」,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2020. 8. 26., 「2021~2025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주요 내용」,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2021. 8. 26., 「정부, '21~'25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국회 제출」, 보도자료, 2021. 8. 31. 등 참고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공공기관 스스로 재무건전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경영효율화 등 자구노력을 통한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한 계기를 마련함.
 - 재무현황과 5년간의 재무관리 방안 등을 보여줌으로써 공공기관 재무상태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중장기적 시각의 체계적인 재무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 또한 3대 신용평가기관의 경우 공기업 신용평가 시 재무건전성 제고 노력에 대한 주요 판단 기준으로 이를 활용하고 있음.
- 2012년 최초로 39개 기관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2021년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제출되었음.
- 법률상 작성대상은 ‘자산 2조 원 이상이거나 자본잠식 또는 손실보전 규정이 있는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해당하는 기관은 <표 II-7>과 같음.
 - 정부 손실보전 기관은 대한석탄공사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2개 기관임.
 - 2021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 기관수는 40개 기관으로 최초 작성하기 시작한 2012년 대비 1개 기관이 증가함.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 기관수는 2012년 39개로 시작하여 2013년 41개, 2014년 40개, 2015년 39개, 2016년 39개, 2017년 38개이었으며,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39개임.
 - 여수광양항만공사는 2013년에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되면서 작성대상 기관에 포함되었으나 자산규모 축소로 인해 2017년에 제외됨.
 - 대한석탄공사는 2013년부터 작성대상에 포함되었고, 한국산업단지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2014년부터 대상으로 포함됨.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예탁결제원은 2014년부터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한국거래소는 2015년부터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되면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에서도 제외됨.
 - (주)강원랜드는 2018년 공공기관 지정 시, 시장형 공기업으로 유형이 변경됨에 따라 2018년부터 재무관리계획을 제출하기 시작함.
 - 서민금융진흥원도 2021년도 공공기관 지정 시,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정부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됨에 따라 2021년부터 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에 해당됨.

〈표 II-7〉 2021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

요건	기관명		
자산 2조 원 이상 (38개)	공기업 (22개)	시장형 (15개)	(주)강원랜드, 부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지역난방공사
		준시장형 (7개)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준정부 기관 (16개)	기금관리 (8개)	공무원연금공단, 기술보증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위탁집행 (8개)	국가철도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서민금융진흥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장학재단
손실보전 규정 존재 (2개)	공기업 (1개)	준시장형 (1개)	대한석탄공사
	준정부 (1개)	기금관리 (1개)	한국무역보험공사

주: 밑줄 친 기관은 2021년 신규로 작성대상에 추가된 기관임
 자료: 기획재정부, 「정부, '21~'25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국회제출」, 보도자료, 2021. 8. 31.

〈표 II-8〉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 변동내역

연도	구분	기관명
2013년	추가(2개)	여수광양항만공사, 대한석탄공사
2014년	추가(2개)	한국산업단지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제외(3개)	한국에너지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예탁결제원
2015년	제외(1개)	한국거래소
2017년	제외(1개)	여수광양항만공사
2018년	추가(1개)	(주)강원랜드
2021년	추가(1개)	서민금융진흥원

자료: 기획재정부, 「'14~'18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도자료, 2014. 9. 22, 「'15~'19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도자료, 2015. 9. 16, 「'16~'20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도자료, 2016. 9. 2, 「'17~'21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도자료, 2017. 8. 30, 「'18~'22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도자료, 2018. 8. 31, 「'19~'23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도자료, 2019. 9. 2 및 「2020~2024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주요 내용」,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2020. 8. 26, 「정부, '21~'25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국회제출」, 보도자료, 2021. 8. 31.

2) 2021~2025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주요 내용²⁶⁾

- 2021~2025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그간의 경영효율화, 비핵심자산 매각 등 부채감축 노력을 통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재무적 영향이 추가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공공기관의 재무적 지속가능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함.
- 정부는 정부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이 적정 투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부동산 대책, 한국판 뉴딜 등 정책 소요를 반영하고, 일자리 창출, 성장동력 확충, 안전 강화, 코로나19사태로 인한 충격 완화에 필요한 투자를 적극 반영하도록 하였음.
 - 다만, 투자 확대가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하여 투자 이행에 따른 재무 리스크 관리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것임.
- 또한 지난 계획에 이어 이번 계획에서도 기관별 재무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함.
 -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기관은 책임경영에 기반한 자율적 재무관리를 추진하도록 하되, 부채감축계획 종료 이후에도 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임.
 - 자본잠식 등 재무위험도가 높은 기관은 경영효율화, 사업 조정 등 자구노력을 계속하여 선제적으로 재무 리스크를 관리하도록 함.
- 전체 공공기관(2021년 기준 347개²⁷⁾) 및 중장기 재무관리대상 기관(40개)의 부채 규모는 증가했지만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감소하는 모습을 보임.
 -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에서 중장기 재무관리 대상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95.5%부터 매년 조금씩 낮아져서 2020년에는 94%로 감소함.

26) 기획재정부, 「2021~2025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주요 내용」,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2021. 8. 26.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의 기본 전제 중 경제성장률, 유가 등 거시지표는 '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21~'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일치시키고 에너지(가스·전기 등) 매출액 전망은 장기수급계획 활용하였으며, 분야별 정부 상위계획 및 국정과제 등을 반영하여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함

27) 알리오시스템 공시 대상 350개 중 은행 3사(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는 제외

- 부채규모는 2018년에 이어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부채비율은 2020년에 감소로 전환됨.
 - 2019년 대비 2020년 공공기관 총부채 규모는 17.9조 원 증가하였고, 부채비율은 5.4%p 감소하였음.
 - 이 중 중장기 재무관리대상 기관의 총부채는 12.3조 원이며 부채비율은 6.8%p 감소함.

〈표 II-9〉 공공기관 부채규모 및 부채비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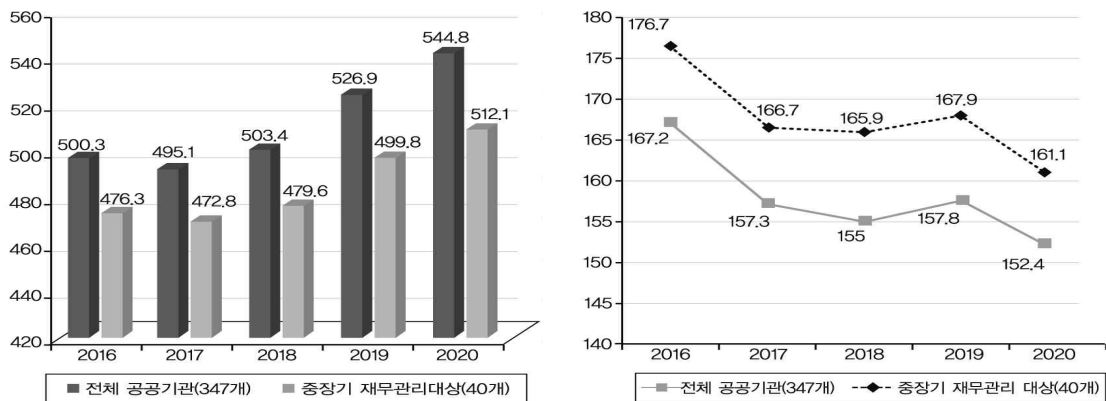
(단위: 조 원, %, %p)

구분	항목	2016	2017	2018	2019 (A)	2020 (B)	증 감 (B-A)
전체 공공기관 (347개)	부채규모(A)	500.3	495.1	503.4	526.9	544.8	17.9
	부채비율	167.2	157.3	155	157.8	152.4	△5.4
중장기 재무관리대상 (40개)	부채규모(B)	476.3	472.8	479.6	499.8	512.1	12.3
	부채비율	176.7	166.7	165.9	167.9	161.1	△6.8
	비중(B/A)	95.3	95.5	95.3	94.9	94.0	-

자료: 기획재정부, 「정부, '21~'25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국회제출」, 보도자료, 2021. 8. 31. 참고

〔그림 II-5〕 공공기관 부채 규모 및 부채비율 현황

(단위: 조 원, %)



주: 전체 공공기관은 2021년 지정된 347개 공공기관을 기준으로 함
 자료: 기획재정부, 「정부, '21~'25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국회제출」, 보도자료, 2021. 8. 31.

- 향후 5년간(2021~2025년) 공공기관의 자산과 부채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부채비율은 2025년까지 162.6%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자산과 부채규모는 향후 5년간(2021~2025년) 각각 154.0조 원, 89.3조 원 증가하여 2025년에는 1031.8조 원, 638.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국가 인프라 확충으로 향후 5년간 40개 중장기 재무관리대상 공공기관의 자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 사업부문별로 살펴보면, SOC 분야의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도로공사를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 및 기반시설 확충이 추진됨에 따라 자산이 99.0조 원이 증가할 것이며, 에너지 분야의 한국전력공사 그룹사를 중심으로 송배전설비·발전소·에너지 신산업 등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 자산이 23.6조 원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표 II-10〉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 공공기관의 자산 전망

(단위: 조 원)

구 분	'20년 (실적)	'21년 (A)	'22년	'23년	'24년	'25년 (B)	증감 (B-A)
전 체(40개)	830.0	877.8	924.7	962.7	995.1	1031.8	154.0
- SOC(10개)	350.6	375.7	410.2	437.1	454.0	474.7	99.0
- 에너지(12개)	266.5	274.3	280.0	283.2	291.2	297.9	23.6
- 금융(13개)	189.1	203.1	208.7	215.7	223.2	232.4	29.3
- 기타(5개)	23.8	24.7	25.8	26.7	26.7	26.8	2.1

자료: 기획재정부, 「정부, '21~'25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국회제출」, 보도자료, 2021. 8. 31. 참고

- 향후 5년간 부채규모는 89.3조 원 증가하고, 부채비율은 4.8%p 하락할 전망이다.
- 부채비율은 2021년 167.5%로 전년 대비 6.4%p 상승할 전망으로 2022년 172.5%로 정점을 찍고 이후부터는 감소하여 2025년에는 162.7%로 2020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 2020~2024년 계획과 비교하여 2021~2025년 계획의 부채규모는 증가했으나 부채비율이 감소함.
 - 부동산 대책과 같은 신규 정책을 반영하는 과정과 코로나 19로 인한 공공기관의 수입 감소 때문에 부채규모는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기관에서 신규로 서민금융진흥원이 포함된 것도 영향을 미침.
 - 부채비율의 감소는 2020~2024년 계획 대비 2020년 실적의 대폭 하락에 기인한 기저효과로 보임.

〈표 II-11〉 총 부채 및 부채비율 전망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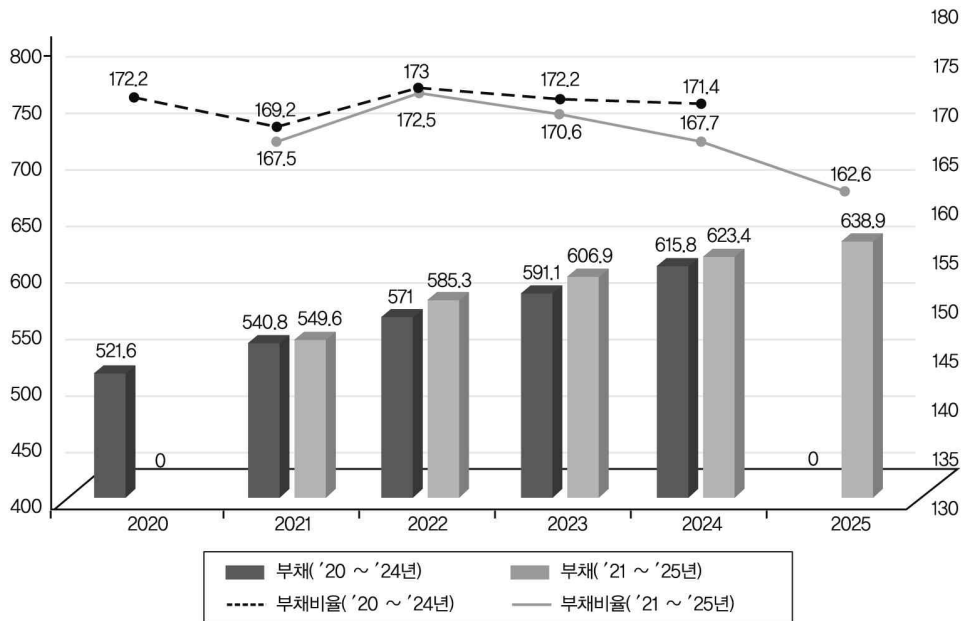
(단위: 조 원)

구 분	'20년 (실적)	'21년 (A)	'22년	'23년	'24년	'25년 (B)	증감 (B-A)
부채비율	161.1%	167.5%	172.5%	170.6%	167.7%	162.6%	△4.9%p
부채규모	512.1	549.6	585.3	606.9	623.4	638.9	89.3
자본	317.9	328.2	339.4	355.8	371.7	392.9	64.7

자료: 기획재정부, 「정부, '21~'25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국회제출」, 보도자료, 2021. 8. 31.

[그림 II-6] 부채 규모 및 부채 비율 전망치 비교

(단위: 조 원, %)



자료: 기획재정부, 「2020~2024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주요 내용」,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0. 8. 26. 및 「정부, '21~'25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국회제출」, 보도자료, 2021. 8. 31. 참고

- 사업부문별로 부채규모 및 부채비율을 살펴보면, SOC 부문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부채비율이 상승할 전망이나, 에너지·금융·기타 부문은 하락할 것으로 보임.
- SOC 부문의 부채규모는 2021년 240.4조 원에서 공공주택 공급 등의 영향으로 66.8조 원 증가하여 2025년 307.2조 원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됨.
 - 부채비율은 2021년 177.6%에서 2025년 183.3%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에너지 부문의 부채규모는 송배전 설비, 발전소 건설 등 신규 투자의 영향으로 2021년 205.3조 원에서 16.4조 원 증가하여 2025년 221.7조 원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임.

- 부채비율은 2021년 297.7%에서 2025년 291.5%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금융 부문의 부채규모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정책모기지 확대 등으로 2021년 90.7조 원에서 6.1조 원 증가해 2025년에는 96.8조 원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 부채비율은 2021년 80.7%에서 2025년 71.5% 수준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표 II-12〉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 공공기관의 부채·부채비율 전망

(단위: 조 원)

분야	'20년 (실적)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B)	증감 (B-A)
전 체(40개)	512.1 (161.1%)	549.6 (167.5%)	585.3 (172.5%)	606.9 (170.6%)	623.4 (167.7%)	638.9 (162.6%)	89.3 (△4.9%p)
- SOC(10개)	222.3 (173.3%)	240.4 (177.6%)	267.0 (186.5%)	286.7 (190.6%)	295.5 (186.4%)	307.2 (183.3%)	66.8 (5.7%p)
- 에너지(12개)	192.4 (259.6%)	205.3 (297.7%)	210.3 (302.0%)	210.1 (287.3%)	217.4 (294.4%)	221.7 (291.5%)	16.4 (△6.2%p)
- 금융(13개)	85.2 (82.0%)	90.7 (80.7%)	94.1 (82.1%)	95.9 (80.1%)	97.0 (76.8%)	96.8 (71.4%)	6.1 (△9.3%p)
- 기타(5개)	12.2 (105.1%)	13.2 (115.8%)	13.9 (116.0%)	14.2 (113.6%)	13.5 (103.8%)	13.2 (96.6%)	0 (△19.2%p)

주: 괄호는 부채비율임
 자료: 기획재정부, 「정부, '21~'25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국회제출」, 보도자료, 2021. 8. 31.

- 총자산 대비 금융부채의 비율은 2021~2025년간 48~49%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 총부채 대비 금융부채의 비율은 향후 5년간(2021~2025년) 77~78%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표 II-13〉 금융부채 전망치 비교

(단위: 조 원)

구 분	'20년 (실적)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금융부채	386.5	426.1	457.0	475.0	488.1	497.6
(총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	(46.6%)	(48.5%)	(49.4%)	(49.3%)	(49.1%)	(48.2%)
(총부채 대비 금융부채 비율)	(75.5%)	(77.5%)	(78.1%)	(78.3%)	(78.3%)	(77.9%)

자료: 기획재정부, 「정부, '21~'25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국회제출」, 보도자료, 2021. 8. 31.

- 당기순이익과 이자보상배율은 향후 5년간 개선될 것이 전망됨.
 - 당기순이익은 2021년 0.7조 원으로 전년 대비 2.2조 원 감소²⁸⁾하나 202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6.9조 원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이다.
 - 채무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배율은 2021년에는 0.9배 수준까지 일시적으로 하락하나, 2022~2025년에는 1.5~2.6배 수준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표 II-14〉 당기순이익 및 이자보상배율 전망

(단위: 조 원, 배)

구분	'20년 (실적)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당기순이익	2.9	0.7	3.0	6.7	7.8	10.3
영업이익(A)	10.7	5.5	9.4	16.3	15.7	17.7
이자비용(B)	6.5	6.4	6.5	6.4	6.5	6.7
이자보상배율(A/B)	1.6	0.9	1.5	2.5	2.4	2.6

자료: 기획재정부, 「정부, '21~'25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국회제출」, 보도자료, 2021. 8. 31.

〈표 II-15〉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 대상 공공기관의 재무 전망(2021~2025년)

(단위: 조 원, 배)

기관명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총계 (조 원)	자산	877.8	924.6	962.6	995.0	1,031.6
	부채	549.6	585.3	606.9	623.4	638.9
	자본	328.2	339.3	355.7	371.6	392.7
	부채비율	167.5%	172.5	170.6	167.8	162.7
	당기순이익	0.7	3.0	6.7	7.8	10.3
	이자보상배율	0.9	1.5	2.5	2.4	2.6
1 (주)강원랜드	자산	37,736	39,881	42,922	45,604	47,239
	부채	6,131	7,441	8,660	9,500	9,645
	자본	31,605	32,440	34,262	36,104	37,594
	부채비율	19.4%	22.9%	25.3%	26.3%	25.7%
	당기순이익	△742	972	2,511	3,389	3,532
	이자보상배율	-	-	-	-	-
2 공무원연금공단	자산	201,014	203,194	211,657	215,142	218,661
	부채	65,479	65,407	70,029	69,373	69,831
	자본	135,534	137,787	141,628	145,770	148,830
	부채비율	48.30%	47.50%	49.40%	47.60%	46.90%

28) 2021년의 당기순이익 감소는 주로 유가상승과 코로나19로 인한 지출증가에 기인함

〈표 II-15〉의 계속

(단위: 조 원, 배)

기관명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3	국가철도공단	자산	192,298	201,100	211,287	222,499	230,249
		부채	207,758	214,249	219,070	226,739	230,027
		자본	△15,460	△13,149	△7,783	△4,240	222
		부채비율	무자본				
		당기순이익	171	2,311	5,366	3,543	4,462
		이자보상배율	0.9	1.4	2.0	1.7	1.9
4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산	353,472	345,274	342,881	352,241	378,839
		부채	129,420	140,529	147,673	156,454	176,850
		자본	224,052	204,746	195,208	195,787	201,989
		부채비율	57.8%	68.6%	75.6%	79.9%	87.6%
		당기순이익	14,434	△19,849	△10,153	2,070	7,828
		이자보상배율	82.0	-	-	-	-
5	기술보증기금	자산	37,978	36,350	37,573	37,297	37,500
		부채	14,874	14,848	14,856	14,818	15,358
		자본	23,104	21,503	22,718	22,479	22,142
		부채비율	64.4%	69.1%	65.4%	65.9%	69.4%
6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자산	2,384	2,442	2,576	2,666	2,768
		부채	1,579	1,611	1,705	1,758	1,828
		자본	806	831	871	908	940
		부채비율	196.0%	193.9%	195.8%	193.5%	194.5%
		당기순이익	25.7	28.2	44.6	48.4	44.5
		이자보상배율	0.8	0.6	0.5	0.7	0.3
7	대한석탄공사	자산	9,532	9,841	10,099	10,335	10,525
		부채	22,078	23,045	23,964	24,854	25,705
		자본	△12,546	△13,204	△13,865	△14,519	△15,180
		부채비율	자본잠식				
		당기순이익	△992	△1,000	△1,010	△989	△981
		이자보상배율	-	-	-	-	-
8	부산항만공사	자산	67,332	72,102	73,942	66,409	67,642
		부채	27,706	32,004	33,500	25,483	26,152
		자본	39,625	40,098	40,442	40,926	41,490
		부채비율	69.9%	79.8%	82.8%	62.3%	63.0%
		당기순이익	535	686	618	732	857
		이자보상배율	2.5	3.0	2.7	2.9	3.7

〈표 II-15〉의 계속

(단위: 조 원, 배)

기관명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	자산	247,565	255,733	264,086	272,700	281,616
		부채	6,312	5,661	5,201	4,861	4,615
		자본	241,253	250,072	258,885	267,839	277,002
		부채비율	2.6%	2.3%	2.0%	1.8%	1.7%
10	서민금융진흥원	자산	35,975	38,297	41,047	43,755	46,522
		부채	30,277	32,078	33,679	35,060	35,862
		자본	5,698	6,219	7,368	8,695	10,661
		부채비율	531.4%	515.8%	457.1%	403.2%	336.4%
		당기순이익	1,642	521	1,149	1,328	1,966
		이자보상배율	1,802.8	552.2	1,258.0	1,472.7	2,198.8
11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자산	57,833	61,772	64,278	66,672	69,251
		부채	13,776	14,043	12,909	11,643	10,439
		자본	44,056	47,729	51,369	55,029	58,812
		부채비율	31.3%	29.4%	25.1%	21.2%	17.8%
		당기순이익	△1,224	△49	24	66	146
		이자보상배율	351.7	287.0	296.7	365.3	471.1
12	신용보증기금	자산	138,093	138,566	133,000	127,161	120,009
		부채	48,214	53,774	53,793	52,079	49,836
		자본	89,879	84,792	79,207	75,082	70,173
		부채비율	53.6%	63.4%	67.9%	69.4%	71.0%
13	예금보험공사	자산	186,359	192,217	204,918	218,126	234,220
		부채	80,558	68,428	57,287	45,850	34,217
		자본	105,801	123,789	147,631	172,276	200,003
		부채비율	무자본				
		당기순이익	17,235	18,333	19,369	20,423	21,301
		이자보상배율	8.5	12.7	17.7	21.5	25.1
14	인천국제공항공사	자산	133,406	149,816	166,193	172,901	172,155
		부채	57,116	74,416	90,761	91,501	91,294
		자본	76,290	75,400	75,432	81,400	80,860
		부채비율	74.9%	98.7%	120.3%	112.4%	112.9%
		당기순이익	△8,320	△890	32	5,975	1,845
		이자보상배율	-	0.1	1.4	11.2	2.5

〈표 II-15〉의 계속

(단위: 조 원, 배)

기관명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15	인천항만공사	자산	33,786	36,180	37,262	38,265	38,828
		부채	11,843	14,444	15,302	15,655	15,444
		자본	21,944	21,736	21,961	22,609	23,384
		부채비율	54.0%	66.5%	69.7%	69.2%	66.0%
		당기순이익	△312	△208	225	739	1,070
		이자보상배율	-	0.3	0.9	1.0	1.1
16	주택도시보증공사	자산	84,922	87,415	90,143	92,516	95,318
		부채	20,201	20,653	20,258	19,942	19,906
		자본	64,720	66,762	69,885	72,574	75,412
		부채비율	31.2%	30.9%	29.0%	27.5%	26.4%
		당기순이익	2,218	2,871	4,283	4,414	4,615
		이자보상배율	52.4	62.8	89.7	88.1	90.8
17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자산	263,297	271,530	279,186	280,086	296,748
		부채	221,986	228,670	225,010	213,949	198,481
		자본	41,311	42,860	54,176	66,137	98,267
		부채비율	537.4%	533.5%	415.3%	323.5%	202.0%
18	한국가스공사	자산	378,863	368,446	361,909	365,100	360,862
		부채	298,120	278,484	270,372	270,275	262,687
		자본	80,742	89,962	91,537	94,826	98,176
		부채비율	369.2%	309.6%	295.4%	285.0%	267.6%
		당기순이익	3,965	5,489	4,707	5,374	6,072
		이자보상배율	1.8	1.9	1.8	2.0	2.1
19	한국공항공사	자산	49,484	51,570	54,517	59,991	68,359
		부채	10,900	13,010	15,528	20,535	27,899
		자본	38,584	38,765	38,508	38,765	40,255
		부채비율	28.3%	32.8%	40.1%	52.4%	69.3%
		당기순이익	△1,811	△76	257	547	1,265
		이자보상배율	-	0.2	2.9	3.8	5.8
20	한국광물자원공사	자산	32,732	29,692	13,835	10,567	10,087
		부채	70,371	66,496	29,951	27,962	28,812
		자본	△37,639	△36,804	△16,115	△17,394	△18,725
		부채비율	자본잠식				
		당기순이익	△489	835	19,565	△1,279	△1,331
		이자보상배율	-	0.4	13.4	-	-

〈표 II-15〉의 계속

(단위: 조 원, 배)

기관명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1	한국남동발전(주)	자산	117,844	118,174	125,491	128,222	132,448
		부채	71,509	74,390	79,047	82,729	86,062
		자본	46,335	43,784	46,444	45,493	46,386
		부채비율	154.3%	169.9%	170.2%	181.9%	185.5%
		당기순이익	△1,448	△2,158	△800	2,211	1,923
		이자보상배율	-	0.3	2.4	2.5	2.0
22	한국남부발전(주)	자산	114,060	114,406	117,739	125,300	135,345
		부채	73,196	74,388	77,662	84,672	93,350
		자본	40,864	40,018	40,077	40,628	41,995
		부채비율	179.1%	185.9%	193.8%	208.4%	222.3%
		당기순이익	△2,100	△853	52	543	1,383
		이자보상배율	-	-	0.8	0.9	1.2
23	한국농어촌공사	자산	129,066	133,803	137,758	132,248	129,648
		부채	107,477	111,946	115,632	109,842	106,957
		자본	21,589	21,858	22,126	22,406	22,690
		부채비율	497.8%	512.2%	522.6%	490.2%	471.4%
		당기순이익	102	110	112	125	134
		이자보상배율	1.4	10.1	15.3	23.2	25.7
24	한국도로공사	자산	738,330	783,730	827,063	864,110	894,906
		부채	337,067	361,003	387,783	412,097	432,235
		자본	401,262	422,727	439,279	452,013	462,672
		부채비율	84.0%	85.4%	88.3%	91.2%	93.4%
		당기순이익	616	1,105	1,172	1,214	1,239
		이자보상배율	1.5	1.6	1.5	1.5	1.4
25	한국동서발전(주)	자산	100,138	106,163	110,753	117,270	125,289
		부채	53,688	59,244	63,555	68,914	75,425
		자본	46,451	46,919	47,198	48,356	49,865
		부채비율	115.6%	126.3%	134.7%	142.5%	151.3%
		당기순이익	△691	468	279	1,157	1,509
		이자보상배율	0.1	0.4	-	0.3	0.6
26	한국마사회	자산	19,653	19,742	19,594	19,580	19,603
		부채	3,378	3,343	3,182	3,111	3,051
		자본	16,276	16,398	16,412	16,468	16,552
		부채비율	20.8%	20.4%	19.4%	18.9%	18.4%
		당기순이익	△3,889	123	100	126	172
		이자보상배율	-	9.1	9.4	3.4	-

〈표 II-15〉의 계속

(단위: 조 원, 배)

기관명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7	한국무역보험공사	자산	51,962	54,608	57,449	60,559	63,517
		부채	25,022	25,188	25,335	25,484	25,639
		자본	26,940	29,420	32,114	35,076	37,878
		부채비율	92.9%	85.6%	78.9%	72.7%	67.7%
28	한국산업단지공단	자산	21,501	19,165	19,248	16,882	17,478
		부채	9,066	6,363	6,656	4,073	4,950
		자본	12,436	12,802	12,592	12,809	12,529
		부채비율	72.9%	49.7%	52.9%	31.8%	39.5%
		당기순이익	△1	367	△211	217	△284
		이자보상배율	-	5.4	-	3.8	-
29	한국서부발전(주)	자산	105,974	112,227	115,656	117,126	119,134
		부채	69,819	76,592	79,870	81,033	82,704
		자본	36,155	35,635	35,787	36,093	36,430
		부채비율	193.1%	214.9%	223.2%	224.5%	227.0%
		당기순이익	△1,151	△558	169	296	148
		이자보상배율	-	0.1	0.8	0.7	0.6
30	한국석유공사	자산	180,702	181,209	160,992	163,995	167,031
		부채	195,446	197,056	188,967	190,941	191,609
		자본	△14,744	△15,848	△27,975	△26,946	△24,578
		부채비율	자본잠식				
		당기순이익	△3,418	△1,513	△13,625	△727	1,681
		이자보상배율	0.9	1.7	1.7	1.8	2.0
31	한국수력원자력(주)	자산	629,380	642,550	654,642	659,622	662,418
		부채	369,673	380,948	388,090	390,678	388,914
		자본	259,707	261,601	266,553	268,944	273,504
		부채비율	142.3%	145.6%	145.6%	145.3%	142.2%
		당기순이익	△186	1,183	4,730	2,779	4,066
		이자보상배율	0.9	1.1	1.9	1.1	1.4
32	한국수자원공사	자산	235,880	245,604	258,295	274,461	288,233
		부채	139,887	142,437	147,532	155,805	160,868
		자본	95,993	103,173	110,799	118,737	127,513
		부채비율	145.7%	138.1%	133.2%	131.3%	126.3%
		당기순이익	1,232	1,294	1,520	1,635	1,994
		이자보상배율	1.6	1.8	2.1	2.2	2.2

〈표 II-15〉의 계속

(단위: 조 원, 배)

기관명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33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산	76,278	84,780	92,194	96,925	93,856
		부채	49,367	57,499	64,772	69,317	66,084
		자본	26,912	27,281	27,422	27,608	27,772
		부채비율	183.4%	210.8%	236.2%	251.1%	238.0%
		당기순이익	479	547	345	315	281
		이자보상배율	1.5	1.2	0.6	0.5	0.4
34	한국장학재단	자산	112,978	110,988	109,320	108,291	107,605
		부채	104,954	102,970	101,397	100,456	99,852
		자본	8,025	8,017	7,923	7,834	7,753
		부채비율	1307.9%	1284.3%	1279.8%	1282.2%	1288.0%
		당기순이익	△277	△7	△95	△89	△82
		이자보상배율	0.4	0.4	0.5	0.5	0.5
35	한국전력공사(연결)	자산	2,077,349	2,141,502	2,214,180	2,290,340	2,358,316
		부채	1,421,354	1,487,053	1,538,158	1,609,732	1,659,303
		자본	655,995	654,449	676,022	680,608	699,013
		부채비율	216.7%	227.2%	227.5%	236.5%	237.4%
		당기순이익	△36,465	△1,364	15,126	7,961	11,313
		이자보상배율	-	0.6	1.9	1.2	1.4
35	한국전력공사(별도)	자산	1,160,130	1,202,765	1,239,874	1,287,435	1,317,777
		부채	667,299	711,670	736,372	785,283	810,702
		자본	492,831	491,095	503,501	502,152	507,075
		부채비율	135.4%	144.9%	146.3%	156.4%	159.9%
		당기순이익	△32,677	△1,737	12,406	3,613	6,369
		이자보상배율	-	0.1	2.5	0.9	1.4
36	한국주택금융공사	자산	240,704	267,252	292,422	326,021	347,388
		부채	109,998	125,591	139,829	162,096	171,688
		자본	130,707	141,662	152,593	163,925	175,700
		부채비율	91.0%	103.6%	114.5%	135.3%	140.8%
		당기순이익	5,314	3,056	2,973	3,086	3,308
		이자보상배율	5.1	2.7	2.3	2.0	1.8
37	한국중부발전(주)	자산	140,073	140,113	145,856	146,228	152,349
		부채	102,780	102,058	105,228	104,165	107,640
		자본	37,293	38,055	40,627	42,063	44,709
		부채비율	275.6%	268.2%	259.0%	247.6%	240.8%
		당기순이익	△1,289	813	2,211	3,000	2,472
		이자보상배율	0.2	1.5	2.5	2.9	2.5

〈표 II-15〉의 계속

(단위: 조 원, 배)

기관명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38 한국지역난방공사	자산	60,731	63,939	69,190	71,314	72,285
	부채	45,961	51,238	49,593	49,952	49,052
	자본	17,978	17,952	21,721	22,333	22,751
	부채비율	255.7%	285.4%	228.3%	223.7%	215.6%
	당기순이익	10	47	274	792	804
	이자보상배율	0.9	1.0	1.5	2.6	2.5
39 한국철도공사	자산	253,982	263,903	243,333	222,210	223,160
	부채	190,041	196,037	178,711	158,602	152,098
	자본	63,941	67,866	64,622	63,608	71,061
	부채비율	297.2%	288.9%	276.5%	249.3%	214.0%
	당기순이익	△11,779	△45	△4,531	△2,628	4,041
	이자보상배율	-	-	-	0.2	0.4
40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산	2,031,202	2,279,160	2,479,947	2,602,249	2,746,575
	부채	1,412,273	1,616,418	1,772,014	1,844,263	1,930,833
	자본	618,929	662,742	707,933	757,985	815,742
	부채비율	228.2%	243.9%	250.3%	243.3%	236.7%
	당기순이익	29,091	16,073	16,756	19,233	26,066
	이자보상배율	16.0	9.3	9.9	11.5	16.3

주: 1. 40개 기관의 전체 수치는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간의 내부거래를 제거한 수치임
 2. 국가철도공단, 예금보험공사는 무자본 특수법인(자본금·기본재산이 0인 기관)으로 부채비율 산정 곤란
 3. 공무원연금공단, 기술보증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창업진흥공단 및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정부기금으로 국가회계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당기순이익 및 이자보상배율을 산출하지 않음
 4. 한국장학재단과 중소기업창업진흥공단은 정책자금 융자사업 수행기관으로 여타기관과 부채비율 일괄 비교 곤란
 자료: 기획재정부, 「2021~2025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주요 내용」,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1. 8. 26.

- 정부는 중장기 투자소요를 차질 없이 뒷받침 하는 한편, 공공기관에 대한 다각적인 재무건전성 관리 노력을 지속할 예정임.
 - 이를 위해 매년 경영실적평가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활용하여 공공기관별 투자 집행, 부채관리 등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함.
 - 현재 경영실적평가 지표에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목표 부채비율(계량) 달성 여부, 투자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노력(비계량) 등 포함되어 있음.
 - 2020년 9월에는 과도한 사업비 증액 억제를 위한 총사업비관리지침 마련해 시행했으며, 2021년 8월에는 예비타당성 심사 시 재무건전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

- 재무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경영 효율화와 책임성 강화방안도 마련함.

나. 재무위험기관 선정결과²⁹⁾

1) 추진배경 및 경과

- 정부는 공공사업 및 투자 확대에 따른 부채규모의 추세적 증가, 사업환경 관련 하방 위험 확대 전망과 이로 인한 재무위험 심화가 전망됨에 따라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재무위험 기관 집중관리제도를 마련함.
 - 코로나19, 우크라이나발 에너지 가격 상승³⁰⁾ 등의 여파로 유가 급등, 환경비용 상승 등 재무위험이 심화될 전망이다.
 - 미국 등 주요국의 대내외 통화긴축 본격화로 인한 가파른 금리인상이 예상되며 이러한 금리인상으로 인한 공공기관의 이자부담 증가가 우려되고 있음.
 - 재무위험 증가로 인한 대규모 정부의 재정지원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며, 실질적으로 2019년 이후 정부 총지출에서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임.

29)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강화방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2022. 6. 3., 「공공기관 재무위험 기관 14개 선정」, 보도자료, 2022. 6. 30., 「재무위험 공공기관 선정·집중관리제도 도입」, 보도자료, 2022. 6. 3., 「자율·책임·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보도자료, 2022. 8. 18., 「14개 재무위험기관 재정 건전화계획을 반영한 '22~'26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보도자료, 2022. 8. 31. 참고

3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부 “러시아 특별경제조치 대상에 한국기업 없어…영향 제한적”」, 정책뉴스, 2022. 5. 13. 및 정책주간지 공감, 「“물가 충격”… 대통령이 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 정책뉴스, 2022. 7. 10.

〈표 II-16〉 정부 총지출 대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 현황(2016~2022년)

(단위: 조 원,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예산안
						본예산	추경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예산안) 총 규모(a)	67.7	69.6	69.8	76.6	95.7	100.3	114.9	108.8
정부 총지출(b)	384.9	406.6	434.1	485.1	549.9	558.0	604.9	604.4
비중(a/b)	17.6	17.1	16.1	15.8	17.4	18.0	19.0	18.0

주: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결산 기준, 2021년과 2022년은 예산(안)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2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중점 분석』, 2021. 10.

- 공공기관의 부채규모 증가, 사업환경 악화, 재무위험 가중, 고유가 등으로 인한 재무위험 심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함.
 - 2013~2017년 부채감축계획에 따라 부채비율이 2017년 150%대로 하락한 이후 동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왔기 때문에 재무위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고, 이로 인해 재무위험에 대한 대응체계 또한 미흡한 실정임.
 - 재무위험 대응체계 개선을 위해 경영실적평가를 통한 간접관리 및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통한 자율관리 등의 기존의 2단계 관리에서 더 나아가, 재무상황을 기준으로 재무위험기관을 선정하여 집중 관리하는 3단계 관리체계로 전환을 모색함.

2) 재무위험기관 선정

- 2022년 제8차 공운위 결의에 따라 공공기관 재무위험에 대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관리를 위해 14개 재무위험기관을 선정함.
 - 재무위험기관 선정을 위한 재무상황평가의 대상기관은 2022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작성한 39개 기관 중 재무구조가 상이한 금융·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27개 기관을 대상으로 함.
 - 재무지표, 재무성과, 재무개선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관별 재무상황평가가 이루어짐.
 - 재무지표 평가는 연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며 민간 신용평가법을 바탕으로, 사업수익성 및 재무안정성 지표의 과거 5년간 실적 및 향후 전망을 평가함.

- 재무성과지표는 경영실적평가 항목 중 재무·예산 운영성과 항목의 최근 3년 등급을 평가하여 등급별로 점수를 부여함.
 - 재무개선도는 가점 항목이며 재무지표 평가점수, 부채비율 및 순차입금/총자산 비율이 평가 직전 2개년 연속 개선될 경우 가점을 부여함.
- 재무상황평가 대상기관인 27개 기관 중 민간신용평가 기준 재무지표 투자적격 등급(BBB:12점), 재무성과 보통(C:2점)에 해당하는 ‘총점 14점 미만’인 기관이거나 부채비율이 200% 이상(민간 신용평가사 등급체계 상 ‘투자 부적격’ 기준)인 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하였음.

〈표 II-17〉 2022년도 공공기관 재무상황평가 대상기관 현황(27개)

구 분	에너지(12개)	SOC(11개)	기타(4개)
공기업 (22개)	한국전력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인천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주)강원랜드
준정부기관 (5개)	-	국가철도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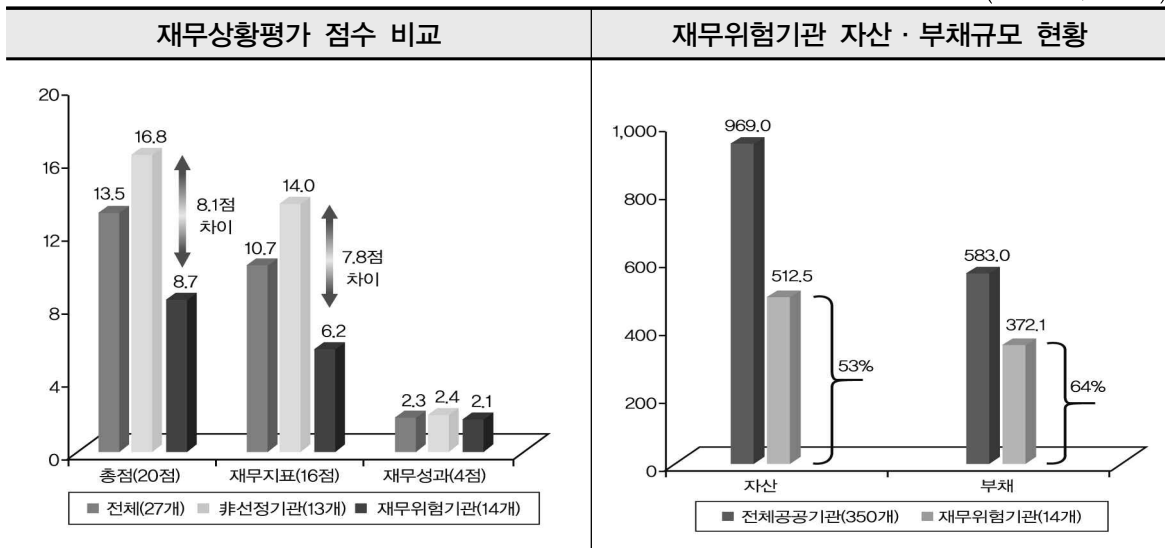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재무위험 공공기관 선정·집중관리제도 도입」, 보도자료, 2022. 6. 3.

- 재무상황평가 실시 결과³¹⁾, 총 27개 대상기관 중 9개 사업수익성악화(징후)기관, 5개 재무구조 전반 취약기관 등 총 14개 기관이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됨.
- 사업수익성악화(징후) 기관은 현재 재무안정성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사업수익성 악화가 재무안정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되는 기관으로 재무지표 항목의 평가점수가 8점 이상인 기관을 사업수익성 악화기관으로 지정함.
- 재무구조 전반 취약기관은 사업수익성과 재무안정성 모두 적정수준 미달인 기관으로 재무지표 항목의 평가점수가 8점 미만인 기관을 재무구조 전반 취약기관으로 지정함.

31) 재무지표 평가항목은 사업수익성 지표와 재무안정성 지표로 구성되며 가중치는 총 16점임

-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등 3개 기관은 재무상황평가 점수가 14점 이상이나,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간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평가하였기 때문에 재무위험기관에 포함됨.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관의 수입·지출이 법규 및 정책에 따라 결정되는 공적 기금형 공공기관에 해당하므로 재무위험기관에서 제외함.³²⁾
- 14개 재무위험기관의 부채 및 자산규모는 전체 350개 공공기관 부채 및 자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함.
- 재무위험기관과 비선정기관 간의 재무상황평가 점수 차이는 재무위험기관의 총 자산수익률, 부채비율 등 재무지표 항목의 점수가 저조한데 기인함.
 - 재무위험기관의 2021년 부채규모는 372.1조 원으로 이는 전체 공공기관 부채 규모의 64%에 해당하며 자산규모는 512.5조 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자산규모의 절반 이상(53%)을 차지함.
 - 공공기관 부채 및 자산규모에 미치는 영향이 큰 재무위험기관의 재무 악화는 향후 전체 공공기관 부채비율의 증가 및 부실로 연결될 우려가 있음.

[그림 II-7] 2021년 재무상황평가 점수 비교 및 재무위험기관의 자산·부채규모
(단위: 점, 조 원)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재무위험기관 14개 선정」, 보도자료, 2022. 6. 30.

32) 공적기금형 공공기관에는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이 포함

- 사업수익성악화(징후)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총 9개 기관으로 고유가, 원자재가격 상승, 금리인상과 같은 환경의 변화로 수익성이 불안정한 상황임.
 - 한국전력공사³³⁾와 6개 발전자회사는 우크라이나발 고유가 지속, 에너지 믹스 변화 등으로 연료 및 구입전력비가 크게 증가하여 대규모 영업적자가 발생하였음.
 - 이들 기관은 신규·대체발전소 건설 및 신재생 에너지 투자 확대에 따른 차입 규모 증가로 부채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원자재 가격 상승, 전력시장 제도 변경³⁴⁾ 등과 같은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당기순이익이 크게 변동하며 수익이 불안정해짐.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부동산 경기 호조에 따라 지속적인 당기순이익을 실현 중이나, 부채규모는 증가세³⁵⁾를 보이므로, 금리인상 등의 대외요인 악화 시에 부채에 대한 금융비용 상승이 재무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함.

〈표 II-18〉 한국전력공사·6개 발전자회사 주요 재무지표(연결기준) 추이(2018~2022년)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분기
연결	당기순이익	△1.2	△2.3	2.1	△5.3	△10.8
	자본	71.1	68.9	70.7	65.3	55.4
	부채	114.2	128.7	132.5	145.8	165.8
	부채비율	160.6%	186.8%	187.5%	223.2%	299.1%
별도	한전 영업이익	△2.2	△2.8	2.8	△7.4	△15.0

자료: 기획재정부,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도 추진계획」,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2. 6. 30. 및 기획재정부 알리 오시스템의 기관별 공시정보(2022. 4. 29.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³⁶⁾

33) 한국전력공사 별도재무제표기준 2021년 영업적자는 △7.4조 원으로, 2020년 대비 영업이익이 10.2조 원 감소 하였으며 2022년 2분기 영업적자는 15조 원으로 7.6조 원 감소함

34) 전력시장 제도 변경은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 논의에 따른 것으로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전력 시장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급격히 상승하는 비상 상황 시 한시적으로 평시 수준 정산가격을 적용하는 긴급 정산상한가격을 신설하는 것으로, 전력거래가격 상한제 도입에 따라 전력정산금 감소로 당기순이익이 감소 될 수 있음

35)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채규모: ('16)133.3조 원 → ('17)130.9조 원 → ('18)128.1조 원 → ('19)126.7조 원 → ('20)129.7조 원 → ('21)138.9조 원

36) 발전자회사는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중부 발전(주)으로 총 6개임

- 재무구조 전반 취약기관은 자원공기업인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가스공사, 대한석탄공사와 SOC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 등 총 5개 기관임.
-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가스공사, 대한석탄공사 등과 같은 자원공기업은 해외투자 자산손상, 당기순손실 누적, 완전자본잠식 상태이거나 부채비율이 300% 초과된 상태로 재무위험 상태임.
- SOC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속철 사업 매출 감소, 고속철도 외 사업의 수요 부족, 낮은 운임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손실로 부채비율³⁷⁾이 증가하는 추세임.

〈표 II-19〉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가스공사, 대한석탄공사
재무현황추이(2017~2021년)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한국석유공사	당기순이익	△736,792	△1,159,541	△154,752	△2,439,173	△45,972
	자본총계	2,383,890	764,065	530,846	△1,140,911	△1,552,252
	부채총계	17,127,810	17,474,936	18,130,956	18,644,947	19,962,993
	부채비율	718.48	2,287.10	3,415.48	자본잠식	자본잠식
한국광해광업공단 (연결)	당기순이익					24,822
	자본총계					△2,218,307
	부채총계					7,264,179
	부채비율					자본잠식
한국가스공사 (연결)	당기순이익	△1,191,735	526,745	58,269	△160,683	964,522
	자본총계	8,140,414	8,497,984	8,146,521	7,735,155	9,119,336
	부채총계	28,999,025	31,191,707	31,165,334	28,174,619	34,550,566
	부채비율	356.24	367.05	382.56	364.24	378.87
대한석탄공사 (연결)	당기순이익	△79,855	△82,345	△122,091	△114,703	△123,459
	자본총계	△958,483	△1,015,131	△1,110,892	△1,194,156	△1,288,007
	부채총계	1,757,726	1,820,735	1,981,336	2,105,752	2,258,527
	부채비율	자본잠식	자본잠식	자본잠식	자본잠식	자본잠식

주: 1.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산출

2. 한국광해광업공단은 2021년 9월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 기관 통합으로 이전 자료 해당없음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의 기관별 공시정보(2022. 4. 29.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37) 한국철도공사의 부채비율: ('16)288.2% → ('17)298.0% → ('18)237.0% → ('19)257.9% → ('20)247.8% → ('21)87.3%

〈표 II-20〉 2022년 재무위험기관 선정결과 주요내용

구분	기관명	재무상황분석
사업수익성 악화(징후) 기관 (9개)	한국전력공사(연결기준)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전력공사는 고유가, 에너지 믹스 변화 등으로 재무구조 악화 → 대규모 영업적자 발생('21년 △5.9조 원/연결) 발전자회사는 신규발전소 건설 및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로 부채비율 지속 증가세
	한국지역난방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자재가격 상승 등 경영환경 변화에 당기순이익이 크게 변동
	한국토지주택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동산 경기 호조로 당기순이익 실현 중이나, 대규모 사업 추진으로 부채 규모 증가세 → 금리 인상 등 대외요인 악화 시, 대규모 부채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 등 재무위험 가능성
재무구조 전반 취약기관 (5개)	자원공기업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가스공사, 대한석탄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투자로 인한 자산손상 및 저수익성 사업구조로 당기순손실 누적 → 완전자본잠식 상태이거나 부채비율 300% 이상
	한국철도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고속철도 이외 나머지 사업에서 지속 손실로 부채비율 증가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재무위험기관 14개 선정」, 보도자료, 2022. 6. 30.

3) 재무위험기관 관리 방향

- 정부는 재무위험기관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대한 거시적 협의·조정 강화, 출자·출연 총량관리 등 사업위험 관리 확대와 이자비용 부담 완화 등의 경영 효율성 제고를 통해 전방위적인 집중관리를 시행할 계획임.
-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대한 협의·조정 강화를 위해 기관의 경영환경, 사업 전망 등을 구분회계 단위로 상세 분석하여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위원회 검증 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반영하는 검증체계를 도입하고자 함.
- 재무 목표에 따른 공공기관 생산성 제고를 위해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를 발표하고, 5개년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관별 맞춤형 관리를 추진할 계획임.

- 사업위험은 출자회사 재무실적을 바탕으로 연간 출자총량(계획)을 협의하고, 기관의 재무상황을 고려하여 연간 출연 규모를 과거 3개년 평균 출연규모의 80% 이하로 제한하거나 출자회사의 당기순이익·부채비율에 해당하는 재무실적을 평가할 것임.
 - 더하여, 사업위험 관리를 위해 기존의 출자회사에 대한 재무분석 후 회복 가능성에 따라 청산 또는 매각 등의 정비를 검토해 나갈 계획임.
 -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관의 업무 확대 또는 증가에 따른 증원 요청 시 기존 인력의 3% 이상을 재배치하는 방식 등으로 증원을 관리하고 부채증가 또는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목표이자율(이자비용/총차입금)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임.
 -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 후 2년 이내 재무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기관은 전문기관의 조직진단을 실시할 계획임.
- 재무위험기관의 5개년(2021년~2026년) 재정건전화 계획은 자산매각 등 재정건전화를 통한 부채감축(총 34.0조 원 규모)과 자본 확충 추진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23년 이후 부채 증가규모 및 부채비율이 하락할 것이 전망됨.³⁸⁾
- 자산매각은 4.3조 원 가량 매각할 계획이며, 기관 고유기능과 무관한 비핵심자산이나 전략적 가치가 낮은 해외사업 지분 등을 매각할 것임.
 - 사업조정은 13조 원 가량 추진될 계획으로 사업·투자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사업조정, 비핵심사업 투자 철회 등이 추진될 계획임.
 - 경영효율화를 통해 5.4조 원 가량 경영 자금이 절감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으며, 설비운영 효율화를 통한 사업비 절감, 사업조정에 따른 이자비용 감소, 출연 축소 등이 추진될 계획임.
 - 수익확대를 위해 서비스 공급가격 산정제도 개선(한국전력공사), 철도 수송능력 확충(한국철도공사) 등일 추진될 계획으로 이를 통해 1.2조 원 규모의 수익이 확대할 것이 전망됨.
 - 자본은 10.1조 원 가량 확충될 것이며 신종자본증권 발행, 유형자산 재평가 등을 통해 진행될 것임.

38) 기획재정부, 「'22~'26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주요내용」, 보도자료, 2022. 8. 31., 「14개 재무위험기관 재정건전화계획을 반영한 '22~'26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보도자료, 2022. 8.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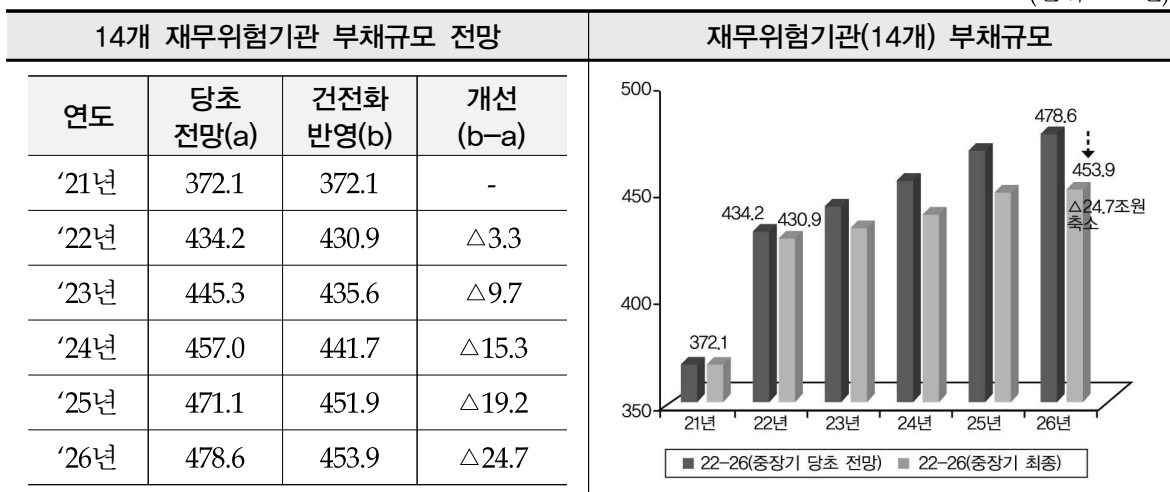
- 재무위험기관의 재정건전화계획 추진을 통해 부채규모 및 부채비율의 증가폭을 최소화하는 재무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재무위험기관의 2022년 부채 전망치는 연료비등의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5.8% 증가한 430.9조 원 수준으로 전망되나 장기적으로는 이후 추진될 재정건전화의 영향으로 부채규모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 전망되어 2022년에서 2026년 사이 부채 증가 규모를 당초 44.4조 원에서 23조 원 수준으로 하향함.
 - 2022년 부채비율은 한국전력공사의 대규모 당기순손실 등으로 345.8%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향후 자본확충, 수익확대 등을 통해 부채비율이 매년 11~34%p씩 감소하여 2026년까지 265.0%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 전망됨.
 - 재무위험기관 중 부채비율 200% 미만인 기관은 2021년 6개에서 2026년 8개³⁹⁾로 증가하고 한국광해광업공단은 2026년에 자본잠식 상태를 벗어날 것이 전망됨.

〈표 II-21〉 2021~2026년 재정건전화계획을 통한 부채감축 및 자본확충 규모
(단위: 억 원)

합계	자산매각	사업조정	경영효율화	수익확대	자본확충
340,602	42,756	130,397	53,765	12,686	100,998
100.0%	12.6%	38.3%	15.8%	3.7%	29.6%

자료: 기획재정부, 「22~26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주요내용」, 보도자료, 2022. 8. 31.을 참고하여 작성

[그림 II-8] 2021~2026년 재정건전화계획에 따른 재무위험기관 부채규모 전망
(단위: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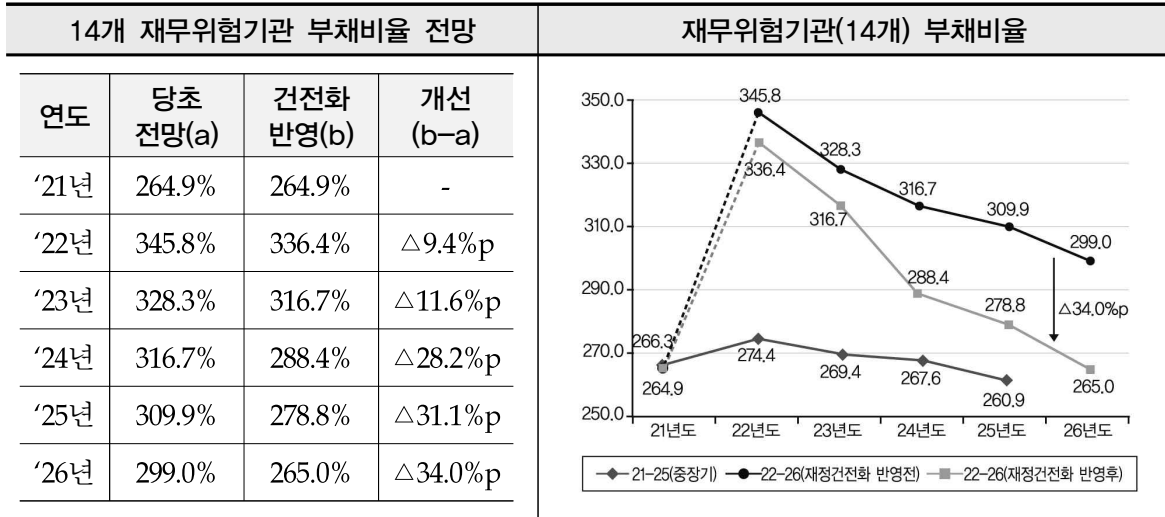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14개 재무위험기관 재정건전화계획을 반영한 '22~'26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보도자료, 2022. 8. 31.을 참고하여 작성

39) 한국수력원자력(주), 발전5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공사

[그림 II-9] 2021~2026년 재정건전화계획에 따른 재무위험기관 부채비율 전망

(단위: %)



자료: 기획재정부, 「22~'26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주요내용」, 보도자료, 2022. 8. 31.을 참고하여 작성

□ 14개 재무위험기관에 대한 관리는 기관의 재무상황에 맞춰 구분하여 맞춤형으로 추진함.

- 사업수익성 악화기관인 한국전력공사, 발전 5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9개 기관은 부채증가 추세 완화를 위해 부동산 등 자산 매각, 경상경비 긴축, 투자 총량제 운영, 신규투자 승인 및 사업관리 강화 등과 같은 수익성 제고 및 비용구조 분석을 통한 지출 효율화에 집중할 예정임.
- 재무구조 전반 취약기관인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가스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5개 기관은 적극적인 부채 감축을 위해 수익성 제고, 지출효율화에 더하여 해외 비핵심자산 매각·철수 등 사업조정, 유사·중복 업무 원점에서 재검토 등과 같은 사업구조 조정도 실시할 예정임.

4) 재무위험기관 향후 조치 계획

□ 재무위험기관의 집중관리를 위한 조치는 순차적으로 추진될 것이며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외부전문기관에서 재무상황평가를 매년 6월 실시하도록 정례화 할 것임.

〈표 II-22〉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 조치 단계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 조치 단계

- (1) 재무위험기관 선정 결과 통보
- (2) 5개년 '재정건전화 계획' 작성 가이드라인 마련·기관 배포
- (3) 기관별 부채감축 목표를 포함한 5개년 '재정건전화 계획' 마련
- (4) 5개년 '재정건전화 계획'을 반영하여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 (5) 재무위험기관의 집중관리 이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22년 경영실적평가 편람 수정

자료: 기획재정부,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도 추진계획」,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2. 6. 30.을 참고해 작성

- 재무위험기관에 대한 거시적인 관리방안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협의·조정 강화, 사업위험 관리 확대, 이자비용 부담 완화 등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원에 대해 세부적인 조치가 이뤄질 것임.
- 중장기계획의 외부전문가진단 및 자체검증 의무화, 재정건전화 계획 수립과 같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협의·조정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중장기계획 작성지침을 통보할 것임.
 - 재무위험기관의 재정건전화계획 이행실적은 분기별로 점검하고 반기별 실적을 공운위에 보고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임.
 - 재무건전성 관리는 2022년 7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과 연계하여 추가적인 자구 노력을 지속 발굴할 것임.
- 사업위험관리 확대를 위한 연간출자계획 협의, 연간 출연규모 제한, 출자회사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조치로는 고유·핵심업무와 무관하거나 출자목적은 달성한 회사의 지분, 완전자본잠식 또는 투자손실이 50%이상 등의 이유로 출자금 회수가 불투명한 회사의 지분을 정리할 계획임.⁴⁰⁾
- 경영효율성 제고 지원방안인 증원 협의 및 인력 재배치, 자금조달 및 운용 효율화에 대한 세부 조치로는 증원요구서 양식 개정과 자산운용지침 개정이 이뤄질 계획임.
- 조직진단을 통한 경영효율성 제고는 경영지침 6조의3(조직진단)에 근거하여 이행될 것임.

40) 기획재정부,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보도자료, 2022. 7. 29.

3.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가.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운영

1) 안전관리등급제 추진경과⁴¹⁾

-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건설현장, 작업장, 시설물 및 연구시설의 위험한 작업 환경을 가진 공공기관의 안전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안전관리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임.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실질적 안전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사회 전반의 안전 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2020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1년 최초로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를 실시하였음.
 - 2021년 안전관리등급제를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시범사업에 이어 2020년 10월에 심사 보조기관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시범사업 전반에 대한 총평회를 개최하고, 11월에는 시범사업 추진 성과 등을 바탕으로 본 사업 시행을 위한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운영에 관한 지침」⁴²⁾을 제정함.
- 2021년 9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심사 결과를 살펴보면, 3등급(보통) 이상 65개(66.3%), 4-1등급(주의) 15개(15.3%), 4-2 및 5등급(미흡이하) 18개(18.4%)로 나타남.
 - 기관의 안전인력·예산 등 구축된 안전역량을 토대로 작업현장에서 어떻게 안전 활동을 이행하고, 그 결과 산재 사고율이 감소했는가 등의 안전성과를 종합 심사 하여 5등급으로 부여함.
- 기획재정부는 안전관리 4등급 이하 33개 기관의 안전능력 강화를 위해 컨설팅, 교육, 제도개선 등 맞춤형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개선 실적을 점검·평가하였음.

41) 기획재정부, 「2021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계획」,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2021. 12. 29., 「2021년도 안전관리등급 평가 착수」, 보도자료, 2022. 1. 26. 및 「2021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최종 확정」, 보도자료, 2022. 5. 4. 참고

42) 안전등급 심사단 구성 및 운영, 안전등급 심사기준(서면, 현장검증), 안전등급 결정 방법, 심사결과 활용 등을 규정

- 안전능력 부족 33개 기관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토안전관리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등 안전 전문기관의 컨설팅 제공을 통해 1,357개의 개선필요과제를 조기 완료함.⁴³⁾
 - 공공기관 경영진의 안전의식 수준을 제고하고자 68개 기관⁴⁴⁾을 대상으로 9차례 경영진⁴⁵⁾ 안전혁신 리더십 교육을 실시함.
 - 교육 실시 전에 78.6점이었던 'CEO의 안전의식 향상도'가 교육 후 94점으로 큰 폭으로 개선되는 등 안전의식 수준 및 교육 효과는 긍정적으로 평가됨.
 -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 안전의 날(11. 11)'을 지정하여 안전혁신 유공자 13명에 대한 경제부총리 표창을 수여하고 안전혁신 우수 사례집을 발간·배포함.
 - 공공 공사계약에서 안전능력 우수업체가 낙찰될 수 있도록 종합심사낙찰제⁴⁶⁾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⁴⁷⁾(PQ) 제도를 개선함.
- 기획재정부는 2022년 안전관리등급제를 운영하기 앞서 2021년 12월, 「2021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계획」 및 『2021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평가 편람』을 확정하여 발표함.
- 시행계획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안전 능력 향상 유도 및 심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2021년도 심사결과를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반영⁴⁸⁾함.
 -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심사단(이하 '심사단') 민간위촉위원의 약 50%를 고용노동부 안전활동 수준평가 위원으로 위촉하여 개별평가와의 연계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고, 중복지표 통합 및 간소화를 통해 건설현장 심사 지표수를 44개에서 32개로 축소함으로써 기관의 심사 부담을 완화함.
 - 현장검증을 심사대상 전 기관으로 확대하고, 현장에서의 안전활동 작동 상태를 심사하기 위해 기관별 작업현장은 무작위(random) 방식으로 선정함.
 - 사고사망 감소 '노력도' 심사지표를 신설하여 산재 사고사망 증감에 대한 계량 심사와 함께 사고 감소노력을 비계량 심사함으로써 중대재해 예방 노력⁴⁹⁾을 유도하고, 전년도 심사 결과 제기된 개선 필요과제 이행여부를 심사함으로써 기관의

43) 부처합동 안전 점검회의를 통해 4-2등급 이하 744개(9. 30.), 4-1등급 613개 이행완료(10. 25.) 확정

44) 안전관리등급 미흡 33개 기관(의무) 및 보통 이상 35개 기관(자발적 참여)

45) 기관장 및 상임이사를 대상으로 함

46) 산재예방실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 외 사용제한, 산업안전법 위반 등 안전평가항목 확대

47) 사고사망만인를 평가: (현행) 가점(+0.8점 이내) → (개선) 가·감점(△1~+1점)

48) 재난 및 안전관리: 사이버 보안, 재난 및 산업재해 예방 노력,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 등으로 구성(비계량 4점)

49) 2020년도: (계량) 사고사망 발생 0점, 미발생 90점 → 2021년도: (계량) 40점, (비계량) 노력도 50점

지속적인 안전능력 향상 노력을 견인함.

□ 심사단⁵⁰⁾은 안전역량, 안전수준, 안전성과 등 3대 범주를 심사하여 종합점수를 산출하며, 종합점수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하여 기관의 안전관리등급을 부여함(그림 II-10).

- 안전역량 및 안전성과는 공통기준을 적용하여 절대 평가함.
- 안전수준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작업장, 건설현장, 시설물, 연구시설의 4대 위험요소를 세분화하여 절대평가함.

[그림 II-10] 2021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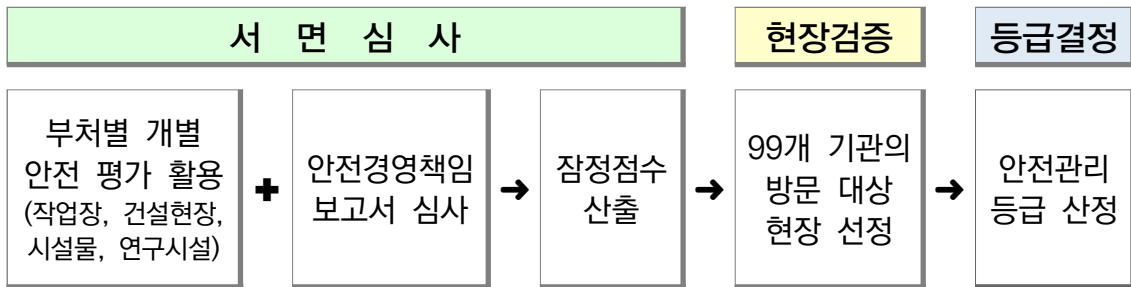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2021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평가 편람』, 2021. 12.

50)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수행 주체로서, 당연직 4명(기획재정부 2차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급), 민간위촉직 32명으로 구성

- 심사절차([그림 II-11])는 위험요소별 기준에 시행중인 안전평가 정보 활용 및 안전경영책임보고서 심사 등의 서면심사와 안전관리대상 현장의 작동성을 확인하는 현장검증으로 구분됨.
- 안전관리등급 산정 시 위험요소별 개별 안전평가(<표 II-23>) 정보와 안전경영책임보고서(<표 II-24>) 심사결과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모든 기관의 현장검증을 통해 복수의 위험요소를 종합심사하여 최종적으로 안전관리등급을 산정함.

[그림 II-11] 2021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절차



자료: 기획재정부, 『2021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평가 편람』, 2021. 12.

<표 II-23> 위험요소별 개별 안전평가 적용방법

위험요소	개별 안전평가	평가기관	적용방법
작업장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기존 안전평가 결과 검증·참조
건설현장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근로자의 안전관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기존 안전평가 결과 검증·참조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평가 (공사중 구축물등의 안전관리)	국토안전관리원	• 기존 안전평가 결과 검증·참조 • 추가자료 활용
시설물	시설물 유지관리 실적점검	국토안전관리원	• FMS 자료 검증·참조 • 추가자료 활용
연구시설	연구실 안전관리 현장검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 기존 안전평가 결과 검증·참조

자료: 기획재정부, 『2021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평가 편람』, 2021. 12.

<표 II-24> 안전경영책임보고서 구성항목

구 성	내 용
I. 2021년도 기본현황	1. 안전관리 대상 시설 및 작업장 2.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감축 목표·실적 3. 안전 조직 구성·인원 현황 및 역할 4. 안전 예산 현황 5. 위험성평가 이행·추진 현황 6.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 현황
II. 2021년도 실적 및 평가	1. 안전경영 방침 및 활동·실적 2. 주무부처의 안전경영 점검결과 및 조치계획 3. 외부 평가기관의 최근 안전평가 결과 4. 대국민 안전가치 실현 노력과 성과 5.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실적
III. 2022년도 안전경영책임 계획의 주요내용	1. 안전활동 추진방향 2. 주요 추진내용 등

자료: 기획재정부, 『2021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평가 편람』, 2021. 12.

- 2021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대상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 중 위험 작업장·건설현장·시설물·연구시설을 1개 이상 보유하여 근로자 및 이용국민에 대한 안전관리가 중요한 99개 기관으로 지정함.
- 2021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대상 선정 기준은 <표 II-25>와 같음.
- 2021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대상 기관과 보유 위험요소별 심사대상 기관은 <표 II-26> 및 <표 II-27>과 같음.

<표 II-25> 2021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대상 선정 기준

위험요소	선 정 기 준
작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무형의 재화를 생산·공급하거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업을 보유하여 소속 직원 및 협력사 근로자 등이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건설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며, 기존 평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기관
시설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 「지속 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따른 기반시설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국가핵심기반 중 SOC 시설물 또는 다중이용 건축물을 소유·관리하는 기관
연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시설을 보유한 공공기관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

자료: 기획재정부, 『2021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평가 편람』, 2021. 12.

〈표 II-26〉 2021년도 안전관리등급 심사대상기관(99개)

공기업(31개)	준정부기관(27개)	기타공공기관(41개)
1. (주)강원랜드	1. 재단법인	1. 광주과학기술원
2. (주)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2. 국방과학연구소
3. 대한석탄공사	2. (재)우체국물류지원단	3. 극지연구소
4. 부산항만공사	3. 공무원연금공단	4. 기초과학연구원
5. 여수광양항만공사	4. 국가철도공단	5. 나노융합기술원
6. 울산항만공사	5. 국립공원공단	6. 대구경북과학기술원
7. 인천국제공항공사	6. 국민연금공단	7.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8. 인천항만공사	7. 근로복지공단	8.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9. 주식회사 에스알	8. 도로교통공단	9. 세계김치연구소
10. 한국가스공사	9. 서울올림픽기념	10.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11. 한국공항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11. 안전성평가연구소
12. 한국광해광업공단	10. 시청자미디어재단	12.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13. 한국남동발전(주)	11. 한국가스안전공사	13. 울산과학기술원
14. 한국남부발전(주)	12. 한국교통안전공단	14. 코레일유통(주)
15. 한국도로공사	13. 한국국토정보공사	15.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6. 한국동서발전(주)	1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6.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7. 한국마사회	15. 한국농어촌공사	17. 한국과학기술원
18.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6.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18. 한국기계연구원
19. 한국서부발전(주)	17. 한국산업단지공단	19.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0. 한국석유공사	18. 한국석유관리원	20.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21. 한국수력원자력(주)	19. 한국소방산업기술원	21. 한국나노기술원
22. 한국수자원공사	20. 한국수산자원공단	22. 한국뇌연구원
23. 한국전력공사	21. 한국승강기안전공단	23.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4. 한국조폐공사	22. 한국에너지공단	24. 한국세라믹기술원
25. 한국중부발전(주)	23.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5.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26. 한국지역난방공사	24. 한국자산관리공사	26. 한국식품연구원
27. 한국철도공사	25. 한국전기안전공사	27. 한국어촌어항공단
28. 한국토지주택공사	26.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28.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9. 한전KDN	27. 한국환경공단	29. 한국원자력연구원
30. 한전KPS(주)		30. 한국재료연구원
31. 해양환경공단		31. 한국전기연구원
		32. 한국전자통신연구원
		33. 한국지질자원연구원
		34. 한국전문연구원
		35. 한국철도기술연구원
		36. 한국표준과학연구원
		37. 한국한의학연구원
		38. 한국항공우주연구원
		39. 한국해양과학기술원
		40.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41. 한국화학연구원

주: 밑줄 친 기관은 공공기관 부설기관에 해당하며 이탤릭체 처리된 기관은 신규 심사대상기관임
 자료: 기획재정부, 「2021년도 안전관리등급 평가 착수」, 보도자료, 2022. 1. 26.

〈표 II-27〉 2021년도 보유 위험요소별 심사대상 기관(99개)

구분	위험요소	공공기관명
1 개 보유 (74개)	작업장 (30개)	근로복지공단, 대한석탄공사, 도로교통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시청자미디어재단,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주식회사 에스알, (재)우체국물류지원단, 코레일유통(주),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전KDN, 한전KPS(주), 해양환경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건설현장 (1개)	한국자산관리공사
	시설물(7개)	(주)강원랜드, 공무원연금공단, 국립공원공단, 국민연금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마사회, 한국산업단지공단
	연구시설 (36개)	광주과학기술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극지연구소, 나노종합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세계김치연구소, 안전성평가연구소,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울산과학기술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뇌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화학연구원
2 개 보유 (9개)	작업장 +건설(1개)	한국환경공단
	작업장 +시설물(7개)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건설현장 +연구(1개)	국방과학연구소
3 개 보유 (16개)	작업장 + 건설현장 + 시설물	국가철도공단, 부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주: 밑줄 친 기관은 공공기관 부설기관에 해당하며 이탤릭체 처리된 기관은 신규 심사대상기관임
 자료: 기획재정부, 「2021년도 안전관리등급 평가 착수」, 보도자료, 2022. 1. 26.

- 안전관리등급 심사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체계 및 현장 안전활동 수준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안전역량, 안전수준, 안전성과 등 3개 범주로 구분하여 종합점수(1,000점 만점)를 산출함.
- <표 II-28>과 같이 안전역량 및 안전성과 범주는 모든 기관에 공통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안전수준 범주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위험요소별로 개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표 II-29>)함.
- 범주별 심사지표 및 배점은 <표 II-30>과 같음.

<표 II-28> 심사범주별 주요 평가내용

심사범주	주요 심사내용								
[공통기준] 안전역량 (30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이 안전활동을 통하여 안전성과를 이뤄낼 수 있는 기본 역량으로 체계역량과 관리역량으로 구성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체계역량</td> <td>• 경영진의 안전경영 리더십, 안전조직·인력·예산, 안전관리 규정 작성 및 안전기본계획 수립 수준 등</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관리역량</td> <td>• 공공기관 관련 근로자 및 이용국민의 안전·보건을 위한 필수 안전활동 실행능력</td> </tr> </table>	체계역량	• 경영진의 안전경영 리더십, 안전조직·인력·예산, 안전관리 규정 작성 및 안전기본계획 수립 수준 등	관리역량	• 공공기관 관련 근로자 및 이용국민의 안전·보건을 위한 필수 안전활동 실행능력				
체계역량	• 경영진의 안전경영 리더십, 안전조직·인력·예산, 안전관리 규정 작성 및 안전기본계획 수립 수준 등								
관리역량	• 공공기관 관련 근로자 및 이용국민의 안전·보건을 위한 필수 안전활동 실행능력								
[개별기준] 안전수준 (45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이 안전역량을 바탕으로 기관이 보유한 위험요소를 계획·실행·점검·개선 등의 일련의 활동을 통해 안전하게 유지·관리하는 수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작업장</td> <td>• 작업장 내 잠재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 및 안전관리 수준</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건설현장</td> <td>• 건설발주 공사단계별 발주자 의무 수행과 시공자의 안전조치 점검 및 안전환경조성 노력 • 발주기관의 건설안전 체계구축 수준 및 안전한 건설현장 환경지원, 건설현장 안전활동 이행, 건설안전 목표달성 및 피해최소화 노력</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시설물</td> <td>• 시설물 관리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 체계 구축, 안전 점검 실시 및 성능수준, 보수·보강, 전문성 강화 및 대국민 안전확보 노력</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연구시설</td> <td>• 연구실 안전 유지·관리 수준</td> </tr> </table>	작업장	• 작업장 내 잠재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 및 안전관리 수준	건설현장	• 건설발주 공사단계별 발주자 의무 수행과 시공자의 안전조치 점검 및 안전환경조성 노력 • 발주기관의 건설안전 체계구축 수준 및 안전한 건설현장 환경지원, 건설현장 안전활동 이행, 건설안전 목표달성 및 피해최소화 노력	시설물	• 시설물 관리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 체계 구축, 안전 점검 실시 및 성능수준, 보수·보강, 전문성 강화 및 대국민 안전확보 노력	연구시설	• 연구실 안전 유지·관리 수준
작업장	• 작업장 내 잠재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 및 안전관리 수준								
건설현장	• 건설발주 공사단계별 발주자 의무 수행과 시공자의 안전조치 점검 및 안전환경조성 노력 • 발주기관의 건설안전 체계구축 수준 및 안전한 건설현장 환경지원, 건설현장 안전활동 이행, 건설안전 목표달성 및 피해최소화 노력								
시설물	• 시설물 관리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 체계 구축, 안전 점검 실시 및 성능수준, 보수·보강, 전문성 강화 및 대국민 안전확보 노력								
연구시설	• 연구실 안전 유지·관리 수준								
[공통기준] 안전성과 (25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이 안전역량과 안전활동을 통해 실현한 안전문화 확산, 안전경영의 성과(안전경영책임보고서), 사망재해 감소 성과 등 								

주: 종합점수(1000) = 안전역량(300)+안전수준(450)+안전성과 및 가치(250)
 자료: 기획재정부, 『2021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평가 편람』, 2021. 12.

〈표 II-29〉 위험요소 및 우선순위별 가중치표

구분	계	관리1	관리2	관리3	관리4
위험요소 1개	100%	100%			
위험요소 2개	100%	60%	40%		
위험요소 3개	100%	45%	30%	25%	
위험요소 4개	100%	40%	25%	20%	15%

주: 안전수준 가중치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위험요소 수량과 조합에 따른 위험요소의 상대적 크기를 고려하여 차등
 자료: 기획재정부, 『2021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평가 편람』, 2021. 12.

〈표 II-30〉 심사지표 총괄표

범 주	심사분야	심 사 지 표	배점
		총 점	1,000
① 안전역량 [300점]	안전역량 합계		300
	1. 체계역량 [170점]	소 계	170
		① 안전보건경영 리더십	40
		②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 및 역량	40
		③ 안전보건경영 투자	30
		④ 안전관리규정 및 절차·지침	30
	⑤ 안전관리 목표 및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30	
	2. 관리역량 [130점]	소 계	130
		① 위험성평가 실시 체계	40
		② 근로자 건강 유지·증진 활동 체계	30
③ 안전보건교육·안전인식·활동참여		30	
④ 재해조사 및 비상상황 대비·대응 능력	30		
② 안전수준 [450점]	1. 작업장	【작업장 안전관리】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450
		① 작업장 기본 안전보건관리 수준	50
		② 기계·전기 설비 위험방지 및 추락예방 조치	150
		③ 화재 및 화학물질사고 예방활동 수준	90
		④ 위험 작업 및 상황 안전관리	60
	⑤ 수급업체 안전보건 관리	100	
	2. 건설현장	【건설발주 안전관리】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토안전관리원	450
		① 발주현장의 안전보건 체계	30
		② 공사 착공 전 안전보건활동	60
③ 공사 착공 후 안전보건활동		95	

〈표 II-30〉의 계속

범 주	심사분야	심 사 지 표	배점	
㉞ 안전수준 [450점]	2. 건설현장	④ 발주현장의 안전보건 여건	40	
		⑤ 건설안전 환경조성	90	
		⑥ 안전시공 작동수준	135	
	3. 시설물	【시설물 안전관리】 - 국토안전관리원		450
		① 시설물 관리계획 수립 수준	40	
		② 시설물 안전을 위한 조직의 노력	50	
		③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50	
		④ 시설물 유지관리 체계 구축 수준	100	
		⑤ 시설물 안전성능 수준	60	
		⑥ 시설물 보수·보강 및 노후화 대비	50	
		⑦ 시설물 안전 전문성 강화 노력 수준	50	
	⑧ 대국민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관리 수준	50		
	4. 연구시설	【연구실 안전관리】 -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450
		① 연구실 일반 안전 유지·관리 수준	30	
		② 연구실 기계 안전 유지·관리 수준	60	
		③ 연구실 전기 안전 유지·관리 수준	60	
		④ 연구실 화공 안전 유지·관리 수준	60	
		⑤ 연구실 소방 안전 유지·관리 수준	60	
		⑥ 연구실 가스 안전 유지·관리 수준	60	
		⑦ 연구실 위생 안전 유지·관리 수준	60	
⑧ 연구실 생물 안전 유지·관리 수준	60			
㉟ 안전성과 및 가치 [250점]	공통	안전성과 합계		250
		① 안전관리등급 평가결과 개선 조치사항 이력관리	50	
		② 안전경영책임 활동 및 성과(안전경영책임보고서)	80	
		③ 안전문화 확산	20	
		④ 사고사망 감소 성과 및 노력도	100	
		④-1 사고사망 감소 성과(계량)	(40)	
		④-2 사고사망 감소 노력도(비계량)	(60)	

주: 안전수준 범주 분야별 가중치 적용 후 환산
 자료: 기획재정부, 『2021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평가 편람』, 2021. 12.

2) 2021년도 안전관리등급제 심사결과⁵¹⁾

- 2022년 9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를 살펴보면, 심사대상기관의 절반 이상이 보통 수준인 3등급에 해당함.
- 등급별 분포를 보면, 2등급(양호) 11개(11.1%), 3등급(보통) 59개(59.6%), 4등급(미흡) 26개(26.3%), 5등급(매우 미흡) 3개(3.0%)로 나타남.
 - 다만, “구성원 전체의 안전관리 참여가 일상화(전사적)되어 있고, 안전 활동이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여야만 달성할 수 있는 1등급 기관은 제도 시행 2년차인 만큼 아직은 없었음.
- 전년 대비 등급 분포를 살펴보면, 보통 이상 수준인 2~3등급 기관은 증가⁵²⁾하고 보통 미만 수준인 4~5등급 기관은 감소하여 안전관리 수준이 전년 대비 전반적으로 개선된 모습임.
 - 이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심사결과가 경영실적평가에 반영됨에 따라 각 공공기관의 안전에 대한 인식과 경각심이 높아진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됨.

〈표 II-31〉 2020~2021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등급 분포

(단위: 개, %, %p)

구 분	기관수	1등급 (우수)	2등급 (양호)	3등급 (보통)	4등급 (미흡)	5등급 (매우미흡)
'20년도(A)	98	-	8 (8.2)	57 (58.2)	31 (31.6)	2 (2.0)
'21년도(B)	99	-	11 (11.1)	59 (59.6)	26 (26.3)	3 (3.0)
증감(B-A)	1	-	+3 (2.9)	+2 (1.4)	△5 (△5.3)	+1 (1.0)

자료: 기획재정부, 「2021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최종 확정」, 보도자료, 2022. 5. 4.

- 전년 대비 등급 상승기관은 26개(26.3%)이고 하락기관은 20개(20.2%)이며 나머지 51개 기관(51.5%)은 전년도와 동일한 등급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등급 상승기관 중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전년 대비 3등급이 상승하였고, 한국중부발전(주)과 한국재료연구원은 2등급이 상승함.

51) 기획재정부, 「2021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최종 확정」, 보도자료, 2022. 5. 4. 참고

52) ('20) 66.4% → ('21) 70.7%

-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안전조직 신설을 통한 안전책임경영체계 강화, 경영진 전원 위험성평가 교육 이수 및 원·하청 상생 등 실질적 안전역량 향상에 노력하고, 기관의 특성을 살려 학생·임직원 등 연구활동 종사자의 안전 확보에 집중함.
 - 한국중부발전(주)은 용접을 포함한 8대 고위험 작업을 대상으로 위험성 사전 검토·조치 확인을 통한 작업 허가, 위험작업 거부·신고제도 및 위험요인 발견 시 모바일을 통해 즉시 신고·조치하는 확인시스템(안전talk) 운영 등 안전관리 실행력을 강화함.
 - 한국재료연구원은 경영진부터 수급업체 근로자까지 참여하는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환류하고, 연구원 자체 안전체험교육장 구축 및 운영 등 안전의식을 제고함.
- 등급 하락기관 중 (재)우체국물류지원단은 전년 대비 2등급이 하락하였으며,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19개 기관은 1등급 하락함.

〈표 II-32〉 2021년도 공공기관 유형별 안전관리 종합등급의 전년 대비 변동내역

(단위: 개)

구 분	기관 수	등급 상승(+)				등급 유지	등급 하락(Δ)			신규 대상 기관
		소계	+3 등급	+2 등급	+1 등급		소계	Δ1 등급	Δ2 등급	
계	99	26	1	2	23	51	20	19	1	2
공기업	31	8	-	1	7	18	5	5	-	-
준정부기관	27	5	-	-	5	16	6	5	1	-
기타공공기관	41	13	1	1	11	17	9	9	-	2

자료: 기획재정부, 「2021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최종 확정」, 보도자료, 2022. 5. 4.

- 위험요소별로는 연구시설(75.7%)이 작업장(65.8%)이나 건설현장(66.6%)보다 보통 이상 수준인 2~3등급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연구시설은 전년도 심사 이후 주무부처와 기관이 연구실 안전수준 개선 노력에 집중하여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됨.
- 2021년도 심사결과 중 5등급을 받은 3개 기관 모두 작업장 위험요소에 해당함.
 - 대한석탄공사, (재)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어촌어항공단 등 3개 기관 모두 안전 책임경영 활동 부진, 전년도 개선 권고과제 이행 부실⁵³⁾, 위험설비 안전장치

미설치 등 안전역량과 안전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표 II-33〉 2021년도 공공기관 위험요소별 종합등급 분포

(단위: 개, %)

구 분	기관수	1등급 (우수)	2등급 (양호)	3등급 (보통)	4등급 (미흡)	5등급 (매우미흡)
계	99	-	11 (11.1)	59 (59.6)	26 (26.3)	3 (3.0)
작업장	38	-	5 (13.2)	20 (52.6)	10 (26.3)	3 (7.9)
건설현장	12	-	1 (8.3)	7 (58.3)	4 (33.3)	-
시설물	12	-	2 (16.7)	7 (58.3)	3 (25.0)	-
연구시설	37	-	3 (8.1)	25 (67.6)	9 (24.3)	-

자료: 기획재정부, 「2021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최종 확정」, 보도자료, 2022. 5. 4.

- 공공기관 유형별로는 모든 유형에서 3등급 비율(59.6%)이 높게 나타났으며, 공기업은 타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2등급 비율(19.4%)이 높게 나타남.
- 이는 공기업이 건설현장 등 위험요소를 다수 보유하고 있음에도 대부분 대형 SOC·에너지 기관으로 기관장의 안전경영의지, 전담조직체계 구축, 안전투자 등이 상대적으로 양호했기 때문으로 해석됨.

〈표 II-34〉 2021년도 공공기관 유형별 종합등급 분포

(단위: 개, %)

구 분	기관수	1등급 (우수)	2등급 (양호)	3등급 (보통)	4등급 (미흡)	5등급 (매우미흡)
계	99	-	11 (11.1)	59 (59.6)	26 (26.3)	3 (3.0)
공기업	31	-	6 (19.4)	17 (54.8)	7 (22.6)	1 (3.2)
준정부기관	27	-	2 (7.4)	15 (55.6)	9 (33.3)	1 (3.7)
기타공공기관	41	-	3 (7.3)	27 (65.9)	10 (24.4)	1 (2.4)

자료: 기획재정부, 「2021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최종 확정」, 보도자료, 2022. 5. 4.

- 2021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결과는 <표 II-35>와 같음.

53)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안전관리등급 심사대상에 2021년도 심사부터 포함된 기관으로 전년도 개선 권고과제 이행부실에 해당하지 않음

〈표 II-35〉 2021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결과


등급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계	31개	27개	41개
1등급	-	-	-
2등급 (11개)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PS(주) (6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2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3개)
3등급 (59개)	주식회사 에스알 (주)한국가스기술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도로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DN 해양환경공단 (17개)	공무원연금공단 국립공원공단 근로복지공단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15개)	국방과학연구소 극지연구소 기초과학연구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세계김치연구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코레일유통(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뇌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27개)

- 정부는 안전관리등급 심사가 일회성이 아닌 기관의 자발적인 안전수준 향상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이 도입 취지인 만큼, 공공기관의 안전 문화 정착 및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조치를 계속해 나갈 계획임.
- 안전전문 공공기관을 통해 개선과제 이행점검을 실시하여 기관별 개선 필요 과제의 조기 이행을 지원함.
 - 4등급 이하 기관은 2022년 8월까지, 3등급 이상 기관은 2022년 10월까지 개선 조치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다음 연도 안전관리등급 심사에 반영할 계획임.
- 전년도⁵⁶⁾와 달리 2022년에는 선제적으로 상반기에 안전관리등급 심사대상 전체 기관에 대해 경영진 안전혁신 교육을 시행했으며, 29개 등급 하위기관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과정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위탁하여 하반기에 운영할 계획임.
- 2022년에는 안전부서 직원의 전문성 향상 교육과정⁵⁷⁾도 최초로 운영 중이며, 29개 등급 하위기관의 안전부서 직원은 6월 교육부터 우선 신청을 받아 단계적으로 교육해 나갈 예정임.
- 등급 하위기관, 사망사고 감소성과 미흡기관, 신규기관 등을 중심으로 맞춤형 컨설팅⁵⁸⁾을 지원하여 실태과약, 문제점 발견, 개선대책 제시 등 체계 전반에 관한 조언 및 해결책을 제시할 계획임.
- 나아가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다수 건설현장을 보유한 한국도로공사(80개소)에 공정별 실시간 '안전관리 상황판⁵⁹⁾'제도를 도입·시범 운영 중이며, 추후 시범 운영효과 등을 분석하여 유사 건설현장 보유 주요 공공기관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임.

56) (2021년) 미흡기관 33개 + 자발적 참여 32개 → (2022년) 심사대상 쉼 기관 99개

57) 실습·체험위주 콘텐츠로 구성(2박 3일 집체교육)하여 2022년 12월까지 연 1,100여명 수료 예정

58) 등급심사 하위기관 29개 + 사망사고 감소성과 미흡기관 1개 + 신규지정기관 3개 + 상시컨설팅 1개⇒ 총 34개 기관 맞춤형 컨설팅 실시 예정(2022년 6월~11월)

59) 경영진이 현장별 위험수준을 인지·관리하도록 3색  으로 실시간 표출

2022 공공기관 현황편람

Ⅲ

2022년 공공기관의 주요 경영정보

1. 일반현황
2. 인력현황
3. 재무현황
4. 손익현황
5. 보수수준
6. 외부 평가결과

III

2022년 공공기관의 주요 경영정보

- 제3장에서는 2022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일반현황, 인력, 손익 및 재무현황과 외부평가결과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제시하고 주요 특징을 살펴보고자 함.
 - 2022년 공공기관의 주요 경영정보는 350개 공공기관(2022년 1월 기준)과 20개 부설기관이 2022년 4월 말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을 통해 정기 공시한 경영정보⁶⁰⁾⁶¹⁾를 기준으로 작성함.
 - 또한 2021년도 경영실적평가결과,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청렴도 측정결과 등 외부평가결과는 주관 정부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참고함.
 - 이 외에도 국토교통부 공공기관 지방이전추진단 홈페이지 및 개별 공공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수한 정보를 활용하여 분석함.
- 일반현황은 관계부처 및 기관 홈페이지, 관계 법령 등을 참고하여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분포, 공공기관 설립형태, 공공기관 자회사 현황, 공공기관 지역별 분포 및 지역발전계획 주요내용⁶²⁾ 등을 정리함.
- 인력, 손익 및 재무현황은 2022년 4월 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보도자료 내용과 알리오시스템의 주요통계 및 기관별 통합공시 정보 등을 분석하여 정리함.
- 외부평가결과는 「공운법」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결과,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그리고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에 대한 분석과 주요 특징을 정리함.
 - 먼저 공공기관의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는 「공운법」 제48조에 근거하여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실시하고 있는 기관 경영실적평가의 주요 결과를 정리함.⁶³⁾

60) 기획재정부,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보도자료, 2022. 4. 29.

61) 2022년 1월 지정된 350개 공공기관 및 그 부설기관(20개)은 「공운법」 제12조 및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의거하여 2022년 4월 말까지 2021년 말 기준의 경영정보를 정기공시 하여야 함

62)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혁신도시 홈페이지(Innocity, <http://innocity.molit.go.kr/v2/>) 및 기관 홈페이지 참고

- 따라서 주무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는 분석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는 「공운법」 제13조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주관 통합 고객만족도 조사와 주무부처 주관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에 대한 결과를 포함함.
 - 알리오시스템에 공시된 2021년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⁶⁴⁾를 참고하여 주요 특징을 분석함.⁶⁵⁾
-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측정결과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청렴도 평가 중 공직유관단체, 국공립대학 또는 공공의료기관에 해당하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일부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종합청렴도 측정결과에 대해 정리함.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청렴도 측정결과를 토대로 유형별 측정 결과, 전년 대비 특징 등을 분석하여 정리함.⁶⁶⁾
-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는 「공운법」 제12조에 따라 알리오시스템에 공공기관이 공시한 경영정보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점검한 결과를 정리함.
 - 기획재정부가 전년도 통합공시 정보에 대해 정확성 및 충분성에 대해 점검한 결과⁶⁷⁾를 토대로 항목별 점검결과, 별점현황, 전년 대비 개선 수준 등을 분석하여 정리함.

63) 외부평가결과 중 기관 평가결과는 기획재정부의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수정)』, 2021. 10.,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실시계획」,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2022. 3. 3.,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보도자료, 2022. 6. 20.,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2022. 6. 20. 및 「202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2021. 12. 8. 참고

64) 매년 1분기 정기공시(매년 4월 말) 시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39.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항목을 통해 공개되는 전년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작성

65) 주무부처 주관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수검한 기관이라 할지라도 주무부처에서 기획재정부로 조사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하여 알리오시스템에 고객만족도 조사결과가 공시되지 않은 기관은 분석대상에서 제외

66)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중 「청렴조사평가」 부분에 공개된 「202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 2021. 7., 「202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21. 12., 「2021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결과」, 2021. 12., 「2021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21. 12. 및 기획재정부, 「2022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22. 1. 28.을 활용하여 작성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자료실: <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20703>)

67)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통합공시 매뉴얼, 전자문서 작성지침」, 2022. 3. 23., 「2021년도 통합공시 점검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22. 4. 8. 및 「21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2022. 4. 8.을 활용하여 작성

1. 일반현황

가.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분포⁶⁸⁾

- 「공운법」에 따라 2022년 1월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350개 기관을 주무부처 기준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총 35개 정부 부처가 산하에 공공기관을 보유하고 있음.
- 2021년과 마찬가지로 35개 부처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 수(47개)가 가장 많고 인사혁신처, 관세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등 6개 부처의 산하 공공기관은 각 1개로 나타남.
- 35개 부처 중 23개 부처가 산하에 10개 미만의 공공기관을 보유하고 있음.
-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수 및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표 Ⅲ-1>과 같음.

<표 Ⅲ-1>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분포(2022. 1월 기준)

(단위: 개)

구 분	계 (350)	시장형 공기업 (15)	준시장형 공기업 (21)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3)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81)	기타 공공기관 (220)
기획재정부	4	0	1	0	1	2
교육부	22	0	0	1	2	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7	0	0	0	10	37
외교부	3	0	0	0	1	2
통일부	2	0	0	0	0	2
법무부	3	0	0	0	0	3
국방부	3	0	0	0	0	3
행정안전부	3	0	0	0	1	2
문화체육관광부	31	0	1	2	3	25
농림축산식품부	12	0	1	0	5	6
산업통상자원부	41	11	6	1	12	11
보건복지부	28	0	0	1	8	19
환경부	12	0	1	0	4	7
고용노동부	12	0	0	1	4	7
여성가족부	5	0	0	0	3	2

68)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현황(유형별 분포 현황)은 <부록 1> 참고

〈표 III-1〉의 계속

(단위: 개)

구 분	계 (350개)	시장형 공기업 (15개)	준시장형 공기업 (21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3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81개)	기타 공공기관 (220개)
국토교통부	28	2	7	0	6	13
해양수산부	17	2	3	0	4	8
중소벤처기업부	11	0	0	2	3	6
국무조정실	25	0	0	0	0	25
방송통신위원회	2	0	1	0	1	0
원자력안전위원회	3	0	0	0	0	3
금융위원회	7	0	0	4	1	2
공정거래위원회	2	0	0	0	1	1
국가보훈처	3	0	0	0	2	1
인사혁신처	1	0	0	1	0	0
식품의약품안전처	4	0	0	0	1	3
관세청	1	0	0	0	0	1
방위사업청	2	0	0	0	0	2
경찰청	1	0	0	0	1	0
소방청	1	0	0	0	1	0
문화재청	1	0	0	0	0	1
산림청	4	0	0	0	3	1
농촌진흥청	1	0	0	0	1	0
특허청	5	0	0	0	1	4
기상청	3	0	0	0	1	2

자료: 기획재정부, 「2022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22. 1. 28.을 참고하여 작성

□ 산하 공공기관이 30개 이상인 정부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3개 부처임.

○ 3개 부처 소관의 공공기관 수는 119개로 전체 공공기관의 34.0%를 차지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공공기관은 분야 특성상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10개 기관)과 기타공공기관(37개 기관)만 분포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중 29개 기관이 '연구개발목적기관'에 해당하며 전체 연구개발목적기관의 38.7%를 차지함.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은 2021년에 비해 1개 증가한 41개 기관이며 공공 기관 유형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기업을 가장 많이 보유한 정부 부처로 36개 공기업 중 17개 기관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에 해당함.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 중 (주)강원랜드를 제외한 16개 기관은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에 해당함.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은 31개이며 이 중 25개 기관이 기타공공기관임.
 - 문화체육관광부의 산하 공기업은 1개 기관으로 그랜드코리아레저(주)가 이에 해당함.
-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개발목적기관은 2019년부터 별도 분류하기 시작하였으며 2022년 공공기관 지정 시에는 14개 부처의 75개 기관이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분류 되어 2021년 대비 1개 기관이 증가함.⁶⁹⁾
- 연구개발목적기관의 72.0%인 54개 기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무조정실 산하 기타공공기관에 해당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목적기관은 29개로, 이 중 22개 기관이 「과기출연기관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해당하며 나머지 7개 기관은 개별 설립근거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임.
 - 국무조정실 소관 연구개발목적기관은 25개 기관으로 모두 「정부출연기관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임.
 - 연구개발목적기관의 부처별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표 III-2>와 같음.

<표 III-2> 주무부처별 연구개발목적기관 분포(2022. 1월 기준)

(단위: 개)

주무부처	기관수	주무부처	기관수
교육부	1	해양수산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9	중소벤처기업부	1
국방부	1	국무조정실	25
문화체육관광부	1	원자력안전위원회	2
산업통상자원부	2	방위사업청	2
보건복지부	3	특허청	1
환경부	3	기상청	2

자료: 기획재정부, 「2022년도 공공기관 지정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2. 1. 28.을 참고하여 작성

69)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신규 지정된 기관은 환경부 산하의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임.

- 2022년 부처별 산하 공공기관 분포를 2021년과 대비하여 살펴보면, 4개 부처에서 산하 공공기관 수 변화가 발생함.
 -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 4개 부처는 신규 공공기관 지정 및 기존 공공기관 지정 해제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소관 기관수가 달라짐.
 - 2021년 대비 2022년 소관 공공기관에 변화가 있던 부처의 전년 대비 변동내역을 정리하면, <표 III-3>과 같음.

<표 III-3> 2022년 주무부처별 산하 공공기관 수 변동 내역

(단위: 개)

구 분	기관수		전년 대비 변동내역	
	'21년	'22년	제외(지정 해제)	추가(신규 지정)
문화체육관광부	32	31 (△1)	아시아문화원	-
산업통상자원부	40	41 (+1)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광해광업공단
보건복지부	27	28 (+1)	-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
금융위원회	8	7 (△1)	한국예탁결제원	-

자료: 기획재정부, 「2022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22. 1. 28.을 참고하여 작성

나. 공공기관 설립형태⁷⁰⁾

1) 설립 근거법령에 따른 설립형태⁷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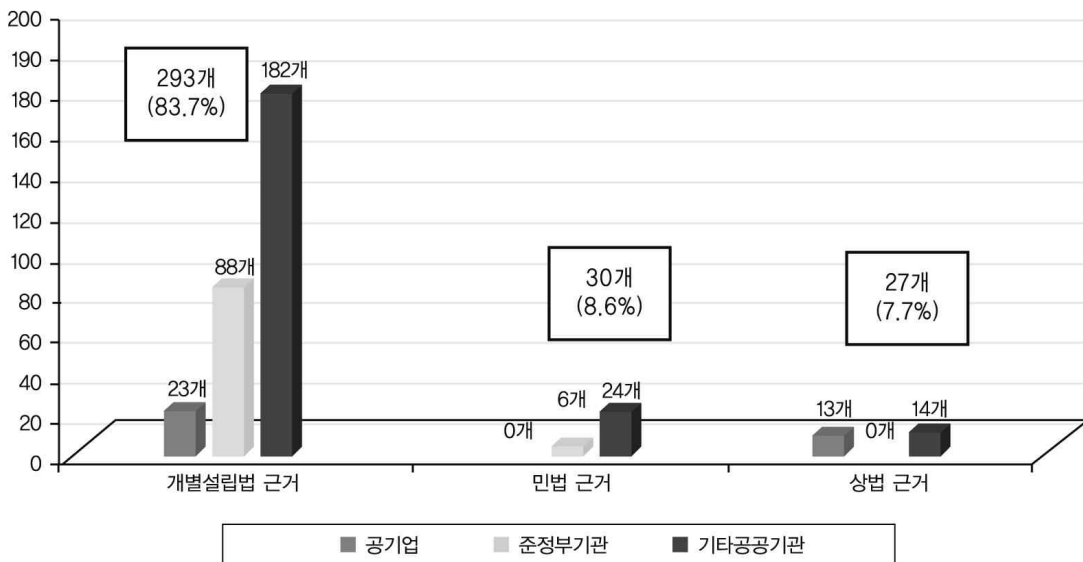
- 공공기관의 설립형태는 설립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구분할 수 있음.
 - 개별 설립근거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 형태의 기관
 - 「상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⁷²⁾

70) 2022년 1월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350개 기관을 기준으로 작성

71) 기관별 설립근거는 <부록 2> 참고

- 2022년 공공기관의 설립형태를 살펴보면, [그림 Ⅲ-1]과 같음.
 - 350개 공공기관의 83.7%인 293개 기관이 개별설립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고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은 전체의 16.3%인 57개 기관임.
 - 공기업은 개별 설립근거법령 또는 「상법」에 근거하여 설립됨.
 - 개별설립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기업은 전체 36개 기관 중 23개임.
 - 「상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13개 공기업은 한국광해광업공단(1개), 한국가스공사(1개), 한국전력공사(9개), 한국철도공사(1개) 및 한국관광공사(1개)의 자회사에 해당함.⁷³⁾
 - 반면 준정부기관은 전체 94개 기관 중 88개 기관(93.6%)이 개별설립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임.
 - 「상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은 없으며 「민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은 6개 기관임.
 - 기타공공기관은 대부분의 기관(182개, 82.7%)이 개별 설립근거법령에 따라 설립됨.
 - 「민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공공기관은 24개 기관이며 「상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공공기관은 14개 기관임.

[그림 Ⅲ-1] 공공기관 설립형태 분포(설립근거법령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1. 일반현황'의 기관별 공시내용(2022. 8. 31.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72) 다른 법률에 설립근거 없이 상법에만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을 '상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분류

73) <표 Ⅲ-10> 공공기관 자회사 현황 참고

- 개별 설립근거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형태의 기관은 2021년과 동일하게 293개(83.7%)이며 이를 통해 법령에 근거하여 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임을 확인할 수 있음.
- 법률상 명문화된 기관 설립근거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은 통상적으로 특수법인으로 일컬음.⁷⁴⁾
 - 법령상 기관 설립근거는 특정기관의 설립 및 운영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 있는 경우, 또는 다른 법률에서 특정기관의 설립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 조문에 근거하는 경우로 구분됨.
 -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공사,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 등이 전자에 해당함.
 - 다른 법률에 설립근거 조항을 둔 기관으로는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국민연금공단,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및 제41조에 각각 근거하여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이 대표적임.
 - 한국특허정보원은 2022년 8월 4일 개정 「발명진흥법」 시행에 따라 「민법」상 재단법인에서 특수법인으로 전환된 기관임.
 - 한국특허정보원은 당초 「민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이었으나 「발명진흥법」 개정을 통해 동법 제20조의3에 설립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특수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 해당함.
 - 2022년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 중 한국제품안전관리원⁷⁵⁾과 한국탄소산업진흥원⁷⁶⁾은 개별설립법에 근거한 특수법인에 해당함.
- 개별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 형태의 공공기관은 30개 기관(8.6%, <표 III-4>)임.
- 「민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 중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를 제외한 나머지 29개 기관은 「민법」상 재단법인에 해당함.

74) 개별 법률에 설립근거는 있으나 법조문상 기관명이 명문화되지 않은 경우는 개별 설립근거법령에 따라 설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

75)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2(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설립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품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설립한다.

76)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한국탄소산업진흥원) ①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육성·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을 둔다.

- 「민법」상 사단법인인 공공기관은 2021년과 마찬가지로 1개 기관임.
- 「민법」상 재단법인도 2021년과 동일하게 29개 기관이나 2022년 공공기관 신규 지정과 법령 개정의 영향으로 해당 공공기관에는 변화가 있음.
- 2022년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 중 (재)한국보건 의료정보원이 「민법」상 재단법인에 해당하여 전년 대비 1개 기관이 증가하였으나 종전 「민법」상 재단법인이었던 한국특허정보원이 2022년 8월 특수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전년과 동일한 기관수를 유지함.

<표 III-4> 「민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공기관(30개 기관)

구 분	기관명	
재단 법인 (29개)	준정부기관 (6개)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우체국물류지원단,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국제방송교류재단,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기타 공공기관 (23개)	(재)APEC기후센터, (재)국제원산지정보원,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우체국시설관리단, (재)일체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재)한국보건 의료정보원,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노사발전재단, 재단법인 건설기술교육원, 재단법인 국악방송,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문화정보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사단 법인 (1개)	기타 공공기관 (1개)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주: 밑줄 친 기관은 2022년 신규로 지정된 공공기관임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1. 일반현황'의 기관별 공시내용(2022. 8. 31. 기준) 및 기관별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

- 개별 설립근거법령이나 「민법」이 아닌 「상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은 2021년과 동일한 27개(7.7%, <표 III-5>)임.
- 「상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은 개별 설립근거법령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민간 부문의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상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임.
- 「상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은 13개 공기업과 14개 기타공공기관으로 준정부기관 중 「상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은 없음.
- 88관광개발(주)을 제외한 26개 기관은 공공기관의 자회사로 모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 「상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은 전년 대비 변동이 없음.

〈표 III-5〉 「상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공기관(27개 기관)

구 분	기관명
공기업 (13개)	(주)강원랜드,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중부발전(주), (주)한국가스기술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DN 한전KPS(주)
기타공공기관 (14개)	(주)공영홈쇼핑, 수자원환경산업진흥(주), 주택관리공단(주),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전MCS(주),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88관광개발(주)

주: 상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공기관 중 88관광개발(주)는 공공기관 자회사가 아님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1. 일반현황'의 기관별 공시내용(2022. 4. 29. 기준) 및 기관별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

2) 설립재원 조달방식에 따른 설립형태 구분

- 공공기관의 설립형태는 설립재원 조달방식에 따라 자본금을 출자 받아 설립하는 기관과 이 외 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자본금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타 민간 등이 납입한 자금으로 구성함.
 - 일부 기관은 관계법령이나 정관에 근거하여 자본금을 주식으로 분할(주식 발행)하는 방식을 채택하기도 함.
 - 자본금 출자가 아닌 다른 채원조달 방식으로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타 민간 등의 출연을 통해 기본재산을 구성하여 기관을 설립하는 경우와 무자본 특수법인 형태로 기관을 설립하는 경우⁷⁷⁾가 있음.
- 외부기관의 출자를 통해 설립된 공공기관(〈표 III-6〉)은 전체 공공기관 중 64개 기관임.
 - 외부기관 출자를 통해 설립된 공공기관은 2021년 65개에서 2022년 64개로 1개 기관 감소함.

77) 88관광개발(주)는 국가보훈처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정부출자기관임

78)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제4조 제1항에 규정에 따라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기관 설립 시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함

- 2021년 공공기관 중 한국예탁결제원이 2022년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되고, 종전에 출자방식으로 설립된 한국광물자원공사와 출연 방식으로 설립된 한국광해관리공단이 2021년 9월 출자를 통해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통합 출범함에 따라 전년 대비 1개 기관이 감소함.
- 출자 방식에 따라 설립된 기관을 공공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기업은 33개, 준정부기관은 8개, 기타공공기관은 23개 기관임.
 - 전체 공기업 36개 중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마사회, 해양환경공단 등 3개 기관을 제외한 33개 공기업은 출자 방식으로 설립된 기관임.
 - 준정부기관 중 출자 방식으로 설립된 기관은 2021년과 마찬가지로 8개 기관이며, 해당 기관도 변화가 없음.
 - 출자 방식으로 설립된 기타공공기관이 2021년 24개 기관에서 2022년 23개 기관으로 감소한 것은 2022년 한국예탁결제원이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 되었기 때문임.
- 출자방식으로 설립된 64개 기관 중 46개 기관이 설립근거법령 또는 기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을 주식으로 분할하고 주식을 발행하고 있음.⁷⁹⁾
 - 기관은 설립근거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수만큼 주식을 발행할 수 있고 출자자는 출자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게 됨.
- 주식을 발행하는 46개 기관 중 8개 기관이 상장기업에 해당함.
 -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된 기관 중,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된 관련 요건을 충족하여 상장된 공공기관은 8개 기관임.
 - 상장 공공기관은 우선적으로 「공운법」의 적용을 받으면서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한국거래소가 정한 유가증권시장의 상장규정 요건 등을 준수하여야 함.⁸⁰⁾
 - 2022년 기준으로 상장 공공기관은 기타공공기관인 중소기업은행을 제외한 7개 기관이 공기업에 해당함.⁸¹⁾

79) 주식을 발행하지 않는 18개 공공기관의 출자자는 출자금에 해당하는 출자증권 또는 출자증서를 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음

80) ① 일반기업의 상장은 규모요건, 분산요건, 경영성과 요건, 안정성 및 건전성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하나, 공공기관을 상장하는 경우에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31조 제1항의 '공적법인 등과 지주회사에 관한 특례'를 적용함

②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특례에 따라 공공법인과 민영화 대상 공기업은 양도제한 요건만을 적용하고,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은 분산요건, 양도제한 요건만을 적용하고 있음

81) 상장 공기업 7개 중 시장형 공기업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주)강원랜드 등 4개 기관이고, 준시장형 공기업은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PS(주) 등 3개 기관임

- 8개 상장 공공기관에 대한 개요는 (<표 III-7>)과 같음.

<표 III-6> 출자 방식으로 설립된 공공기관(64개 기관)

구 분	주식 발행 기관(46개)	출자증권(증서) 교부 기관(18개)
공기업 (33개)	(주)강원랜드, <u>그랜드코리아레저(주)</u> , 인천국제공항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주택도시보증공사, <u>한국가스공사</u> ,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u>한국전력공사</u> , 한국중부발전(주), <u>한국지역난방공사</u> ,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부동산원, <u>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u> , 한전KDN, <u>한전KPS(주)</u> (22개)	대한석탄공사,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u>한국광해광업공단</u> ,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11개)
준정부기관 (8개)	서민금융진흥원, 한국관광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3개)	대한무역투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주택금융공사 (5개)
기타공공기관 (23개)	88관광개발(주), (주)공영홈쇼핑, 새만금개발공사, 수자원환경산업진흥(주), 주택관리공단(주), 중소기업유통센터, <u>중소기업은행</u> , <u>코레일관광개발(주)</u> , <u>코레일네트웍스(주)</u> , <u>코레일로지스(주)</u> , <u>코레일유통(주)</u> , <u>코레일테크(주)</u> ,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벤처투자, 한국산업은행,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자원공사, 한전MCS(주) (21개)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2개)

주: 1. 밑줄 친 기관은 상장 공공기관(8개)에 해당

2. 이탤릭 처리한 기관은 2022년 신규로 지정된 공공기관임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25. 자본금 및 주주현황'의 기관별 공시내용(2022. 8. 31. 기준) 및 기관별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

〈표 III-7〉 상장 공공기관 개요

(단위: 명, 백만 원)

기관명	부처	유형	설립연도 (설립근거(법))	상장일	임직원 총계	총자산
한국전력공사	산업통상자원부	시장형 공기업	1961년 (「한국전력공사법」)	1989.08.10.	23,540	211,114,738
한국가스공사	산업통상자원부	시장형 공기업	1983년 (「한국가스공사법」)	1999.12.15.	4,322	43,669,902
한국지역난방공사	산업통상자원부	시장형 공기업	1985년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9조)	2010.01.29.	2,151	6,517,362
(주)강원랜드	산업통상자원부	시장형 공기업	1998년 (「상법」 및 「폐광지역 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2003.09.04.	3,769	3,827,273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	산업통상자원부	준시장형 공기업	1975년 (「상법」 제317조)	2009.12.24.	2,390	705,509
한전KPS(주)	산업통상자원부	준시장형 공기업	1984년 (「상법」 제317조)	2007.12.24.	6,703	1,426,920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문화체육관광부	준시장형 공기업	2005년 (「상법」 및 카지노 영업허가)	2009.11.19.	1,823	531,306
중소기업은행	금융위원회	기타 공공기관	1961년 (「중소기업은행법」)	2003.12.24.	13,974	398,071,914

주: 임직원 총계(상임임원+정규직 정원+무기계약직 정원)와 총자산은 2021년 말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의 기관별 공시정보(2022. 8. 31.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 출자 방식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의 출자 주체는 정부, 「공운법」상 공공기관, 지방 자치단체와 이 외 민간 등 기타로 구분할 수 있음(<표 III-8>).

○ 정부가 단독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공공기관은 13개 기관으로 전년 대비 1개 기관이 감소(14개 → 13개)함.

- 정부가 한국공항공사의 지분 4.4%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함⁸²⁾에 따라 정부가 단독으로 출자한 공공기관의 수가 전년 대비 1개 감소함.
- 정부 단독 출자 공기업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6개 기관이 해당함.

82) 정부는 2021년 1월 12일 국무회의를 통해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지분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현물로 출자함

- 정부 단독 출자 준정부기관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3개 기관이 해당함.
- 정부 단독 출자 기타공공기관은 88관광개발(주), 새만금개발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투자공사 등 4개 기관이 해당함.
- 전체 지분 중 공공기관 보유 지분이 30% 이상인 기관은 35개로 이 중 29개 기관이 공공기관 자회사에 해당함.
 - 공공기관이 단독으로 보유한 지분이 50% 이상이거나 보유지분이 30~50% 미만이나 지분 보유 공공기관이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관을 공공기관 자회사로 분류함.
 - 공공기관 보유 지분이 30% 이상인 기관 중 공공기관 자회사가 아닌 기관은 한국관광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등 6개 기관임.
-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지분이 30% 미만인 공공기관은 서민금융진흥원 1개 기관임.
 -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을 통한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 시중 은행 및 보험사 등 민간기관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기관임.

〈표 III-8〉 출자 주체별 보유지분 현황(2021. 12월말 기준)

(단위: %)

기관명	공공기관 유형	출자 주체별 보유지분율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기타
부산항만공사	시장형 공기업	87.30	12.70	-	-
인천국제공항공사	시장형 공기업	100.00	-	-	-
인천항만공사	시장형 공기업	80.70	19.30	-	-
(주)강원랜드	시장형 공기업	-	36.27	14.75	48.99
한국가스공사	시장형 공기업	26.15	20.47	7.93	45.45
한국공항공사	시장형 공기업	95.60	4.40	-	-
한국남동발전(주)	시장형 공기업	-	100.00	-	-
한국남부발전(주)	시장형 공기업	-	100.00	-	-
한국동서발전(주)	시장형 공기업	-	100.00	-	-
한국서부발전(주)	시장형 공기업	-	100.00	-	-

〈표 III-8〉의 계속

(단위: %)

기관명	공공기관 유형	출자 주체별 보유지분율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기타
한국석유공사	시장형 공기업	100.00	-	-	-
한국수력원자력(주)	시장형 공기업	-	100.00	-	-
한국전력공사	시장형 공기업	18.20	38.82	-	42.98
한국중부발전(주)	시장형 공기업	-	100.00	-	-
한국지역난방공사	시장형 공기업	34.55	30.08	10.36	25.01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준시장형 공기업	-	58.14	-	41.86
대한석탄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100.00	-	-	-
여수광양항만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71.20	28.80	-	-
울산항만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87.30	12.70	-	-
주식회사 에스알	준시장형 공기업	-	100.00	-	-
주택도시보증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70.25	-	-	29.75
(주)한국가스기술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	100.00	-	-
한국광해광업공단	준시장형 공기업	99.86	0.14	-	-
한국도로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87.77	12.22	-	0.0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100.00	-	-	-
한국부동산원	준시장형 공기업	49.40	30.60	-	20.00
한국수자원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93.79	6.13	0.07	-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준시장형 공기업	-	67.83	-	32.17
한국조폐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100.00	-	-	-
한국철도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100.00	-	-	-
한국토지주택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88.82	11.18	-	-
한전KDN	준시장형 공기업	-	100.00	-	-
한전KPS(주)	준시장형 공기업	-	62.63	-	37.40
한국자산관리공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76.97	18.14	-	4.89
한국주택금융공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63.54	-	-	36.4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00.00	-	-	-
서민금융진흥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12.21	-	87.79
한국관광공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55.20	44.46	-	0.3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00.00	-	-	-

〈표 III-8〉의 계속

(단위: %)

기관명	공공기관 유형	출자 주체별 보유지분율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기타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00.00	-	-	-
한국전력거래소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100.00	-	-
88관광개발(주)	기타공공기관	100.00	-	-	-
새만금개발공사	기타공공기관	100.00	-	-	-
수자원환경산업진흥(주)	기타공공기관	-	100.00	-	-
(주)공영흡소평	기타공공기관	-	50.00	-	50.00
주택관리공단(주)	기타공공기관	-	100.00	-	-
중소기업유통센터	기타공공기관	-	100.00	-	-
중소기업은행	기타공공기관	59.50	9.04	-	31.46
코레일관광개발(주)	기타공공기관	-	60.80	-	39.20
코레일네트웍스(주)	기타공공기관	-	97.18	-	2.82
코레일로지스(주)	기타공공기관	-	97.27	-	2.73
코레일유통(주)	기타공공기관	-	100.00	-	-
코레일테크(주)	기타공공기관	-	97.98	-	2.02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기타공공기관	-	100.00	-	-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기타공공기관	-	100.00	-	-
한국벤처투자	기타공공기관	-	100.00	-	-
한국산업은행	기타공공기관	100.00	-	-	-
한국수출입은행	기타공공기관	68.74	22.12	-	9.14
한국체육산업개발(주)	기타공공기관	-	100.00	-	-
한국투자공사	기타공공기관	100.00	-	-	-
한국해양진흥공사	기타공공기관	53.57	44.21	-	2.22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기타공공기관	52.08	40.30	-	7.62
한전MCS(주)	기타공공기관	-	100.00	-	-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기타공공기관	-	100.00	-	-

주: 1. 출자 주체는 중앙정부(정부), 공공기관(「공운법」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지방자치단체(지자체) 및 기타(민간, 우리사주, 외국인투자자 등 포함)로 구분

2. 밑줄 친 기관은 상장 공공기관(8개)에 해당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25. 자본금 및 주주현황'의 기관별 공시내용(2022. 8. 31.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 출자 방식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을 설립근거법령 기준으로 구분해 보면(<표 Ⅲ-9>), 상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27개)과 개별 설립근거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37개)으로 구분됨.
 - 출자 방식으로 설립된 준정부기관은 8개 기관으로 모두 개별 설립근거법령이 있는 기관임.
 - 출자 방식으로 설립된 공기업(33개) 중 개별 설립근거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은 20개 기관임.
 - 「상법」상 주식회사⁸³⁾인 공기업은 13개 기관으로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자회사에 해당함.
 - 출자 방식으로 설립된 기타공공기관(23개) 중 9개 기관이 개별 설립근거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임.
 - 「상법」상 주식회사인 기타공공기관은 14개 기관으로 88관광개발(주),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를 제외한 12개 기관은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소기업유통센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등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자회사에 해당함.
 -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는 기타공공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자회사임.

83) 「상법」에 근거하여 설립되고 주식을 발행하는 기관을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 분류함

〈표 III-9〉 출자 방식으로 설립된 공공기관 구분(설립근거법령 기준)

구분	공기업 (33개)	준정부기관 (8개)	기타공공기관 (23개)
개별 설립 법령 근거 (37개)	(주식 발행) 주택도시보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도로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9개)	(주식 발행) 서민금융진흥원, 한국관광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3개)	(주식 발행) 새만금개발공사, (주)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은행, 한국벤처투자, 한국산업은행,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7개)
	(출자증권·증서 교부) 대한석탄공사,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11개)	(출자증권·증서 교부) 대한무역투자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주택금융공사 (5개)	(출자증권·증서 교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2개)
상법 근거 (27개)	(주식 발행) (주)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중부발전(주),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DN, 한전KPS(주) (13개)	-	(주식 발행) (주)공영홈쇼핑, 수자원환경산업진흥(주), 주택관리공단(주),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테크(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로지스(주),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전MCS(주),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14개)

주: 밑줄 친 기관은 2022년 신규로 지정된 공공기관임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25. 자본금 및 주주현황'의 기관별 공시내용(2022. 8. 31. 기준) 및 기관 정관을 참고하여 작성

다. 공공기관 자회사 현황

- 공공기관 자회사란 「공운법」에 근거한 공공기관 중 모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이 자회사인 기관의 지분을 50% 이상 소유하였거나, 모기관의 소유지분이 50% 미만이나 3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임원임면권 등 실질지배력을 가진 공공기관을 의미함.
- 2022년 공공기관 중 공공기관의 자회사는 2021년과 동일하게 29개임(<표 Ⅲ-10>).
 - 공공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29개 기관 중 절반 이상인 15개 기관이 기타공공기관 유형에 해당함.
 - 공기업 유형인 자회사는 13개 기관으로 이 중 9개 기관이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이며 나머지 4개 기관은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자회사에 해당함.
 - 준정부기관 유형인 자회사는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국전력거래소임.
 - 2021년 9월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통합됨에 따라 (주)강원랜드의 모회사가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변경됨.
- 공공기관을 자회사로 보유한 공공기관은 전년과 동일하게 12개 기관임.
 - 12개 기관 중 7개 기관이 공기업 유형에 해당하고 준정부기관 유형이 3개 기관이며 기타공공기관 유형은 2개 기관임.
 - 공기업에 해당하는 7개 모회사는 에너지 및 SOC 분야의 공공기관임.⁸⁴⁾
 - 공공기관을 자회사로 보유한 12개 공공기관 중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3개 기관을 제외한 9개 기관은 공공기관인 자회사를 1개씩 보유하고 있음.

84) 공공기관을 자회사로 보유한 에너지 분야 공기업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3개 기관이며, SOC 분야 공기업은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4개 기관임

〈표 III-10〉 공공기관 자회사 현황(29개 기관)

모기업		공공기관 자회사인 기관(29개)	
기관명	유형	기관수	기관명
한국전력공사	시장형 공기업	12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형 공기업)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중부발전(주) ▪ (준시장형 공기업)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DN, 한전KPS(주)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전력거래소 ▪ (기타공공기관) 한전MCS(주),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한국가스공사	시장형 공기업	1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시장형 공기업)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준시장형 공기업	1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형 공기업) (주)강원랜드
한국철도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6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시장형 공기업) 주식회사 에스알 ▪ (기타공공기관)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한국도로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1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공공기관)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한국수자원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1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공공기관) 수자원환경산업진흥(주)
한국토지주택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1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공공기관) 주택관리공단(주)
한국관광공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시장형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2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공공기관)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공공기관)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문화예술회관위원회	기타 공공기관	1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공공기관)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중소기업유통센터	기타 공공기관	1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공공기관) (주)공영홈쇼핑

주: 1. 공공기관 자회사 중 「공운법」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국한하여 자료 작성

2. 주식회사 에스알과 (주)강원랜드는 모회사가 보유한 지분은 각각 41%, 36.27%로 50% 미만에 해당하나 모회사인 한국철도공사와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어 자회사로 분류함

3. 밑줄 친 기관은 2022년 신규로 지정된 공공기관임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31. 투자 및 출자·출연 현황'의 기관별 공시내용(2022. 8. 31.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라. 공공기관의 지역별 분포 및 지역발전계획 주요 내용

1) 공공기관 지역별 분포 현황⁸⁵⁾

- 정부는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2003년부터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을 추진함.
 - 2003년 정부의 기본구상 발표를 시작으로 2005년 혁신도시 및 이전대상 공공기관을 지정·발표하였으며, 2007년 10개 혁신도시 및 세종특별시의 개발예정지구 지정을 거쳐 개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함.
 -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전기관을 최대한 유사한 영역의 업무를 수행하는 동일 기능군으로 분류하여 10개 혁신도시 및 세종특별시로 이전할 지역별 대상기관을 선정함.
 - 부산 혁신도시는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여 해양수산 분야, 금융산업 분야, 영화진흥 분야의 공공기관이 이전대상 기관으로 선정됨.
 - 대구 혁신도시는 산업진흥 분야, 교육·학술진흥 분야, 가스산업 분야의 공공기관이 이전대상 기관으로 선정됨.
 - 광주·전남 혁신도시는 전력산업 유관 공공기관과 농림수산 분야 공공기관이 이전대상으로 선정됨.
 - 울산 혁신도시로는 에너지산업 분야, 근로복지 및 산업안전 등 분야의 공공기관이 이전기로 함.
 - 강원 혁신도시로는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여 광업진흥 및 관광 분야 공공기관과 건강생명 유관 공공기관이 이전기로 함.
 - 충북 혁신도시는 정보통신 분야 공공기관과 인력개발 및 과학기술 분야 유관 공공기관이 이전대상으로 선정됨.
 - 전북 혁신도시는 식품연구 관련 공공기관과 국민연금 관련 공공기관 등이 이전대상으로 선정됨.
 - 경북 혁신도시로는 도로교통 관련 공공기관 등이 이전기로 함.
 - 경남 혁신도시로는 주택건설 관련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진흥 관련 공공기관, 그리고 국방·산업기술 관련 공공기관이 이전기로 함.

85)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홈페이지(<http://innocity.molit.go.kr>) 및 기관별 홈페이지와 2022년 4월말 알리오 시스템에 공시된 일반현황 자료의 소재지 정보를 참고하여 작성

- 제주 혁신도시는 국제교류 관련 공공기관 등이 이전대상으로 선정됨.
- 세종특별시로는 정부부처와 밀접한 업무관계가 있는 국책연구기관 등이 이전 대상으로 선정됨.

□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른 이전대상 기관은 정부부처(소속조직 포함) 및 공공기관을 포함한 151개 기관이며 이 중 「공운법」상 공공기관은 105개 기관임.

○ 이전대상 기관 중 「공운법」상 공공기관은 당초 109개 기관이었으나, 공공기관 통폐합⁸⁶⁾과 공공기관 지정 해제⁸⁷⁾ 등의 영향으로 2022년 공공기관 기준으로 105개 기관이 이전대상 공공기관에 해당함.

○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은 2019년 12월에 모두 완료됨.⁸⁸⁾

□ 지역별 이전대상 공공기관 분포는 <표 Ⅲ-11>과 같음.

<표 Ⅲ-11> 지역별 이전대상 공공기관 분포(2022년 공공기관 기준)

(단위: 개)

구 분	합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이전대상 공공기관수	105	18	46	41
부산	10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게임물관리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대구	9	한국가스공사 한국부동산원	신용보증기금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장학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86) 2014년 6월 구. 기초기술연구회와 구. 산업기술연구회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세종 지역 이전 완료)로 통합 출범 하였으며, 2021년 9월 구. 한국광물자원공사와 구. 한국광해관리공단이 한국광해광업공단(강원 지역 이전 완료)으로 통합 출범함

87) 지방이전 대상기관 중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된 기관은 (주)한국건설관리공사(경북 지역 이전 완료, 2021년 1월 지정 해제)와 한국예탁결제원(부산 지역 이전 완료, 2022년 1월 지정 해제)임

88)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홈페이지(<http://innocity.molit.go.kr/content.do?key=2208172095042>)

〈표 III-11〉의 계속

(단위: 개)

구 분	합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광주/전남	13	한국전력공사 한전KPS(주) 한전KDN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울산	7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석유공사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강원	9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공원공단 도로교통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한적십자사
충북	10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소비자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충남	2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	-
전북	6	-	국민연금공단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경북	7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	10	한국남동발전(주)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주택관리공단(주)

〈표 III-11〉의 계속

(단위: 개)

구 분	합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제주	3	-	공무원연금공단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세종	19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 정보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주: 1. 한국예탁결제원(이전 완료)이 「공운법」상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됨(2022년 1월)에 따라 부산 지역의 이전대상 공공기관 수는 11개에서 10개로 변동
 2. 구. 한국광물자원공사(이전 완료)와 구. 한국광해관리공단(이전 완료)이 2021년 9월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통합 출범함에 따라 강원 지역의 이전대상 공공기관 수는 10개에서 9개로 변동
 3. (주)한국건설관리공사(이전 완료)가 「공운법」상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됨(2021년 1월)에 따라 경북 지역의 이전대상 공공기관 수는 8개에서 7개로 변동
 4. 구. 기초기술연구회, 구. 산업기술연구회가 2014년 6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전 완료)로 통합 출범함에 따라 세종 지역의 이전대상 공공기관 수는 20개에서 19개로 변동

자료: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홈페이지(<http://innocity.molit.go.kr>)

□ 2022년 지정된 350개 공공기관의 지역별 분포(<표 III-12>)를 살펴보면, 서울 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이 120개(34.3%)로 여전히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분포율을 보임.

○ 공공기관 분포율이 높은 상위 5개 지역은 서울(34.3%), 대전(9.7%), 경기(8.0%), 세종(7.1%), 부산(5.7%) 순이며 5개 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은 전체 공공기관의 64.8%를 차지함.

〈표 III-12〉 지역별 공공기관 분포(2022. 4월 기준)

(단위: 개,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350개)	120 (34.3)	20 (5.7)	15 (4.3)	7 (2.0)	3 (0.9)	34 (9.7)	10 (2.9)	25 (7.1)	28 (8.0)	12 (3.4)	13 (3.7)	7 (2.0)	11 (3.1)	16 (4.6)	10 (2.9)	14 (4.0)	5 (1.4)
공기업 (36개)	5 (1.4)	3 (0.9)	2 (0.6)	2 (0.6)	0 (0.0)	4 (1.1)	3 (0.9)	0 (0.0)	2 (0.6)	3 (0.9)	0 (0.0)	2 (0.6)	0 (0.0)	4 (1.1)	3 (0.9)	2 (0.6)	1 (0.3)
준정부기관 (94개)	26 (7.4)	6 (1.7)	6 (1.7)	1 (0.3)	0 (0.0)	5 (1.4)	4 (1.1)	6 (1.7)	7 (2.0)	6 (1.7)	7 (2.0)	2 (0.6)	4 (1.1)	8 (2.3)	2 (0.6)	3 (0.9)	1 (0.3)
기타공공기관 (220개)	89 (25.4)	11 (3.1)	7 (2.0)	4 (1.1)	3 (0.9)	25 (7.1)	3 (0.9)	19 (5.4)	19 (5.4)	3 (0.9)	6 (1.7)	3 (0.9)	7 (2.0)	4 (1.1)	5 (1.4)	9 (2.6)	3 (0.9)

주: 1. () 안은 각 지역별 공공기관 비중

2. 공공기관별 상세 소재지(본사 기준)는 <부록 2> 참고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1. 일반현황'의 기관별 공시내용(2022. 4. 29. 기준) 및 기관별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

□ 공공기관 유형에 따른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공기업은 다른 유형에 비해 수도권 지역 소재 기관의 비중이 낮음.

○ 공기업 유형은 다른 두 유형에 비해 수도권 지역(서울·경기) 소재 기관의 비중(7개 기관, 19.4%)이 낮는데, 이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다수의 기관⁸⁹⁾이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하였기 때문임.

-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7개 기관 중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공항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해양환경공단 5개 기관은 서울에 소재하며 한국마사회 및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경기 지역에 소재함.

- 공기업은 광주, 세종, 충북, 전북을 제외한 지역에 고르게 분포한 것으로 나타남.

○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은 17개 지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

- 준정부기관 중 수도권 지역 소재 기관은 33개 기관으로 전체 준정부기관의 35.1%를 차지함.

- 기타공공기관은 전 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나 여전히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기관이 108개로 전체 기타공공기관의 49.1%를 차지함.

□ 정부는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일환으로 2021년 10월 제37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서울에 소재한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등 3개 기관을 대전 지역으로 이전할 것임을 밝힘.⁹⁰⁾

89) 36개 공기업 중 지방 이전한 기관은 18개 기관임

- 한국임업진흥원과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등 2개 기관이 2022년 중 이전할 예정이고,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2025년에 이전할 예정이다.

2) 2021년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⁹¹⁾

- 이전 공공기관은 2018년부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 제29조의2에 근거하여 이전지역의 인재를 의무적으로 일정비율 이상 채용하고 있음.
 - 여기서 지역인재는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을 의미함.
 - 이전 공공기관은 기관별 채용규모, 이전 지역의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채용 비율 및 기준 등에 따라 지역인재를 채용하여야 함.
 - 정부는 매년 이전 공공기관별 채용실적을 공개하고 채용실적이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음.
- 「혁신도시법」에 따라 지역인재 채용 의무가 있는 이전 공공기관은 당초 106개 기관⁹²⁾이었으나 정부는 2019년과 2020년에 「혁신도시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21년부터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기관을 확대함.
 - 2021년 「혁신도시법」 제4조에 따라 지방이전계획을 수립·제출한 106개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30조의2(이전 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및 <별표1>에 규정된 채용비율에 따라 매년 지역인재를 채용해야 함.
 - 「혁신도시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기관으로 신규 지정된 21개 기관은 「혁신도시법」 시행 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과 수도권에 소재하거나 했던 기관의 업무를 승계하거나 이관 받아 현재 지방에 소재한 기관 등을 포함함.
 - 「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에 후속하여 2020년 5월 27일 개최된 제27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지역인재 의무채용 신규 대상기관으로 선정함.

90) 국토교통부, 「‘기상청+3개 공공기관’ 대전 이전 확정」, 보도자료, 2021. 10. 25.

91)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공공기관 현황 편람』, 2021. 11. 및 국토교통부, 「2021년 지역발전 추진 실적 및 2022년 추진계획」, 2022. 4. 26.을 참고하여 작성

92)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발표 당시 109개였으나 공공기관 통폐합과 공공기관 지정 해제 등의 영향으로 2021년 공공기관 기준으로 106개 기관이 이전대상 공공기관에 해당

- 신규 대상기관(<표 III-14>)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대전 지역에 소재한 기관이 17개로 가장 많으며 이 외 부산, 세종, 충북 및 충남 지역에 소재한 기관은 각 1개 기관임.
- 지역인재 의무채용 신규 대상기관은 현재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과 동일한 체계를 따르게 되나, 기존 대상 기관과 시행시기의 차이가 있어 연도별 의무채용 비율은 다르게 적용함.
- 신규 대상기관에 적용되는 의무채용 비율(<표 III-15>)은 「혁신도시법 시행령」 <별표1>에 명시되어 있음.

<표 III-13> 지역인재 채용비율

(단위: %)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이후
채용비율	18.0	21.0	24.0	27.0	30.0

주: 이전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법」 제4조에 따라 지방이전계획을 수립·제출한 「공운법」상 공공기관임
 자료: 「혁신도시법 시행령」 <별표1>의 '1.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

<표 III-14> 지역인재 의무채용 신규 대상기관

구분	기관명	소재지	이전시기 또는 변경설립 시기	주무부처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15개)	국방과학연구소	서울 → 대전	'83. 1월	방사청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울 → 대전	'90. 7월	과기부
	한국수자원공사	서울 → 대전	'74. 10월	환경부
	한국조폐공사	서울 → 대전	'73. 4월	기재부
	한국한의학연구원	서울 → 대전	'04. 2월	과기부
	한국과학기술원	서울 → 대전	'89. 7월	과기부
	한국원자력연구원	서울 → 대전	'85. 12월	과기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서울 → 대전	'76. 5월	과기부
	한국화학연구원	서울 → 대전	'78. 4월	과기부
	(주)한국가스기술공사	서울 → 대전	'10. 11월	산업부
	한국특허정보원	서울 → 대전	'14. 4월	특허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서울 → 대전	'13. 3월	중기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서울 → 충남	'97. 5월	과기부
	한국향로표지기술원	서울 → 세종	'18. 2월	해수부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서울 → 대전	'10. 2월	산림청

〈표 III-14〉의 계속

구분	기관명	소재지	이전시기 또는 변경설립 시기	주무부처
수도권에 소재하거나 했었던 기관의 업무를 승계하거나 이관받아 현재 지방에 있는 기관 (6개)	한국철도공사	대전	'05. 1월	국토부
	국가철도공단	대전	'04. 1월	국토부
	코레일테크(주)	대전	'04. 12월	국토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대전	'01. 1월	과기부
	기술보증기금	부산	'89. 4월	중기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충북	'17. 2월	식약처

자료: 국토교통부, 「철도공사·수자원공사 등 21개 기관에서도 지역인재 뽑는다」, 보도자료, 2020. 5. 27.

〈표 III-15〉 지역인재 의무채용 신규 대상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

(단위: %)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이후
채용비율	18.0	21.0	24.0	27.0	30.0

주: 지역인재 의무채용 신규 대상기관은 「혁신도시법」 제4조에 따라 지방이전계획을 수립·제출한 「공운법」상 공공기관임

자료: 「혁신도시법 시행령」 <별표1>의 '2. 이전공공기관을 제외한 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비율'

- 국토교통부가 2022년 4월 발표한 2021년 이전 공공기관의 「혁신도시법」에 따른 지역인재 의무채용 실적(<표 III-16>⁹³)을 살펴보면, 106개⁹⁴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⁹⁵은 35.2%로 2021년 법정 채용비율인 27%를 초과하여 달성함.
- 2021년 이전 공공기관의 「혁신도시법」에 따른 의무채용 대상은 3,358명이었으며, 이 중 1,184명을 이전지역 출신 학생들로 채용함.
 - 106개 기관 중 지역인재 채용비율(2021년 27%)을 달성한 기관은 57개 기관임.
- 지역별 실적을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의무채용 비율이 목표치인 27%를 모두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혁신도시 중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40% 이상인 지역은 강원(44.5%, 344명 중 153명)과 충북(40.3%, 119명 중 48명), 세종(40%, 10명 중 4명)으로 나타남.

93) 국토교통부, 「2021년 지역발전 추진실적 및 2022년 추진계획」, 2022. 4. 26.

94) 2021년 1월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 된 (주)한국건설관리공사(경북 지역)와 2020년 「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으로 추가 지정된 기관(21개)은 실적 산출에서 제외

95) 혁신도시법에 따른 지역인재 채용률은 지역본부별 채용 등 의무채용 예외규정에 따른 인원을 제외한 의무채용 대상 중 지역인재 채용인원으로 산출함

- 이 외 지역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대구(38.3%, 317.5명 중 121.5명), 경북(37.0%, 338명 중 125명), 전북(36.6%, 399명 중 146명)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표 Ⅲ-16>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나 국토교통부가 별도 발표한 자료⁹⁶⁾에 따르면, 지역인재 의무채용 신규 대상인 21개 기관 중 일부 기관이 2021년 지역인재 채용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모두 달성한 것으로 확인됨.
 -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원자력연구원,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특허정보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코레일테크(주)(이상 대전 지역 소재), 기술보증기금(부산 지역 소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충북 지역 소재) 등 12개 기관은 2021년 지역인재 채용 목표 인원을 설정하고 지역인재를 채용함.
 - 12개 기관이 설정한 지역인재 채용 목표인원은 964명으로 2021년 중 292명을 채용하여 지역인재 채용률이 30.3%로 나타났으며 이는 2년차 법정 채용비율인 21%를 상회하는 수준임.

<표 Ⅲ-16> 2021년도 이전 지역별 지역인재 의무채용 실적

(단위: 개, 명, %)

이전 지역	기관수	2020			2021		
		채용목표제 대상인원 (A)	지역인재 채용인원 (B)	지역인재 채용률 (B/A)	채용목표제 대상인원 (A)	지역인재 채용인원 (B)	지역인재 채용률 (B/A)
합계	106	4,129	1181	28.6	3,358	1,184	35.2
부산	11	300	102	33.9	319	113	35.4
대구	9	358	124	34.5	318	122	38.3
광주·전남	13	1280	346	27.0	932	287	30.8
울산	7	120	35	29.2	108	38	35.2
강원	9	330	87	26.4	344	153	44.5
충북	10	62	25	40.1	119	48	40.3
전북	6	346	98	28.3	399	146	36.6
경북	7	616	170	27.6	338	125	37.0
경남	10	518	126	24.3	354	108	30.5
제주	3	28	9	32.1	17	5	29.4

96) 국토교통부, 「2021년도 공공기관별 지역인재 채용실적(「혁신도시법」 제29조의2)」, 2022. 2. 11.

〈표 III-16〉의 계속

(단위: 개, 명, %)

이전 지역	기관수	2020			2021		
		채용목표제 대상인원 (A)	지역인재 채용인원 (B)	지역인재 채용률 (B/A)	채용목표제 대상인원 (A)	지역인재 채용인원 (B)	지역인재 채용률 (B/A)
충남	2	158	54	34.2	100	35	35.0
세종	19	13	6	46.2	10	4	40.0

- 주: 1. 지역인재 채용인원은 최종학력이 이전지역 고등·대학교인 신규채용 인원임
 2. 실적 산출 시 대상기관은 2021년 지정된 「공운법」상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되 2020년 및 2021년 지역발전 계획 수립대상이 아닌 기관은 대상에서 제외함
 - 2021년 1월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 된 (주)한국건설관리공사(경북 지역)의 실적은 제외하고 2022년 1월 공공 기관에서 지정 해제된 한국예탁결제원(부산 지역)의 실적은 포함
 - 「공운법」상 공공기관이 아닌 한국지방행정연구원(강원 지역)의 2020년과 2021년 실적 제외
 - 2020년 「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으로 추가 지정된 기관(21개)은 2020년과 2021년 지역발전계획 미수립 대상이므로 실적 산출 대상에서 제외
 3. 2021년 9월 신규 출범한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통합 이전 기관인 구.한국광물자원공사와 구.한국광해관리공단의 실적을 반영

자료: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공공기관 현황 편람』, 2021. 11. 및 국토교통부, 「2021년 지역발전 추진실적 및 2022년 추진계획」, 2022. 4. 26.을 참고하여 작성

3) 2022년 이전 공공기관의 혁신도시별 지역발전계획 주요 내용⁹⁷⁾

- 이전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법」 제29조의3 및 제29조의5, 동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31조의3에 근거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 이전 공공기관은 이전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 하여 매년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추진실적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공개하여야 함.
- 「혁신도시법」에 따른 기관별 지역발전계획은 지역산업 육성, 지역인재 채용 및 육성, 지역주민 지원, 유관기관 협력, 지역생산물품 우선구매 등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발전계획에 포함해야하는 주요 수립항목은 <표 III-17>과 같음.

97) 국토교통부, 「2021년 지역발전 추진실적 및 2022년 추진계획」, 2022. 4. 26.을 참고하여 작성

〈표 III-17〉 이전 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 주요 수립 항목

구분	세부 내용
지역산업 육성	연관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전략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 등 지역산업 활성화에 대한 사업
지역인재 채용·육성	지역인재 채용, 지역대학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장학 사업, 직무체험 및 견학프로그램 운영 등 인재 양성에 대한 사업
지역주민 지원	지역주민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체육시설 등 생활SOC 건립, 기관 시설 개방 등에 대한 사업
유관기관 협력	지자체-기업-대학과의 공동 연구 및 협의회 운영 등 지역발전을 위한 기관 간 협력에 대한 사업
지역생산물품 우선구매	이전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자료: 국토교통부, 「2021년 지역발전 추진실적 및 2022년 추진계획」, 2022. 4. 26.

- 2022년 4월 국토교통부는 이전 공공기관의 2022년도 지역발전계획을 발표함.
 - 국토교통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등 전체 이전 대상기관(151개)⁹⁸⁾은 개별 혁신도시(10개 지역)에서 지역산업 육성, 지역인재 채용, 주민지원(지역공헌), 지역물품 우선구매 등 지역발전을 위해 약 3조 5,068억 원 규모의 사업(총 3,087건)을 시행할 계획임.
 - 특히 지역산업 육성(45.6%, 1조 5,976억 원)과 지역경제 기여(44.4%, 지역물품 구매, 1조 5,566억 원) 부문 투자가 다수 계획되어 있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 상당 부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2022년 지역발전계획 기준으로 105개 「공운법」상 공공기관⁹⁹⁾에 대한 지역별 발전계획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표 III-18>과 같음.
 - 105개 이전 공공기관은 지역발전을 위해 2022년 중 약 3조 3,309억 원 규모의 사업(총 2,543건)을 추진할 예정임.

98) 전체 이전 대상기관(151개)에는 105개 「공운법」상 공공기관(2022년 기준) 외에 정부부처(소속조직) 및 「공운법」상 공공기관이 아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된 기관이 포함

99)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발표 당시 109개였으나 공공기관 통폐합과 공공기관 지정 해제 등의 영향으로 2022년 공공기관 기준으로 105개 기관이 지역발전계획 작성대상 이전대상 공공기관에 해당

〈표 III-18〉 2022년 지역별 발전계획

(단위: 개, 건, 백만 원)

구분	기관 수	지역산업 육성		지역인재 육성		지역주민 지원		유관기관 협력		기타사업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합계	105	383	1,563,811	401	40,306	785	48,737	423	76,723	110	143,536
부산	10	39	11,171	36	5,645	78	5,434	31	2,447	1	1
대구	9	51	158,331	36	8,638	89	4,065	45	2,407	14	28,554
광주·전남	13	63	177,500	61	6,330	97	9,753	61	9,656	13	68,627
울산	7	28	220,781	18	1,370	63	2,261	20	15,289	8	374
강원	9	34	72,181	32	1,728	93	1,318	50	5,485	17	3,284
충북	10	20	35,324	34	1,064	74	2,351	43	887	14	34,513
전북	6	45	86,628	36	2,101	50	1,202	40	469	2	160
경북	7	26	41,232	31	6,650	43	5,637	22	393	11	50
경남	10	50	736,667	48	3,202	101	11,043	48	34,256	10	6,980
제주	3	1	87	6	6	12	37	17	912	9	198
충남	2	19	7,262	11	2,859	10	5,515	14	3,026	8	685
세종	19	7	16,647	52	713	75	122	32	1,496	3	110

주: 1. 「공운법」상 공공기관이 아닌 한국지방행정연구원(강원 지역)과 2020년 「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역 인재 의무채용 대상으로 추가 지정된 기관(21개)의 계획 제외
 2. 2021~2022년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 된 (주)한국건설관리공사(경북 지역)와 한국예탁결제원(부산 지역)의 계획 제외
 자료: 국토교통부, 「2021년 지역발전 추진실적 및 2022년 추진계획», 2022. 4. 26.

□ 10개 혁신도시¹⁰⁰⁾를 중심으로 2022년 중 추진할 지역발전계획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표 III-19>와 같음.

〈표 III-19〉 2022년 지역별 발전계획 주요 내용

구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부산	(주택도시보증공사) 민관합동 창업공간 조성사업, 의료버스 지원 (한국남부발전(주)) 혁신 시제품 컨설팅, 성능테스트 및 인증지원	(한국주택금융공사) 금융경제 오픈캠퍼스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형 청년창업허브 조성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사 취업지원을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과학고실 운영 (게임물관리위원회) 지역영화인 특화전문 교육
대구	(한국가스공사) 그린뉴딜 창업기업 지원 (한국부동산원) 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 운영, 옐로카펫 사업	(신용보증기금) 뉴딜기업 맞춤형 보증 지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사업 (한국장학재단) 지역 우수인재 장학금	(한국사학진흥재단) 대구지역 대학생을 위한 행복 기숙사 건립, 지역대학 연계 현장실습 교육과정 운영

100) 12개 이전 지역 중 충남과 세종 지역 제외

〈표 III-19〉의 계속

구 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광주·전남	(한국전력공사) 에너지벨리 조성,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학습 지원 (한전KPS(주)) 지역 중소기업 금융 대출이자 지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융합보안 핵심인재 양성사업 (한국콘텐츠진흥원) 어린이 환경동화 보급사업 (한국농어촌공사) 농촌 집고쳐주기 사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환경인형극 제작·운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빛가람 미래농업 인재육성과정 운영
울산	(한국석유공사) 울산 동북아 에너지 허브사업 구축 (한국동서발전(주)) 복지시설 그린리모델링 개선지원, 에너지신기술 세미나 개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회적 기업 창업준비 지원 (한국에너지공단) 지역 빈곤계층 태양광 발전설비 지원 (근로복지공단) 산재전문병원 건립	(에너지경제연구원) 지역 에너지 계획 수립 지원, 지역내 산·학·연 에너지정책 네트워크 강화 에너지포럼 운영
강원	(한국광해광업공단) 진폐 재해자 지원, 취약계층 거주환경 개선 (대한석탄공사) 도계 도시재생사업, 학생 통학 버스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실버의료기기 메카 조성 (한국관광공사)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육성 (도로교통공단)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 교육	(대한적십자사) 찾아가는 응급처치 교육
충북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도시안전 SOS랩 및 SW개발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버스부품 시험평가지원센터 건립 (한국소비자원)빅데이터 기반 소비자교육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공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학기술 혁신정책 포럼
전북	-	(국민연금공단) 마을자치연금 확대 추진 (한국전기안전공사) 중소기업 상생펀드 조성	(한국식품연구원) 지역업체 제품개발을 위한 식품 분석 지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책 쉽터 운영 및 도서기증
경북	(한국도로공사) 지역주민 무료 법률상담, 창업 동아리 지원사업 (한국수력원자력(주)) 원전 현장인력 양성원 운영, 안심가로등 사업	(한국교통안전공단) 튜닝카 성능안전 시험센터 건립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원자력 활용분야 채용박람회	(대한법률구조공단) 취약계층 청소년 법문화교육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홍보역사관 설치 및 개방
경남	(한국토지주택공사) 통영 폐조선소 도시재생사업 (한국남동발전(주))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 융합형 기술인력 양성	(국토안전관리원) 소규모 공동주택 무상 안전점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스마트 승강기 실증 플랫폼 구축사업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산업기술 R&D 교육 (한국저작권위원회)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지원

자료: 국토교통부, 「2021년 지역발전 추진실적 및 2022년 추진계획」, 2022. 4. 26.을 참고하여 작성

2. 인력현황¹⁰¹⁾

가. 임직원 수 현황

- 2021년 공공기관의 임직원 수(정원 기준)¹⁰²⁾는 약 44만 3천명으로 국가행정공무원 정원 약 75만 1천명의 59.0%에 해당하는 규모임.
- 공공기관의 임직원 수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2021년에는 전년 대비 약 1.8% 증가하였으나 증가세는 점차 둔화하는 모습임.

〈표 III-20〉 공공기관 임직원 및 국가행정공무원 현황(2017~2021년)

(단위: 천 명, %, %p)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A)	'21년 (B)	증감 (B-A)	전년 대비 증감률
공공기관 임직원(a)	345	383	420	435	443	8	1.8%
국가행정공무원(b)	639	649	663	736	751	15	2.0%
비중(a/b)	54.0	59.0	63.3	59.1	59.0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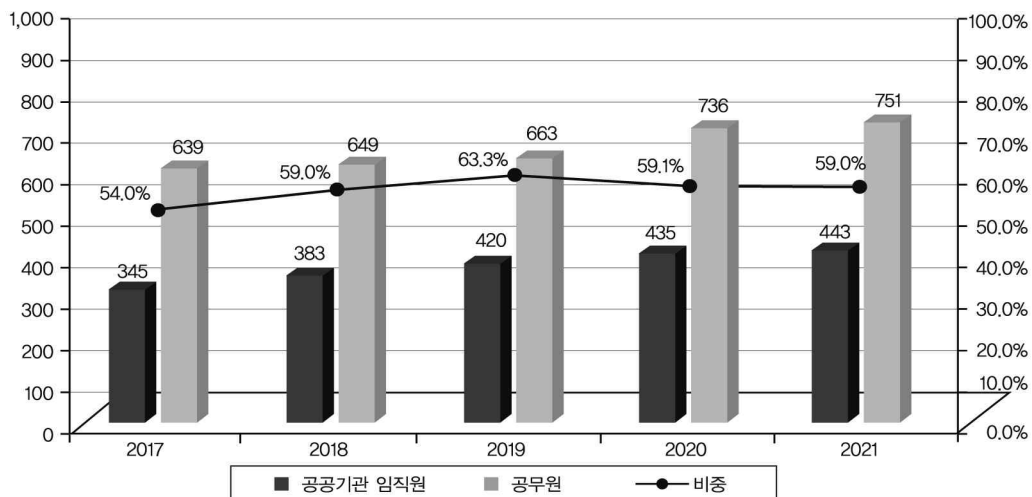
주: 1. *는 %p단위임

2. 소수 반올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수차이 조정을 일부 거침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 '임직원 현황'(2022. 4. 29. 기준) 및 나라지표 '행정부 국가공무원 정원추이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16)'를 참고하여 작성

〔그림 III-2〕 공공기관 임직원 및 국가행정공무원 현황(2017~2021년)

(단위: 천 명, %)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 '임직원 현황'(2022. 4. 29. 기준) 및 나라지표 '행정부 국가공무원 정원추이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16)'를 참고하여 작성

101) 기획재정부,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보도자료, 2022. 4. 29. 및 알리오시스템 유관항목 참고

102) 공공기관(부설기관 포함)의 상임임원, 정규직 직원(무기계약직 및 임금피크제 별도 정원 포함)에 대한 총 정원

- 2021년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은 필수 분야 신규 증원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으로 전년 대비 7,950명 증가함.
 - 2021년 증원 인력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 방역·간호·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중대재해법 준수를 위한 시설물 안전요원 등 필수인력 증원 6.5천 명, 정규직 전환 1.3천 명 등 약 8천 명 규모임.¹⁰³⁾

- 최근 5년간 준시장형 공기업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 및 현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기타공공기관 유형의 2021년 임직원 정원은 전년 대비 4,013명(2.5%) 증가한 16만 5,001명으로 전체 공공기관 유형 중 가장 큰 비중(37.3%)을 차지함.
 - 기타공공기관 중 인력증원의 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전남대학교병원(592명)이고, 두 번째로 큰 기관은 한전MCS(주)(586명)임.
 - 공기업 유형의 2021년 임직원 정원은 15만 794명으로 2020년 대비 384명이 증가하여 0.3%의 정원 증가율을 보임.
 - 시장형 공기업의 2021년 임직원 정원은 6만 6,993명으로 전년 대비 1.1%(723명) 증가하였음.
 - 공공기관 유형 중 유일하게 준시장형 공기업 유형의 임직원 정원이 감소하였는데, 전년 대비 339명(△0.4%) 감소하여 8만 3,801명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 중 인력감원 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704명)로 준시장형 공기업 유형의 전체 감원 인력(1,080명) 중 65.2%를 차지함.
 - 준정부기관 유형의 2021년 임직원 정원은 전년 대비 2.9%(3,552명) 증가한 12만 6,981명으로 나타남.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임직원 정원은 전년 대비 3.0%(879명) 증가한 3만 675명으로 전체 공공기관 유형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임.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임직원 정원은 9만 6,306명으로 전년 대비 2.9%(2,673명) 증가함.

- 공공기관의 임직원 정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2019년부터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음.

103) 기획재정부,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보도자료, 2022. 4. 29.

- 최근 3년간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 증가율은 2019년 9.6%에서 2020년 3.6%, 2021년 1.8%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정원 증가율 감소 추세는 공기업¹⁰⁴⁾ 및 기타공공기관¹⁰⁵⁾ 유형에서도 유사하게 확인되고 있음.
 - 특히 공기업 유형 중 준시장형 공기업¹⁰⁶⁾의 경우, 2019년, 2020년까지 정원 증가율이 둔화하다가 2021년에는 정원 자체의 감소로 전환되었음.
- 반면 준정부기관¹⁰⁷⁾ 유형의 정원 증가율을 살펴보면 2018년 13.5%에서 2020년 2.4%까지 감소하였으나, 2021년에는 전년 대비 정원 증가율이 0.5%p 상승하여 2.9%로 나타났음.

〈표 III-21〉 공공기관 유형별 임직원 수 현황(2017~2021년)

(단위: 명, %)

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A)	'21년 (B)	증감 (B-A)	전년 대비
							증감률
합 계	345,208 (323,727)	382,762 (358,990)	419,542 (392,398)	434,827 (408,532)	442,777 (415,478)	7,950 (6,946)	1.8 (1.7)
공기업	132,979 (127,272)	140,253 (134,192)	147,374 (141,612)	150,410 (144,782)	150,794 (145,043)	384 (261)	0.3 (0.2)
· 시장형	61,579 (59,545)	63,555 (61,096)	65,268 (63,379)	66,270 (64,709)	66,993 (65,193)	723 (485)	1.1 (0.7)
· 준시장형	71,400 (67,727)	76,698 (73,096)	82,106 (78,232)	84,140 (80,073)	83,801 (79,849)	△339 (△224)	△0.4 (△0.3)
준정부기관	100,438 (93,852)	113,975 (106,864)	120,478 (114,396)	123,429 (117,118)	126,981 (120,986)	3,552 (3,868)	2.9 (3.3)
· 기금관리형	24,497 (22,548)	28,288 (26,440)	29,367 (27,819)	29,796 (28,189)	30,675 (28,996)	879 (807)	3.0 (2.9)
· 위탁집행형	75,941 (71,304)	85,686 (80,425)	91,111 (86,576)	93,633 (88,929)	96,306 (91,990)	2,673 (3,061)	2.9 (3.4)
기타공공기관	111,792 (102,603)	128,534 (117,933)	151,690 (136,390)	160,988 (146,632)	165,001 (149,449)	4,013 (2,817)	2.5 (1.9)

주: 1. () 안의 수치는 현원 기준

2. 현원의 경우 소수 반올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수차이 조정을 일부 거침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 '임직원 현황'(2022. 4. 29.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104) 공기업: (2019년) 5.1% → (2020년) 2.1%(△3.0%p) → (2021년) 0.3%(△1.8%p)

105) 기타공공기관: (2019년) 18.0% → (2020년) 6.1%(△11.9%p) → (2021년) 2.5%(△3.6%p)

106) 준시장형 공기업: (2019년) 7.1% → (2020년) 2.5%(△4.6%p) → (2021년) -0.4%(△2.9%p)

107) 준정부기관: (2019년) 5.7% → (2020년) 2.4%(△3.3%p) → (2021년) 2.9%(+0.5%p)

- 2021년 공공기관 임직원 수(정원 기준) 현황을 주무부처별로 살펴보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수가 9만 6,485명(41개 기관)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국토교통부 8만 7,770명(28개 기관), 교육부 5만 2,085명(23개 기관) 순으로 나타남.
- 임직원 수 증가는 교육부 산하 기관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2,408명, 4.8%), 다음으로 산업통상자원부(1,528명, 1.6%), 보건복지부(904명, 2.1%) 순임.
- 반면 임직원 수가 가장 크게 감소한 기관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이며(△349명, △0.4%), 다음으로 기획재정부(△14명, △0.4%), 국방부(△9명, △1.1%)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22〉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임직원 수 현황(2017~2021년)

(단위: 개, 명, %)

구 분	기관수	'17년	'18년	'19년	'20년 (A)	'21년 (B)	증감 (B-A)	전년 대비 증감률
기획재정부	4	2,971	3,190	3,264	3,341	3,327	△14	△0.4
교육부	22	36,634	41,774	45,651	49,677	52,085	2,408	4.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7	25,331	30,344	31,689	32,468	32,996	528	1.6
외교부	3	672	737	796	814	827	13	1.6
통일부	2	83	208	216	209	210	1	0.5
법무부	3	1,155	1,249	1,307	1,319	1,360	41	3.1
국방부	3	604	633	728	802	793	△9	△1.1
행정안전부	3	1,314	1,527	1,601	1,694	1,708	14	0.8
문화체육관광부	31	7,903	9,248	9,617	9,612	9,645	33	0.3
농림축산식품부	12	10,194	12,580	13,029	13,060	13,109	49	0.4
산업통상자원부	41	83,697	86,535	91,706	94,957	96,485	1,528	1.6
보건복지부	28	34,555	38,563	41,813	42,388	43,292	904	2.1
환경부	12	10,981	13,369	14,023	14,661	15,062	401	2.7
고용노동부	12	14,421	17,846	19,049	19,514	20,229	715	3.7
여성가족부	5	760	996	1,026	1,032	1,082	50	4.8
국토교통부	28	63,493	68,088	85,014	88,119	87,770	△349	△0.4
해양수산부	17	3,447	4,098	4,665	4,855	5,107	252	5.2
중소벤처기업부	11	3,847	4,611	4,942	5,224	5,476	252	4.8
국무조정실	25	3,674	4,497	5,000	5,118	5,192	74	1.4
방송통신위원회	2	425	529	541	578	581	3	0.5

〈표 III-22〉의 계속

(단위: 개, 명, %)

구 분	기관수	'17년	'18년	'19년	'20년 (A)	'21년 (B)	증감 (B-A)	전년 대비 증감률
원자력안전위원회	3	685	731	795	808	815	7	0.9
금융위원회	7	21,759	22,334	22,998	23,540	24,123	583	2.5
공정거래위원회	2	515	546	589	627	651	24	3.8
국가보훈처	3	5,368	6,550	6,983	7,326	7,620	294	4.0
인사혁신처	1	578	658	662	680	683	3	0.4
식품의약품안전처	4	468	505	528	526	565	39	7.4
관세청	1	50	50	50	50	50	0	0.0
방위사업청	2	3,719	4,258	4,425	4,479	4,497	18	0.4
경찰청	1	2,611	2,935	3,001	3,030	3,057	27	0.9
소방청	1	226	271	291	314	321	7	2.2
문화재청	1	335	376	389	394	394	0	0.0
산림청	4	579	774	940	1,230	1,256	26	2.1
농촌진흥청	1	292	291	315	324	329	5	1.5
특허청	5	1,632	1,628	1,663	1,708	1,710	2	0.1
기상청	3	231	234	238	351	372	21	6.0
합 계	350	345,208	382,762	419,542	434,827	442,777	7,950	1.8

주: 1. 기관수는 모기관 단위로 산출하였으며 부설기관(20개 기관)의 임직원수는 모기관에 포함하여 반영
 2. 임직원 수는 2022년 4월 30일 알리오시스템에 공시한 기관별 임직원 수를 부처 단위로 합산하여 작성하였으며
 반올림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수차이 조정을 일부 거침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2. 임직원 수' 항목의 기관별 공시자료(2022. 4. 29.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 2021년 임직원 수(정원 기준)의 증감을 기관 단위로 살펴보면, 전남대학교병원 등 총 24개 기관에서 전년 대비 100명 이상의 인력 증원이 이루어짐.
- 24개 기관에서 총 5,646명이 증원되었으며 이는 2021년 전체 인력증원 규모(7,950명)의 약 71.0%를 차지함.
- 가장 큰 규모로 인력이 증원된 기관은 전남대학교병원으로 전년 대비 592명(12.7%)이 증원되어 임직원 정원이 2020년 4,675명에서 2021년 5,267명으로 증가함.
 - 전남대학교병원과 더불어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전북대학교병원 등 의료 분야의 인력 증원이 크게 이루어졌는데, 이는 코로나19에 대응을 위한 의료 인력 증원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기인한 것임.

- 인력 증원 규모가 두 번째로 큰 기관은 한전MCS(주)로 전년 대비 586명이 증원되어 2021년 총 임직원 수는 4,973명으로 나타남.
- 한전MCS(주)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2020년에 정원이 크게 증가(전년 대비 66.6% 증가)하였으며, 2021년에는 13.4%의 증가율을 보임.

〈표 III-23〉 2021년 인력증원 100명 이상인 기관

(단위: 명)

번호	기관명	유형	증원 규모	번호	기관명	유형	증원 규모
1	전남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592	13	한국수자원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171
2	한전MCS(주)	기타공공기관	586	14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155
3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456	15	한국환경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44
4	근로복지공단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455	16	국토안전관리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35
5	충남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345	17	충북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134
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295	18	한국전력공사	시장형 공기업	131
7	중소기업은행	기타공공기관	276	19	한국도로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130
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246	20	신용보증기금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19
9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245	21	한국전기안전공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06
10	전북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239	22	국가철도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05
11	서울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196	23	주택도시보증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105
12	한국남동발전(주)	시장형 공기업	177	24	국립중앙의료원	기타공공기관	103

주: 1. 2021년 인력증원 규모는 2020년 임직원 정원 대비 2021년 임직원 정원 차이임

2.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기타공공기관인 서울대학교병원의 부설기관임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2. 임직원 수' 항목의 공시자료(2022. 4. 29.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 반면 전년 대비 임직원 정원이 감소한 기관은 38개 기관으로, 총 1,718명 규모가 감소하였음.
- 임직원 정원이 가장 크게 감소한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2020년 9,683명에서 2021년 정원은 704명 감소한 8,979명으로 집계됨.
 - 이는 2021년 발생한 부동산 투기 논란과 이에 따라 마련된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 방안¹⁰⁸⁾에 따른 기능 조정과 이를 통한 인원 감축에 기인한 것임.
- 인력 감원 규모가 두 번째로 큰 기관은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로 2021년 정원은 전년 대비 454명 감소한 6,317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정규직으로 전환¹⁰⁹⁾된 인원의 정년퇴직 등의 영향임.
- 대한석탄공사의 경우, 2016년 기능 조정계획¹¹⁰⁾에 따라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전년 대비 129명 감소하여 755명 수준까지 감소하였음.¹¹¹⁾

〈표 III-24〉 2021년 인력 감원 기관

(단위: 명)

번호	기관명	유형	감원 규모	번호	기관명	유형	감원 규모
1	한국토지주택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704	20	한국문화진흥 주식회사	기타공공기관	3
2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기타공공기관	454	21	88관광개발(주)	기타공공기관	2
3	대한석탄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129	22	인천국제공항공사	시장형 공기업	2
4	한국철도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85	23	한국디자인진흥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2
5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준시장형 공기업	67	24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기타공공기관	2
6	한국조폐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50	25	한국학중앙연구원	기타공공기관	2
7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48	26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병원	기타공공기관	1

108) 국토교통부,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방안」, 보도자료, 2021. 6. 7.

109)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지난 2019년 신설된 한국도로공사의 자회사로 한국도로공사의 위탁분야 요금수 통행료 수납 및 콜센터 상담서비스, 교통방송 서비스 업무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환 당시 통행료 수납원 등의 연령이 높아 정년 퇴직자가 다수 발생하였음.

110) 기획재정부,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보도자료, 2016. 6. 14.

111) (2017년) 1,251명 → (2018년) 1,135명(△116명) → (2019년) 1,002명(△133명) → (2020년) 884명(△118명) → (2021년) 755명(△129명)

〈표 III-24〉의 계속

(단위: 명)

번호	기관명	유형	감원 규모	번호	기관명	유형	감원 규모
8	한국광해광업공단	준시장형 공기업	44	27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 진흥재단	기타공공기관	1
9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타공공기관	30	28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타공공기관	1
10	전쟁기념사업회	기타공공기관	20	29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기타공공기관	1
11	한국등산·트레킹 지원센터	기타공공기관	20	30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준시장형 공기업	1
12	(재)우체국물류지원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8	3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기타공공기관	1
13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기타공공기관	8	3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타공공기관	1
14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기타공공기관	6	33	한국문화예술회관위원회	기타공공기관	1
15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기타공공기관	5	3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기타공공기관	1
16	한전원자력연료 주식회사	기타공공기관	5	35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기타공공기관	1
17	민주화운동기념 사업회	기타공공기관	3	36	환경보전협회	기타공공기관	1
18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기타공공기관	3	37	세계김치연구소	기타공공기관	1
19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기타공공기관	3	38	한국과학영재학교	기타공공기관	1

주: 1. 2021년 인력감원 규모는 2020년 임직원 정원 대비 2021년 임직원 정원 차이임

2. 세계김치연구소는 기타공공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의 부설기관이며 한국과학영재학교는 기타공공기관인 한국과학기술원의 부설기관임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2. 임직원 수' 항목의 공시자료(2022. 4. 29.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나. 신규채용 현황

□ 2021년에는 보건의료·SOC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신규채용이 이루어졌으며 채용인원은 2만 7,053명으로 나타남.

○ 신규채용 규모는 전년 대비 3,683명(△12.0%) 감소하였으나, 2018년~2019년 대규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자율정원조정제도 등으로 인해 신규채용 규모가 일시적으로 상승하였고, 이러한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예년 수준인 2~3만 명을 유지하고 있음.¹¹²⁾

〈표 III-25〉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2017~2021년)

(단위: 만 명, %)

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A)	'21년 (B)	증감 (B-A)	전년 대비 증감률
신규채용	2.27	3.39	4.13	3.07	2.71	△0.37	△12.0

주: 소수 반올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수차이 조정을 일부 거침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4. 신규채용 현황' 항목의 기관별 공시자료(2022. 4. 29.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 2021년 신규채용 현황을 공공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기업 유형과 기타공공기관 유형에서는 전년 대비 신규채용 규모가 감소하였고, 준정부기관 유형에서 소폭 증가하였음.
- 전체 공공기관 유형 중 기타공공기관에서 신규채용 규모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는데, 2020년 15,587명에서 2021년 12,607명으로 2,980명 감소(△19.1%)하였음.
- 시장형 공기업은 2020년 3,231명에서 2021년 2,639명으로 592명 감소(△18.3%)하였으며, 준시장형 공기업은 전년 대비 1,090명 감소(△24.4%)하여 2021년 3,377명으로 나타남.
- 준정부기관 유형에서는 전년 대비 신규채용 규모가 증가하였는데,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2021년 1,812명으로 전년 대비 338명 증가(22.9%)하였으며,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2021년 6,618명으로 전년 대비 641명 증가(10.7%)하였음.

〈표 III-26〉 신규 채용 현황(2017~2021년)

(단위: 명, %)

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A)	'21년 (B)	증감 (B-A)	전년 대비 증감률
합 계	22,659	33,894	41,322	30,736	27,053	△3,683	△12.0
공기업	6,820	9,085	11,292	7,698	6,016	△1,682	△21.8
· 시장형	3,665	4,206	4,303	3,231	2,639	△592	△18.3
· 준시장형	3,155	4,879	6,989	4,467	3,377	△1,090	△24.4
준정부기관	6,942	9,921	9,239	7,451	8,430	979	13.1
· 기금관리형	1,790	2,672	1,651	1,474	1,812	338	22.9
· 위탁집행형	5,153	7,249	7,587	5,977	6,618	641	10.7
기타공공기관	8,896	14,888	20,792	15,587	12,607	△2,980	△19.1

주: 소수 반올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수차이 조정을 일부 거침
 자료: 기획재정부,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보도자료, 2022. 4. 29. 및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4. 신규채용 현황' 항목의 기관별 공시자료(2022. 4. 29.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 2021년 공공기관 신규 채용 현황을 주무부처별로 살펴보면, <표 III-27>과 같음.
- 2021년 신규채용 규모는 교육부(7,489명), 산업통상자원부(3,803명), 국토교통부(3,750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상위 3개 부처의 신규채용 규모가 전체 신규채용 규모의 55.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21년 신규채용 규모가 증가한 부처를 순서대로 살펴보면, 고용노동부(332명, 33.9%), 환경부(193명, 25.0%), 금융위원회(139명, 18.7%) 순임.
 - 2021년 신규채용 규모가 감소한 부처를 순서대로 살펴보면, 산업통상자원부(△3,051명, △44.5%), 국토교통부(△1,117명, △23.0%), 교육부(△641명, △7.9%) 순임.
- 35개 부처 중 15개 부처¹¹³⁾ 산하 공공기관에서 신규채용 규모가 총 5,148명 감소하였음.

<표 III-27>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신규 채용 현황(2017~2021년)

(단위: 개, 명, %)

구 분	기관수	'17년	'18년	'19년	'20년 (A)	'21년 (B)	증감 (B-A)	전년 대비
								증감률
기획재정부	4	141	251	205	195	185	△10	△5.1
교육부	22	4,659	7,931	7,037	8,130	7,489	△641	△7.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7	1,201	2,953	1,755	1,297	1,318	22	1.7
외교부	3	61	87	87	47	39	△8	△17.6
통일부	2	7	5	10	6	7	1	16.7
법무부	3	55	95	92	57	71	14	24.6
국방부	3	28	23	33	21	24	3	14.3
행정안전부	3	85	352	127	66	141	75	113.6
문화체육관광부	31	331	476	352	300	374	74	24.6
농림축산식품부	12	662	666	551	375	458	83	22.1
산업통상자원부	41	4,506	5,659	8,411	6,854	3,803	△3,051	△44.5
보건복지부	28	3,135	3,362	3,870	3,048	3,153	105	3.4
환경부	12	617	783	1,165	773	966	193	25.0
고용노동부	12	1,292	2,154	1,320	979	1,311	332	33.9
여성가족부	5	56	65	58	117	75	△42	△35.6

113) 산업통상자원부(△3,051명), 국토교통부(△1,117명), 교육부(△641명), 산림청(△149명), 국가보훈처(△50명), 여성가족부(△42명), 방송통신위원회(△25명), 인사혁신처(△18명), 기획재정부(△10명), 소방청(△9명), 특허청(△9명), 외교부(△8명), 식품의약품안전처(△8명), 문화재청(△7명), 농촌진흥청(△5명)

〈표 III-27〉의 계속

(단위: 개, 명, %)

구 분	기관수	'17년	'18년	'19년	'20년 (A)	'21년 (B)	증감 (B-A)	전년 대비
								증감률
국토교통부	28	3,118	4,781	12,402	4,867	3,750	△1,117	△23.0
해양수산부	17	242	346	385	350	408	58	16.6
중소벤처기업부	11	269	511	470	392	528	136	34.7
국무조정실	25	237	683	311	275	326	51	18.5
방송통신위원회	2	33	35	37	49	24	△25	△51.0
원자력안전위원회	3	18	54	79	24	37	13	54.2
금융위원회	7	962	836	855	744	883	139	18.7
공정거래위원회	2	50	64	72	39	67	28	71.8
국가보훈처	3	262	828	671	919	869	△50	△5.4
인사혁신처	1	55	50	49	60	42	△18	△30.0
식품의약품안전처	4	28	71	70	75	67	△8	△10.7
관세청	1	14	3	8	2	5	3	150.0
방위사업청	2	146	371	389	101	199	98	97.0
경찰청	1	81	83	137	124	141	17	13.7
소방청	1	18	25	31	30	21	△9	△30.0
문화재청	1	11	24	16	21	14	△7	△33.3
산림청	4	163	199	154	253	105	△149	△58.7
농촌진흥청	1	29	8	25	25	20	△5	△20.0
특허청	5	67	43	67	68	59	△9	△13.2
기상청	3	25	22	23	55	76	21	37.7
합 계	350	22,659	33,894	41,322	30,736	27,053	△3,683	△12.0

주: 1. 기관수는 모기관 단위로 산출하였으며 부설기관(20개 기관)의 임직원수는 모기관에 포함하여 반영
 2. 임직원 수는 2022년 4월 30일 알리오시스템에 공시한 기관별 임직원 수를 부처 단위로 합산하여 작성하였으며
 반올림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수차이 조정을 일부 거침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2. 임직원 수' 항목의 기관별 공시자료(2022. 4. 29.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 2021년에 신규 채용이 100명 이상 이루어진 기관은 52개이며 이 중 상위 10개 기관의 신규채용 규모(9,792명)가 전체 신규채용(27,053명)의 약 36.2%를 차지함.

○ 신규채용이 많이 이루어진 10개 기관은 보건의료 분야, SOC 분야 및 에너지 분야의 공공기관에 해당함.

〈표 III-28〉 2021년 신규 채용 규모 상위 10개 기관

(단위: 명)

번호	기관명	유형	신규 채용	번호	기관명	유형	신규 채용
1	한국철도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1,429	6	서울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931
2	전남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1,076	7	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859
3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063	8	부산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826
4	한국전력공사	시장형 공기업	1,051	9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804
5	충남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980	10	경북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773

주: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기타공공기관인 서울대학교병원의 부설기관임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4. 신규채용 현황' 항목의 기관별 공시자료(2022. 4. 29.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 신규 채용 규모를 전년 대비 증감 측면에서 살펴보면, 전남대학교병원 등 9개 기관에서 2021년 신규채용 규모가 전년 대비 100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남대학교병원은 2021년 전체 공공기관 중 신규채용 규모(1,076명)가 두 번째로 크고 전년 대비 신규 채용 증가 인원(405명)은 가장 많음.
 - 이는 파견용역업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따른 채용 규모 확대에 기인함.
- 경상국립대학교병원은 전년보다 260명 증가(63.6%)한 669명을 신규로 채용함.
 - 이는 2021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간호 인력 증원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채용 규모 증가임.
- 근로복지공단의 2021년 신규 채용 규모는 721명으로, 2020년 461명 대비 260명(56.3%) 증가하였음.
 - 신규 사업 수행을 위해 기관의 정원이 증원됨에 따라 채용 규모도 확대됨.
- 충남대학교병원은 2021년 전년 대비 213명이 증가한 980명을 신규로 채용하였으며, 신규채용 규모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전체 신규채용 규모에서도 상위 5개 기관 내에 자리하고 있음.
 - 2020년 세종충남대학교병원 개원에 따른 의료 인력을 증원하면서 채용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

- 이 외 한국국토정보공사, 국방과학연구소 등도 2021년에 신규 채용 인원이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20년도 채용 규모가 감소하여 2021년 상승폭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이며 예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채용하였음.

〈표 III-29〉 2021년 신규 채용 100명 이상 증가한 기관

(단위: 명, %)

번호	기관명	유형	'20년 신규채용 (A)	'21년 신규채용 (B)	증감 (B-A)	전년 대비
						증감률
1	전남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671	1,076	405	60.4
2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409	669	260	63.6
3	근로복지공단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461	721	260	56.3
4	충남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767	980	213	27.8
5	한국국토정보공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84	328	144	78.3
6	국방과학연구소	기타공공기관	56	181	125	223.2
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21	224	103	85.1
8	한국항공공사	시장형 공기업	131	233	102	77.9
9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212	312	100	47.2

주: 전년 대비 증감률은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4. 신규채용 현황' 항목의 기관별 공시자료(2022. 4. 29.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공공성 제고에 따른 사회형평적 채용 관련 실적을 살펴보면, 2021년에는 총 신규채용 규모 감소에 따라 사회형평적 채용 전체 인원은 감소하였으나, 전체 신규채용 대비 비중은 모두 증가하여 사회형평적 채용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¹¹⁴⁾
- 비수도권 지역인재, 청년, 여성 등의 신규채용은 감소하였으나 각 감소율은 총 신규채용 감소율(△12.0%)보다는 낮았으며, 장애인 및 이전지역 인재 채용은 증가하였음.
 - 장애인 채용 규모는 2019년 대규모 채용에 따른 기저효과로 2020년에는 전년 대비 67.6% 감소하였으나 2021년에는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¹¹⁵⁾을 마련하는 등의 장애인 채용 확대 노력으로 전년 대비 48명(7.1%) 증가하여 734명이 채용되었음.

114) 기획재정부,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보도자료, 2022. 4. 29.

115)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2020. 6. 5.

- 2021년 여성의 신규채용 인원은 12,871명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전체 신규채용 대비 비중은 47.6%로 최근 5년간 가장 높게 나타남.
- 2021년 청년 채용 비중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는데 전년(73.8%) 대비 7.9%p 증가한 81.7%로 나타났음.

〈표 III-30〉 사회형평적 채용 규모(2017~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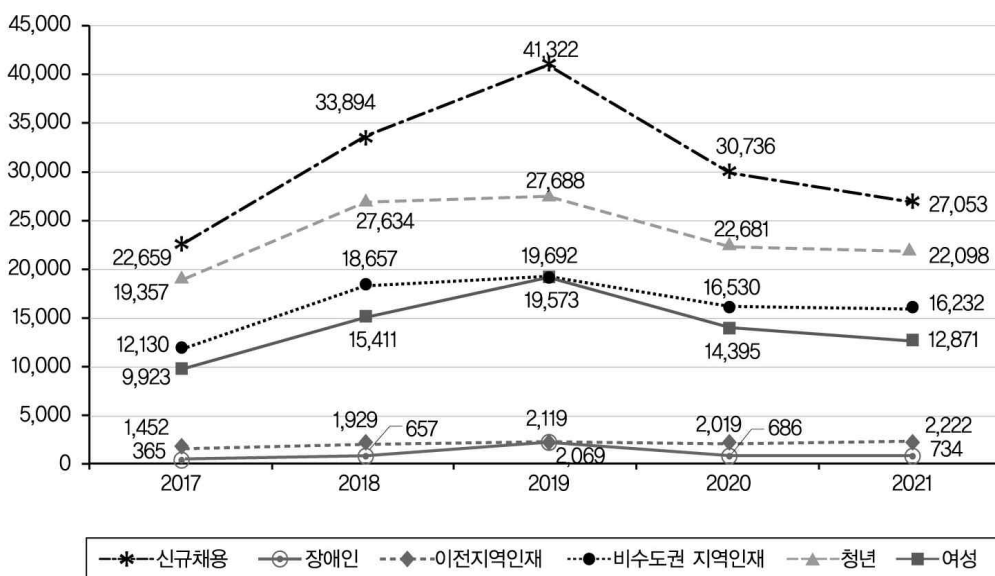
(단위: 명, %)

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A)	'21년 (B)	증감 (B-A)	전년 대비 증감률
장애인	365 (1.6%)	657 (1.9%)	2,119 (5.1%)	686 (2.2%)	734 (2.7%)	48	7.1
이전지역인재	1,452 (6.4%)	1,929 (5.7%)	2,069 (5.0%)	2,019 (6.6%)	2,222 (8.2%)	204	10.1
비수도권 지역인재	12,130 (53.5%)	18,657 (55.0%)	19,692 (47.7%)	16,530 (53.8%)	16,232 (60.0%)	△298	△1.8
청년	19,357 (85.4%)	27,634 (81.5%)	27,688 (67.0%)	22,681 (73.8%)	22,098 (81.7%)	△583	△2.6
여성	9,923 (43.8%)	15,411 (45.5%)	19,573 (47.4%)	14,395 (46.8%)	12,871 (47.6%)	△1,524	△10.6
총 신규채용	22,659	33,894	41,322	30,736	27,053	△3,683	△12.0

주: () 안의 수치는 총 신규채용 대비 비중
 자료: 기획재정부,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보도자료, 2022. 4. 29.

[그림 III-3] 사회형평적 채용 추이(2017~2021년)

(단위: 명)



자료: 기획재정부,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보도자료, 2022. 4. 29.를 참고하여 작성

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현황¹¹⁶⁾

- 정부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청년실업 문제에 대응하여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민간부문으로 파급함으로써 청년고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청년고용의무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¹¹⁷⁾에 청년 미취업자(연령기준: 15세 이상 34세 이하)를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 2021년 기준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기관은 445개소이며, 이 중 「공운법」상 공공기관은 304개소, 지방공기업은 141개소임.
- 정부는 청년 신규고용률이 3% 미만인 기관의 명단을 공표하고 있으며, 청년 신규고용 실적을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하여야 함.¹¹⁸⁾
 - 공공부문의 청년고용의무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2022년에는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미이행기관을 점검하는 등 정부적 차원의 노력을 전개해나갈 계획임.

〈표 III-31〉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추이(2011~2021년)

(단위: %)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청년신규고용비율	3.0	3.3	3.5	4.8	4.8	5.9	5.9	6.9	7.4	5.9	5.8
의무이행기관비율	42.3	48.1	51.3	72.1	70.1	80.0	80.0	82.1	89.4	84.9	86.5

주: 1. 청년의무고용 적용대상인 「공운법」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한 전체 실적임
 2. 2013년까지는 '고용노력의무'의 대상을 만 15~29세로 함
 자료: 고용노동부, 「2018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준수율 82.1%」, 보도자료, 2019. 2. 28. 및 「2021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22. 2. 24.를 참고하여 작성

- 2021년 청년고용의무제 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청년 신규고용비율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의무이행기관 비율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음.
- 2021년 청년고용의무제 적용기관(445개소)의 청년 신규고용 인원은 2만 2,973명으로 적용기관 전체 정원의 5.8%를 차지하여 국정과제 목표(5% 이상)를 상회함.

116) 고용노동부, 「2021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22. 2. 24.
 117) 「공운법」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 준정부기관, 정원이 30명 이상인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정원이 30명 이상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포함
 118)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 제4항 내지 제5항

- 「공운법」상 공공기관의 2021년 청년 신규고용인원은 2만 111명으로 전년 대비 698명(3.6%) 증가하였으며, 청년 신규고용비율은 5.9%로 전년 대비 0.1%p 증가함.
- 2021년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기관(445개소) 중 청년고용의무를 달성한 기관의 비율은 86.5%(385개소)로 2020년(84.9%, 370개소)과 비교해 1.6%p(+15개소)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간 80%를 상회하고 있음.
 - 한편 2021년에 청년고용의무를 달성하지 못한(미이행) 기관은 총 60개소(13.5%)이며, 청년고용의무제 적용이 제외되는 기관은 17개소로 나타남.
 - 2021년 청년고용의무제 적용대상 공공기관(304개) 중 이행기관은 262개소(86.2%)이며, 미이행기관은 42개소(13.8%)임.
- 「공운법」상 공공기관의 최근 6년간 청년 신규고용 및 청년고용의무제 이행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표 III-32> 및 <표 III-33>과 같음.
 - 「공운법」상 공공기관의 청년 신규고용 실적은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해오다 2020년에는 자율정원조정제도 운영에 따른 기저효과 및 코로나19 영향으로 감소하였으며, 2021년에 다시 소폭 증가하여 2만 명 이상의 신규고용 실적을 나타내고 있음.¹¹⁹⁾
 -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기관 비율은 2017년을 제외하고 매년 달성률이 80%를 상회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전년 대비 2.0%p(+7개소) 증가하여 86.2%의 달성률을 나타냈음.¹²⁰⁾

119) 2016년 5.8% → 2017년 6.0%(+0.2%p) → 2018년 7.2%(1.2%p) → 2019년 7.8%(0.6%p) → 2020년 5.8%(△2.0%p) → 2021년 5.9%(+0.1%p)

120) 2016년 82.8% → 2017년 77.5%(△5.3%p) → 2018년 82.8%(+5.3%p) → 2019년 89.1%(+6.3%p) → 2020년 84.2%(△4.9%p) → 2021년 86.2%(+2.0%p)

〈표 III-32〉 청년 신규고용 현황(2016~2021년)

(단위: 개소, 명,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기관 수	정원 (A)	청년 고용 (B)	기관 수	정원 (A)	청년 고용 (B)	기관 수	정원 (A)	청년 고용 (B)	기관 수	정원 (A)	청년 고용 (B)	기관 수	정원 (A)	청년 고용 (B)	기관 수	정원 (A)	청년 고용 (B)
합계	409	326,774	19,236 (5.9)	404	322,123	18,937 (5.9)	447	373,416	25,676 (6.9)	442	385,862	28,689 (7.4)	436	387,574	22,798 (5.9)	445	395,422	22,793 (5.8)
「공운법」상 공공기관	279	281,993	16,326 (5.8)	276	290,800	17,358 (6.0)	308	320,994	23,225 (7.2)	303	332,388	25,786 (7.8)	303	332,383	19,413 (5.8)	304	338,144	20,111 (5.9)
지방공기업	130	44,781	2,910 (6.5)	128	31,323	1,579 (5.0)	139	52,422	2,451 (4.7)	139	53,474	2,903 (5.4)	133	55,191	3,385 (6.1)	141	57,278	2,862 (5.0)

주: () 안은 정원 대비 청년고용 비율, 청년고용 비율(%)=청년고용(B)/정원(A)
 자료: 고용노동부, 「2021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22. 2. 24.

〈표 III-33〉 청년고용의무제 이행기관 현황(2016~2021년)

(단위: 개소,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기관 수	청년 고용		기관 수	청년 고용		기관 수	청년 고용		기관 수	청년 고용		기관 수	청년 고용		기관 수	청년 고용							
		달성	미달		달성	미달		달성	미달		달성	미달		달성	미달		달성	미달						
합계	409	327 (80.0)	82 (20.0)	25	404	323 (80.0)	81 (20.0)	15	447	367 (82.1)	80 (17.9)	19	442	395 (89.4)	47 (10.6)	18	436	370 (84.9)	66 (15.1)	28	445	385 (86.5)	60 (13.5)	17
「공운법」상 공공기관	279	231 (82.8)	48 (17.2)	15	276	214 (77.5)	62 (22.5)	14	308	255 (82.8)	53 (17.2)	11	303	270 (89.1)	33 (10.9)	13	303	255 (84.2)	48 (15.8)	23	304	262 (86.2)	42 (13.8)	12
지방공기업	130	96 (73.8)	34 (26.2)	10	128	109 (85.2)	19 (14.8)	1	139	112 (80.6)	27 (19.4)	8	139	125 (89.9)	14 (10.1)	5	133	115 (86.5)	18 (13.5)	5	141	123 (87.2)	18 (12.8)	5

주: () 안은 청년고용달성 기관수 비율임
 자료: 고용노동부, 「2021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22. 2. 24.

라. 비정규직 현황 및 정규직 전환 실적¹²¹⁾

- 정부가 추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연차별 전환계획(2017. 10월)」에 따라 기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추진되면서 공공기관 전체 인력 중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공공부문 비정규직 연차별 전환계획」은 2020년까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¹²²⁾ 지방공기업 및 교육기관 등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20만 5천명¹²³⁾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정함.
 - 대다수의 공공기관이 정부 정책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전년도에 이어 공공기관 근로자의 고용안정성과 전환자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있으며 정규직 고용 관행이 확산되고 있음.
- 2022년 4월 알리오시스템 공시정보 기준, 2021년 말 기준 비정규직 수는 전년 대비 3,715명(6.1%) 감소한 5만 7,025명임.
 - 「공공부문 비정규직 연차별 전환계획」에 따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표 III-34〉 공공기관 비정규직 현황(2017~2021년)

(단위: 명, %)

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A)	'21년 (B)	증감 (B-A)	전년 대비 증감률
비정규직 합계	134,664	103,654	79,836	60,740	57,025	△3,715	△6.1

주: 1. 비정규직 합계: 비정규직(기간제) + 소속외인력(파견+용역)

2. 2022년 4월 30일 알리오시스템에 경영정보를 공시한 350개 공공기관(2022년 1월 지정 기준)과 그 부설기관(20개 기관)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자료: 기획재정부,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보도자료, 2022. 4. 29.

121)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1단계 기관 정규직 전환 추진실적자료(8차)」, 2022. 3. 4. 및 「'17년 7월 이후 공공부문 상시·지속업무 종사 비정규직 199,538명 정규직 전환」, 보도자료, 2021. 3. 5.을 참고하여 작성

122) 「공공부문 비정규직 연차별 전환계획(2017. 10월)」의 '공공기관'은 2017년 기준 「공운법」상 공공기관 340개와 「공운법」상 공공기관이 아닌 4개 기관(금융감독원,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방송공사, 한국은행)을 포함한 344개 기관임

123) 기관별 계획 17만 5천명 및 추가전환 여지 3만명 포함

- 2022년 3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1단계 기관 정규직 전환 추진 실적자료 (8차)」에 따른 정규직 전환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022년 「공운법」상 공공기관(350개) 중 「공공부문 비정규직 연차별 전환계획」에 포함된 327개 기관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함.
 - 350개의 공공기관 중 2018~2022년에 신규 지정 및 지정해제 된 기관은 대상기관에 포함되지 않음.
 - 327개 공공기관 기준,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인원은 10만 7,465명으로 계획인원 대비 전환결정 비율은 113.5%로 나타났으며, 이 중 실제로 전환이 완료된 인원은 10만 2,422명으로 결정인원 대비 전환완료 비율은 95.3%로 나타남.
 - 전환결정 비율은 모든 유형의 공공기관에서 100%를 상회하고 있으며, 그 중 가장 높은 유형은 준시장형 공기업(129.1%)이며, 가장 낮은 유형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100.7%)임.
 - 전환완료 비율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101.2%)이 가장 높았고, 시장형 공기업(89.2%)이 가장 낮았음.
 - 공공기관 비정규직 중 기간제 근로자의 전환결정 인원은 2만 5,946명으로 계획인원 대비 전환결정 비율은 101.7%로 나타났으며, 이 중 실제로 전환이 완료된 인원은 2만 5,892명으로 결정인원 대비 전환완료 비율은 99.8%임.
 - 공공기관 파견 근로자의 전환결정 인원은 8만 1,519명으로 계획인원 대비 전환결정 비율은 117.9%이며, 이 중 실제로 전환이 완료된 인원은 7만 6,530명으로 결정인원 대비 전환완료 비율은 93.9%임.
 - 계획인원 대비 전환결정 비율은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근로자 모두 100%를 초과하였으며, 결정인원 대비 전환완료 비율은 기간제 근로자(99.8%)가 파견 근로자(93.9%)에 비해서 더 높게 나타남.

〈표 III-35〉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결정 및 전환완료 현황

(단위: 명, %)

구 분	총인원 ¹⁾	상시 인원 ²⁾	전환계획 인원 ³⁾ (A)	전환결정 인원 ⁴⁾ (B)	전환결정 비율 (B/A)	전환완료 인원 ⁵⁾ (C)	전환완료 비율 (C/B)
합 계 ⁶⁾	146,821	130,669	94,661	107,465	113.5	102,422	95.3
공기업	72,429	69,426	48,649	60,365	124.1	56,624	93.8
· 시장형	35,882	34,689	25,630	30,653	119.6	27,353	89.2
· 준시장형	36,547	34,737	23,019	29,712	129.1	29,271	98.5
준정부기관	25,880	23,300	19,075	19,824	103.9	19,536	98.5
· 기금관리형	7,847	7,281	6,161	6,825	110.8	6,315	92.5
· 위탁집행형	18,033	16,019	12,914	12,999	100.7	13,221	101.7
기타공공기관	48,512	37,943	26,937	27,276	101.3	26,262	96.3

- 주: 1. 총인원은 2017년 6월 말 기준 기간제 및 파견·용역 근로자 현원(2017년 특별실태조사)임
 2. 상시인원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임
 3. 전환계획인원은 2017년 10월 25일 연차별 전환계획상 인원으로, 개별 기관 자체 판단에 따른 잠정적인 정규직 전환계획 인원임
 4. 전환결정인원은 전환결정기구(기간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파견용역: 노사전문가협의)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인원임
 5. 전환완료인원은 실제 정규직으로 전환(채용)을 완료한 인원임
 6. 고용노동부 자료(344개 기관 기준) 중 2022년 「공운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327개 기관을 대상으로 산출(「공운법」상 공공기관이 아닌 4개 기관(금융감독원,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방송공사, 한국은행)과 2018~2022년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 된 13개 기관(사단법인한국기술자격검정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주)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예탁결제원, (재)한국형수치예보보안공사, (재)정동극장, 아시아문화원, IOM이민정책연구원,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한전의료재단법인한일병원, 부산항보안공사, 인천항보안공사)은 분석대상에서 제외)

자료: 기획재정부, 「2022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22. 1. 28. 및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1단계 기관 정규직 전환 추진실적자료(8차)」, 2022. 3. 4.를 참고하여 작성

〈표 III-36〉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결정 및 전환완료 현황

(단위: 명, %)

구 분	총인원 ¹⁾	상시인원 ²⁾	전환계획인원 ³⁾ (A)	전환결정인원 ⁴⁾ (B)	전환결정비율 (B/A)	전환완료인원 ⁵⁾ (C)	전환완료비율 (C/B)
합 계 ⁶⁾	46,059	32,892	25,512	25,946	101.7	25,892	99.8
공기업	10,909	9,273	8,150	8,187	100.5	8,213	100.3
· 시장형	1,280	747	452	438	96.9	443	101.1
· 준시장형	9,629	8,526	7,698	7,749	100.7	7,770	100.3
준정부기관	8,201	6,258	5,342	5,267	98.6	5,413	102.8
· 기금관리형	2,038	1,539	1,223	1,203	98.4	1,201	99.8
· 위탁집행형	6,163	4,719	4,119	4,064	98.7	4,212	103.6
기타공공기관	26,949	17,361	12,020	12,492	103.9	12,266	98.2

- 주: 1. 총인원은 2017년 6월 말 기준 기간제 및 파견·용역 근로자 현원(2017년 특별실태조사)임
 2. 상시인원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임
 3. 전환계획인원은 2017년 10월 25일 연차별 전환계획상 인원으로, 개별 기관 자체 판단에 따른 잠정적인 정규직 전환계획 인원임
 4. 전환결정인원은 전환결정기구(기간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파견용역: 노사전문가협의)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인원임
 5. 전환완료인원은 실제 정규직으로 전환(채용)을 완료한 인원임
 6. 고용노동부 자료(344개 기관 기준) 중 2022년 「공운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327개 기관을 대상으로 산출(「공운법」상 공공기관이 아닌 4개 기관(금융감독원,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방송공사, 한국은행)과 2018~2022년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 된 13개 기관(사단법인한국기술자격검정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주)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예탁결제원, (제)한국형수치예보보안공사, (제)정동극장, 아시아문화원, IOM이민정책연구원, (제)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한전의료재단법인한일병원, 부산항보안공사, 인천항보안공사)은 분석대상에서 제외)

자료: 기획재정부, 「2022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22. 1. 28. 및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1단계 기관 정규직 전환 추진실적자료(8차)」, 2022. 3. 4.를 참고하여 작성

〈표 III-37〉 파견 근로자 정규직 전환결정 및 전환완료 현황

(단위: 명, %)

구 분	총인원 ¹⁾	상시인원 ²⁾	전환계획인원 ³⁾ (A)	전환결정인원 ⁴⁾ (B)	전환결정비율 (B/A)	전환완료인원 ⁵⁾ (C)	전환완료비율 (C/B)
합 계 ⁶⁾	100,762	97,777	69,149	81,519	117.9	76,530	93.9
공기업	61,520	60,153	40,499	52,178	128.8	48,411	92.8
· 시장형	34,602	33,942	25,178	30,215	120.0	26,910	89.1
· 준시장형	26,918	26,211	15,321	21,963	143.4	21,501	97.9
준정부기관	17,679	17,042	13,733	14,557	106.0	14,123	97.0
· 기금관리형	5,809	5,742	4,938	5,622	113.9	5,114	91.0
· 위탁집행형	11,870	11,300	8,795	8,935	101.6	9,009	100.8
기타공공기관	21,563	20,582	14,917	14,784	99.1	13,996	94.7

- 주: 1. 총인원은 2017년 6월 말 기준 기간제 및 파견·용역 근로자 현원(2017년 특별실태조사)임
- 2. 상시인원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임
- 3. 전환계획인원은 2017년 10월 25일 연차별 전환계획상 인원으로, 개별 기관 자체 판단에 따른 잠정적인 정규직 전환계획 인원임
- 4. 전환결정인원은 전환결정기구(기간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파견용역: 노사전문가협의)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인원임
- 5. 전환완료인원은 실제 정규직으로 전환(채용)을 완료한 인원임
- 6. 고용노동부 자료(344개 기관 기준) 중 2022년 「공운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327개 기관을 대상으로 산출(「공운법」상 공공기관이 아닌 4개 기관(금융감독원,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방송공사, 한국은행)과 2018-2022년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 된 13개 기관(사단법인한국기술자격검정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주)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예탁결제원, (재)한국형수치예보보안공사, (재)정동극장, 아시아문화원, IOM이민정책연구원,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한전의료재단법인한일병원, 부산항보안공사, 인천항보안공사)은 분석대상에서 제외)

자료: 기획재정부, 「2022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22. 1. 28. 및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1단계 기관 정규직 전환 추진실적자료(8차)」, 2022. 3. 4.를 참고하여 작성

3. 재무현황¹²⁴⁾

가. 총평

- 2021년 공공기관 자산규모는 969조 원으로 공공주택, 전력설비 확충 등 주요 기관의 사업 확대 등에 따라 전년 대비 71.4조 원(8.0%)이 증가하였음.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임대자산 증가, 한국전력공사의 발전소·송배전 설비 등 전력설비 증가, 한국도로공사의 도로 투자확대에 따른 유료도로관리권 증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보급자리론) 확대에 따른 대출채권 증가 등이 공공기관 자산 증가에 영향을 주었음.
- 2013년 말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의 영향으로 2014년 공공기관 부채 규모가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된 이래 2017년까지 4년 연속 감소하였으나, 2018년 다시 증가세로 전환된 이후 2021년까지 부채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
- 2021년 부채 규모는 583조 원으로 2020년 541.2조 원 대비 약 41.8조 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투자·사업재원 마련을 위한 통상적 차입에 기인함.
- 공기업 부채는 전년 대비 35.9조 원(9%) 증가하였고, 준정부기관 부채는 전년 대비 2.9조 원(2.3%) 증가, 기타공공기관 부채는 전년 대비 3조 원(17%) 증가함.

124)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기관별 공시자료(2022. 4. 29. 기준) 및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보도자료, 2022. 4. 29. 참고

〈표 III-38〉 공공기관의 자산, 부채 및 자본 현황(2017~2021년)

(단위: 조 원, %)

구분	'17	'18	전년 대비 증감 (증가율)	'19	전년 대비 증감 (증가율)	'20	전년 대비 증감 (증가율)	'21	전년 대비 증감 (증가율)
◇ 부채	493.2	501.1	7.9 (1.6)	524.7	23.6 (4.7)	541.2	16.5 (3.2)	583.0	41.8 (7.7)
· 공기업	364.4	371.5	7.2 (2.0)	388.5	17.0 (4.6)	398.2	9.7 (2.5)	434.1	35.9 (9.0)
· 준정부기관	117.7	117.8	0.1 (0.1)	121.9	4.1 (3.5)	125.4	3.4 (2.8)	128.2	2.9 (2.3)
· 기타공공기관	11.1	11.7	0.7 (5.9)	14.2	2.5 (21.4)	17.6	3.4 (23.7)	20.6	3.0 (17.0)
◇ 자본	313.7	323.7	10.0 (3.2)	332.8	9.1 (2.8)	356.4	23.6 (7.1)	386.0	29.6 (8.3)
· 공기업	206.2	209.4	3.1 (1.5)	213.3	4.0 (1.9)	219.1	5.7 (2.7)	223.8	4.8 (2.2)
· 준정부기관	87.7	90.2	2.4 (2.8)	94.8	4.7 (5.2)	109.0	14.1 (14.9)	127.3	18.3 (16.8)
· 기타공공기관	19.8	24.2	4.4 (22.3)	24.7	0.5 (1.9)	28.4	3.7 (15.0)	34.9	6.5 (23.1)
◇ 자산	806.9	824.8	17.9 (2.2)	857.5	32.6 (4.0)	897.6	40.1 (4.7)	969.0	71.4 (8.0)
· 공기업	570.6	580.9	10.3 (1.8)	601.8	20.9 (3.6)	617.3	15.5 (2.6)	658.0	40.7 (6.6)
· 준정부기관	205.5	208.0	2.5 (1.2)	216.8	8.8 (4.2)	234.3	17.6 (8.1)	255.5	21.2 (9.0)
· 기타공공기관	30.9	35.9	5.1 (16.4)	38.9	3.0 (8.3)	46.0	7.1 (18.2)	55.5	9.5 (20.8)

주: 1. () 안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

2. 2022년 4월말 알리오시스템에 경영정보를 공시한 350개 공공기관(2022년 1월 지정 기준) 및 부설기관(20개 기관)을 기준으로 작성

3.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2017~2021년 모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자료 작성 (단, 일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7개)의 경우 2018~2020년 신규 지정 및 유형변경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시점에 기관별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기준이 도입되었으며, 이에 따라 2017~18년에 한해 과거 한국일반회계 기준(K-GAAP)을 사용: 서민금융진흥원,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창업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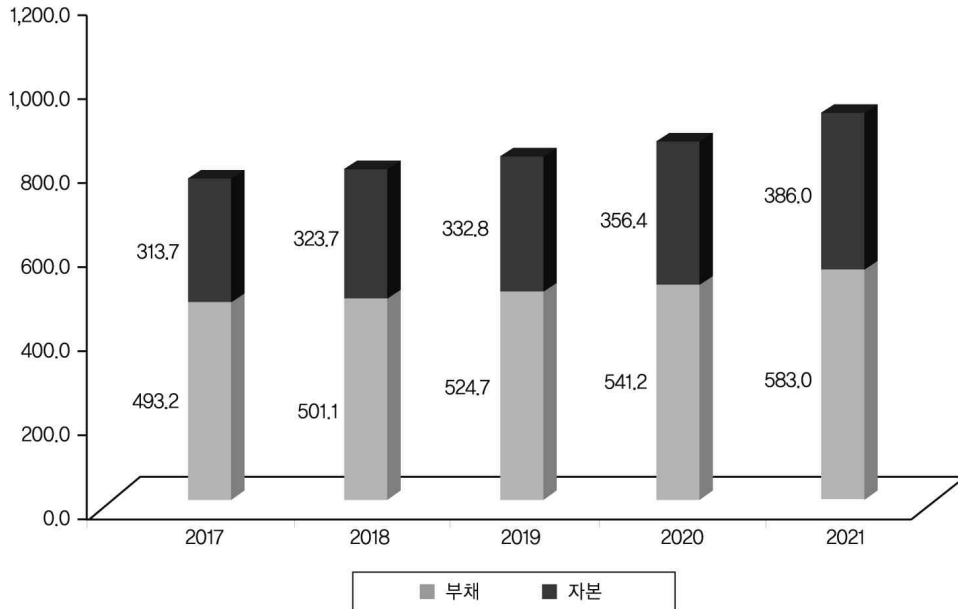
4.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기관 고유계정 및 기금계정(직접관리기금)을 모두 포함하여 금액 산출. 다만, 기타공공기관 중 금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은 산출대상에서 제외

5. 소수점 반올림과 증감 계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수차이 조정을 일부 거침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22. 요약재무상태표'의 기관별 공시자료(2022. 4. 29.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그림 III-4] 공공기관의 자본 및 부채 규모 추이(2017~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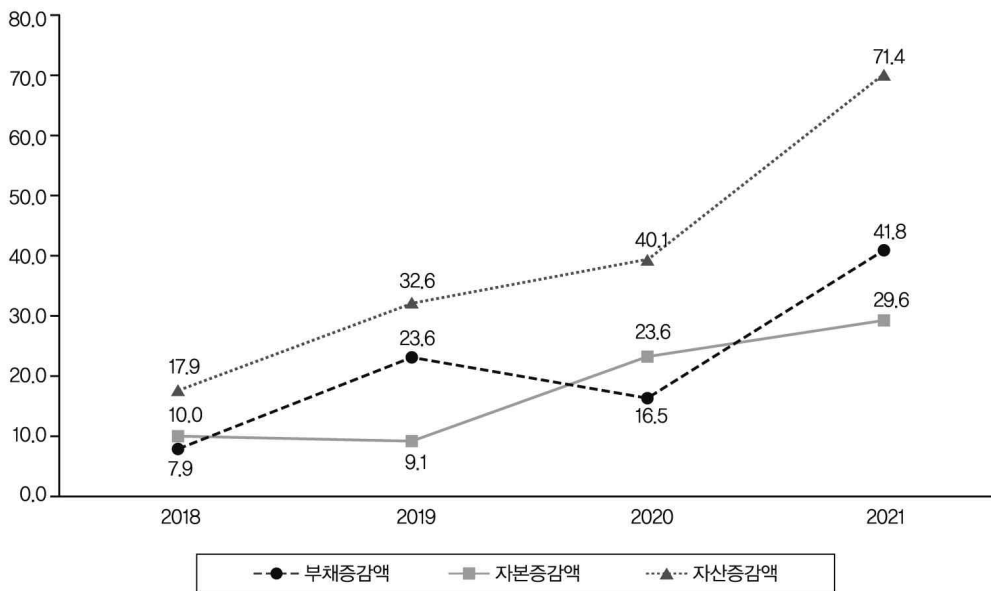
(단위: 조 원)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22. 요약재무상태표'의 기관별 공시자료(2022. 4. 29.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그림 III-5] 공공기관의 자산, 부채 및 자본 증감액 추이(2018~2021년)

(단위: 조 원)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22. 요약재무상태표'의 기관별 공시자료(2022. 4. 29.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나. 부채 현황

- 2015년 이후 2017년까지 매년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는 감소세를 유지하였으나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1년 공공기관 부채 규모는 583조 원으로 전년 대비 41.8조 원 대폭 증가하였음.
- 공공기관 중 부채 증가가 가장 큰 기관은 한국전력공사(연결재무제표 기준)로 전년 대비 약 13.3조 원의 부채가 증가하였음.
 - 설비 산업인 발전산업의 특성상 매년 발전소 및 송변전 설비 건설을 위한 대규모 투자비가 발생하며, 자금부족 시 사채발행 및 외부차입을 통해 조달하는 것이 부채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남.¹²⁵⁾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임대주택 운영호수의 계속적 증가 및 임대주택 노후화로 인한 수선비 증가 등으로 임대주택 운영손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정책 사업물량 급증(주택공급 확대, 3기신도시 지정 등)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부채가 증가함.¹²⁶⁾
- 「공운법」 제39조의2 및 「국가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는 40개 기관¹²⁷⁾의 2021년 부채 규모는 550.7조 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약 9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38.2조 원 증가하였고 부채비율은 161%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임.
- 부채 규모는 작년에 수립된 「2021~2025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2021년 전망치인 549.6조 원보다 약 1.1조 원 초과하였음.¹²⁸⁾

125)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34. 주요기관의 상세부채 정보」의 기관별 공시자료(2022. 4. 29. 기준)를 참고

126)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34. 주요기관의 상세부채 정보」의 기관별 공시자료(2022. 4. 29. 기준)를 참고

127)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상기관(40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남동발전(주),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장학재단,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농어촌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술보증기금,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주택도시보증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마사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주)강원랜드, 서민금융진흥원

128)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22. 요약재무상태표」의 기관별 공시자료(2022. 4. 29. 기준)를 참고

〈표 III-39〉 부채 규모 및 부채비율 현황(2017~2021년)

(단위: 조 원, %, %p)

구 분	'17	'18	전년 대비 증감	'19	전년 대비 증감	'20	전년 대비 증감	'21	전년 대비 증감
◇ 부채	493.2 (157)	501.1 (155)	7.9 (△2)	524.7 (158)	23.6 (3)	541.2 (152)	16.5 (△6)	583.0 (151)	41.8 (△1)
공기업	364.4 (177)	371.5 (177)	7.2 (1)	388.5 (182)	17.0 (5)	398.2 (182)	9.7 (0)	434.1 (194)	35.9 (12)
· 시장형	166.8 (156)	174.5 (167)	7.7 (11)	189.8 (185)	15.3 (19)	192.3 (190)	2.5 (5)	216.3 (226)	24.0 (36)
· 준시장형	197.6 (199)	197.1 (188)	△0.6 (△11)	198.7 (179)	1.6 (△9)	205.9 (174)	7.2 (△5)	217.8 (170)	11.9 (△4)
준정부기관	117.7 (134)	117.8 (131)	0.1 (△4)	121.9 (129)	4.1 (△2)	125.4 (115)	3.4 (△14)	128.2 (101)	2.9 (△14)
· 기금관리형	60.9 (117)	57.8 (100)	△3.0 (△17)	57.8 (85)	△0.1 (△14)	60.2 (75)	2.4 (△10)	62.8 (67)	2.6 (△8)
· 위탁집행형	56.9 (160)	60.0 (187)	3.1 (27)	64.1 (236)	4.2 (49)	65.2 (226)	1.0 (△10)	65.4 (198)	0.3 (△28)
기타공공기관	11.1 (56)	11.7 (49)	0.7 (△8)	14.2 (58)	2.5 (9)	17.6 (62)	3.4 (4)	20.6 (59)	3.0 (△3)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상기관(40개)	473.1 (166)	479.9 (165)	6.9 (△1)	500.2 (167)	20.2 (2)	512.5 (161)	12.3 (△7)	550.7 (161)	38.2 (0)

주: 1. () 안은 부채비율(부채/자본)임

2. 2022년 4월말 알리오시스템에 경영정보를 공시한 350개 공공기관(2022년 1월 지정 기준) 및 부설기관(20개 기관)을 기준으로 작성

3.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2017~2021년 모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자료 작성 (단, 일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7개)의 경우 2018~2020년 신규 지정 및 유형변경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시점에 기관별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기준이 도입되었으며, 이에 따라 2017~18년에 한해 과거 한국일반회계 기준(K-GAAP)을 사용: 서민금융진흥원,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창업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4.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기관 고유계정 및 기금계정(직접관리기금)을 모두 포함하여 금액 산출. 다만, 기타 공공기관 중 금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은 산출대상에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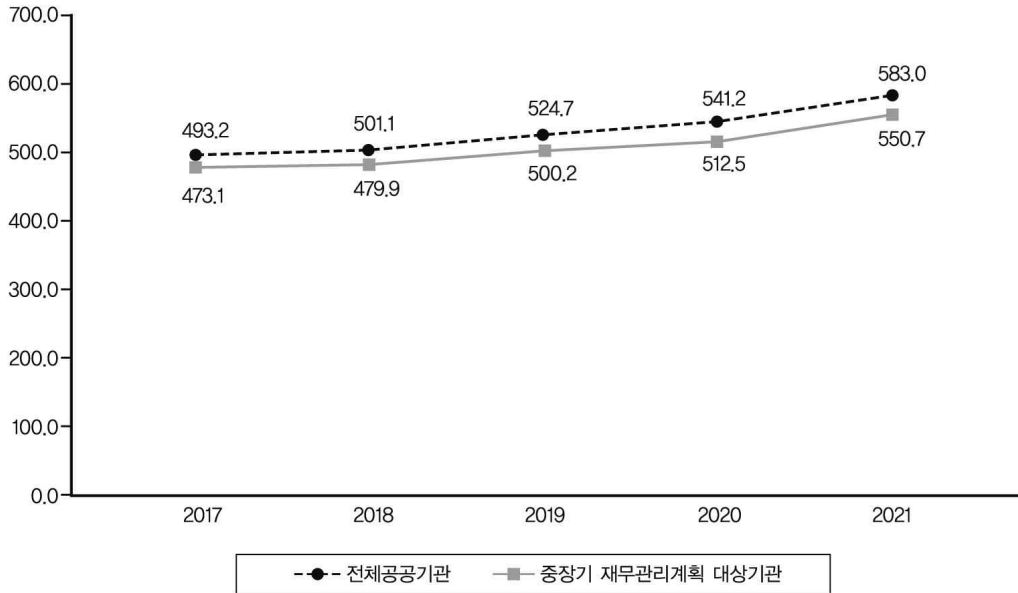
5. 소수점 반올림과 증감 계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수차이 조정을 일부 거침

6.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상기관은 2021년(40개)을 기준으로 함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22. 요약재무상태표'의 기관별 공시자료(2022. 4. 29.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그림 III-6] 부채 규모 추이(2017~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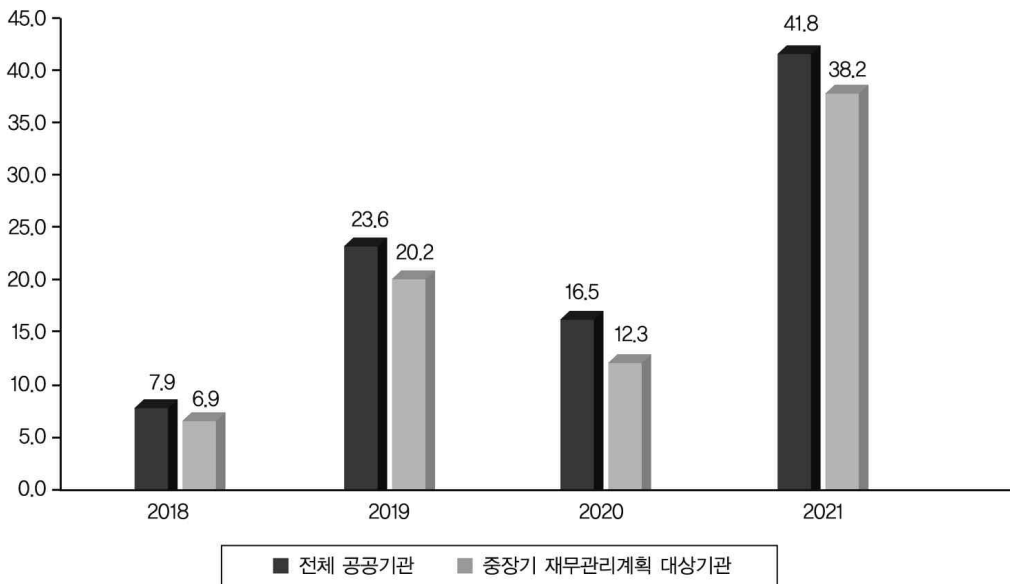
(단위: 조 원)



주: 작성 시점에 따라 전체공공기관 개수 및 규모 변동가능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22. 요약재무상태표'의 기관별 공시자료(2022. 4. 29.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그림 III-7] 부채 증감 추이(2018~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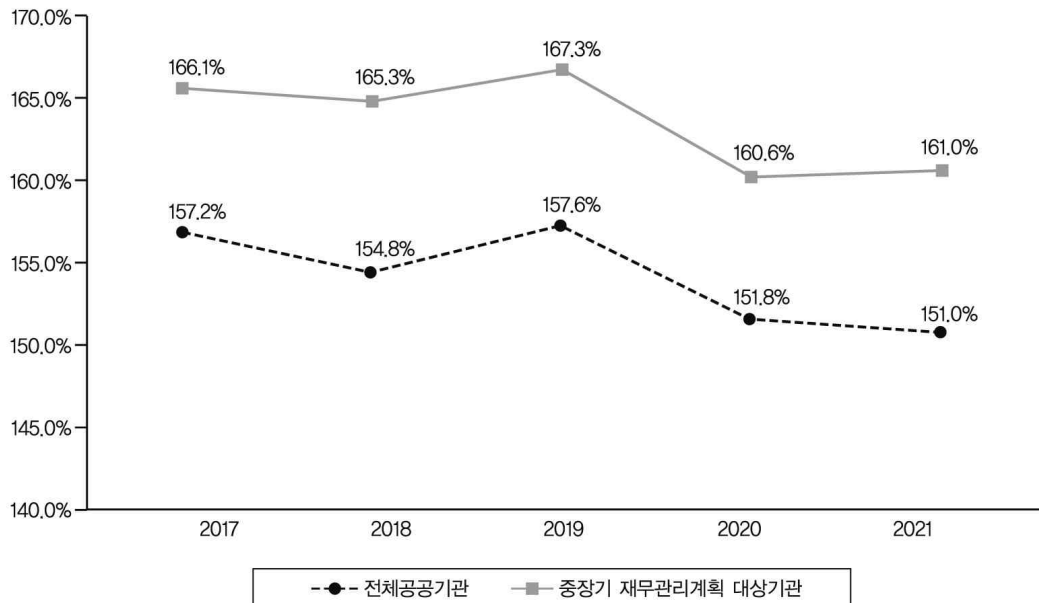
(단위: 조 원)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22. 요약재무상태표'의 기관별 공시자료(2022. 4. 29.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비율¹²⁹⁾은 2013년부터 6년 연속 감소세¹³⁰⁾를 유지하다가 2019년에 잠시 소폭 상승하였으나 2020년에는 전년 대비 5.8%p 하락하였고, 2021년에 0.8%p 다시 하락하여 151%를 나타냄.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상기관인 공공기관 40개의 부채비율 역시 전체 공공기관과 유사한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6.7%p 하락하여 160.6%를 나타냈고, 2021년은 2020년과 유사한 수준인 161%를 기록함.

[그림 III-8] 부채비율 추이(2017~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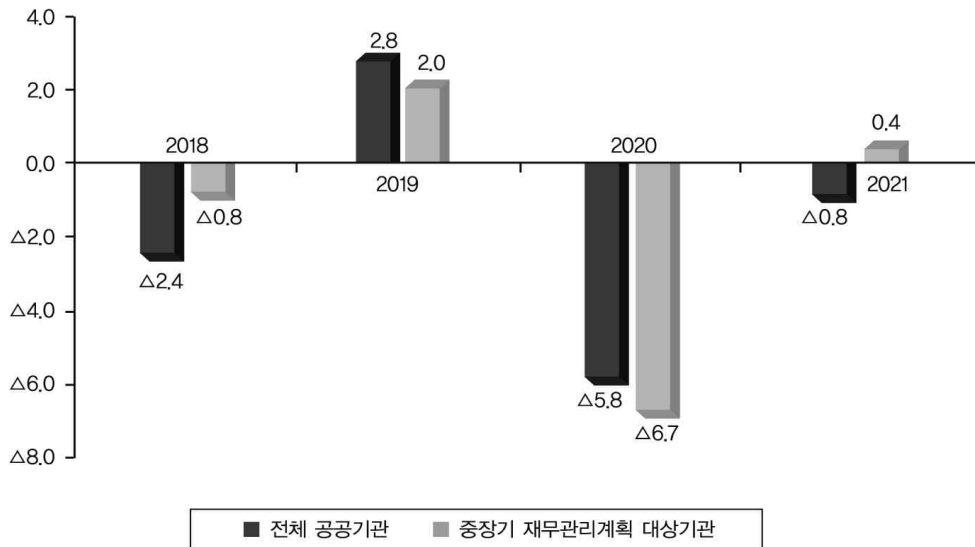
주: 자료의 정확성을 위해 <표 III-39>의 부채비율을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기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22. 요약재무상태표'의 기관별 공시자료(2022. 4. 29.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129) 부채비율: 부채/자본

130) 부채비율(%): ('13) 217 ('14) 201 ('15) 183 ('16) 167 ('17) 157 ('18) 155 ('19) 158 ('20) 152 ('21) 151

[그림 III-9] 부채비율 증감 추이(2018~2021년)

(단위: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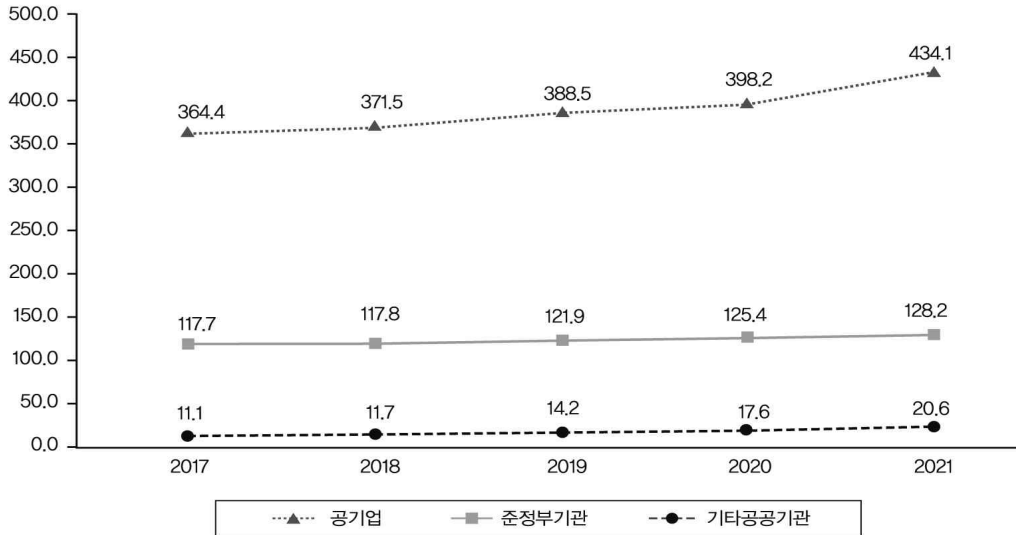
주: 자료의 정확성을 위해 <표 III-39>의 부채비율 증감을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기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22. 요약재무상대표'의 기관별 공시자료(2022. 4. 29.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 공공기관 유형별로 부채 규모를 살펴보면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모두 부채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부채 규모면에서 보면, 전체 공공기관의 전년 대비 부채 증가액(41.8조 원)의 상당 부분(35.9조 원, 85.9%)이 공기업의 부채 증가에 기인함.
 - 공기업 유형에서 전년 대비 증가한 35.9조 원의 부채 중 시장형 공기업이 24조 원, 준시장형 공기업이 11.9조 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부동산 대책에 따른 주택 공급과 전력·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확충, 주거·기업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등 국민생활 필수분야 지원과 투자 확대 사업 재원조달을 위한 채무증가에 기인함.
 - 준정부기관의 경우 전년 대비 2.9조 원의 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부채가 전년 대비 2.6조 원 증가한 것에서 기인함.

- 부채 증가율의 경우 2021년 공기업의 부채 증가율이 대폭 상승 하는 반면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준정부기관의 부채 증가율은 2019년~2021년에 2~3%수준을 보이고 있고, 기타공공기관은 2019년 21.4%, 2020년에 23.7%로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이다 2021년 17%로 하락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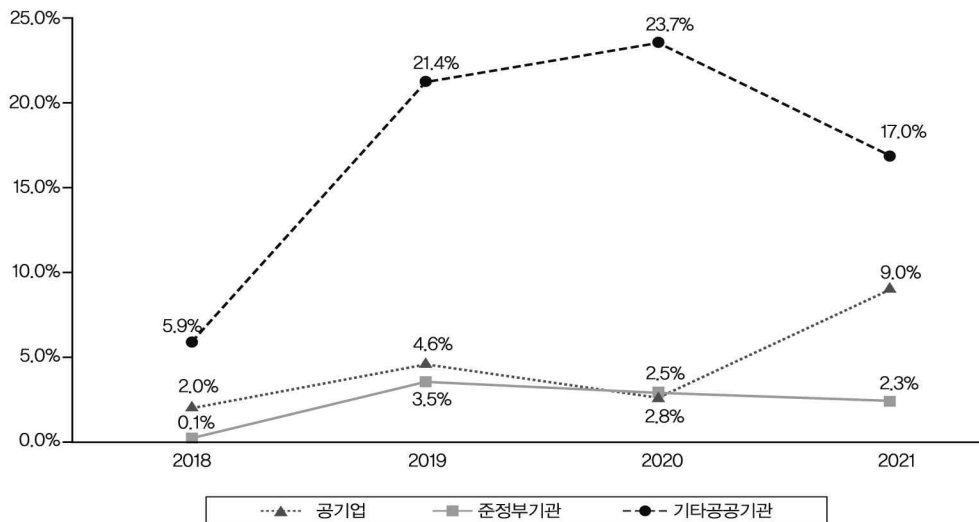
[그림 III-10] 공공기관 유형별 부채 현황(2017~2021년)

(단위: 조 원)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22. 요약재무상대표'의 기관별 공시자료(2022. 4. 29.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그림 III-11] 공공기관 유형별 부채 증가율 추이(2018~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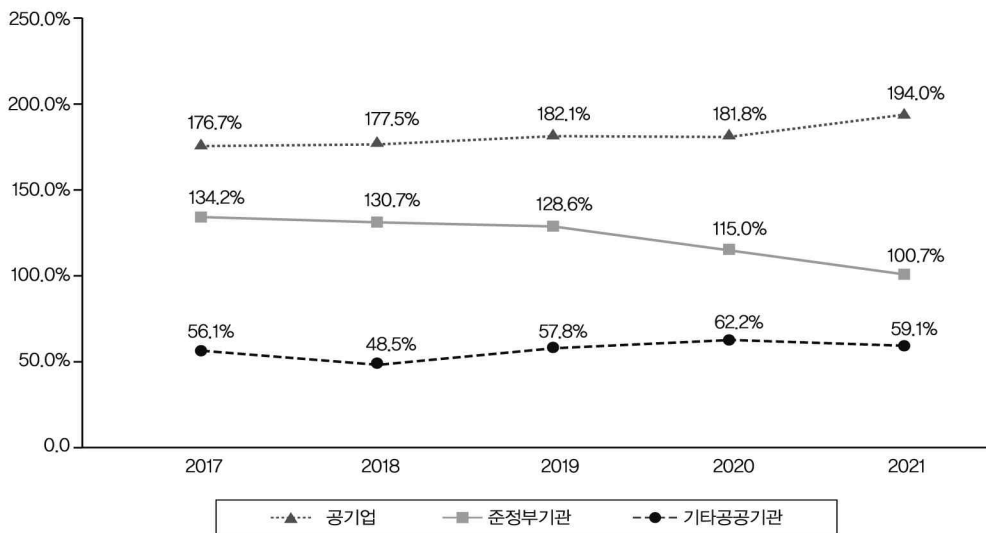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22. 요약재무상대표'의 기관별 공시자료(2022. 4. 29.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 공공기관 유형별로 부채비율 추이를 살펴보면, 공기업과 기타공공기관은 2017년 이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경향을 보이고, 준정부기관은 2017년 이후 부채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공기업의 부채비율은 대체로 완만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 2021년 12.2% 증가하여 194%를 기록함.

- 준정부기관은 2017년 134.2%였던 부채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특히 2020년 13.5%, 2021년 14.3% 큰 폭으로 감소하여 2021년 100.7%를 나타냄.
- 기타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은 2018년 감소, 2019년, 2020년에는 증가하였고, 2021년 다시 감소하면서 소폭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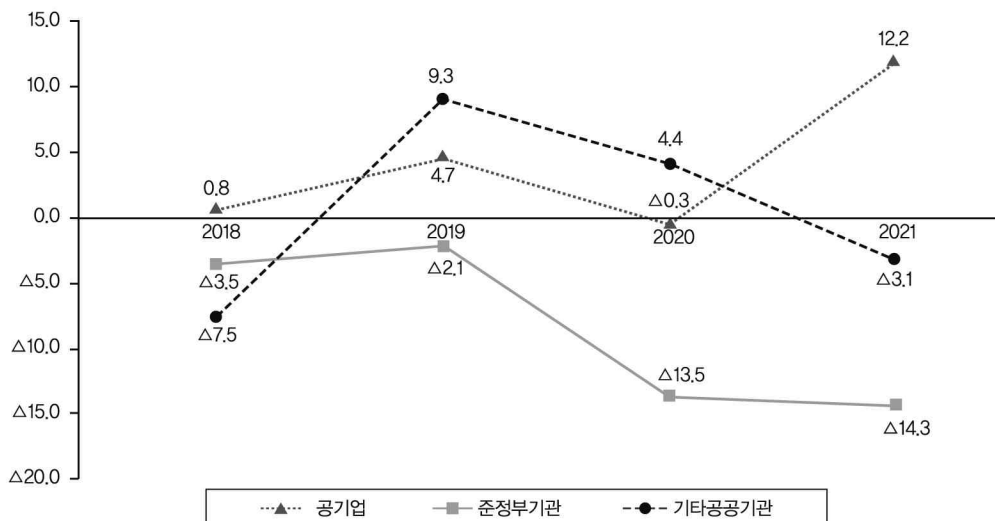
[그림 Ⅲ-12] 공공기관 유형별 부채비율 현황(2017~2021년)



주: 자료의 정확성을 위해 <표 Ⅲ-39>의 부채비율을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기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22. 요약재무상태표' 기관별 공시자료(2022. 4. 29.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그림 Ⅲ-13] 공공기관 유형별 부채비율 증감 추이(2018~2021년)

(단위: %p)



주: 자료의 정확성을 위해 <표 Ⅲ-39>의 부채비율 증감을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기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22. 요약재무상태표'의 기관별 공시자료(2022. 4. 29.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 2021년 공공기관 부채 규모를 주무부처별로 살펴보면,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기관이 보유한 부채가 약 221.2조 원으로 규모가 가장 컸으며, 두 번째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이 보유한 부채 약 221조 원으로 국토교통부와 유사한 규모를 보임.
-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이 보유한 부채는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76%¹³¹⁾를 차지하고 있음.
- 2021년 부채 규모가 가장 크게 증가한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로 전년 대비 약 21.8조 원 증가(10.9%)하였으며, 부채 규모가 가장 크게 감소한 부처는 보건복지부로 전년 대비 약 0.6조 원 감소(△4.3%)함.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의 부채가 크게 급증한 것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유가급등으로 인한 에너지 분야 공기업의 부채가 전년 대비 증가¹³²⁾한 것에 기인함.
 -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의 부채 감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채 감축 실적(0.8조 원)에 기인함.

〈표 III-40〉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부채 현황(2017~2021년)

(단위: 억 원, %)

구 분	기관 수	'17	'18	'19	'20(A)	'21(B)	증감 (B-A)	전년대비 증감률
기획재정부	4	1,378	1,456	2,448	3,909	4,601	692	17.7
교육부	22	174,705	175,308	176,457	176,648	174,586	△2,062	△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7	31,487	27,936	29,860	32,239	34,893	2,654	8.2
외교부	3	1,043	1,248	1,120	1,245	1,568	323	25.9
통일부	2	30	34	123	160	162	2	1.1
법무부	3	638	693	700	714	753	39	5.4
국방부	3	310	274	291	329	340	11	3.5
행정안전부	3	438	468	540	636	698	61	9.6
문화체육관광부	31	21,461	24,367	23,180	22,399	21,280	△1,119	△5.0
농림축산식품부	12	98,594	97,766	104,625	114,714	121,756	7,042	6.1
산업통상자원부	41	1,737,214	1,821,003	1,974,799	1,991,922	2,209,686	217,764	10.9
보건복지부	28	88,492	124,844	136,329	137,548	131,575	△5,973	△4.3

131) 국토교통부 38%, 산업통상자원부 38%

132) 한국전력공사(13.3조), 한국가스공사(6.4조), 한국석유공사(1.3조)

〈표 III-40〉의 계속

(단위: 억 원, %)

구 분	기관 수	'17	'18	'19	'20(A)	'21(B)	증감 (B-A)	전년대비 증감률
환경부	12	151,795	155,527	154,759	156,270	155,200	△1,071	△0.7
고용노동부	12	7,904	9,238	10,508	10,759	11,146	387	3.6
여성가족부	5	66	87	129	130	148	18	14.0
국토교통부	28	2,006,495	1,982,866	1,990,899	2,074,160	2,212,095	137,935	6.7
해양수산부	17	34,353	42,006	63,037	83,268	108,853	25,586	30.7
중소벤처기업부	11	165,857	174,021	184,416	221,014	245,807	24,794	11.2
국무조정실	25	4,066	3,934	4,348	4,951	5,054	103	2.1
방송통신위원회	2	2,713	2,370	2,351	2,567	2,555	△12	△0.5
원자력안전위원회	3	421	610	497	513	675	162	31.7
금융위원회	7	324,249	278,893	303,603	295,629	306,307	10,678	3.6
공정거래위원회	2	77	92	91	119	172	52	43.8
국가보훈처	3	753	877	903	981	967	△15	△1.5
인사혁신처	1	68,052	73,759	68,341	64,984	60,597	△4,387	△6.8
식품의약품안전처	4	150	197	368	429	399	△29	△6.9
관세청	1	3	3	3	3	2	△0	△7.5
방위사업청	2	7,861	9,441	9,787	11,292	15,378	4,086	36.2
경찰청	1	247	444	584	723	817	94	13.0
소방청	1	152	118	119	141	137	△4	△2.7
문화재청	1	107	82	93	118	86	△32	△27.1
산림청	4	41	64	189	181	170	△11	△6.3
농촌진흥청	1	79	137	155	125	98	△28	△22.0
특허청	5	850	844	900	1,014	1,005	△9	△0.9
기상청	3	62	36	17	31	35	4	11.9
합계	350	4,932,144	5,011,044	5,246,564	5,411,865	5,829,599	417,735	7.7

주: 1. 2022년 4월말 알리오시스템에 경영정보를 공시한 350개 공공기관(2022년 1월 지정 기준) 및 그 부설기관(20개 기관)을 기준으로 작성. 기관수는 모기관 단위로 산출하였으며 부설기관 수치는 모기관에 포함하여 반영
 2.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기관 고유계정 및 기금계정(직접관리기금)을 모두 포함하여 금액 산출. 다만, 기타공공기관 중 금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기획재정부 소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금융위원회 소관)은 산출 대상에서 제외
 3. 반올림하는 과정에서 합계, 증감액, 증감률에 오차 발생 가능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22. 요약재무상태표'의 기관별 공시자료(2022. 4. 29.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 2021년 기준 부채 규모 상위 10개 공공기관은 2020년 부채 상위 10개¹³³⁾ 기관과 동일하며, 일부 순위 변동만 발생하였음.

○ 10개 기관 모두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 대상기관이며 이 중 국가철도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제외한 7개 기관은 에너지 및 SOC 분야 공기업에 해당함.

〈표 III-41〉 2021년도 부채 규모 상위기관 현황

(단위: 조 원, %, %p)

순위	기관명	2020년	2021년(A)	증감액	증감률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전망치(B)	전망치 대비 초과감축(B-A)
1	한국전력공사	132.5 (187)	145.8 (223)	13.3 (36)	10.1	142.1 (217)	△3.66 (△6)
2	한국토지주택공사	129.7 (234)	138.9 (221)	9.1 (△12)	7.0	141.2 (228)	2.34 (7)
3	한국가스공사	28.2 (364)	34.6 (379)	6.4 (15)	22.6	29.8 (369)	△4.74 (△10)
4	한국도로공사	31.2 (82)	33.3 (83)	2.1 (1)	6.8	33.7 (84)	0.42 (1)
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9.5	22.0	2.5	13.0	22.2	0.16
6	국가철도공단	20.3	20.6	0.2	1.2	20.8	0.20
7	한국석유공사 ¹³⁴⁾	18.6	20.0	1.3	7.1	19.5	△0.42
8	한국철도공사	18.0 (248)	18.7 (287)	0.7 (40)	3.6	19.0 (297)	0.34 (10)
9	한국수자원공사	13.8 (153)	13.5 (137)	△0.3 (△16)	△2.1	14.0 (146)	0.44 (9)
10	국민건강보험공단	12.4 (59)	11.6 (47)	△0.8 (△13)	△6.6	12.9 (58)	1.38 (11)

주: 1. () 안은 부채비율(=부채/자본)임
 2. 한국전력공사의 부채는 연결 재무상태표 기준
 3. 국가철도공단은 자본금·기본재산이 0인 기관으로 부채비율 산출 불가능
 4.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정책자금 융자사업 수행기관으로 여타기관과 부채비율 일괄 비교 곤란
 5. 소수점 반올림하는 과정에서 증감액 및 증감률 계산하는데 일부 오차 발생 가능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22. 요약재무상태표'의 기관별 공시자료(2022. 4. 29.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133) 2020년도 부채 상위 10개 기관의 순위: 1. 한국전력공사, 2. 한국토지주택공사, 3. 한국도로공사, 4. 한국가스공사
 5. 국가철도공단, 6.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7. 한국석유공사, 8. 한국철도공사, 9. 한국수자원공사, 10. 국민건강보험공단

134) 한국석유공사는 2020년 부채 규모가 자산 수준을 넘어서면서 자본이 (-)상태인 "자본잠식"을 나타내며, 중장기

다. 자산 현황

- 2021년 공공기관 자산 총액은 969조 원으로 부동산 대책에 따른 주택공급(한국토지주택공사)과, 전력·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주거·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한국주택금융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따라 전년 대비 8%(71.4조 원) 증가함.
- 2021년 공공기관 유형별 자산 규모를 살펴보면, 공기업은 658조 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자산에서 가장 큰 비중(67.9%)을 차지하고 있으며, 준정부기관은 255.5조 원(26.4%), 기타공공기관은 55.5조 원(5.7%) 수준을 나타냄.
- 2021년 공공기관 유형별 자산 규모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공기업(40.7조 원, 6.6%), 준정부기관(21.2조 원, 9.0%), 기타공공기관(9.5조 원, 20.8%) 모두 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그림 III-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5년간 모든 유형에서 자산이 꾸준히 증가하였음.

〈표 III-42〉 공공기관 유형별 자산 현황(2017~2021년)

(단위: 조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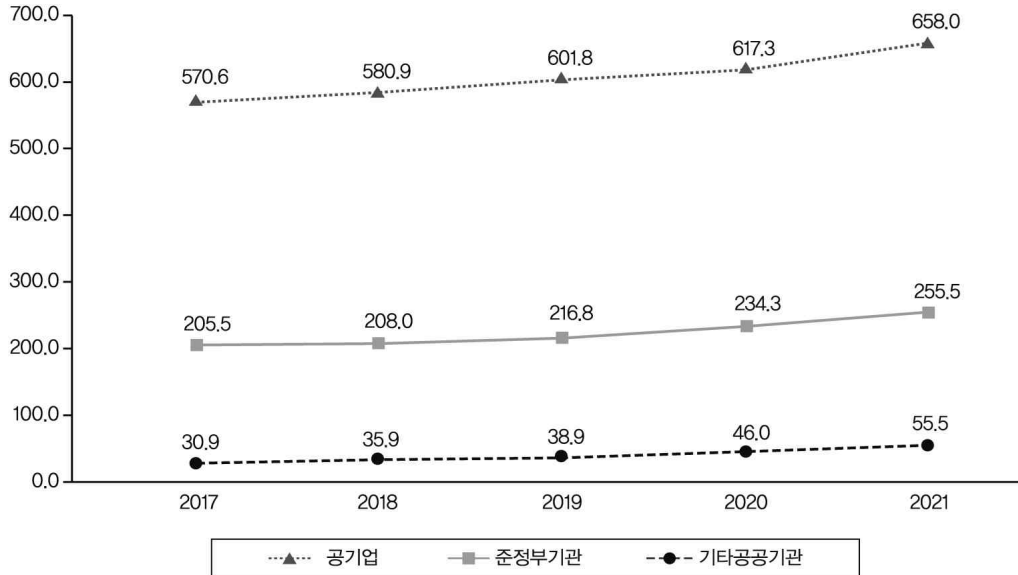
구 분	'17	'18	'19	'20(A)	'21(B)	증감 (B-A)	전년 대비 증감률
합 계	806.9	824.8	857.5	897.6	969.0	71.4	8.0
공기업	570.6	580.9	601.8	617.3	658.0	40.7	6.6
· 시장형	273.8	279.1	292.2	293.3	312.0	18.7	6.4
· 준시장형	296.8	301.8	309.6	324.0	345.9	22.0	6.8
준정부기관	205.5	208.0	216.8	234.3	255.5	21.2	9.0
· 기금관리형	113.1	116.0	125.4	140.4	157.0	16.6	11.8
· 위탁집행형	92.4	92.1	91.3	94.0	98.5	4.6	4.9
기타공공기관	30.9	35.9	38.9	46.0	55.5	9.5	20.8

주: 소수점 반올림 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 유형별 자산액의 합과 합계가 일부 오차 발생가능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22. 요약재무상태표'의 기관별 공시자료(2022. 4. 29.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재무관리계획에서도 당기순손실 누적으로 2025년까지 “완전자본잠식 규모 확대”로 전망하고 있음, 한국석유공사, 「2021년~2025년 한국석유공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2021. 8.

[그림 III-14] 공공기관 유형별 자산 현황(2017~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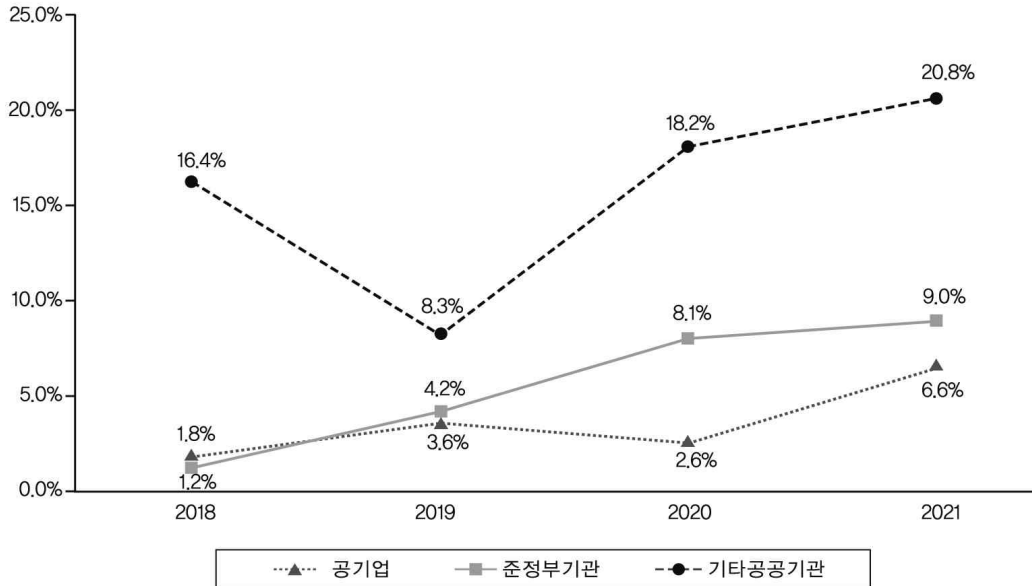
(단위: 조 원)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22. 요약재무상태표'의 기관별 공시자료(2022. 4. 29.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 공공기관 유형별로 자산 증가율을 살펴보면 공기업은 뚜렷한 추이를 보이지 않고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으며, 준정부기관은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나타냄.
- 공기업은 2018년 이후 자산 증가율이 완만하게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 2021년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이를 보임.
- 준정부기관은 2018년 이후 자산 증가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9.0%의 자산 증가율을 나타냄.
- 기타공공기관은 2018년 자산 증가율이 16.5%로 높은 수준을 보이다가, 2019년에는 8.4%로 대폭 하락하였으나, 2020년에는 다시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2021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음.

[그림 III-15] 공공기관 유형별 자산 증가율 추이(2018~2021년)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22. 요약재무상태표'의 기관별 공시자료(2022. 4. 29.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 2021년 공공기관 자산 현황을 주무부처별로 살펴보면,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기관의 자산규모가 약 351조 원으로 가장 큰 규모이며,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의 자산이 약 301조 원으로 두 번째로 큰 규모를 나타냄.
-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은 전체 공공기관 자산의 36.2%, 31.1%로 총 67.3%에 육박함.
- 자산 규모가 가장 크게 증가한 부처는 국토교통부로 전년 대비 약 22.5조 원 증가하였으며, 가장 크게 감소한 부처는 약 0.01조 원(124억 원) 감소한 방송통신위원회로 공공기관 자산의 감소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음.

〈표 III-43〉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자산 현황(2017~2021년)

(단위: 억 원, %)

구 분	기관 수	'17	'18	'19	'20(A)	'21(B)	증감 (B-A)	전년대비 증감률
기획재정부	4	6,644	6,869	8,287	10,209	12,054	1,844	18.1
교육부	22	393,275	396,337	420,625	445,450	475,702	30,252	6.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7	124,540	123,660	126,814	133,656	141,311	7,655	5.7
외교부	3	2,941	3,205	3,112	2,925	2,898	△27	△0.9
통일부	2	108	118	204	226	222	△3	△1.5
법무부	3	2,185	2,217	2,233	2,252	2,275	24	1.0
국방부	3	607	848	878	873	832	△41	△4.6
행정안전부	3	969	990	1,021	1,173	1,144	△29	△2.5
문화체육관광부	31	79,088	89,038	94,640	92,894	92,866	△28	△0.0
농림축산식품부	12	148,063	146,941	154,098	158,940	163,137	4,197	2.6
산업통상자원부	41	2,651,444	2,697,533	2,824,610	2,827,848	3,011,622	183,773	6.5
보건복지부	28	364,828	360,776	338,313	357,142	396,866	39,724	11.1
환경부	12	227,335	236,620	241,471	250,436	258,273	7,838	3.1
고용노동부	12	18,638	20,415	22,288	23,123	23,342	220	1.0
여성가족부	5	191	189	184	172	203	31	17.9
국토교통부	28	2,992,707	3,050,667	3,127,006	3,285,739	3,510,415	224,676	6.8
해양수산부	17	124,616	156,352	177,028	225,365	293,451	68,085	30.2
중소벤처기업부	11	219,913	228,345	237,145	287,209	333,832	46,623	16.2
국무조정실	25	9,437	9,392	9,687	10,154	10,687	533	5.2
방송통신위원회	2	5,964	5,518	5,367	5,737	5,613	△124	△2.2
원자력안전위원회	3	964	1,805	1,816	1,843	2,127	284	15.4
금융위원회	7	482,184	490,428	550,012	612,709	690,576	77,867	12.7
공정거래위원회	2	752	717	683	659	671	12	1.9
국가보훈처	3	4,013	4,173	4,046	3,866	3,980	114	2.9
인사혁신처	1	177,557	182,138	188,770	198,071	213,098	15,027	7.6
식품의약품안전처	4	167	212	357	413	369	△44	△10.7
관세청	1	28	33	38	41	44	3	7.8
방위사업청	2	22,313	24,514	25,788	28,221	33,195	4,974	17.6
경찰청	1	3,214	3,209	2,942	2,969	3,118	149	5.0
소방청	1	1,257	1,337	1,400	1,452	1,504	52	3.6
문화재청	1	146	125	147	176	163	△13	△7.3
산림청	4	768	774	871	844	849	5	0.6
농촌진흥청	1	190	212	247	257	290	34	13.1
특허청	5	2,241	2,475	2,510	2,715	2,909	194	7.2
기상청	3	95	71	53	103	126	23	22.5
합계	350	8,069,380	8,248,251	8,574,691	8,975,862	9,689,766	713,903	8.0

주: 1. 2022년 4월말 알리오시스템에 경영정보를 공시한 350개 공공기관(2022년 1월 지정 기준) 및 그 부설기관(20개 기관)을 기준으로 작성. 기관수는 모기관 단위로 산출하였으며 부설기관 수치는 모기관에 포함하여 반영

2.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기관 고유계정 및 기금계정(직접관리기금)을 모두 포함하여 금액 산출. 다만, 기타공공기관 중 금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기획재정부 소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금융위원회 소관)은 산출 대상에서 제외

3. 반올림하는 과정에서 합계, 증감액, 증감률에 오차 발생가능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22. 요약재무상태표'의 기관별 공시자료(2022. 4. 29.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 2021년 기준 자산 규모 상위 10개 공공기관은 2020년 자산 상위 10개 기관¹³⁵⁾과 동일하며, 일부 순위변동만 발생하였음.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8개 기관은 모두 부채 상위 10개 기관에 포함됨.
 - 상위 10개 기관 중 한국철도공사를 제외한 9개 기관이 전년 대비 자산이 증가함.
 - 전체 공공기관 중 자산 증가액 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약 16.3조 원, 8.8% 증가)이며, 자산 증감률이 가장 큰 기관은 한국가스공사(약 7.8조 원, 21.6% 증가)이고, 자산 감소는 한국철도공사(약 0.1조 원, 0.5% 감소)에서만 유일하게 나타남.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부동산 대책에 따른 주택공급으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도로공사는 전력·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주거·기업지원을 위한 정책금융으로 인하여 자산이 증가함.

〈표 III-44〉 2021년도 자산 규모 상위기관 현황

(단위: 억 원, %)

순위	기관명	2020년	2021년	증감액	증감률
1	한국전력공사	2,031,421	2,111,089	79,668	3.9
2	한국토지주택공사	1,852,865	2,016,501	163,636	8.8
3	한국도로공사	691,876	734,021	42,146	6.1
4	한국가스공사	359,098	436,699	77,601	21.6
5	국민건강보험공단	332,152	362,047	29,895	9.0
6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239,038	266,769	27,731	11.6
7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29,698	266,367	36,669	16.0
8	한국철도공사	252,765	251,556	△1,209	△0.5
9	한국주택금융공사	200,326	237,759	37,433	18.7
10	한국수자원공사	229,041	234,371	5,330	2.3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22. 요약재무상태표'의 기관별 공시자료(2022. 4. 29.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135) 2020년도 자산 상위 10개 기관의 순위: 1. 한국전력공사, 2. 한국토지주택공사, 3. 한국도로공사, 4. 한국가스공사, 5. 국민건강보험공단, 6. 한국철도공사, 7.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8. 중소기업진흥공단, 9. 한국수자원공사, 10. 한국주택금융공사

4. 손익현황¹³⁶⁾

- 최근 공공기관 손익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2019년 2년간 당기순이익이 다른 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모습을 보였으나 2020년부터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공기업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전반적으로 흑자를 유지하고 있음.
- 2017년 7.2조 원이던 당기순이익이 2018년, 2019년 각각 0.6조 원, 0.8조 원으로 대폭 감소하였고, 2020년에는 당기순이익이 5.2조 원으로 상승하면서 2021년 10.8조 원으로 점차 회복하고 있음.
- 공공기관 유형별로 2021년 당기순이익 추이를 살펴보면, 시장형 공기업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당기순이익이 전년도(2020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공기업의 2021년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63%이상 감소하였는데, 이는 준시장형 공기업의 당기순이익이 3.4조 원으로 전년 대비 2.9조 원(593.5%) 가량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형 공기업의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4.1조 원(341.2%) 대폭 감소하였기 때문임.
- 준정부기관의 경우 2018년 1.3조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이후 2019년에 손실의 폭이 줄고, 2020년에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면서 2021년에는 7.0조 원으로 개선된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에 기인함.
- 기타공공기관은 2019년까지 0.1조 원 미만의 당기순이익을 보였으나, 2020년 약 2.7조 원, 2021년 약 5.6조 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2년 연속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고 있음.

136)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기관별 공시자료(2022. 4. 29. 기준),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보도자료, 2022. 4. 29., 「2022년 정부 출자주식 배당금 2조 4,541억 원 확정」, 보도자료, 2022. 5. 31. 등 참고

〈표 III- 45〉 당기순손익 현황(2017~2021년)

(단위: 조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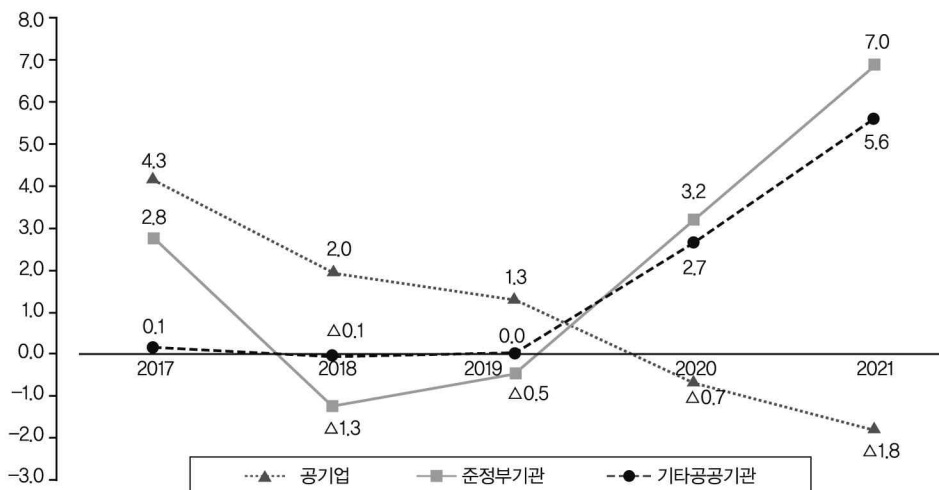
구 분	'17	'18	전년대비 증감	'19	전년대비 증감	'20	전년대비 증감	'21	전년대비 증감 (증감률)
합 계	7.2	0.6	△6.6	0.8	0.2	5.2	4.4	10.8	5.6 (108.0)
공기업	4.3	2.0	△2.3	1.3	△0.7	△0.7	△2.0	△1.8	△1.1 (△163.2)
· 시장형	1.4	△0.4	△1.8	△1.1	△0.7	△1.2	△0.1	△5.3	△4.1 (△341.2)
· 준시장형	2.8	2.4	△0.5	2.4	0.0	0.5	△1.9	3.4	2.9 (593.5)
준정부기관	2.8	△1.3	△4.1	△0.5	0.8	3.2	3.7	7.0	3.7 (116.0)
· 기금관리형	2.4	2.7	0.3	2.5	△0.2	1.6	△0.9	2.8	1.2 (73.4)
· 위탁집행형	0.4	△4.0	△4.4	△3.0	1.0	1.6	4.6	4.2	2.6 (158.3)
기타공공기관	0.1	△0.1	△0.2	0.0	0.1	2.7	2.6	5.6	3.0 (112.8)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상기관(39개)	6.7	0.4	△6.3	0.6	0.2	2.8	2.2	5.2	2.4 (84.7)

- 주: 1.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2017~2021년 모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자료 작성
- 2.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기관 고유계정을 대상으로 금액 산출
- 3. 공무원연금, 신보 등 일부 공공기관은 국가회계기준 적용으로 당기순이익이 산출되지 아니하여 상기 수치에서 제외
- 4. 소수점 반올림하는 과정에서 증감액 및 증감률 오차 발생가능
- 5.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상기관은 2021년(40개)을 기준으로 함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23. 요약손익계산서(또는 요약 포괄손익계산서)'의 기관별 공시자료(2022. 4. 29.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그림 III-16] 공공기관 유형별 당기순손익 추이(2017~2021년)

(단위: 조 원)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23. 요약손익계산서(또는 요약 포괄손익계산서)'의 기관별 공시자료(2022. 4. 29.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 2021년에 순이익을 실현한 상위 10개 공공기관은 모두 전년 대비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였고, 한국가스공사,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제외하고 2020년 대상기관¹³⁷⁾과 일치하며, 일부 순위변동이 있음.
- 한국해양진흥공사는 보유주식 자산재평가로 인한 이익확대로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여 1위를 차지하였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분양주택 공급물량 확대에 따른 매출증가로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여 2위를 차지함.
 - 2020년 순이익 상위 10개 기관 중 한국전력공사, 대한적십자사, 한국예탁결제원 등 3개 기관은 2021년 당기순이익 상위 10개 기관에서 제외됨.
 - 한국전력공사는 유가 등 발전연료 가격 급등에 따른 비용이 증가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해 제외되었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은 2022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되었고, 대한적십자사는 다른 기관의 신규 편입으로 인하여 순위에서 제외됨.
 - 한국가스공사,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5, 6, 7위에 신규 편입되었음.
 -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해 순손실 상위 10개에 속해 있던 기관으로 2021년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하여 순이익 상위 10개 기관에 편입됨.
 - 한국가스공사는 경기회복과 경쟁연료 대비 경쟁력 제고로 인한 산업용 천연가스 판매량 증가가 당기순이익 증가에 영향을 주었고, 국립중앙의료원은 코로나 관련 손실보상금 지급에 따라 일시적으로 당기순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유 주택저당대출채권 규모의 지속적 증가로 이자수입이 증가하여 안정적인 순이익이 발생함.
- 2021년에 순손실이 발생한 상위 10개 공공기관은 2020년 대상기관¹³⁸⁾과 다소 차이를 보임.
- 2020년 순손실 상위 10개 기관 중 한국광물자원공사, (주)강원랜드,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5개 기관이 2021년 당기순손실 상위 10개 기관에서 제외됨.
 - 2020년 순이익이 상위기관 3위였던 한국전력공사는 2021년 순손실 상위기관 1위가 되었고, 한국관광공사, 대한석탄공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연금공단이 신규 편입됨.

137)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전력공사, 예금보험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대한적십자사, 한국예탁결제원

138)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마사회, 인천국제공항공사, (주)강원랜드,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 한국전력공사는 유가 등 발전연료 가격 급등에 따른 비용이 증가하여 순손실이 발생하였고, 대한석탄공사는 석탄 판매가격 동결 등 구조적인 한계로 당기순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한국관광공사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수익 악화로 인해 계속적으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표 III- 46〉 2021년도 당기순이익·순손실 상위기관 현황

(단위: 억 원, %)

순 위	기관명	2020년	2021년	증감액	증감률	
순이익	1	한국해양진흥공사	26,069	41,875	15,805	60.6
	2	한국토지주택공사	33,029	41,633	8,604	26.1
	3	국민건강보험공단	16,160	38,123	21,963	135.9
	4	예금보험공사	19,115	22,853	3,738	19.6
	5	한국가스공사	△1,607	9,645	11,252	700.3
	6	국립중앙의료원	△52	7,180	7,232	13,929.4
	7	한국주택금융공사	△1,651	6,088	7,738	468.8
	8	주택도시보증공사	2,918	3,620	701	24.0
	9	한국수자원공사	3,186	3,421	235	7.4
	10	서민금융진흥원	1,021	2,972	1,951	191.0
순손실	1	한국전력공사	20,925	△52,292	△73,217	△349.9
	2	한국철도공사	△13,427	△11,552	1,875	14.0
	3	인천국제공항공사	△4,229	△7,506	△3,277	△77.5
	4	한국마사회	△4,368	△3,480	888	20.3
	5	한국공항공사	△1,487	△2,311	△825	△55.5
	6	한국관광공사	△1,236	△1,265	△29	△2.4
	7	대한석탄공사	△1,147	△1,235	△88	△7.6
	8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1,452	△1,111	342	23.5
	9	한국석유공사	△24,392	△460	23,932	98.1
	10	국민연금공단	△383	△454	△71	△18.6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23. 요약손익계산서(또는 요약 포괄손익계산서)'의 기관별 공시자료(2022. 4. 29.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 2022년 5월 정부는 39개 출자기관 중 올해 배당이 결정된 19개¹³⁹⁾ 출자기관의 배당금 2조 4,541억 원 수납을 확정하였음.
- 2022년 정부배당금은 전년 대비 1조 145억 원 증가하고 평균 배당성향¹⁴⁰⁾은 40.38%로 전년 대비 3.46%p 상승하였음.¹⁴¹⁾
 - 정부배당을 실현한 기관수는 2021년 22개에서 2022년 19개로 감소하였으나 배당금 규모는 증가함.
 - 소관·회계별로는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 1조 6,826억 원과 주무부처 소관 특별회계·기금 7,715억 원임.
- 39개 정부출자기관 중 「공운법」상 공공기관은 34개¹⁴²⁾로 이 중 17개 기관이 2022년 지급한 정부배당금 규모는 2조 4,487억 원임.
 - 2020년에 배당하지 않았던 한국가스공사가 2021년 흑자로 전환되면서 배당을 실시하였고, 적자 전환된 한국전력공사, 88관광개발(주), 인천항만공사 등 3개 기관은 정부배당을 실시하지 못함.

〈표 III-47〉 정부 배당수입 추이(2018~2022년)

(단위: 개, 억 원, %, %p)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증감
출자기관 수	36	38	39	39	39	-
유배당기관	25	21	22	22	19	△3
정부배당금	18,060	14,382	14,040	14,396	24,541	+10,145
일반회계	8,622	6,696	6,069	9,194	16,826	+7,632
특별·기금	9,438	7,685	7,971	5,203	7,715	+2,512
배당성향	34.98	32.48	32.58	36.92	40.38	+3.46

자료: 기획재정부, 「2022년 정부 출자주식 배당금 2조 4,541억 원 확정」, 보도자료, 2022. 5. 31.

139) 20개 기관은 당기순손실 및 이월결손 보전 등으로 2022년 배당에서 제외

- 당기순손실 발생(13개): 인천공항공사, 새만금개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조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88관광개발(주), 한국전력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 이월결손 보전 등(7개):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서울신문사, 공항철도주식회사,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140) 평균 배당성향(배당금÷당기순이익, %): ('17) 31.89 → ('18) 34.98 → ('19) 32.48 → ('20) 32.58(0.10%p) → ('21) 36.92(4.34%p) → ('22) 40.38(3.46%p)

141) 기획재정부, 「2022년 정부 출자주식 배당금 2조 4,541억 원 확정」, 보도자료, 2022. 5. 31.

142)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서울신문사, 대한송유관공사, 공항철도주식회사 등 5개 기관은 「공운법」상 공공기관이 아님

〈표 III- 48〉 39개 정부출자기관의 정부배당 현황

(단위: 억 원)

기관명	'21년 배당			'22년 배당		
	일반 회계	특별 기금	소계	일반 회계	특별 기금	소계
1 한국토지주택공사	2,275	3,570	5,845	2,597	4,844	7,441
2 한국산업은행	1,925	172	2,096	7,592	739	8,331
3 중소기업은행	2,208	-	2,208	3,701	-	3,701
4 한국가스공사	-	-	-	566	92	659
5 한국수출입은행	273	4	277	1,296	19	1,315
6 한국주택금융공사	392	33	425	417	34	451
7 한국자산관리공사	142	-	142	159	-	159
8 부산항만공사	238	-	238	183	-	183
9 한국방송공사	33	-	33	32	-	32
10 한국농어촌공사	9	-	9	130	-	130
11 울산항만공사	77	0.1	77	119	0.1	119
12 한국부동산원	10	-	10	16	-	16
1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5	-	25	15	-	15
1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	-	2	4	-	4
15 한국해양진흥공사	-	-	-	-	-	-
16 한국수자원공사	-	-	-	-	-	-
17 한국광물자원공사	-	-	-	-	-	-
18 여수광양항만공사	-	-	-	-	-	-
19 서울신문사	-	-	-	-	-	-
20 해외인프라개발공사	-	-	-	-	-	-
21 한국조폐공사	-	-	-	-	-	-
22 한국교육방송공사	3	4	8	-	-	-
23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	-	-	-	-
24 새만금개발공사	-	-	-	-	-	-
25 한국관광공사	-	-	-	-	-	-
26 인천항만공사	157	56	213	-	-	-
27 한국석유공사	-	-	-	-	-	-
28 한국공항공사	-	-	-	-	-	-
29 한국철도공사	-	-	-	-	-	-

〈표 III- 48〉의 계속

(단위: 억 원)

기관명	'21년 배당			'22년 배당		
	일반 회계	특별 기금	소계	일반 회계	특별 기금	소계
30 한국전력공사	1,421	-	1,421	-	-	-
31 주택도시보증공사	-	616	616	-	621	621
32 한국투자공사	-	580	580	-	1,176	1,176
33 한국도로공사	1	118	120	-	134	134
34 대한송유관공사	-	10	10	-	23	23
35 한국지역난방공사	-	39	39	-	32	32
36 공항철도주식회사	-	-	-	-	-	-
37 88관광개발(주)	-	0.2	0.2	-	-	-
38 대한석탄공사	-	-	-	-	-	-
39 인천국제공항공사	-	-	-	-	-	-
합 계	9,194 (17개)	5,203 (13개)	14,396 (22개)	16,826 (14개)	7,715 (11개)	24,541 (19개)

주: 1. 밑줄 친 기관은 「공운법」상 공공기관이 아님

2. 괄호 안의 수치는 기관수임

자료: 기획재정부, 「2022년 정부 출자주식 배당금 2조 4,541억 원 확정」, 보도자료, 2022. 5. 31.

5. 보수수준¹⁴³⁾

가. 직원 평균보수 수준

- 2021년 전체 공공기관 정규직 직원¹⁴⁴⁾의 평균보수는 약 6,975만 원 수준으로 유형별 평균보수 수준은 공기업(약 8,095만 원), 기타공공기관(약 6,914만 원), 준정부기관(약 6,711만 원) 순으로 높음.¹⁴⁵⁾

143) 기획재정부,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보도자료, 2022. 4. 29. 및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2022. 4. 29. 기준) 참고

144) 공공기관(부설기관 포함)의 무기계약직을 제외한 일반 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함

145) 직원 평균보수는 각 회계연도별로 상시종업원 전체에게 지급된 총 보수지급액을 상시종업원 수로 나눈 값임 (여기서 상시종업원은 각월 급여지급일 현재 급여 지급대상 정규직원 수의 연간 합계를 12월로 나눈 인원임). 기관별 직원 평균보수는 알리오시스템 공시항목 중 '7. 직원 평균보수' 항목에 공시된 '1인당 평균 보수액' 정보를 활용하여 산출함. 알리오시스템의 '1인당 평균보수액'은 기본급,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 경영평가 성과급, 기타성과상여금 등의 세부항목으로 지급된 총 금액으로 산출

- 공기업 정규직 직원의 평균보수(약 8,095만 원)는 전체 공공기관 평균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유형보다 높음.
 - 시장형 공기업의 직원 평균보수(약 8,569만 원)는 2021년 전체 기관 유형을 통틀어 가장 높은 수준으로, 공공기관 전체 평균보다는 약 1,594만 원, 준정부기관보다 약 1,858만 원, 기타공공기관보다 약 1,655만 원 높은 수준임.
- 준정부기관 정규직 직원의 평균보수(약 6,711만 원)는 공공기관 유형 중 가장 낮은 수준임.
 - 준정부기관 정규직 직원의 평균보수는 공공기관 전체 평균보다 약 264만 원 낮으며 기타공공기관 유형과 비교해도 약 203만 원 적은 수준임.
 - 특히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정규직 직원 평균보수는 약 6,507만 원 수준으로 공공기관 전체 평균보다 약 468만 원 낮은 수준임.

〈표 III-49〉 직원 평균보수 현황(2017~2021년, 정규직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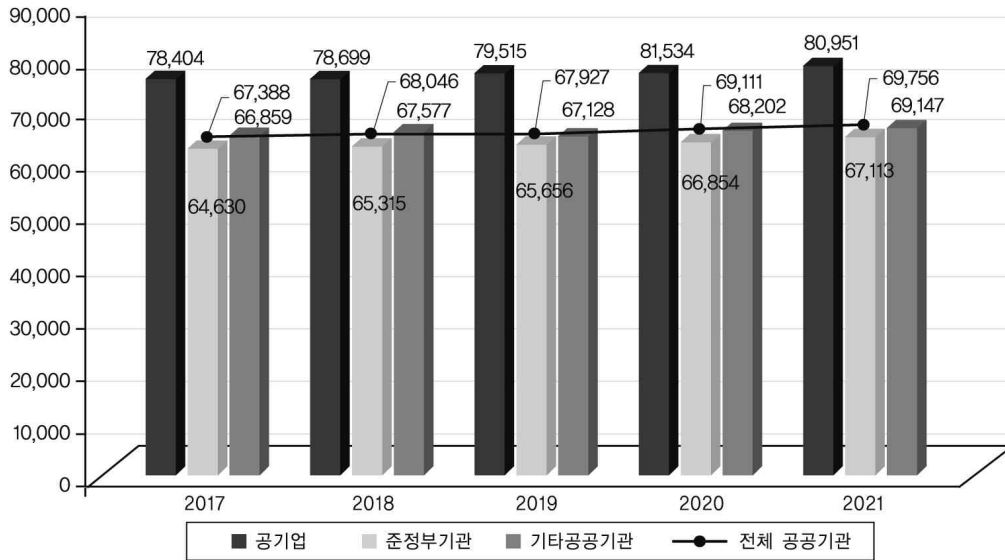
(단위: 천 원, %)

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A)	'21년 (B)	증감 (B-A)	전년 대비 증감률
합 계	67,388	68,046	67,927	69,111	69,756	645	0.9
공기업	78,404	78,699	79,515	81,534	80,951	△583	△0.7
· 시장형	82,375	83,317	84,709	86,076	85,697	△379	△0.4
· 준시장형	75,427	75,236	75,620	78,127	77,561	△566	△0.7
준정부기관	64,630	65,315	65,656	66,854	67,113	259	0.4
· 기금관리형	76,988	77,746	78,652	80,133	80,451	318	0.4
· 위탁집행형	62,740	63,413	63,668	64,823	65,073	250	0.4
기타공공기관	66,859	67,577	67,128	68,202	69,147	945	1.4

주: 공공기관 직원 평균보수는 부설기관을 포함한 기관의 일반 정규직 직원을 기준으로, 무기계약직은 미포함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 '직원 평균보수'(2022. 4. 29.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그림 III-17] 직원 평균보수 추이(2017~2021년, 정규직 기준)

(단위: 천 원)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 '직원 평균보수'(2022. 4. 29.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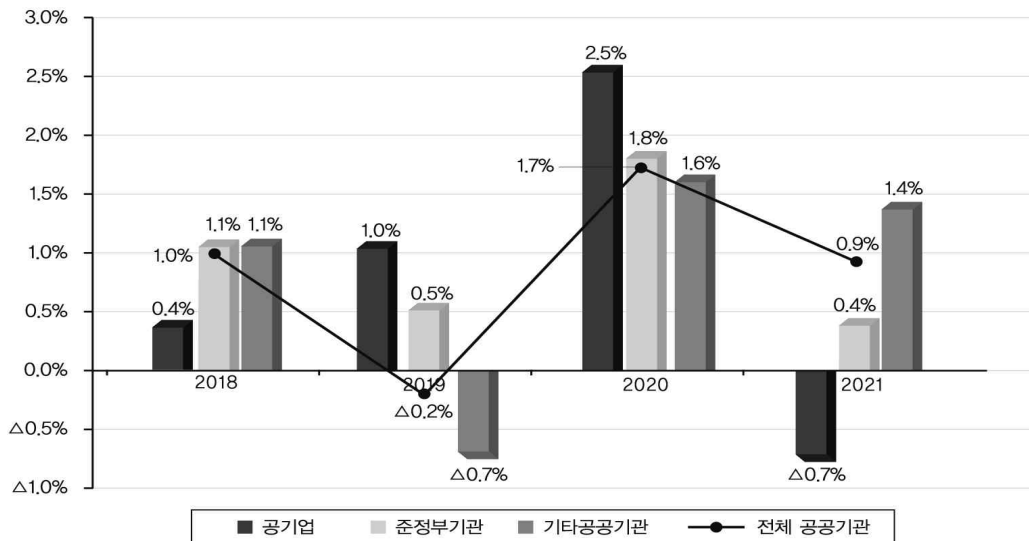
□ 2021년 공공기관 전체 정규직 직원의 평균보수는 전년 대비 0.9%(약 64만 원) 상승했으며,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기업을 제외한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직원의 평균보수가 각각 전년 대비 0.4%, 1.4% 증가함.

- 전년 대비 직원 평균보수 상승률이 가장 높은 유형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전년 대비 1.4%(약 94만 원) 증가함.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모두 직원 평균보수가 전년 대비 0.4%씩 증가하였고,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2021년 전체 공공기관 유형 중 직원 평균보수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공기업은 전년 대비 정규직 직원의 평균보수가 0.7%(약 58만 원)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전체 공공기관 유형 중 직원 평균보수 수준이 가장 높음.
 - 2021년도 총 36개의 공기업 중 20개 기관이 전년 대비 정규직 직원 평균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¹⁴⁶⁾, 이 중 감소율이 3.0% 이상인 기관은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마사회, 한국석유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7개 기관임.

146) (주)한국가스기술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도로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DN

- 2021년에 실시한 2020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 등급이 하락한 한국가스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석유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5개 공기업 모두 전년 대비 정규직 직원의 평균보수가 감소함.
-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전체 공공기관 직원 평균보수는 2019년도를 제외한 모든 년도에서 약 0.9~1.7% 수준으로 증가함.
 - 공기업의 직원 평균보수는 2020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1년 0.7%(△58만 원) 감소함.
 - 준정부기관의 직원 평균보수는 2017년부터 2021년 사이에 매년 0.4~1.8%의 폭으로 증가함.
 - 기타공공기관은 2019년에 소폭 감소하였지만(△44만 원, △0.7%) 나머지 기간에서 직원 평균 보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 공공기관 유형별 직원 평균보수 인상률과 2021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상의 총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147)을 비교해 보면, 기타공공기관을 제외한 모든 유형이 지침상의 상한선(0.9%)을 준수함.

[그림 III-18] 직원 평균보수 증가율 추이(2018~2021년, 정규직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 '직원 평균보수'(2022. 4. 29.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147) 「2021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은 2021년도 총인건비 예산 편성 시 2020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0.9% 이내에서 증액하여 편성하도록 함. 다만, 공공기관 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2019년도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직원의 1인당 평균 임금 수준과 해당 산업 평균을 비교하여 총인건비 인상률을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정부출연기관법」, 「과기출연연구기관법」 등에 따라 운영 중인 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포함)과 부처 직할 연구기관은 총인건비 차등인상률 적용을 제외할 수 있음

나. 상임임원 연봉 수준¹⁴⁸⁾

- 공공기관 상임임원(기관장, 상임이사, 상임감사)의 보수에 대한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보수지침」¹⁴⁹⁾과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이하 ‘혁신지침’)」에 관련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음.
 - 임원 보수지침은 상임임원의 기본연봉 책정 시 준수해야 할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한해 적용함.
 - 기관장의 기본연봉은 매년 정무직 공무원 중 차관의 연봉과 연계하여 책정하며, 기관장의 기본연봉이 해당 연도 차관의 연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관의 연봉과 동액으로 설정하고 이하인 경우는 매년 차관의 연봉 인상률에 따라 기본연봉을 인상하도록 함.
 -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의 기본연봉은 기관장 기본연봉의 100분의 80을 상한으로 하되, 이를 초과할 경우는 기관장 연봉의 100분의 80과 동액으로 하고 100분의 80 이하인 경우는 매년 기관장의 연봉 인상률에 따라 기본연봉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함.
 -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2018년부터 임원 보수지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기타공공기관 중 5개 금융 분야 기관¹⁵⁰⁾은 「혁신지침」 제5조(보수) 제3항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보수지침」을 준용하여 상임임원의 보수를 책정하여야 함.
 - 2021년에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보수지침」 일부 개정이 있었으나, 공기업 임원 성과급 지급률 상한 조정, 준정부기관 기관장의 중기성과급제 적용에 관한 개정사항은 2021년을 평가 대상 기간으로 하는 성과급(2022년 지급)부터 적용하기로 함.¹⁵¹⁾
- 2021년 전체 공공기관 기관장(상임)의 평균연봉은 약 1억 8,072만 원 수준임.
 - 공공기관 유형별로는 공기업 기관장의 평균연봉이 약 2억 432만 원으로 공공기관 전체 평균보다 약 2,360만 원 높은 것으로 나타남.

148) 기관장, 상임이사, 상임감사 등 상임임원에 대한 연봉은 알리오시스템에 공시된 ‘6. 임원연봉’과 주요통계 중 ‘임원 평균연봉’ 자료를 활용함. 알리오시스템상 상임임원에 대한 연봉은 연도 말 결산기준으로 상임임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총보수액을 의미하며 총보수액에는 기본급,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 경영평가 성과급, 기타 성과상여금 등을 모두 포함하여 산출

149) 2018. 3월 공공기관 관련 지침 전면 개정에 따라 종전 「공공기관 임원 보수지침」이 개정된 것으로 임원 보수지침의 적용범위를 공공기관 전체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제한

150)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151) 기획재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보수지침 일부 개정안」, 2021. 10. 1. 참고

- 시장형 공기업 기관장 평균연봉(약 2억 1,865만 원)이 준시장형 공기업 기관장(약 1억 9,409만 원)보다 약 2,455만 원 높은 수준임.
 - 시장형 공기업 기관장의 평균연봉은 전체 공공기관 유형 중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약 2억 4,741만 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음.
 - 준정부기관 기관장 평균연봉은 약 1억 8,793만 원으로 공기업보다는 1,639만 원 낮으나 공공기관 전체 평균보다는 약 721만 원 높은 수준임.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기관장 평균연봉(약 2억 4,741만 원)은 전체 공공기관 유형 중 가장 높는데, 이는 공공기관 전체 평균보다 약 6,669만 원 높은 수준임.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경우, 기관장 평균연봉이 1억 7,839만 원으로 전체 평균보다 다소 낮은 편임.
 - 기타공공기관의 기관장 평균연봉(약 1억 7,371만 원)은 공공기관 전체 유형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전체 평균보다 700만 원 낮음.
 - 기타공공기관 유형의 기관장 평균연봉은 공기업보다는 약 3,061만 원 낮고, 준정부기관보다는 약 1,422만 원 낮은 수준임.
- 2021년 전체 공공기관 상임이사의 평균연봉은 약 1억 5,168만 원 수준임.
- 공공기관 유형별로는 공기업 상임이사의 평균연봉이 약 1억 5,458만 원으로, 공공기관 전체 평균보다 약 290만 원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준정부기관 상임이사 평균연봉은 약 1억 5,375만 원으로, 공기업보다는 약 82만 원 낮으나 공공기관 전체 평균보다는 약 207만 원 높은 수준임.
 - 기타공공기관 상임이사 평균연봉은 공공기관 전체 유형 중 가장 낮은 수준인 약 1억 4,773만 원으로, 전체 평균보다 약 394만 원 낮음.
- 2021년 전체 공공기관 상임감사의 평균연봉은 약 1억 6,261만 원 수준으로 전체 공공기관 간의 편차가 크지 않은 편임.
- 공공기관 유형별로는 공기업 상임감사의 평균연봉이 약 1억 5,682만 원으로, 공공기관 전체 평균보다 579만 원 적을 뿐만 아니라 전체 기관 유형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임.
 - 준정부기관 상임감사 평균연봉은 약 1억 6,728만 원으로, 공공기관 전체 유형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전체 평균보다 약 467만 원 높음.

- 기타공공기관의 상임감사 평균연봉은 약 1억 6,285만 원으로, 공기업 평균보다는 602만 원 높으나 준정부기관 평균보다는 약 443만 원 낮은 수준임.

〈표 III-50〉 상임임원 평균연봉 현황(2017~2021년)

(단위: 천 원, %)

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A)	'21년 (B)	증감 (B-A)	전년 대비 증감률
기 관 장	전체 평균	167,680	170,549	175,533	179,255	180,723	1,468	0.8
	공기업	199,670	198,216	210,903	215,474	204,328	△11,146	△5.2
	준정부기관	172,418	176,596	182,085	184,969	187,938	2,969	1.6
	기타공공기관	159,879	163,088	166,663	170,821	173,714	2,893	1.7
상 임 이 사	전체 평균	141,509	145,592	149,090	150,884	151,681	797	0.5
	공기업	149,717	151,555	157,692	161,281	154,581	△6,700	△4.2
	준정부기관	141,683	147,185	149,554	151,536	153,752	2,216	1.5
	기타공공기관	135,672	139,820	143,201	144,008	147,732	3,724	2.6
상 임 감 사	전체 평균	149,938	155,237	159,445	162,177	162,616	439	0.3
	공기업	153,626	154,743	160,695	163,440	156,824	△6,616	△4.0
	준정부기관	151,892	162,295	163,398	162,833	167,286	4,453	2.7
	기타공공기관	145,523	149,620	155,203	160,698	162,853	2,155	1.3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 '임원 평균연봉'(2022. 4. 29.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 최근 5년간의 상임임원 평균연봉 추이는 [그림 III-19], [그림 III-20] 및 [그림 III-21]과 같음.

- 기관장(상임), 상임이사, 상임감사의 전체 평균연봉은 최근 5년 동안 매년 증가함.
 - 다만 상임이사와 상임감사의 전체 평균연봉 상승폭은 점차 완화되는 모습을 보임.
- 상임기관장 평균연봉을 살펴보면, 2018년과 2021년 공기업의 하락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음.
 - 공기업의 기관장 평균연봉은 최근 5년 동안 다른 유형의 기관장 연봉 대비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최근 5년 중 가장 큰 하락폭(△5.2%)으로 인하됨.
 - 준정부기관 기관장의 평균연봉은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21년 기관장 평균연봉이 1억 8,793만 원으로 공공기관 전체 평균(1억 8,072만 원)보다 721만 원 높은 수준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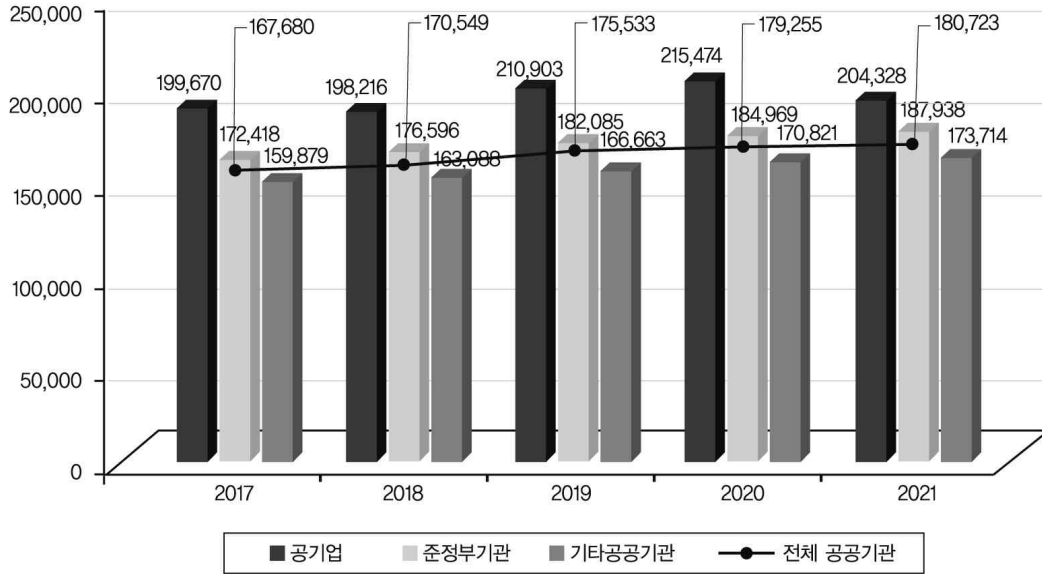
- 기타공공기관 기관장의 평균연봉은 201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증감률 또한 2017~2020년 사이 매년 증가하다가 2021년에 전년도 증감률을 하회하며 그 상승세가 다소 약화됨.¹⁵²⁾
- 상임이사 평균연봉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상승폭은 점차 둔화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전년 대비 0.5%(79만 원) 증가에 그침.
 - 최근 5년간 공기업 상임이사의 평균연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21년 하락세로 돌아섰으나, 여전히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 상임이사의 평균연봉은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준정부기관의 경우 2021년에 전년 대비 약 221만 원(약 1.5%) 증가한 1억 5,375만 원으로 집계되어 공기업과의 격차를 줄이고 있음.
 - 2021년 기타공공기관의 상임이사 평균연봉은 전년보다 약 2.6%(약 372만 원) 증가하여 다른 유형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했으나 여전히 가장 낮은 수준임.
- 전체 상임감사 평균연봉의 경우 지난 5년간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그 증가율은 해마다 크게 둔화되는 추세임.¹⁵³⁾
 - 상임감사 평균연봉 수준은 2020년 공기업(약 1억 6,344만 원), 준정부기관(약 1억 6,283만 원), 기타공공기관(약 1억 6,069만 원) 순으로 높았다가, 2021년에 준정부기관(약 1억 6,728만 원), 기타공공기관(약 1억 6,285만 원), 공기업(약 1억 5,682만 원) 순으로 변화함.
 - 2021년 공기업 상임감사 평균연봉은 다른 유형에 비해 큰 폭(△4.0%, △602만 원)으로 감소하면서, 2017년부터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던 기타공공기관보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짐.
 - 준정부기관 상임감사 평균연봉은 2020년에 전년 대비 56만 원(△0.3%)이 감소하였으나, 2021년에 반등하면서 공기업을 추월해 전체 유형 중 가장 높은 수준(1억 6,728만 원)을 기록함.
 - 기타공공기관의 상임감사 평균연봉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전년 대비 약 1.3%(약 215만 원) 증가함.

152) 2018년 2.0% → 2019년 2.2%(0.2%p) → 2020년 2.5%(0.3%p) → 2021년 1.7%(△0.8%p)

153) 2018년 3.5% → 2019년 2.7%(△0.8%p) → 2020년 1.7%(△1.0%p) → 2021년 0.3%(△1.4%p)

[그림 III-19] 기관장(상임) 평균연봉 추이(2017~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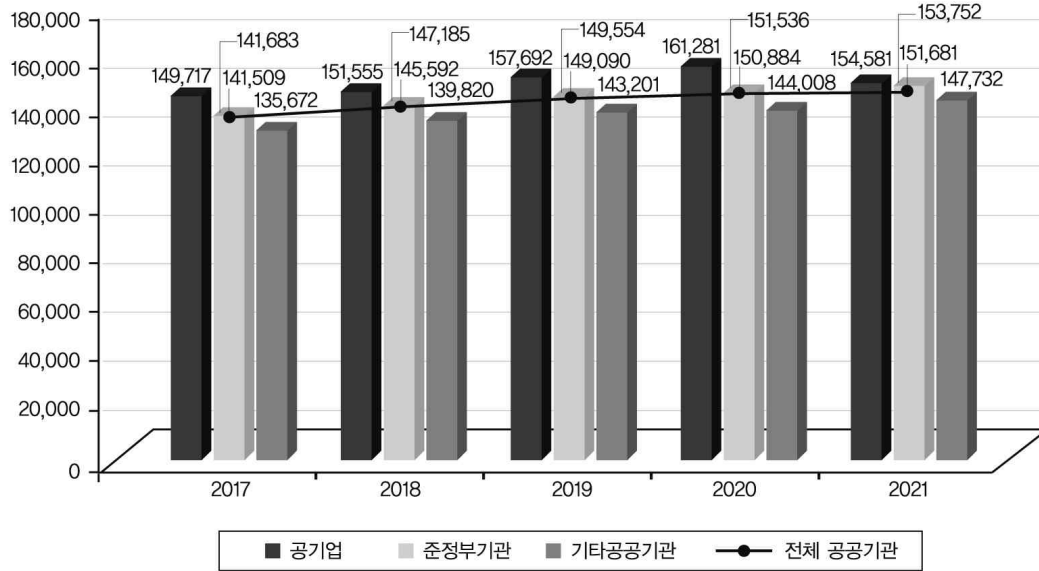
(단위: 천 원)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 '임원 평균연봉'(2022. 4. 29.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그림 III-20] 상임이사 평균연봉 추이(2017~2021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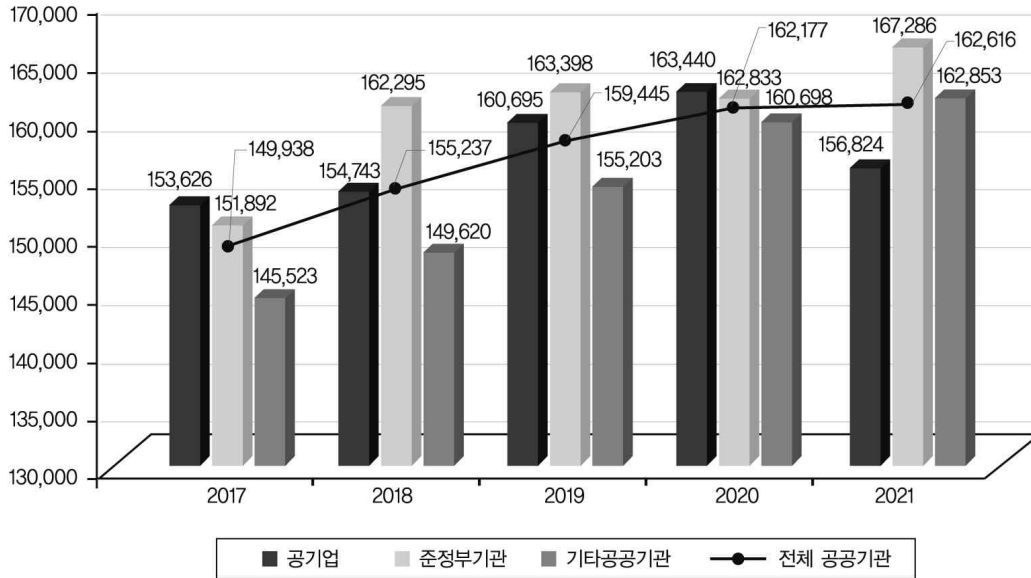
(단위: 천 원)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 '임원 평균연봉'(2022. 4. 29.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그림 III-21] 상임감사 평균연봉 추이(2017~2021년)

(단위: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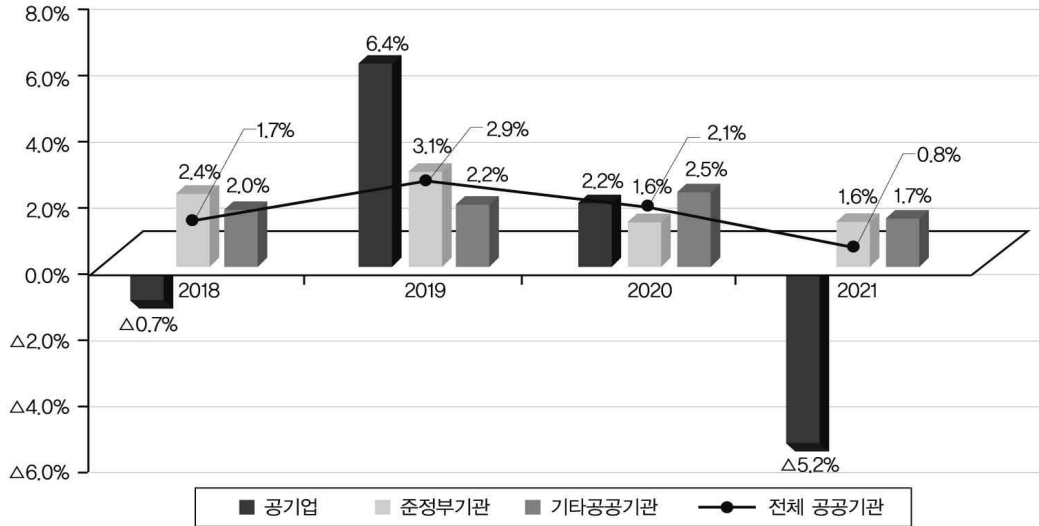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 '임원 평균연봉'(2022. 4. 29.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 상임임원 평균연봉 수준의 변화를 전년 대비 증감률 기준으로 살펴보면, [그림 III-22], [그림 III-23] 및 [그림 III-24]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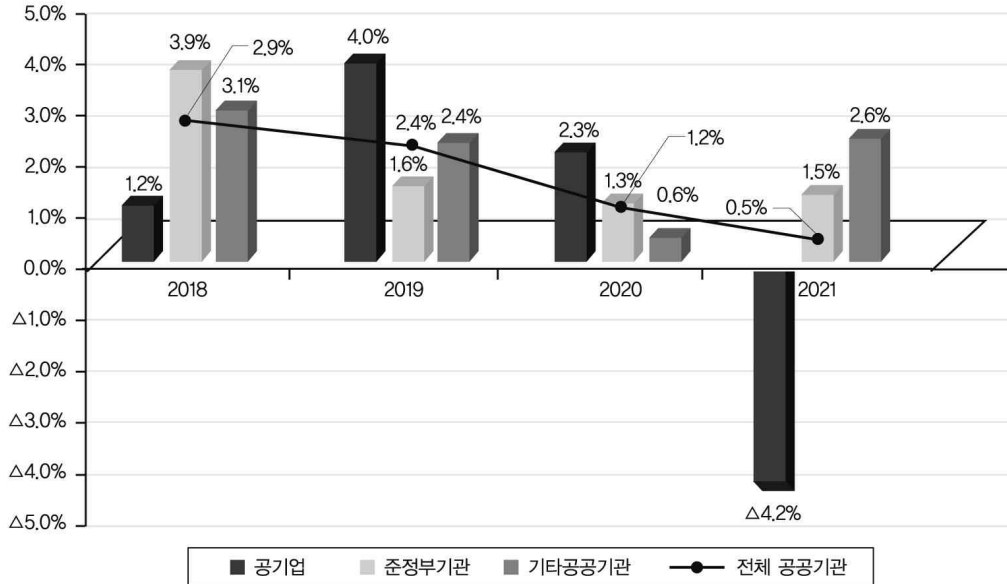
- 최근 5년간 전년 대비 상임임원 평균연봉 증가율이 가장 높은 회계연도는 상임이사와 상임감사의 경우 2018년이며, 기관장의 경우 2019년임.
- 2018년과 2019년 상임임원 평균연봉 증가율은 전년 대비 크게 상승하였으나, 2020년과 2021년에는 증가세가 다소 둔화됨.
 - 2018년에 기관장 평균연봉이 하락한 것을 제외하면 공기업의 상임임원 평균연봉은 2020년까지 꾸준히 상승해왔으나, 2021년에 일제히 4.0~5.2%의 큰 하락을 보임.
 - 준정부기관의 경우, 2018년 상임감사 평균연봉 증가율이 6.8%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기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2020년의 상임감사 평균연봉 증가율 감소(약 △0.3%)를 제외하면 전체 상임임원의 평균연봉은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함.
 - 기타공공기관의 전년 대비 기관장·상임이사·상임감사 평균연봉 증가율은 최근 5개년 간 꾸준히 0.6~3.7% 수준의 증가세를 보임.

[그림 III-22] 기관장(상임) 평균연봉 증감률(2018~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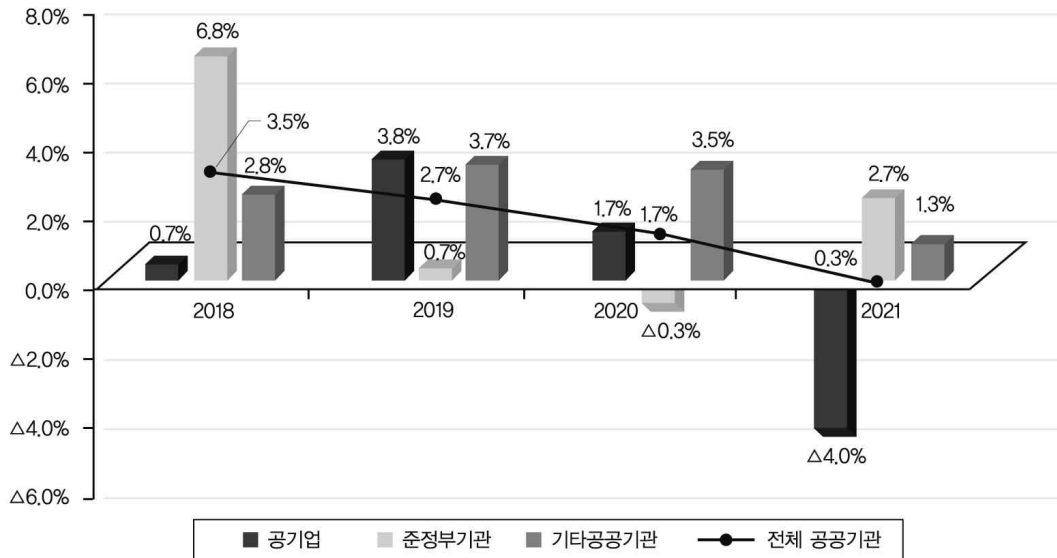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 '임원 평균연봉'(2022. 4. 29.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그림 III-23] 상임이사 평균연봉 증감률(2018~2021년)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 '임원 평균연봉'(2022. 4. 29.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그림 III-24] 상임감사 평균연봉 증감률(2018~2021년)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 '임원 평균연봉'(2022. 4. 29.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다. 복리후생비 수준

- 2021년 중 공공기관 전체 임직원(무기계약직, 비정규직 포함)에게 지급된 무상지급 형태의 복리후생비 총 규모는 약 8,594억 원임.
-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복리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으로 2021년 임직원 수가 전년 대비 1.8%(7,950명) 증가하였음에도 복리후생비 지원규모는 전년 대비 0.4%(38억 원) 수준으로 소폭 증가하였음.
 - 정원 증가 등의 이유로 복리후생비 총액은 증가하였으나, 총액 증가 수준이 정원 증가 수준에 못 미쳐 1인당 복리후생비는 감소하고 있음.¹⁵⁴⁾
- 공공기관 유형별로 복리후생비 지원 규모는 공기업(3,537억 원), 기타공공기관(3,014억 원), 준정부기관(2,043억 원) 순으로 높음.
 - 공공기관 전체 복리후생비 중 기관유형별 비중을 살펴보면, 공기업이 41.2%, 기타공공기관이 35.1%, 준정부기관이 23.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¹⁵⁵⁾

154) 2021년도 1인당 복리후생비는 1.7% 감소한 187만 원으로 2018년도 이래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음. 기획재정부,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보도자료, 2022. 4. 29. p. 4 참고

155) 2021년 정원 기준 공공기관 유형별 임직원 수 규모를 비교하면, 기타공공기관(16만 5,001명, 37.3%), 공기업(15만 794명, 34.1%), 준정부기관(12만 6,981명, 28.7%) 순임.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 '임직원 현황'(2022. 4. 29. 기준) 참고

- 공공기관 유형 중 공기업만 2021년 복리후생비 지원 규모가 감소함.
 - 공기업은 전년 대비 임직원 정원이 소폭 증가(384명, 0.3%)했음에도 불구하고 복리후생비 지원규모는 대폭(216억 원, △5.8%) 감소함.
 -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은 2021년에 복리후생비가 증가하였는데, 당해 연도에 두 기관 유형 모두 정원이 증가하였으므로 정원 증가에 따른 복리후생비 증가라고 볼 수 있음.¹⁵⁶⁾

〈표 III-51〉 기관 복리후생비 지원 규모 현황(2017~2021년)

(단위: 억 원, %)

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A)	'21년 (B)	증감 (B-A)	전년 대비 증감률
합 계	7,668	8,373	8,491	8,556	8,594	38	0.4
공기업	3,546	4,001	3,870	3,753	3,537	△216	△5.8
· 시장형	1,978	2,126	2,110	2,011	1,874	△137	△6.8
· 준시장형	1,568	1,875	1,760	1,742	1,663	△79	△4.5
준정부기관	1,767	1,852	1,922	1,894	2,043	149	7.9
· 기금관리형	516	551	582	564	574	10	1.8
· 위탁집행형	1,251	1,302	1,340	1,330	1,469	139	10.5
기타공공기관	2,355	2,520	2,699	2,908	3,014	106	3.6

주: 부설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예산에 편성되어 복리후생비로 지급된 내역임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 '복리후생비 지원 규모'(2022. 4. 29.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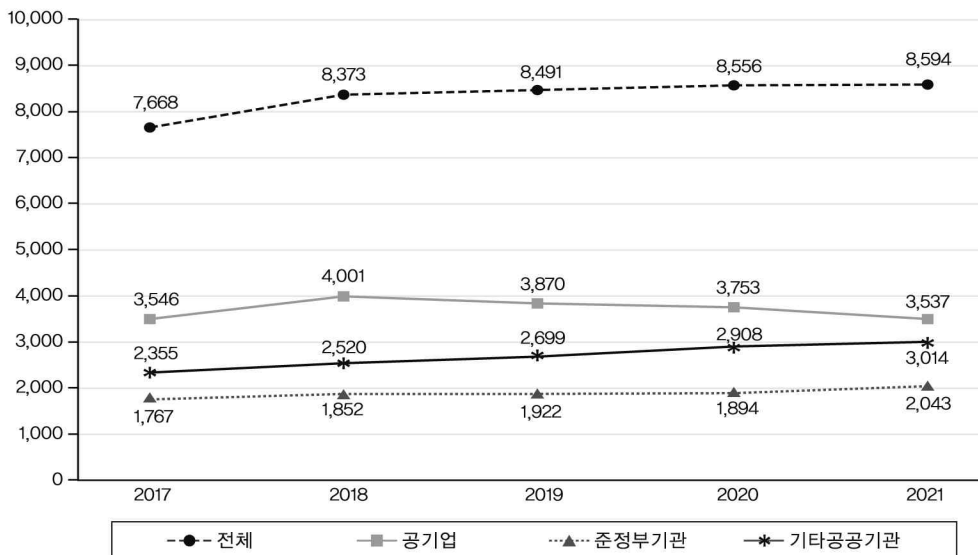
- 최근 5년간 무상 지급된 복리후생비 총액 추이([그림 III-25])를 보면, 전체 공공기관 복리후생비는 2017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였음.
- 전체 공공기관의 복리후생비 총액은 2017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에 약 8,373억 원으로 전년 대비 9.2% 증가하여 크게 상승하였으나, 그 이후 상승폭이 둔화되어 2021년에는 전년 대비 0.4%(38억 원) 증가함.
 - 공기업에서 2021년 복리후생비가 대폭 감소하였지만, 준정부기관에서 149억 원(7.9%), 기타공공기관에서 106억 원(3.6%)이 증가하여 2021년 전체 공공기관의 복리후생비 증감률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0.4%로 나타남.
- 공공기관 유형별로 복리후생비 무상지급액 지원 규모 변화를 살펴보면, 기타공공기관은 201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인 반면, 준정부기관은 증가세를 유지

156) 준정부기관은 복리후생비가 149억 원(7.9%), 정원 기준 임직원 수가 3,552명(2.9%) 증가했고, 기타공공기관은 복리후생비가 106억 원(3.6%), 정원 기준 임직원 수가 4,013명(2.5%) 증가함

하다가 2020년에 소폭 감소(28억 원, △1.5%)하였고, 공기업은 2018년의 반등 이후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음.

- 2021년 공기업의 복리후생비는 2019년부터 시작된 하락세를 유지하며 전년 대비 216억 원(△5.8%)이 감소함.
 - 준정부기관의 경우,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복리후생비 무상지급액 규모의 변화가 공공기관 유형 중 가장 미미한 편이었으나, 2021년에 149억 원(7.9%)이 증가하며 전년 대비 9.3%p가 상승하는 등 최근 5년 사이 가장 큰 변동을 보임.
 - 기타공공기관의 복리후생비 무상지급액 규모는 2017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3,01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6억 원(3.6%)이 증가함.
- 2017년 대비 2021년 복리후생비 지원 규모 증가율을 보면, 전체 공공기관의 증가율은 12.1%이며, 유형별 증가율은 공기업 △0.3%, 준정부기관 15.6%, 기타공공기관 28.0%로 나타남.
- 공기업의 복리후생비 지원규모는 2017년 3,546억 원에서 2021년 3,537억 원으로 약 0.3%(9억 원) 감소함.
 - 준정부기관의 경우 복리후생비 지원규모가 2017년 1,767억 원에서 2021년 2,043억 원으로 15.6%(276억 원) 증가하였고, 기타공공기관도 2017년 2,355억 원에서 2021년 3,014억 원으로 28.0%(659억 원) 증가하여, 두 유형 모두 전체 공공기관의 증가율(12.1%)을 상회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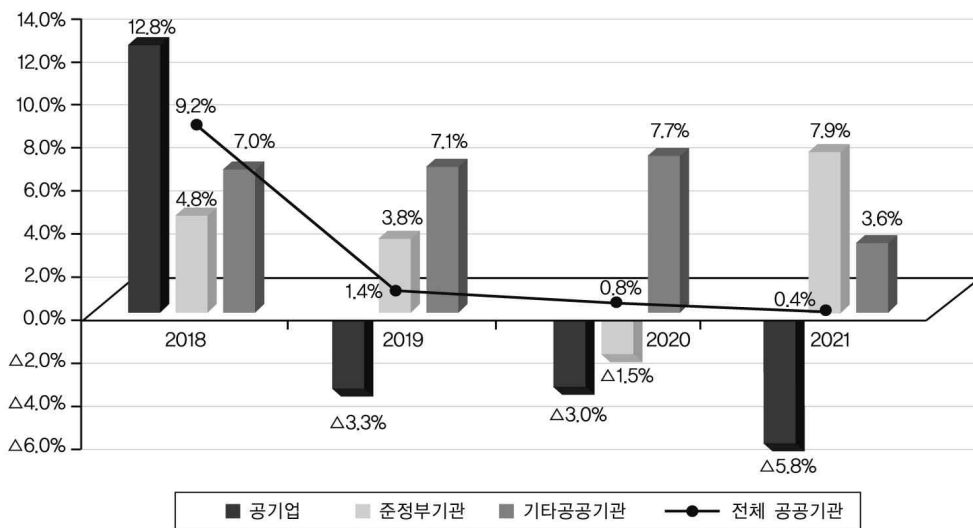
[그림 III-25] 복리후생비 지원 규모 현황(2017~2021년, 무상지원 기준)
(단위: 억 원)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 '복리후생비 지원 규모'(2022. 4. 29.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 복리후생비 지원규모 증감률 추이(무상지원 기준)를 살펴보면, 공공기관 전체적으로는 2018년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19년부터는 다시 증가세가 완만해짐.
- 공기업의 경우, 복리후생비 지원규모 증감률이 2018년 12.8%로 최근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마이너스로 전환되어 2021년까지 매년 전년 대비 감소하는 모습을 보임.
- 준정부기관의 복리후생비 지원규모는 2020년 1.5%(△28억 원) 감소하였으나, 2021년 7.9%(149억 원) 증가하여 전년도의 감소분을 만회함.
- 기타공공기관의 복리후생비 지원규모 증감률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증가 추세로 매년 전년 대비 7%대의 증가를 보이다¹⁵⁷⁾ 2021년 3.6% 증가해 증감률이 둔화됨.

[그림 III-26] 복리후생비 지원 규모 증감률 추이(2018~2021년, 무상지원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 '복리후생비 지원 규모'(2022. 4. 29.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 보육비, 문화여가비, 행사 지원비, 의료 및 건강검진비, 선택적 복지, 학자금 등 주요 복리후생비 항목별 지급액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표 III-52>와 같음.
- 보육비는 2020년의 감소를 제외하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 보육비는 전년 대비 약 5억 원(10.2%) 증가함.
 - 이러한 증가 추세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영유아 보육시설 확대가 지속됨에 따라 보육비 지원 또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임.

157) 2018년 7.0% → 2019년 7.1% → 2020년 7.7%

- 2021년부터는 알리오시스템 보육비 항목의 공시기준이 개정되어 보육시설 설치·운영비¹⁵⁸⁾를 제외한 보육비 지원을 복리후생비상 보육비로 공시해야 함.¹⁵⁹⁾
- 증가세를 보이던 문화여가비 및 행사지원비는 2020년 전년 대비 각각 71억 원 (△17.7%), 79억 원(△21.2%) 감소했다가 2021년 반등했음.
 - 문화여가비의 경우 2021년에 2020년의 감소분을 회복하였는데,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적 완화에 따른 체육시설 개방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임.
- 의료 및 건강검진비는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¹⁶⁰⁾
- 선택적 복지는 다른 항목에 비해 규모가 큰 복리후생 항목으로, 2021년에는 전체 복리후생비(8,594억 원)의 41.9%(약 3,601억 원) 수준을 차지함.
 - 수혜인원의 확대에 의해 선택적 복지비용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꾸준히 증가했으나 2021년에는 감소세로 전환됨.
- 학자금은 2017년 이후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2017년 대비 607억 원 (△58.5%) 감소하였고, 2020년 대비 220억 원(△33.8%) 감소하였음.
 - 이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확대에 따라 학자금 지원 규모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임.

〈표 Ⅲ-52〉 복리후생비 주요항목 현황(2017~2021년)

(단위: 억 원, %)

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17년 대비		'20년 대비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보 육 비	33	42	50	47	52	18	55.6	5	10.2
문화여가비	346	355	403	331	414	68	19.7	82	24.8
행사지원비	328	341	371	293	326	△2	△0.6	33	11.4
의료 및 건강검진비	771	821	904	987	1,052	281	36.4	64	6.5
선택적 복지	2,923	3,224	3,410	3,711	3,601	678	23.2	△110	△3.0
학 자 금	1,037	1,019	895	651	431	△607	△58.5	△220	△33.8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통계다운로드에 게시된 '복리후생비'(2022. 4. 29.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158) 보육시설 운영비(보육교사 인건비·식재료비·기본운영비, 시설운영비와 보육시설 이용 수수료, 공동 어린이 집에 대한 기관부담금 등) 및 보육시설 설치비로 복리후생에서 분리공시

159)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통합공시 매뉴얼, 전자문서 작성지침」, 2022. 3. 23. 참고

160) 2017년 대비 의료 및 건강검진비 증가액은 281억 원(36.4%)임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규모는 2018년 크게 감소(832억 원, △26.2%)한 이후로 최근 5년간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146억 원(△8.3%) 감소함.
- 2021년 기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총액 1,611억 원 중 공기업 출연금은 약 1,016억 원으로 전체의 63.1%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기타공공기관이 전체의 28.6%, 준정부기관이 전체의 8.4%를 차지함.
 - 2021년 공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증가한 것은, 준시장형 공기업에서 486억 원(△68.4%)이 감소했음에도 시장형 공기업에서 이를 만회할 정도로 크게 증가(564억 원, 248.5%)한 것에서 기인함.
 - 준정부기관의 2021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규모는 13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5억 원(△20.6%) 감소하였으며,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모두에서 전년 대비 사내근로복지기금 규모가 각각 31억 원(△24.8%), 4억 원(△8.9%) 감소함.
 - 기타공공기관의 2021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규모는 46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9억 원(△29.1%) 감소함.

〈표 III-53〉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규모(2017~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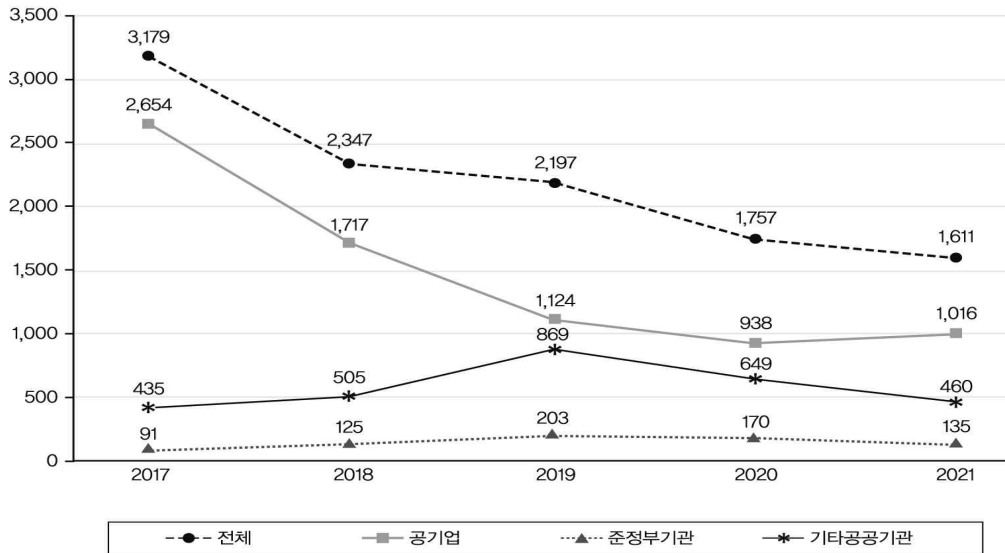
(단위: 억 원, %)

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A)	'21년 (B)	증감 (B-A)	전년 대비 증감률
합 계	3,179	2,347	2,197	1,757	1,611	△146	△8.3
공기업	2,654	1,717	1,124	938	1,016	78	8.3
· 시장형	2,363	973	183	227	791	564	248.5
· 준시장형	290	744	941	711	225	△486	△68.4
준정부기관	91	125	203	170	135	△35	△20.6
· 기금관리형	33	42	139	125	94	△31	△24.8
· 위탁집행형	58	83	65	45	41	△4	△8.9
기타공공기관	435	505	869	649	460	△189	△29.1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규모'(2022. 4. 29.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그림 III-27]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규모(2017~2021년)

(단위: 억 원)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규모'(2022. 4. 29.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6. 외부 평가결과

가. 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¹⁶¹⁾

1) 기관 평가제도 개요

□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운법」 제31조 및 제48조에 근거하여 기관 경영실적 평가 (이하 '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함.¹⁶²⁾

- 경영실적 평가는 기관의 경영실적에 대한 외부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의 경영책임성을 확보하고 경영개선을 유도하고자 마련된 제도로, 1984년에 최초 실시되어 39년째 시행 중인 대표적인 공공기관 관리정책 중 하나임.
- 기획재정부는 매년 3~6월 사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전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 지급 등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음.

161) 기획재정부,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수정)』, 2021. 10.,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실시계획」,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2022. 3. 3.,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보도자료, 2022. 6. 20.,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2022. 6. 20. 및 「202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2021. 12. 8. 참고

162) 「공운법」 제31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던 기관장 평가(공공기관 기관장 경영성과협약 이행실적 평가)는 2018년도 평가부터 기관평가에 통합하여 실시하였으므로 별도로 다루지 않음

- 기타공공기관은 「공운법」 제4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실시하는 기관 경영실적 평가의 대상은 아니나 주무부처 주관하에 자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¹⁶³⁾
 -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영실적 평가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독립적으로 평가업무를 수행토록 함.
 - 기관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2018년 실시한 2017년도 경영실적 평가부터 경영평가단을 공기업 평가단과 준정부기관 평가단으로 분리함.
 - 경영실적 평가의 평가지표체계, 평가유형,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평가대상 연도 개시 전에 공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영평가편람을 통해 사전에 정하고 있음.
 -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임직원에게 경영평가 성과급을 차등지급하고 우수기관과 부진기관에 대해 차별화된 조치를 시행함.
 - 경영실적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 등을 시행할 수 있음.
 - 성과급 지급률은 공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이 결정함.
 - 기획재정부 장관은 실적부진 기관의 기관장·상임이사에 대하여 공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음.
 - D등급 이하인 실적부진 기관은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경상경비예산이 삭감(0.5~1%p 이내)될 수 있으며,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하여 이행상황을 점검받아야 함.
- 2021년도 경영실적 평가는 기획재정부가 「공운법」에 따라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최종결과와 후속조치를 2022년 6월 20일 공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였음.¹⁶⁴⁾
- 2021년도 경영실적 평가는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수정)』을 토대로 130개 기관(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4개)을 대상으로 2022년 실시함.
 - 2021년 1월 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유형변경¹⁶⁵⁾, 2021년 9월 기관 통·폐합¹⁶⁶⁾ 및 2022년 1월 기관 해산¹⁶⁷⁾ 등으로 평가대상기관이 전년 대비 1개 기관 감소함.

163)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준용하여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되, 평가결과를 기획재정부에 통보할 의무는 없음

164) 「공운법」 제48조 제7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매년 6월 20일까지 경영실적평가를 마치고, 그 결과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함

165) 서민금융진흥원: 2021년 1월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유형 변경

166) 한국광해광업공단: 2021년 9월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에 따라 기존 한국광물자원공사(준시장형 공기업)와 한국광해관리공단(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 통합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신설 출범

- 2021년 8월 발표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처음 실시되는 2021년도 경영실적 평가는 평가위원의 전문성 강화 및 평가 내실화를 위해 예년 보다 1개월 앞선 2월부터 경영평가단 구성 및 교육 등에 조기 착수함.
 - 2022년 평가단은 교수·회계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공기업·준정부기관 유형별로 구분하여 평가팀을 구성함.¹⁶⁸⁾
 - 기획재정부는 경영평가위원 선정에 앞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후보 풀을 구성하기 위해 인터넷 공모¹⁶⁹⁾ 시민·사회단체 추천, 관련 부처 추천 등을 진행하는 한편, 특정전공·성별 등의 편중 최소화를 위해 지역·여성·특정분야 전문성을 고려하여 평가단을 구성함.
 - 평가단은 공기업 평가단 37명과 준정부기관 평가단 62명 외에 감사 직무수행 실적을 평가¹⁷⁰⁾하기 위해 별도로 감사평가단(10명)을 구성함.
 - 평가단은 서면심사, 기관별 실사 등을 통해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및 59개 기관의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함.
 - 기관별 실사는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함.
- 2021년도 경영실적 평가 대상기관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경영실적 평가는 130개(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4개) 기관을 대상으로, 총 5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실시됨.
 - 공기업은 2개 유형(공기업 I, 공기업 II), 준정부기관은 3개 유형(위탁집행형, 기금관리형, 강소형)으로 평가유형을 구분함.
 - 2021년도 경영실적 평가 대상기관 중 최초로 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수검한 기관은 서민금융진흥원과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2개 기관임.
 - 서민금융진흥원은 2021년 공공기관 지정 시 기타공공기관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됨에 따라 2022년 실시되는 경영실적 평가대상에 포함되었으며, 평가유형은 강소형 유형에 해당함.

167) 아시아문화원: 2021년 3월 개정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2022년 1월 아시아문화원이 해산됨에 따라 2022년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

168) 경영관리 계량지표의 평가는 경영관리 계량평가위원회(31명)를 별도로 구성하여 평가 후에 합산하여 최종 득점을 산출함

169) 알리오시스템(www.alio.go.kr)을 통해 경영평가위원 공모 실시

170) 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는 감사 개인에 대한 평가이므로 분석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 기관 통·폐합으로 2021년 9월 신설 출범한 한국광해광업공단(준시장형 공기업)의 평가유형은 공기업Ⅱ 유형에 해당함.
- 2021년도 경영실적 평가 대상기관 중 3개 기관이 전년 대비 평가유형이 달라짐.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등 3개 기관은 2020년도 경영실적 평가(2021년 실시)에서는 강소형 유형¹⁷¹⁾이었으나 2021년도 경영실적 평가에서는 위탁집행형 유형으로 평가유형이 변경됨.

〈표 Ⅲ-54〉 2021년도 경영실적 평가 대상기관(130개)

유형	기관명	
공기업 (36개)	공기업 I (10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기업 II (26개)	(주)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대한석탄공사,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식회사 에스알,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전KDN, 한전KPS(주), 해양환경공단
준정부기관 (94개)	기금관리형 (12개)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위탁집행형 (45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가철도공단,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토안전관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도로교통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우체국물류지원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관광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71) 「공운법」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중에서 정원이 300인 미만인 기관과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중에서 자산규모(위탁관리하는 기금자산 포함)가 1조 원 미만이고 정원이 300인 미만인 기관(2020년 말 기준)이 강소형 유형에 해당

〈표 III-54〉의 계속

유 형	기 관 명
준정부기관 (94개)	강소형 (37개) 국제방송교류재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독립기념관, 서민금융진흥원, 시청자미디어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주: 1. 신규 평가 대상기관(2개)은 밑줄로 표시
 2. 한국농업기술진흥원(구.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한국보건복지인재원(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기관명 변경
 자료: 기획재정부,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수정)』, 2021. 10.을 참고하여 작성

□ 2021년도 경영실적 평가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¹⁷²⁾

- 2021년도 경영실적 평가에서는 체계적·전문적인 평가 및 검증장치 마련을 위해 전반적인 평가과정 및 절차를 개편함.
 - 예년보다 일찍 경영평가단을 구성하여 기관별 실사 전 단계에서 평가위원 대상 교육의 실시기간 및 내용을 확대¹⁷³⁾하는 한편 기관별 경영현황·주요사업 및 과거 평가결과 등에 대한 평가위원 사전검토를 강화하여 내실 있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함.
 - 평정결과의 적정성 검증, 평정과정의 모니터링 및 평가결과 산출 시 오류 발생 방지 등을 위해 평가검증단과 평가검증위원회를 최초로 운영함.
- 이전 평가에 비해 평가결과가 실질적인 경영개선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
 - 기획재정부는 2021년 10월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수정하여 편람에 기관의 생애주기와 다양한 기관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경영 컨설팅을 실시

172)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방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2021. 8. 31.,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 보도자료, 2021. 8. 31.,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실시계획」,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2022. 3. 3. 및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보도자료, 2022. 6. 20.을 참고하여 작성

173) (기간) 1일 → 2일, (교육내용) 기초교육 중심에서 심화교육으로 전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컨설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컨설팅 결과를 기관 경영개선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의무화함.

- 기존 실적부진기관(D, E등급)에 대한 컨설팅 이외에 신규기관 컨설팅¹⁷⁴⁾을 신설하여 경영평가제도가 공공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과 경영성과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환류 기반을 강화함.
- 2018년도 경영실적 평가부터 강화된 '사회적 가치' 중심의 평가 기조¹⁷⁵⁾를 유지한 가운데, 일부 공공기관의 비위 행위를 계기로 윤리경영 분야에 대한 평가가 과거보다 더욱더 엄정하게 실시됨.
 - 윤리경영 분야를 엄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부동산 투기·갑질·성비위 등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엄격한 페널티를 부여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및 부패방지시책 평가결과, 감사원 지적 등도 평가에 적극 반영함.
 - 윤리경영 지표의 가중치를 3점에서 5점으로 확대하였으며, 윤리경영지표의 세부 평가내용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추가하여 평가함.
 - 윤리경영 분야에 대한 평가 강화를 통해 윤리경영 지표의 평가등급이 '미흡' 이하(D, E)인 기관의 수가 2020년 73개에서 2021년 63개로 10개 기관이 감소함.
- 작년에 이어 '코로나19 대응 노력과 성과'¹⁷⁶⁾ 가점에 따라 공공기관의 코로나19 위기 극복 노력과 성과 등을 반영함.
 -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코로나19가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에 지속해서 영향을 끼친 점을 고려해 평가편람 수정 시 '통제불능성의 판단'과 '코로나19 영향보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기관별 경영실적을 합리적으로 보정하여 평가함.
- 연령과 관계없이 직무에 따라 공정하게 보수가 결정되는 직무급 제도를 도입하려는 기관의 노력과 도입 수준에 대한 평가도 2020년도에 이어 유지하되 기관의 평가 부담 완화를 위해 평가방식을 개선함.
 - 2019년도 경영실적 평가까지 직무급 관련 평가내용이 '보수 및 복리후생' 지표의 일부 세부 평가항목으로 반영되어 있었으나 2020년도 경영실적 평가부터 별도의

174) 2021년도 평가 시 최초 평가를 받은 한국광해광업공단, 서민금융진흥원 등 2개 기관이 해당함

175) 사회적 가치 중심 평가 기조: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환경, 상생협력·지역발전, 윤리경영

① (사회적 가치)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 배점: ('20년) 공기업 24점, 준정부기관 22점 → ('21년) 공기업 25점, 준정부기관 23점
 ② (윤리) 윤리경영 지표 배점 확대(기존 3점 → 5점) 및 세부평가내용에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노력·성과' 추가 및 적부평가제 도입(중대한 위반·위법행위 발생 시 0점)
 ③ (안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심사 결과 신규 반영

176) 코로나19 대응 노력과 성과 가점(비계량 3점): ① 코로나19 고동분담을 위한 노력과 성과 ②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정책 대응 ③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

체크리스트와 '직무급 점검단'¹⁷⁷⁾을 통해 직무급 도입 노력과 수준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기 시작함.

- 2020년도 경영실적 평가에서는 직무급 점검단의 점검결과를 참고하여 경영평가단이 실사를 통해 다시 평가하여 방식이었다면 2021년도 경영실적 평가부터는 기관의 평가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직무급 점검단의 점검결과를 경영실적 평가에 그대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함.
- 경영실적 평가를 통해 직무급 도입 여부 및 기관별 수준을 지속해서 관리해 온 결과, 2020년도 경영실적 평가 시 도입기관 수가 18개에 불과했던 것이 2021년도 경영실적 평가에서는 직무급 도입 기관이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¹⁷⁸⁾
- 이외 사내대출 등 최근 이슈화된 복리후생 항목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강화하였으며 주요사업과 관련하여 신재생 에너지 투자 확대, 중소벤처기업 지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주요사업 정책에 대한 성과 창출 여부에 대한 평가도 강화함.
- 평가등급 판정과 관련하여 기관 간 과열 경쟁 방지를 위해 2017년도 경영실적 평가부터 도입한 절대평가 제도를 2021년도 경영실적 평가에서도 그대로 유지함.
 -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병용하며 종합점수와 경영관리, 주요사업 범주별 점수를 바탕으로 하여 6개 등급(탁월(S)/우수(A)/양호(B)/보통(C)/미흡(D)/아주미흡(E))으로 기관의 평가등급을 산출함.

2) 2021년도 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 2021년도 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이하 '기관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
- 2021년도 기관 평가결과를 2020년도 기관 평가결과와 비교해 보면 등급 분포는 전반적으로 예년과 유사한 모습임.
 - 2020년도 대비 양호등급 이상(S, A, B) 비율이 소폭 상승(55.0% → 55.4%)하고, 미흡 등급 이하(D, E) 비율은 소폭 하락함(14.5% → 13.8%).

177) 경영평가단 내 점검단이 아닌 경영평가단과 구분하여 기획재정부가 별도로 구성·운영하는 점검단임

178) 직무급 도입기관이 2019년 5개에서 2020년 18개, 2021년 35개로 증가

- 평가유형별¹⁷⁹⁾ 종합등급 분포를 비교하면, 양호등급 이상(S, A, B)은 강소형 유형과 위탁집행형·기금관리형 유형의 분포비율이 공기업 유형에 비해 높은 반면 미흡 등급 이하(D, E)는 전 유형이 모두 유사한 수준임.
 - 강소형 유형과 위탁집행형·기금관리형 유형의 양호등급 이상인 기관 비율은 각각 59.5%, 56.1%인 반면, 공기업 유형은 50.0%임.
 - 미흡등급 이하(D, E)인 기관의 비율은 공기업 유형 13.9%, 위탁집행형·기금관리형 유형 14.0% 및 강소형 유형 13.5%로 유형별 비율 차이가 0.1~0.5% 수준임.
- 2021년도 기관 평가결과의 종합등급을 구체적으로 보면, 종합등급이 S등급(탁월)은 1개 기관, A등급(우수)은 23개 기관, B등급(양호)은 48개 기관, C등급(보통)은 40개 기관, D등급(미흡)은 15개 기관, E등급(아주미흡)은 3개 기관임.
- 지난 9년간(2012~2020년도) 기관 평가결과에서 최상위 S등급인 기관은 없었으나 2021년도에는 한국동서발전(주)가 S등급을 받음.
 - 한국동서발전(주)는 재난안전 사고 예방,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구현에서 성과를 달성하였고, 발전설비의 안정적 운영 등 주요사업 부문의 성과를 인정 받아 전년 대비 1등급 상승한 S등급으로 평가됨.
- 전년 대비 등급별 기관 수 변화를 살펴보면, B등급인 기관이 1개 감소, D등급인 기관이 2개 감소, E등급인 기관이 1개 증가하였으며, A등급과 C등급은 기관 수 변화가 없음.
- 종합등급이 A등급인 기관은 공기업 유형의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도로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해양환경공단 등 8개 기관, 위탁집행형·기금관리형 유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로교통공단, 신용보증기금,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10개 기관, 그리고 강소형 유형인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등 5개 기관으로 총 23개 기관임.
 - 2020년도에 이어 2021년도에도 종합등급 A등급 이상을 유지한 기관은 총 15개 기관임.

179) 평가유형은 공기업(공기업 I·II 유형), 준정부기관(준정부기관 중 기금관리형·위탁집행형) 및 강소형(준정부기관 중 강소형)으로 구분

- 이 중 강소형 유형의 한국농업기술진흥원 1개 기관은 2017년도부터 5년 연속 종합등급 A등급을 유지하였으며,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도로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6개 기관은 2019년도부터 3년 연속 A등급을 유지함.
- 이 외 9개 기관은 2020년도보다 경영성과가 개선되어 평가등급이 상승하였는데, 한국중부발전(주) 1개 기관은 종합등급이 전년도 C등급에 비해 2등급 상승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나머지 8개 기관은 모두 전년 대비 1등급 상승함.
- 종합등급이 E등급인 기관은 한국철도공사, (재)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3개 기관임.
- (재)우체국물류지원단은 2019년도부터 3년 연속 E등급을 받음.

□ 최근 3년(2018~2020년도) 기관 평가결과 평균 대비 2021년도 종합등급의 분포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유사한 수준임.

- 2021년도 종합등급이 양호등급 이상(S, A, B)인 기관의 비율이 55.4%로 3년 평균 55.4%와 같으며, 2021년도 종합등급이 미흡등급 이하(D, E)인 기관의 비율이 13.8%로 3년 평균인 13.6%보다 조금 높음.

〈표 III-55〉 2021년도 평가유형별 종합등급 분포

(단위: 개)

구 분	연도별	기관 수	S (탁월)	A (우수)	B (양호)	C (보통)	D (미흡)	E (아주미흡)	
공기업	2020	36	0	6	16	10	3	1	
	2021	36	1	8	9	13	4	1	
준정부기관	· 위탁집행형/ 기금관리형	2020	54	0	11	18	18	6	1
		2021	57	0	10	22	17	6	2
	· 강소형	2020	41	0	6	15	12	8	0
		2021	37	0	5	17	10	5	0
전 체	2020	131 (100%)	0 (0.0%)	23 (17.6%)	49 (37.4%)	40 (30.5%)	17 (13.0%)	2 (1.5%)	
	2021	130 (100%)	1 (0.8%)	23 (17.7%)	48 (36.9%)	40 (30.8%)	15 (11.5%)	3 (2.3%)	
	'18~'20 평균	(100%)	(0.0%)	(16.5%)	(38.9%)	(30.9%)	(12.6%)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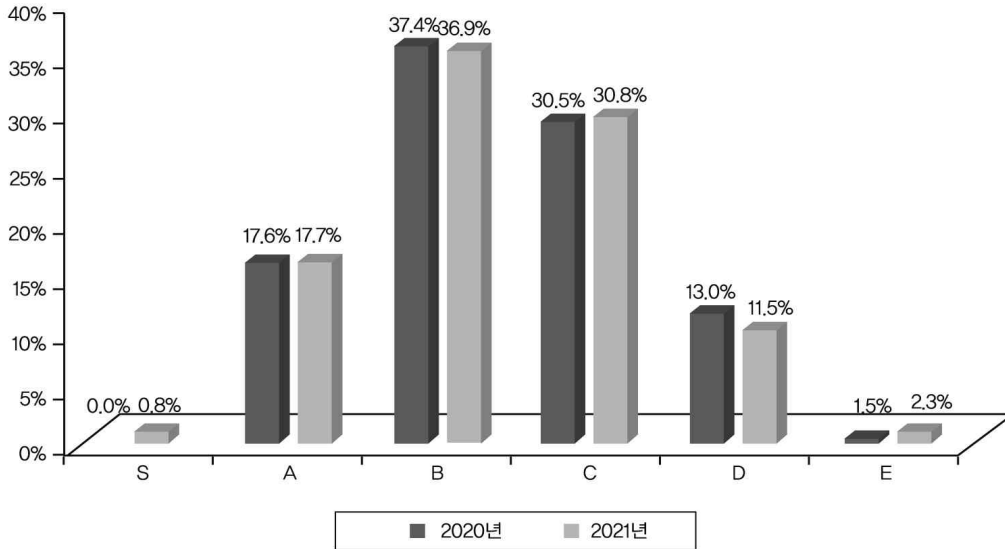
주: 등급구간은 평균점수 및 표준편차 등을 활용하여 설정
 자료: 기획재정부,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19. 6. 20.,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0. 6. 19.,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보도자료, 2021. 6. 18.,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 수정 및 향후 조치계획(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1. 6. 25.,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보도자료, 2022. 6. 20.,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2. 6. 20.을 참고하여 작성

〈표 III-56〉 2021년도 종합등급별 기관 현황

등급	공기업(36개)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기금관리형(57개)	강소형(37개)
S	한국동서발전(주) (1개)	-	-
A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도로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해양환경공단 (8개)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로교통공단 신용보증기금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환경공단 (10개)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5개)
B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DN 한전KPS(주) (9개)	공무원연금공단 국가철도공단 국립공원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예금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2개)	국제방송교류재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시청자미디어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17개)
C	(주)강원랜드 부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13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국토안전관리원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17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독립기념관 서민금융진흥원 창업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특허전략개발원 (10개)
D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대한석탄공사 한국마사회 한국토지주택공사 (4개)	국립생태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6개)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5개)
E	한국철도공사 (1개)	(재)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2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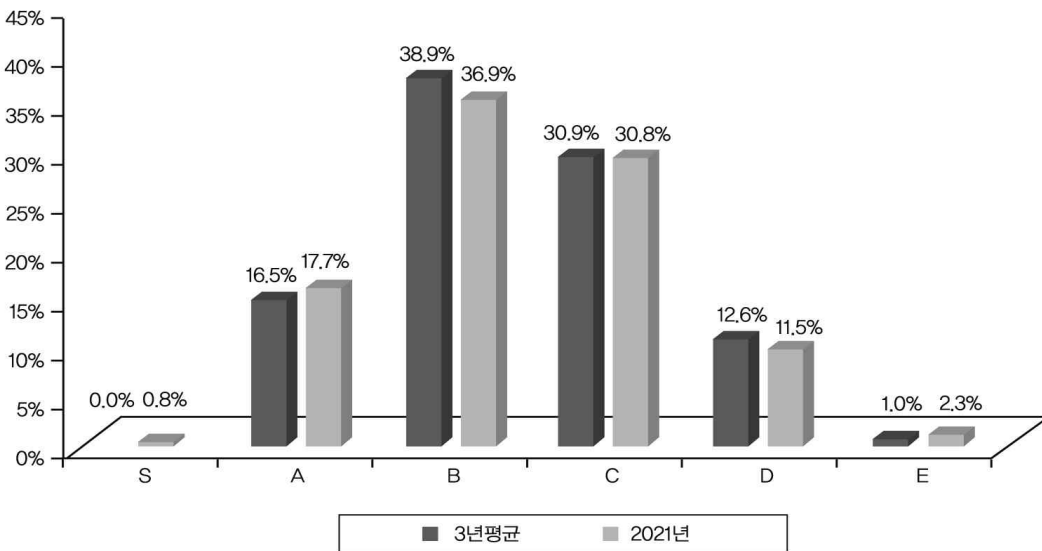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2. 6. 20.

[그림 III-28] 전년 대비 2021년도 평가등급별 분포



자료: 기획재정부,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보도자료, 2022. 6. 20. 및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2. 6. 20.을 참고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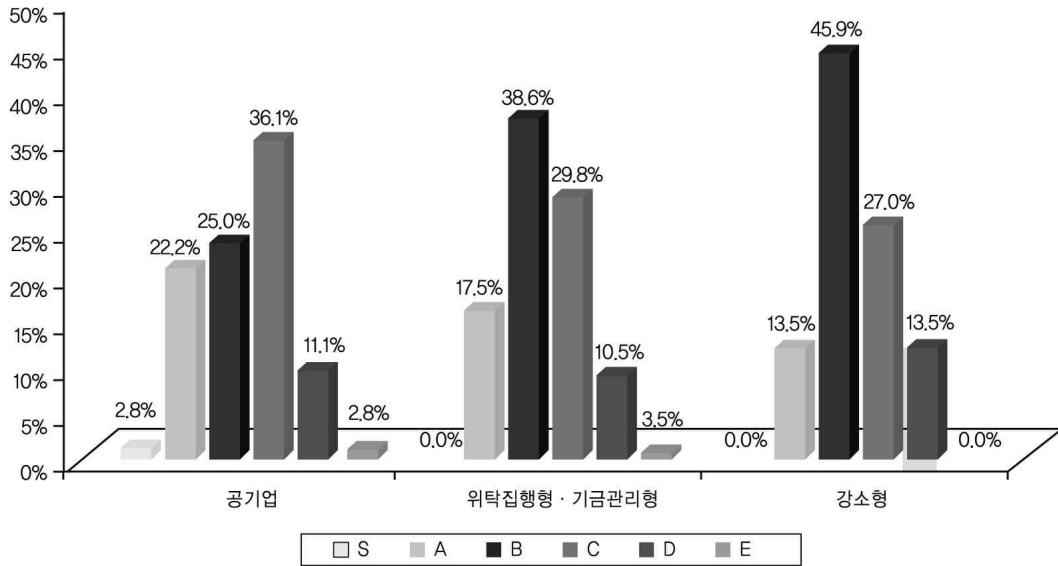
[그림 III-29] 최근 3년 평균 대비 2021년도 평가등급별 분포



주: 3년 평균은 2018~2020년도의 기관 평가결과 평균을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19. 6. 20.,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0. 6. 19.,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보도자료, 2021. 6. 18.,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 수정 및 향후 조치계획(안)」,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1. 6. 25.,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보도자료, 2022. 6. 20.,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2. 6. 20.을 참고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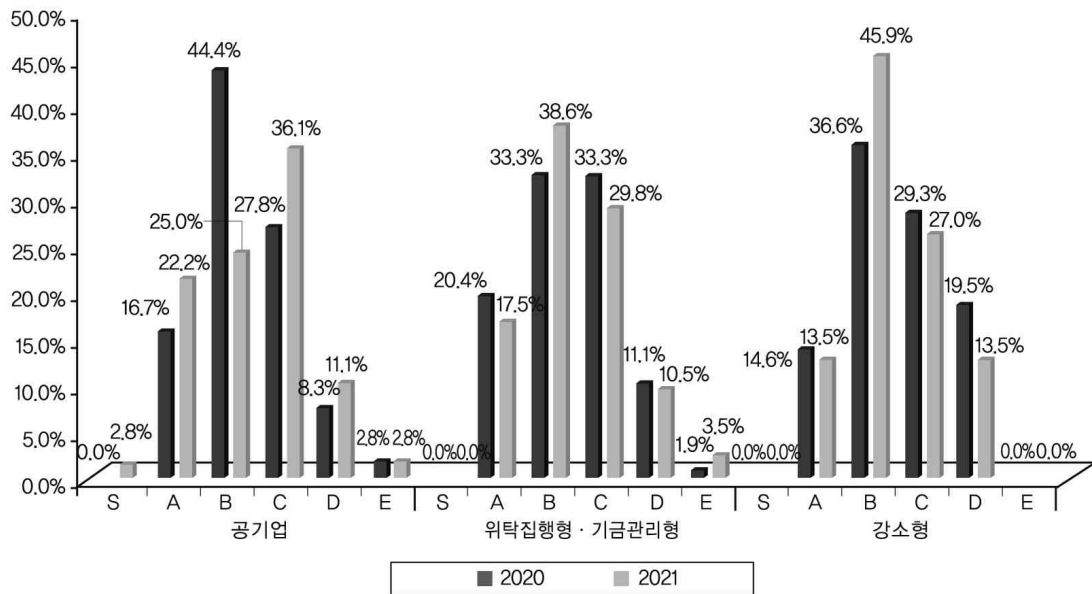
- 평가유형별로 기관 평가결과의 등급별 분포를 살펴보면, 모든 유형에서 동일하게 B등급과 C등급의 분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종합등급 분포는 평가유형별로 유사한 모습을 보이나, 일부 차이가 있음.
 - 모든 유형이 B등급과 C등급이 가장 큰 분포를 차지하지만, 공기업 유형은 C등급, 위탁집행형·기금관리형 유형과 강소형 유형은 B등급의 분포가 가장 크게 나타남.
 - 위탁집행형·기금관리형 유형과 강소형 유형은 B등급 다음으로 C등급이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B등급과 C등급 간 비중의 차이가 위탁집행형·기금관리형 유형은 8.8%p, 강소형 유형은 18.9%p로 평가유형별로 큰 차이를 보임.
 - 전년 대비 종합등급 변동을 평가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기업 유형은 2020년 B등급 중심에서 2021년 C등급 위주로 평가등급이 하향 조정되었으며, 위탁집행형·기금관리형 유형은 B등급 분포가 증가되는 평가 결과를 보였음.
 - 공기업 유형은 2020년도에 A등급과 B등급 분포의 차이가 컸으나, 2021년도 평가에서는 A등급이 증가하고, B등급이 감소하여 두 등급 간 분포의 차이가 27.7%p에서 2.8%p로 크게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상대적으로 완만한 분포를 보이고 있음.
 - 이와 반대로 2020년도에 위탁집행형·기금관리형 유형은 B등급과 C등급이 동일한 분포를 보였으나 2021년도에는 B등급이 증가하고, C등급이 감소하여 두 등급 간 분포의 차이가 8.8%p로 증가함.
 - 강소형 유형은 2020년도 대비 D등급의 분포가 감소하고, B등급의 분포가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가파른 분포를 보이고 있음.
 - 미흡 이하 등급(D, E)의 분포는 강소형 유형에서는 감소하였으나, 공기업과 위탁집행형·기금관리형 유형에서는 증가하였음.

[그림 III-30] 2021년도 평가유형별 등급 분포



자료: 기획재정부,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2. 6. 20.을 참고하여 작성

[그림 III-31] 평가유형별 전년 대비 평가등급 분포 비교



자료: 기획재정부,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 수정 및 향후 조치계획(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1. 6. 25. 및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2. 6. 20.을 참고하여 작성

- 2020년도 및 2021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모두 수검한 128개 기관을 대상으로 전년 대비 평가등급 변동내역을 살펴본 결과, 평가등급이 상승한 기관은 39개 기관으로 전체의 30.5%를 차지하고, 평가등급이 하락한 기관은 35개로 27.3%를 차지함.
- 전년 대비 평가등급이 개선된 기관 중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중부발전(주) 등 3개 기관은 평가등급이 2단계 상승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음.
 - 2년 연속 평가등급이 상승한 기관은 3개이고, 이 중 한국동서발전(주)은 2년 연속 평가등급이 상승하여 2021년도 평가에서 S등급을 받은 기관으로 지속적인 경영 개선 노력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¹⁸⁰⁾
- 평가등급이 전년보다 하락한 기관 중 평가등급이 2단계 이상 하락한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철도공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등 4개 기관임.
 - 2년 연속 평가등급이 하락한 기관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조폐공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5개 기관이며, 3년 연속 평가등급이 지속해서 하락한 기관은 없음.

〈표 III-57〉 전년 대비 2021년도 평가등급 변동 요약

(단위: 개)

구 분	기관 수 (128개)	변동폭		
		1단계	2단계	3단계
평가등급 상승	39 (30.5%)	36	3	-
평가등급 유지	54 (42.2%)	-	-	-
평가등급 하락	35 (27.3%)	31	4	-

주: 2021년 9월 기관 통폐합을 통해 신설 출범한 한국광해광업공단과 2021년 기타공공기관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 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된 서민금융진흥원은 2020년도 경영평가를 수검하지 않았으므로 분석대상에서 제외
 자료: 기획재정부,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 수정 및 향후 조치계획(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1. 6. 25. 및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2. 6. 20.을 참고하여 작성

180) 한국동서발전(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시청자미디어재단 등 3개 기관은 2년 연속 평가등급이 1단계씩 상승하여 2021년도 평가에서 한국동서발전(주)은 S등급,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A등급, 시청자미디어재단은 B등급을 받음

〈표 III-58〉 전년 대비 2021년도 평가등급 변동 현황

구분	기관명
등급 상승 (39개)	<p>(공기업) 울산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해양환경공단</p> <p>(준정부기관) 공무원연금공단, 국가철도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국제방송교류재단,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도로교통공단, 시청차미디어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력거래소,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p>
등급 유지 (54개)	<p>(공기업) (주)강원랜드,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도로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DN, 한전KPS(주)</p> <p>(준정부기관)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우체국물류지원단,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안전관리원,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콘텐츠진흥원</p>
등급 하락 (35개)	<p>(공기업) (주)한국가스기술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대한석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공사</p> <p>(준정부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독립기념관, 중소기업창업진흥원, 창업진흥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관광공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p>

주: 2021년 9월 기관 통폐합을 통해 신설 출범한 한국광해광업공단과 2021년 기타공공기관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 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된 서민금융진흥원은 2020년도 경영평가를 수검하지 않았으므로 분석대상에서 제외
 자료: 기획재정부,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 수정 및 향후 조치계획(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1. 6. 25. 및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2. 6. 20.을 참고하여 작성

□ 2021년도 기관 평가결과 분포를 살펴보면 <표 III-59>, <표 III-60>과 같이 나타남.

<표 III-59> 2021년도 주무부처별 소관 공공기관 평가등급 분포

(단위: 개)

구 분	기관 수	S (탁월)	A (우수)	B (양호)	C (보통)	D (미흡)	E (아주미흡)
기획재정부	2	-	-	1	1	-	-
교육부	3	-	1	2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	-	2	5	2	-	1
외교부	1	-	1	-	-	-	-
행정안전부	1	-	-	-	1	-	-
문화체육관광부	6	-	-	3	1	2	-
농림축산식품부	6	-	1	1	3	1	-
산업통상자원부	30	1	4	10	12	3	-
보건복지부	9	-	2	4	3	-	-
환경부	5	-	2	2	-	1	-
고용노동부	5	-	-	2	2	1	-
여성가족부	3	-	-	1	1	1	-
국토교통부	15	-	2	4	6	2	1
해양수산부	9	-	2	2	3	1	1
중소벤처기업부	5	-	-	4	1	-	-
방송통신위원회	2	-	-	2	-	-	-
금융위원회	5	-	3	1	1	-	-
공정거래위원회	1	-	-	-	-	1	-
국가보훈처	2	-	-	-	2	-	-
식품의약품안전처	1	-	1	-	-	-	-
인사혁신처	1	-	-	1	-	-	-
경찰청	1	-	1	-	-	-	-
소방청	1	-	-	-	-	1	-
산림청	3	-	-	2	-	1	-
농촌진흥청	1	-	1	-	-	-	-
특허청	1	-	-	-	1	-	-
기상청	1	-	-	1	-	-	-
합 계	130	1	23	48	40	15	3

자료: 기획재정부,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2. 6. 20.을 참고하여 작성

〈표 III-60〉 2021년도 주무부처별 소관 공공기관 평가등급 현황

주무부처	기관명
기획재정부 (2개)	(B등급) 한국재정정보원 (C등급) 한국조폐공사
교육부 (3개)	(A등급) 한국교육학술정보원 (B등급)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장학재단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10개)	(A등급)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연구재단 (B등급)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C등급) (재)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과학창의재단 (E등급) (재)우체국물류지원단
외교부 (1개)	(A등급) 한국국제협력단
행정안전부 (1개)	(C등급)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문화체육관광부 (6개)	(B등급)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관광공사, 한국언론진흥재단 (C등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D등급)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콘텐츠진흥원
농림축산식품부 (6개)	(A등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B등급)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C등급)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어촌공사 (D등급) 한국마사회
산업통상자원부 (30개)	(S등급) 한국동서발전(주) (A등급)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B등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DN, 한전KPS(주) (C등급) (주)강원랜드,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 (D등급)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보건복지부 (9개)	(A등급)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B등급) 국민연금공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C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
환경부 (5개)	(A등급)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B등급) 국립공원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D등급) 국립생태원
고용노동부 (5개)	(B등급) 근로복지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C등급)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인력공단 (D등급)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표 III-60〉의 계속

주무부처	기관명
여성가족부 (3개)	(B등급)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C등급) 한국건강가정진흥원 (D등급)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토교통부 (15개)	(A등급) 한국도로공사, 한국부동산원 (B등급) 국가철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국토정보공사 (C등급) 국토안전관리원, 인천국제공항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D등급)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E등급) 한국철도공사
해양수산부 (9개)	(A등급)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환경공단 (B등급)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C등급)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D등급) 한국해양수산연수원 (E등급)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중소벤처기업부 (5개)	(B등급)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C등급) 창업진흥원
방송통신위원회 (2개)	(B등급)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금융위원회 (5개)	(A등급)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B등급) 예금보험공사 (C등급) 서민금융진흥원
공정거래위원회 (1개)	(D등급) 한국소비자원
국가보훈처 (2개)	(C등급) 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식품의약품안전처 (1개)	(A등급)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사혁신처 (1개)	(B등급) 공무원연금공단
경찰청 (1개)	(A등급) 도로교통공단
소방청 (1개)	(D등급)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산림청 (3개)	(B등급)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임업진흥원 (D등급)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농촌진흥청 (1개)	(A등급)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특허청 (1개)	(C등급)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기상청 (1개)	(B등급)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자료: 기획재정부,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2. 6. 20.을 참고하여 작성

- 범주별 등급을 살펴보면, 경영관리 범주에서 S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이고, 주요사업 범주에서는 S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음.
- 공기업 유형 중 한국동서발전(주), 해양환경공단 등 2개 기관은 경영관리 범주와 주요사업 범주에서 모두 A등급을 받음.
 - 공기업 유형 중 경영관리 범주에서 A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부동산원,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DN, 해양환경공단 등 7개 기관이며, 주요사업 범주에서 A등급을 받은 기관은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수자원공사, 해양환경공단 등 5개 기관임.
 -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경영관리 범주에서 A등급을 받았으나 주요사업 범주에서 D등급을 받아 범주 간 등급 차이가 3단계에 달했으며, 종합등급은 B등급으로 평가됨.
 -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전KDN 등 5개 기관은 경영관리 범주와 주요사업 범주 간 등급 차이가 2단계에 달함.
 - 경영관리 범주에서 E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철도공사 1개 기관임.
- 위탁집행형·기금관리형 유형 중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경영관리 범주에서 S등급을 받았으며, 두 범주 모두에서 A등급 이상을 받은 기관은 없음.
 - 경영관리 범주에서 S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1개 기관이며, A등급을 받은 기관은 9개 기관임.
 - 주요사업 범주에서 A등급을 받은 기관은 8개 기관임.¹⁸¹⁾
 - 경영관리 범주와 주요사업 범주 간 등급이 2단계 이상 차이가 나는 기관은 공무원연금공단, 국립공원공단, 국토안전관리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13개 기관임.
 - 이 중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 3개 기관은 경영관리 범주와 주요사업 범주 간 등급이 3단계 차이가

181) 경영관리 범주에서 A등급을 받은 기관은 공무원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9개 기관이고, 주요사업 범주에서 A등급을 받은 기관은 국립공원공단,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도로교통공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8개 기관임

- 나는 기관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경영관리 범주에서 A등급, 주요사업 범주에서 D등급을 받아, 종합등급은 C등급으로 평가받았으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경영관리 범주에서 S등급, 주요사업 범주에서 C등급을 받아, 종합등급은 A등급으로 평가받았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경영관리 범주에서 B등급, 주요사업 범주에서 E등급을 받아, 종합등급은 D등급으로 평가됨.
- 경영관리 범주에서 E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1개이고, 주요사업 범주에서 E등급을 받은 기관은 (재)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3개 기관임.
 - 강소형 유형 중 경영관리 범주와 주요사업 범주 모두에서 A등급 이상을 받은 기관은 없음.
 - 경영관리 범주에서 A등급을 받은 기관은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등 6개 기관이고, 주요사업 범주에서 A등급을 받은 기관은 국제방송교류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디자인진흥원 등 4개 기관임.
 - 범주 간 등급이 2단계 이상 차이가 나는 기관은 국제방송교류재단, 독립기념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등 10개 기관임.
 - 이 중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범주 간 등급이 3단계 차이가 나는 기관으로, 국제방송교류재단은 경영관리 범주에서 D등급, 주요사업 범주에서 A등급을 받아, 종합등급은 B로 평가받았으며, 한국수산자원공단은 경영관리 범주에서 E등급, 주요사업 범주에서 B등급을 받아, 종합등급은 C로 평가받았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경영관리 범주에서 B등급, 주요사업 범주에서 E등급을 받아, 종합등급은 D등급으로 평가됨.
 - 경영관리 범주에서 E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수산자원공단 1개이고, 주요사업 범주에서 E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2개 기관임.

〈표 III-61〉 2021년도 기관 평가결과 현황(공기업 유형)

등급	총 합	경영관리	주요사업
S	한국동서발전(주) (1개)	-	-
A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도로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해양환경공단 (8개)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부동산원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DN 해양환경공단 (7개)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수자원공사 해양환경공단 (5개)
B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DN 한전KPS(주) (9개)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도로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중부발전(주) 한전KPS(주) (14개)	(주)한국가스기술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부동산원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전KPS(주) (12개)
C	(주)강원랜드 (주)한국가스기술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13개)	(주)강원랜드 (주)한국가스기술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공항공사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10개)	(주)강원랜드 대한석탄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DN (12개)
D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대한석탄공사 한국마사회 한국토지주택공사 (4개)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대한석탄공사 한국마사회 한국토지주택공사 (4개)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부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공항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마사회 (7개)
E	한국철도공사 (1개)	한국철도공사 (1개)	-

자료: 기획재정부,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2. 6. 20.

〈표 III-62〉 2021년도 기관 평가결과 현황(위탁집행형·기금관리형 유형)

등급	종합	경영관리	주요사업
S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1개)	-
A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로교통공단 신용보증기금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환경공단 (10개)	공무원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환경공단 (9개)	국립공원공단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도로교통공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8개)
B	공무원연금공단 국가철도공단 국립공원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2개)	국가철도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도로교통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개)	국가철도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국토안전관리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환경공단 (22개)

〈표 III-62〉의 계속

등급	종합	경영관리	주요사업
C	(재)우체국금융개발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토안전관리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17개)	(재)우체국금융개발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18개)	(재)우체국금융개발원 공무원연금공단 국립생태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관광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9개)
D	국립생태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6개)	(재)우체국물류지원단 국립생태원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8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5개)
E	(재)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2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1개)	(재)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개)

자료: 기획재정부,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2. 6. 20.

〈표 III-63〉 2021년도 기관 평가결과 현황(강소형 유형)

등급	종합	경영관리	주요사업
S	-	-	-
A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5개)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6개)	국제방송교류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디자인진흥원 (4개)
B	국제방송교류재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시청자미디어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17개)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재정정보원 (11개)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독립기념관 시청자미디어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재정정보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19개)
C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독립기념관 서민금융진흥원 창업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특허전략개발원 (10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시청자미디어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창업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14개)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서민금융진흥원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창업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9개)
D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5개)	국제방송교류재단 독립기념관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5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3개)
E	-	한국수산자원공단 (1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개)

자료: 기획재정부,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2. 6. 20.

- 2021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① 부진기관 및 중대재해 발생기관에 대한 인사조치, ② 부진기관 경영개선 점검 및 차년도 예산 반영 조치, ③ 성과급 차등 지급 등을 시행함.¹⁸²⁾
 - 실적부진 기관의 기관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시행함.
 - 종합등급에서 E등급을 받은 기관의 장과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기관의 장은 해임 건의의 대상이 되고, 당해 연도 D등급을 받은 기관의 장은 경고 조치의 대상이 됨.
 - 2021년도 경영실적 평가에서 E등급 또는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8개 기관 중 현재 재임 중인 기관장 1명에 대해 해임건의하고, 나머지 7개 기관은 2021년 말 기준 기관장 재임기간 6개월 미만이거나 임기만료로 해임건의 대상에서 제외함.¹⁸³⁾¹⁸⁴⁾
 - 기관평가 종합등급이 '미흡 이하 등급(D, E)'으로 실적이 부진하여 기관장 경고 조치의 대상이 되는 기관은 18개이며, 이 중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관장 3명에 대해 경고 조치함.¹⁸⁵⁾
 - 중대재해가 발생한 14개 기관 중 현재 재임 중인 기관장 13명에 대해 경고 조치함.¹⁸⁶⁾
 - 중대재해 발생으로 기관장 경고조치를 받은 기관은 국가철도공단, 국립공원공단, 부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13개 기관임.
 - 실적부진 기관, 중대재해 발생기관의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경영부진기관에 대한 경영개선 및 구조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기로 함.
 - 종합등급에서 D등급 이하를 받은 18개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내년도 경상경비를 삭감(0.5~1%p)하는 등 공공기관 예산 편성에 기관 평가결과를 반영함.

182) 기획재정부,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보도자료, 2022. 6. 20.

183) 종합등급에서 E등급을 받은 기관은 (재)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철도공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3개 기관이며,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기관은 국립생태원,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마사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5개 기관임

184) 종합등급에서 E등급을 받아 해임 건의된 기관의 기관장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기관장임

185) 실적부진기관(18개) 중 기관장 경고조치를 받은 기관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3개 기관의 기관장임

186) 한국농어촌공사는 기관장 임기만료로 대상에서 제외

- 중대재해가 발생한 14개 기관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 방지 등 안전 관련 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임.
- 2021년도 경영실적 평가 성과급 지급 대상은 범주별(종합, 경영관리, 주요사업) 등급이 C등급 이상인 129개 기관이고, 등급별·평가유형별로 차등 지급함.
 - 성과급 지급률은 범주별로 종합평가 50%, 경영관리 범주 25%, 주요사업 범주 25%를 반영하여 차등 지급함.
 - 성과급 지급률은 「202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함.
- 2021년도 경영실적 평가부터 공기업 기관장·감사·상임이사의 성과급 지급률 상한을 하향 조정함.
 - 공기업 기관장 성과급 지급률 상한을 기본연봉 대비 최대 120%에서 기본연봉 대비 10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이와 연동하여 감사·상임이사의 성과급 지급률 상한을 기본연봉 대비 최대 100%에서 8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함.
- 한국전력공사 및 자회사, 그 외 당기순손실 발생 공기업에 대해 추가 조치함.
 - 한국전력공사의 재무상황 악화에 따른 강도 높은 자구노력 필요성 등을 감안 하여 한국전력공사 및 9개 자회사¹⁸⁷⁾의 기관장·감사·상임이사의 성과급 자율 반납을 권고함.
 - 이외에도 2021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11개 공기업¹⁸⁸⁾에 대하여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의 자율 반납을 권고함.
- 2021년도 경영실적 평가 성과급 지급률은 <표 III-64>와 같음.

187)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중부발전(주), 한전KDN, 한전KPS(주)

188) 2021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공기업은 (주)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대한석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공항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11개 기관임

〈표 III-64〉 2021년도 경영실적 평가 성과급 지급률(공기업·준정부기관)

(단위: %)

구분		기준	S	A	B	C	D~E	
공기업	기관장	(기본연봉 대비)	100	80	60	40	0	
			100~0					
	상임이사·감사	(기본연봉 대비)	80	60	48	32	0	
				80~0				
	직원	(월기본급 대비)	250	200	150	100	0	
				250~0				
준정부기관	기관장	(기본연봉 대비)	60	48	36	24	0	
			60~0					
	상임이사·감사	(기본연봉 대비)	60	48	36	24	0	
				60~0				
	직원	(월기본급 대비)	100	80	60	40	0	
				100~0				
舊정부투자기관 (‘83~‘06) 직원	직원	(월기본급 대비)	300	240	180	120	0	
				300~0				

자료: 기획재정부,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보도자료, 2022. 6. 20.을 참고하여 작성

나.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¹⁸⁹⁾

1)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개요

-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공공서비스의 실질적 수요자인 고객이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만족도 형태로 평가함으로써, 공급자 중심의 경영실적평가를 보완하고자 실시되고 있음.
-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1999년부터 도입되었으며, 매년 기획재정부가 공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된 후 추진함.
- 도입 당시에는 구 정부투자기관¹⁹⁰⁾만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나, 2004년에는 구 정부산하기관으로, 2005년에 각 부처 자율혁신기관¹⁹¹⁾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대상이 확대됨.

189) 기획재정부, 「2021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기본계획(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2021. 7. 29. 및 「2021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보도자료, 2022. 4. 12. 참고

190) 구 정부투자기관의 대부분이 현재 공기업에 해당함

191) 부처 자율혁신기관의 대부분이 현재 기타공공기관에 해당함

- 2011년도부터는 직접고객 외에 일반 국민의 공공기관 평가를 반영하기 위해 ‘국민 체감도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2018년도부터는 ‘사회적 가치 기여도 조사’로 대체됨.
-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2007년부터 「공운법」 제13조 제2항 및 제3항과 시행령 제17조 제1항과 제3항에 근거해 실시됨.
 - 또한 「공운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공공기관이 공시해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표 III-65〉 「공운법」 제13조

제13조(고객현장과 고객만족도 조사) ①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고객현장을 제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1. 기본 임무
2.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바람직한 서비스의 수준
3.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불만처리, 시정 절차 및 배상 등의 책임
4. 제공하는 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노력 및 계획 등

②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은 그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객현장을 제정하여 공표하거나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 고객현장의 제정·공표, 고객만족도 조사의 절차·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고객만족도 조사는 주관기관에 따라 ‘기획재정부 주관 통합조사’와 ‘주무부처 주관 조사’로 구분되어 시행됨.
 - ‘기획재정부 주관 통합조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전체 및 기타공공기관 중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일부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2021년 기획재정부 주관 통합 고객만족도 조사는 250개 기관이 대상임.¹⁹²⁾
 - ‘주무부처 주관조사’는 기타공공기관 중 국민생활과 밀접성이 낮거나 기관 규모가 작아 통합조사의 실익이 부족한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2021년 주무부처 주관 고객만족도 조사 대상기관은 82개임.¹⁹³⁾
 - 출연연구기관, 30인 미만의 소규모 기관 등이 주무부처 주관조사의 대상이 됨.

192) 2021년 공공기관 기준임(2022년 공공기관 기준 247개)

193) 2021년 공공기관 기준임(2022년 공공기관 기준 83개)

- 2021년에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12개)¹⁹⁴도 예산 확보 등 고객만족도 조사 관련 업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주무부처 주관조사를 수검하게 됨.
 - 공공기관 중 주된 고객이 중앙행정기관이거나 불특정 외국인 또는 모회사 등으로 고객 형성이 미흡한 기관(18개)은 고객만족도 조사대상에서 제외함.
 - 한국전력공사가 모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주) 등 6개 발전자회사(공기업), 외국인이 주된 고객인 세종학당재단 등이 이에 해당함.
- 2015~2018년까지는 기능별로 그룹을 구분하여 그룹 내에서 상대평가 하는 방식을 적용했으나 2019년 상대평가를 완화하기 위해 그룹 분류를 폐지했으며 이러한 기조가 2021년까지 유지되고 있음.
- 2016년까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5개 그룹과 기타공공기관 4개 그룹으로 분류하였으나 고객만족도 조사 점수의 상향평준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7년부터 기능 중심으로 조사그룹을 개편함.¹⁹⁵
 - 기능과 주요사업에 따라 그룹을 세분화하여 동일 그룹 내 기관 간 동질성을 제고함으로써 상대평가를 강화함.
 - 2017년 개편된 그룹 분류에 따라 공공기관 간 서비스품질 경쟁 강화를 위해 그룹별 상대평가를 실시하여 S-A-B-C 등급을 1:4:4:1의 비율로 부여함.
 - 2019년 조사부터 기존의 서열등급 부여 방식이 기관 간 과다경쟁을 유발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지적을 고려하여 상대평가를 완화하고 절대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되면서 그룹 분류가 폐지됨.
-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2015년부터 PCSI 2.0 모델을 적용하고 있으며, 고객만족도 지수는 서비스 품질, 사회적 책임, 불일치의 3가지 선행요인과 만족도 측정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도출함.
- PCSI 2.0 모델은 종전 PCSI 모델을 개선한 것으로 두 모델을 비교하면 <표 III-66>과 같음.

194) 재단법인 건설기술교육원, 건축공간연구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립항공박물관,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한국재료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전MCS(주)

195) 공기업·준정부기관 10개 그룹(고용·복지, 문화(관람, 관광·예술·언론), 교육, 금융, 에너지, SOC, 공공안전, 산업, 연구 등)과 기타공공기관 9개 그룹(산업, 의료, 교육·연구, SOC, 공공안전, 문화(관람, 체육·언론·예술), 복지, 금융 등)으로 분류함

- 개인이 고객인 경우 서비스 환경 품질에 대해 조사하며, 법인이 고객인 경우 관계 여건 품질에 대해 조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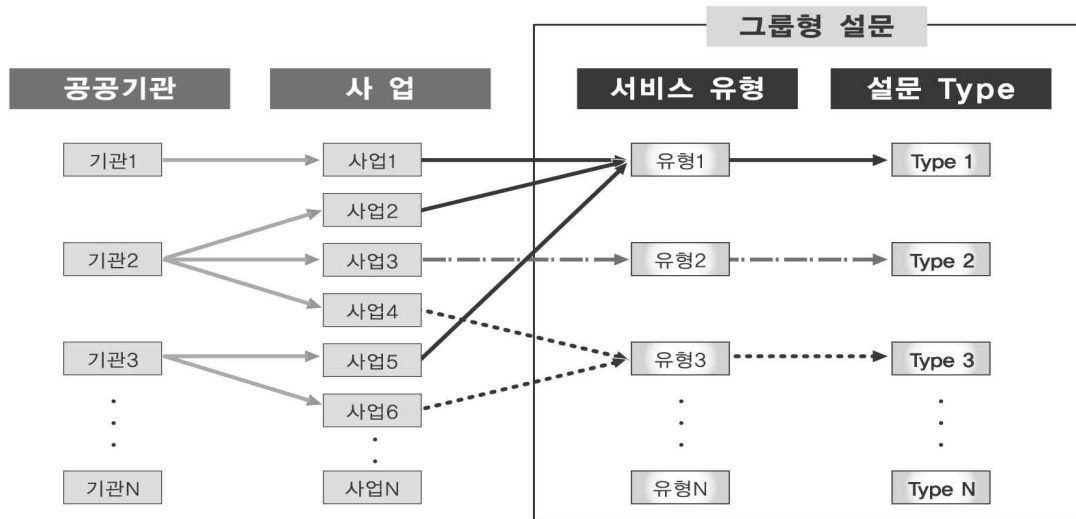
〈표 III-66〉 PCSI 모델과 PCSI 2.0 모델 비교

구 분		PCSI	PCSI 2.0		
서비스품질 모형	서비스상품 품질	편익성	본원적 문제해결		
		전문성	서비스 효익성		
		혁신성	서비스 완결성		
	서비스전달 품질	지원성	인적상호작용		
		공감성	커뮤니케이션		
		대응성	고객케어		
	서비스환경 품질	공통	개인고객용	법인고객용	
		쾌적성	물리적 환경		협력
		편리성	제도/절차/시스템환경		상호호혜
		심미성	인적자원 역량환경		관계 동등성
사회품질	청렴성	-			
	공익성	-			
	안정성	-			
사회적책임 모형	사회적책임	-	정책타당성		
		-	지속가능성		
		-	윤리성		
서비스 비교평가 모형	불일치	-	기대 대비 비교		
		-	이상점 대비 비교		
		-	다른 기관 대비 비교		
고객만족 모형	전반적 만족	절대적 만족	-		
		상대적 만족	인지적 만족	욕구 충족	
		감정적 만족		체감 만족	
	요소만족	서비스 상품만족	감정적 만족	긍정적 감정	
		서비스 전달만족		부정적 감정	
		서비스 환경만족	-		
사회적만족	사회적 책임만족	-			
성과모형	기관성과	신뢰	신뢰		
		지지			
		인식전환			
	사회성과	국민행복	국민행복		
		국가발전			

자료: 기획재정부, 「2016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기본계획(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16. 7. 1.

- 2017년까지는 전체 기관이 공통 설문문항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2018년 조사부터는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여 설문을 다양화하였으며 2021년 조사까지 유지됨.
- 2017년까지 유지된 설문지는 기관 설문 유형을 개인과 법인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조사 대상 기관별, 사업별 특수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 2018년 변경된 설문지는 공공서비스의 특징을 반영하여 이용 동기(자발·비자발), 서비스 형태(유형·무형), 이용 목적(과정지향·결과지향) 등에 따라 8종류로 세분화함으로써 조사대상자의 응답 정확도를 제고하고자 함.

[그림 III-32] 고객만족도 조사 설문개편(2018년)



자료: 기획재정부, 「2018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기본계획(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18. 8. 24.

- 기획재정부는 매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일괄 발표하고, 알리오시스템¹⁹⁶⁾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조사결과는 경영실적평가의 국민소통 지표에 반영하고 있음.
-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가 경영실적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고객만족도 조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음.
 -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국민소통 지표로 전체 100점에서 0.5점을 반영하고 있음.

196)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39.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통해 공개함

- 2017년까지는 전체 100점에서 2점 반영되던 것을 2018년부터 1점으로 축소하였고, 2020년부터는 0.5점으로 축소됨.
- 기타공공기관은 주무부처의 경영실적평가에서 국민평가(고객만족도) 지표로 반영하고 있으나 주무부처에 따라 지표와 가중치를 달리 적용함.

〈표 III-67〉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통합조사 경영실적평가 반영안

$$\text{국민소통지수} = (0.8 \times \text{고객만족도지수}) + (0.2 \times \text{사회적가치 기여도지수})$$

* 사회적가치 기여도지수가 없는 경우 결측 처리

자료: 기획재정부, 「2021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기본계획(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1. 7. 29.

2) 2021년 고객만족도 조사제도 개선사항

- 2021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화조사를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제고를 위한 청렴도 조사항목 신설 및 부정행위에 대한 규정 마련에 중점을 둠.
 -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의 전화조사 비중은 과거 2017~2019년 약 78.7%, 2020년 85%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2021년에는 90% 이상을 목표로 함.
 - 또한, 2021년에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청렴도' 조사항목을 신설함.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등으로 공공부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됨을 고려하여 공공기관의 윤리경영 강화를 위한 청렴도 항목을 신설함.
- 고객만족도 조사 시 발생하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부정행위 기관 및 조사업체에 대해 부정행위에 대한 패널티 부여 기준을 마련함.
 - 부정행위가 적발된 공공기관은 해당연도 경영실적평가 '국민소통지표(0.5점)'를 0점 처리함.
 - 부정행위에 연루된 조사업체는 향후 1년간 조사업체 선정을 위한 기술평가 시 선정에서 제외하는 패널티를 부여함.
 - 부정행위 연루 여부의 판단은 감사원·소관부처 감사 또는 경찰 조사 결과 부정행위 연루가 확인된 경우 등에 해당함.

- 기술평가 시 선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은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해 1년간 입찰 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하나, 기획재정부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에 따라 직접적인 입찰 제한은 불가능함.

3) 2021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2021년도 고객만족도 조사 대상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표 Ⅲ-68>과 같음.
 - 2022년 기준 350개 공공기관 중 2021년도 고객만족도 조사대상 기관은 325개임.
 - 공기업·준정부기관 117개와 기타공공기관 208개가 이에 해당함.
 - 기획재정부의 「2021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기본계획」에 기재된 조사대상 기관은 332개 기관이나 이 중 2개 기관¹⁹⁷⁾이 2022년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되었으며 2개 기관이 1개 기관으로 통합되고¹⁹⁸⁾ 3개 기관¹⁹⁹⁾은 기본계획 발표 이후 조사대상에서 제외됨.
 - 2022년 공공기관(350개) 중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2021년도 통합 고객만족도 조사를 수검한 기관은 244개 기관으로 수검기관 전체의 75.1%를 차지함.
 - 25개 공기업, 92개 준정부기관, 그리고 127개 기타공공기관이 이에 해당함.
 - 2021년도 주무부처 주관 고객만족도 조사를 수검한 81개 기관은 모두 기타공공기관으로, 24.9%를 차지함.
 - 2022년 공공기관(350개) 중 2021년도 고객만족도 조사를 수검하지 않은 기관은 총 25개 기관임.
 - 2021년도 고객만족도 조사 미수검 기관 중 18개 기관은 「2021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기본계획」에 따라 조사대상에서 제외됨.
 - 기획재정부 통합조사 대상 기관 중 국립중앙의료원, 국제방송교류재단 및 그랜드코리아레저(주)는 고객 특성이 조사에 적합하지 않거나 코로나19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가능 등의 사유로 기획재정부 고객만족도 조사 기술평가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본계획 발표 이후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주무부처 주관 조사 대상 기관 중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은 기본계획 발표 이후 조사대상에서 제외됨.

197) 아시아문화원, 한국예탁결제원

198)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2021년 9월 통합되어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새롭게 출범함

199) 국립중앙의료원, 국제방송교류재단, 그랜드코리아레저(주)

- 2022년 공공기관 지정 시 신규로 지정된 3개 기관²⁰⁰⁾은 2021년도 고객만족도 조사를 수검하지 않음.

〈표 III-68〉 2021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대상기관 현황

(단위: 개)

구 분	조사 미수검 기관 현황						조사 수검 기관 현황		
	합계	조사 제외	조사 유예	신규 지정	수시 지정	합계	기재부 통합조사	주무부처 조사	
공 기 업	시장형	15	6	6	0	0	9	9	0
	준시장형	21	5	5	0	0	16	16	0
	소 계	36	11	11	0	0	25	25	0
준 정 부 기 관	기금관리형	13	0	0	0	0	13	13	0
	위탁집행형	81	2	2	0	0	79	79	0
	소 계	94	2	2	0	0	92	92	0
기타공공기관	220	12	9	0	3	0	208	127	81
전 체	350	25 (100%)	22 (88.0%)	0 (0.0%)	3 (12.0%)	0 (0.0%)	325 (100%)	244 (75.1%)	81 (24.9%)

주: 1. 2022년 1월 지정된 공공기관(350개)을 대상으로 2021년도 고객만족도 조사 미수검 사유와 조사 주관기관 현황을 정리함

2. 신규지정 및 수시지정은 2022년 중 발생한 건을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39.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항목의 기관별 공시자료(2022. 7. 26.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 2022년 공공기관 기준으로 2021년도 고객만족도 조사 대상기관을 조사 주관기관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표 III-69>와 같음.
-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통합 고객만족도 조사를 수검한 기관 중 4개 기관은 2019년 신규로 지정된 기관으로 2020년에는 주무부처 주관 조사 대상이었으나 2021년도 조사부터 기획재정부 주관 통합조사로 편입됨.
 - (재)축산환경관리원, 아동권리보장원, 재단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가 이에 해당함.
- 2021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를 수검한 325개 기관 중 고객만족도 조사를 최초로 수검하는 기관은 9개 기관임.
 - 최초 수검 9개 기관 중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립항공박물관,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재단법인 건설기술교육원,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한전MCS(주) 등 8개 기관은 2021년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임.

200)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통합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새롭게 출범함에 따라 2021년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통합 기관으로 조사를 최초 수집함.

〈표 Ⅲ-69〉 2021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대상기관(2022. 4월 기준)

구분	기관명
기획 재정부 주관 통합 조사 (244개)	<p>(공기업) (주)강원랜드, 대한석탄공사,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식회사 에스알,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양환경공단</p> <p>(준정부기관)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우체국물류지원단,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무원연금공단, 국가철도공단,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안전관리원,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도로교통공단, 독립기념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서민금융진흥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청자미디어재단, 신용보증기금,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예금보험공사,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관광공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p>

〈표 III-69〉의 계속

구분	기관명
기획 재정부 주관 통합 조사 (244개)	<p>(기타공공기관) (재)APEC기후센터, (재)국제원산지정보원,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우체국시설관리단, (재)축산환경관리원, (주)공영홈쇼핑,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건설근로자공제회, 게임물관리위원회,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광주과학기술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립부산과학관, 국립암센터,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노사발전재단,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적십자사, 대한체육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수자원환경산업진흥(주), 새만금개발공사,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식품안전정보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아동권리보장원,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예술의전당,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울산과학기술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재단법인 국악방송,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재단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략물자관리원, 전북대학교병원, 전쟁기념사업회, 제주대학교병원, 주택관리공단(주),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은행,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태권도진흥재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재단,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벤처투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은행,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잡월드,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향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해양진흥공사, 한식진흥원, 환경보전협회</p>
주무 부처 주관 조사 (81개)	<p>(기타공공기관)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88관광개발(주), 건축공간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항공박물관,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전직교육원, 국토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p>

〈표 III-69〉의 계속

구분	기관명
주무 부처 주관 조사 (81개)	동북아역사재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재단법인 건설기술교육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외동포재단,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부법무공단,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한국핵융합연구원, 한전MCS(주), 항공안전기술원
조사 미수검 기관 (25개)	(공기업) (주)한국가스기술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중부발전(주), 한전KDN, 한전KPS(주) (준정부기관)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기타공공기관) 국립중앙의료원, 세종학당재단,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코레일테크(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투자공사,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주: 1. 2022년 1월 지정된 공공기관(350개)을 대상으로 하며 기관 유형은 2022년 공공기관 유형을 기준으로 함
 2. 밑줄 처리된 기관은 2021년 고객만족도 조사 최초 수검 기관으로 2021년 신규로 지정되었거나 2개 기관이
 1개 기관으로 통합되어 통합 기관(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새롭게 출범한 기관임
 자료: 기획재정부, 「2021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기본계획(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1. 7. 29. 및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39.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항목의 기관별 공시자료(2022. 7. 26.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 조사를 수검한 325개 공공기관에 대한 2021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등급을 살펴 보면, 다음의 <표 III-70>과 같음.
 - 기획재정부 주관 통합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는 2018년 조사까지 수준등급과 더불어 그룹별 상대등급을 발표하였으나 2019년 조사부터 상대평가를 완화하고 절대평가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편으로 상대등급은 발표하지 않음.
 - 그룹분류가 폐지됨에 따라 그룹별 상대등급 부여도 폐지됨.
 - 2020년 조사부터 목표달성도에 따라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하는 점수기준을 우수/보통/미흡 3단계로 구분하여 발표하였으며, 알리오시스템 공시를 위한 절대등급은 기존 4단계 구분을 유지함.

- 2021년 조사결과를 4단계 절대등급에 따라 분석하면 ‘우수’ 기관이 60개, ‘양호’ 기관이 151개, ‘보통’인 기관이 85개, ‘미흡’ 기관은 29개임.
 - 2021년 최초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수검한 9개 기관 중 3개 기관은 ‘우수’, 5개 기관은 ‘양호’, 1개 기관은 ‘보통’인 것으로 나타나 최초 수검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미흡’ 기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립항공박물관, 한전MCS(주)는 고객만족도 조사 최초 수검 기관이나 고객만족도 등급이 ‘우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양호’ 및 ‘보통’ 수준인 기관이 전체의 72.7%(236개)를 차지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 수준이 전반적으로 양호함을 확인할 수 있음.
 - 최하위 수준인 ‘미흡’에 해당하는 기관은 전체 325개 기관 중 29개 기관으로 8.9%를 차지함.
 - ‘미흡’인 기관 중 20개 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미흡’인 기관 전체의 69.0%를 차지함.
 - ‘미흡’인 기관 중 공기업은 4개 기관으로 (주)강원랜드,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에 해당하며, 준정부기관은 5개 기관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재정정보원임.

〈표 III-70〉 2021년도 고객만족도 수준 등급별 분포

구분	기관명
<p>우수 (60개))</p>	<p>(공기업) 대한석탄공사,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수자원공사</p> <p>(준정부기관) 국가철도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기술보증기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도로교통공단, 독립기념관,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복지진흥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환경공단</p> <p>(기타공공기관)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립부산과학관, 국립항공박물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방기술품질원,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에너지경제연구원, 전쟁기념사업회, 정부법무공단,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재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문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향로표지기술원, 한전MCS(주), 환경보전협회</p>
<p>양호 (151개))</p>	<p>(공기업) 울산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조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해양환경공단</p> <p>(준정부기관)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우체국물류지원단,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공무원연금공단, 국립생태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안전관리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서민금융진흥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시청차미디어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창업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학재단,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p> <p>(기타공공기관)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재)우체국시설관리단,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수자원환경산업진흥(주), 건축공간연구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암센터,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국방과학연구소, 국토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한적십자사, 동북아역사재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p>

〈표 III-70〉의 계속

구분	기관명
<p>양호 (151개)</p>	<p>산업연구원, 새만금개발공사,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예술의전당,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재단법인 건설기술교육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재외동포재단, 전남대학교병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중소기업은행,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유통(주),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벤처투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은행,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잡월드,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p>
<p>보통 (85개)</p>	<p>(공기업)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마사회,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p> <p>(준정부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공단, 근로복지공단, 농림수산물식품교육문화정보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p> <p>(기타공공기관) (재)APEC기후센터, (재)국제원산지정보원,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중소기업연구원, (재)축산환경관리원, 한식진흥원, 88관광개발(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게임물관리위원회,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노사발전재단,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식품안전정보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영화진흥위원회, 울산과학기술원, 재단법인 국악방송,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전북대학교병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p>

<표 III-70>의 계속

구분	기관명
보통 (85개)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해양진흥공사, 항공안전기술원
미흡 (29개)	<p>(공기업) (주)강원랜드,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p> <p>(준정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재정정보원</p> <p>(기타공공기관) (주)공영홈쇼핑, 건설근로자공제회, 광주과학기술원, 국방전직교육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아동권리보장원, 영상물등급위원회, 재단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전략물자관리원, 제주대학교병원, 주택관리공단(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장애인개발원</p>

주: 1. 고객만족도 조사 주관기관(기획재정부 또는 주무부처)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주관기관별 조사에서 측정된 고객만족도 등급을 기재함
 2. 2022년 1월 지정된 공공기관 중 2021년 고객만족도 조사를 수검한 325개 기관을 대상으로 함 (2022년 신규 지정기관, 2021년 고객만족도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기관은 불포함)
 3. 밀줄 처리된 기관은 고객만족도 조사 최초 수검기관(9개)임. 이 중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통합하여 출범한 기관으로 2021년 통합 기관으로는 고객만족도 조사를 최초 수검함
 자료: 기획재정부, 「2021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보도자료, 2022. 4. 12.와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39. 고객만족도조사결과' 항목의 공시자료(2022. 7. 26.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의 기관유형별 등급 분포는 <표 III-71>과 같음.
 - 공기업 유형은 고객만족도가 '우수' 등급인 기관의 비율이 다른 두 유형에 비해서 높아 고객만족도 수준이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음.
 - 2021년도 고객만족도 조사를 받은 25개 공기업 중 '우수' 등급인 기관이 7개 (28.0%) 이고 '양호' 등급인 기관도 10개(40.0%)로, '양호' 이상인 기관이 전체의 68.0%를 차지함.
 - 공기업 유형 중 고객만족도 등급이 '보통' 등급인 기관은 4개 기관이며, '미흡' 등급인 기관도 4개 기관임.
 - 2021년도 고객만족도 조사를 수검한 준정부기관은 92개 기관이며, 이 중 69개 기관(75.0%)이 '양호' 수준 이상임.

- '우수' 등급인 준정부기관은 22개로 전체의 2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양호' 등급인 준정부기관은 47개로 전체의 51.1%를 차지함.
- 다른 두 유형에 비해 '양호' 등급인 기관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18개 기관(19.6%)이 '보통' 수준이며 최하위 등급인 '미흡'에 해당하는 기관은 5개 기관으로 전체의 5.4%를 차지함.
- 2021년 고객만족도를 수검한 기타공공기관은 208개 기관으로 전체의 60.1%의 기관이 '양호' 수준 이상임.
 - '우수' 등급인 기타공공기관은 31개인 14.9%이며, '미흡' 등급인 기관은 20개 기관으로 9.6%를 차지함.
- 2021년도 고객만족도 조사를 수검한 대부분의 기관(236개, 72.7%)이 '양호'와 '보통' 등급에 분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최상위 등급에 분포한 공공기관은 60개로 18.5%, 최하위 등급인 공공기관은 29개로 8.9%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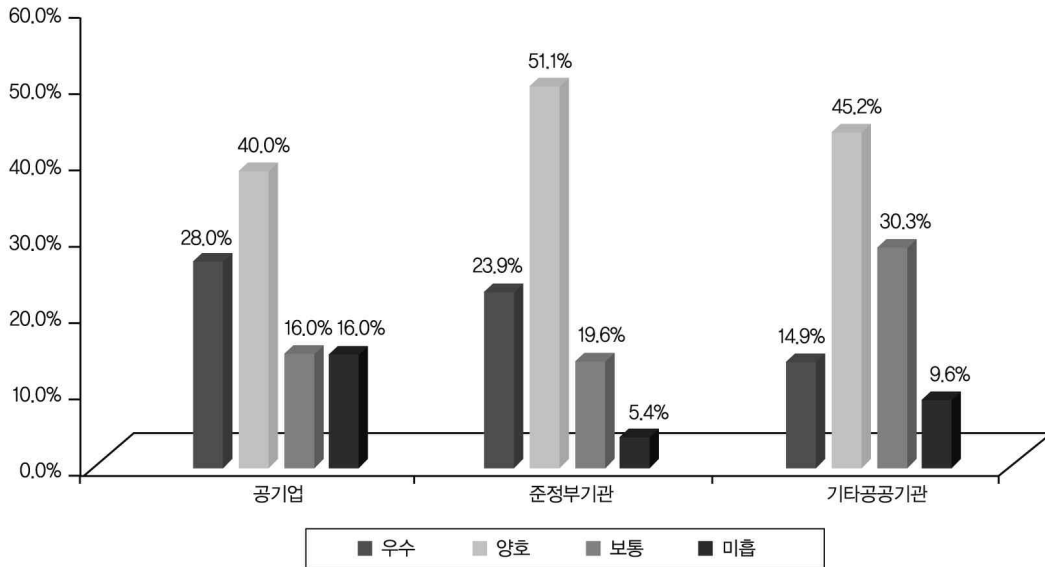
〈표 III-71〉 2021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요약(수준 등급)

(단위: 개)

구 분			조사대상	고객만족도 수준 등급			
				우수	양호	보통	미흡
공 기 업	시장형	15	9	3	3	2	1
	준시장형	21	16	4	7	2	3
	소 계	36	25	7	10	4	4
준 정 부 기 관	기금관리형	13	13	6	5	2	0
	위탁집행형	81	79	16	42	16	5
	소 계	94	92	22	47	18	5
기타공공기관		220	208	31	94	63	20
합 계		350	325 (100%)	60 (18.5%)	151 (46.5%)	85 (26.2%)	29 (8.9%)

주: 2022년 1월 지정된 공공기관(350개)을 대상으로 하며 기관 유형은 2022년 유형을 기준으로 구분함
 자료: 기획재정부, 「2021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2022. 4. 12.와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39.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항목의 공시자료(2022. 7. 26.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그림 Ⅲ-33] 2021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수준 등급 분포



자료: 기획재정부, 「2021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2022. 4. 12.와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39.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항목의 공시자료(2022. 7. 26.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 2020년도 고객만족도 수준과 2021년도 수준을 비교해 보면, 전년도 등급을 유지한 기관이 67.1%(204개)를 차지하여 전반적으로 고객만족도 수준의 변화가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음(<표 Ⅲ-72>).
- 전년도와 동일한 등급을 유지한 기관 중 공기업은 17개, 준정부기관은 60개, 기타 공공기관은 127개임.
- 고객만족도 수준이 2020년도에 비해 개선된 기관은 59개로 분석대상기관(304개)의 19.4%를 차지함.
 - 1개 공기업, 19개 준정부기관 및 39개 기타공공기관이 전년도보다 고객만족도 등급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고객만족도 등급이 개선된 59개 기관 중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기초과학연구원, 여수광양항만공사, 코레일유통(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2단계 상승함.
 - 이 외 54개 기관은 고객만족도 등급이 전년 대비 1단계 상승함.
- 2020년도에 비해 고객만족도 수준이 악화된 기관은 41개로 전체의 13.5%를 차지함.
 - 4개 공기업, 11개 준정부기관 및 26개 기타공공기관이 이에 해당함.
 - 이 중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장애인개발원은 2단계 하락하였으며, 나머지 38개 기관은 1단계 하락함.

- 2020년도 대비 2021년도 고객만족도 수준 등급 변동 현황 및 내역은 <표 III-72>, <표 III-73>, <표 III-74>와 같음.

<표 III-72> 전년 대비 2021년도 고객만족도 수준 등급 변동 비교

(단위: 개)

구 분			2021년도 조사대상기관	2020년도 대비 등급 개선수준			
				분석 대상기관	상승 (▲)	유지 (-)	하락 (▼)
공 기 업	시장형	15	9	7	0	7	0
	준시장형	21	16	15	1	10	4
	소 계	36	25	22	1	17	4
준 정 부 기 관	기금관리형	13	13	13	4	9	0
	위탁집행형	81	79	77	15	51	11
	소 계	94	92	90	19	60	11
기타공공기관		220	208	192	39	127	26
전 체		350	325	304 (100%)	59 (19.4%)	204 (67.1%)	41 (13.5%)

주: 1. 기관 유형은 2022년 유형을 기준으로 구분함

2. 조사대상기관(325개)은 2022년 1월 지정된 공공기관 중 기획재정부 또는 주무부처가 실시한 2021년 고객만족도 조사를 수검한 기관임. 분석대상기관(304개)은 2022년 1월 지정된 공공기관 중 2020년 및 2021년 고객만족도 조사를 모두 수검한 기관임(2021~2022년 신규지정기관 및 지정해제기관, 2021년 고객만족도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기관 등은 불포함)

자료: 기획재정부, 「2021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2022. 4. 12.와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39.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항목의 공시자료(2022. 7. 26.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표 III-73> 전년 대비 2021년도 고객만족도 수준 등급 변동 현황

(단위: 개)

구 분	기관수 (304개)	변동폭		
		1단계	2단계	3단계
등급 상승	59 (19.4%)	54	5	0
등급 유지	204 (67.1%)	-	-	-
등급 하락	41 (13.5%)	38	3	0

주: 2022년 1월 지정된 공공기관 중 2020년 및 2021년 고객만족도 조사를 모두 수검한 기관을 기준으로 분석(2021~2022년 신규 지정기관 및 지정 해제기관, 2021년 고객만족도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기관 등은 불포함)

자료: 기획재정부, 「2021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2022. 4. 12.와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39.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항목의 공시자료(2022. 7. 26.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표 III-74〉 전년 대비 2021년도 고객만족도 수준 등급 변동 내역

구분	기관명
등급 상승 (59개)	<p>(공기업) 여수광양항만공사</p> <p>(준정부기관)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국가철도공단,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독립기념관, 서민금융진흥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p> <p>(기타공공기관)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재)축산환경관리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립암센터, 국립해양박물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기초과학연구원, 노사발전재단,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에너지경제연구원, 예술의전당,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전남대학교병원, 정부법무공단, 중소기업은행,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유통(주),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국방연구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재단,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환경보전협회</p>
등급 유지 (204개)	<p>(공기업) (주)강원랜드, 대한석탄공사,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양환경공단</p> <p>(준정부기관) 공무원연금공단, 국립공원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안전관리원,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물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도로교통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시청자미디어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관광공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학재단,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p> <p>(기타공공기관)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우체국시설관리단, 중소기업연구원, 한식진흥원, (주)공영홈쇼핑, 수자원환경산업진흥(주), 88관광개발(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축공간연구원, 게임물관리위원회,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인자리진흥원,</p>

〈표 III-74〉의 계속

구분	기관명
등급 유지 (204개)	광주과학기술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전직교육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한적십자사, 대한체육회, 동북아역사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산업연구원, 새만금개발공사,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식품안전정보원, 영화진흥위원회,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울산과학기술원, 재단법인 국악방송,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재단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재외동포재단, 전략물자관리원, 전북대학교병원, 전쟁기념사업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택관리공단(주), 중소기업유통센터,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코레일로지스(주), 태권도진흥재단,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도박문제예방지유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벤처투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은행,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등급 하락 (41)	(공기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조폐공사 (준정부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생태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기타공공기관) (재)APEC기후센터, (재)국제원산지정보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 아동권리보장원, 영상물등급위원회,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제주대학교병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통계기술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해양조사협회

주: 2022년 1월 지정된 공공기관 중 2020년 및 2021년 고객만족도 조사를 모두 수검한 기관을 기준으로 분석 (2021~2022년 신규 지정기관 및 지정 해제기관, 2021년 고객만족도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기관 등은 불포함)
 자료: 기획재정부, 「2021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2022. 4. 12.와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39.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항목의 공시자료(2022. 7. 26.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 2019년부터 기획재정부 통합조사 대상 기관의 조사결과는 기관 사업별 목표달성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결과를 산출하여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하고 목표달성도 정도에 따라 우수-보통-미흡 3단계로 등급을 부여함.
 - 각 기관의 사업별 3년 평균 실적을 기초로 목표점수를 부여하고, 사업별 목표점수 달성 여부에 따라 기관의 목표달성도를 평가한 뒤,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보통-미흡 3단계로 등급을 부여함.
 - 2020년 조사에서는, 코로나19로 현장조사가 불가능한 사업이 기관 전체 사업의 70% 이상인 경우 목표달성도 평가에서 제외하였으나 2021년 조사에서는 목표점수 산출이 가능한 모든 기관의 목표달성도를 평가함.
 - 또한 2021년 조사에서는 기관별 달성도 점수 산출의 기준이 되는 사업별 목표달성에 따른 배점 차이를 확대하여 변별력을 강화함.
 - 기존 사업별 목표치 달성 시 1.0점 부여, 미달성 시 0.8점 부여하던 기준을 목표치 미달성 시 0.5점 부여로 하향 조정함.

- 2021년 조사결과, '우수' 등급인 기관은 41개, '보통'인 기관은 95개, '미흡'인 기관은 104개이며 4개 기관은 통합 조사 최초 대상 기관으로 목표달성도 평가에서는 제외함.²⁰¹⁾
 - '우수'는 기관의 모든 평가대상 업무에서 고객만족도가 과거보다 개선·유지된 경우로(목표달성도 100%), 공기업 6개, 준정부기관 14개, 기타공공기관 21개가 이에 해당함.
 - 특히, 9개 기관²⁰²⁾은 3년 연속 우수기관, 7개 기관²⁰³⁾은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지속적으로 고객에게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보통'은 '우수'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나 전체사업의 50% 이상 목표를 달성한 경우로, 공기업 8개, 준정부기관 35개, 기타공공기관 52개가 해당함.

201) 기획재정부 주관 통합조사 대상 기관으로 2021년 목표달성도 점수 결과가 산출된 기관은 기획재정부 보도 자료 「2021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2022. 4. 12.)」에 의하면 245개 기관이나 이 중 4개 기관은 2020년 주무부처 주관 조사 대상으로 2021년 통합조사 대상에 최초 포함되어 과거 목표치가 없어 목표달성도 평가에서는 제외되었으며 1개 기관(한국예탁결제원)이 2022년 지정 해제되어 총 240개 기관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함

202)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국민연금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제식물검역인증원, 한국벤처투자

203) 독립기념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울산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미흡’은 목표달성도가 50% 미만인 경우로, 공기업 11개, 준정부기관 43개, 기타 공공기관 50개가 해당함.
- 미흡기관(104개)에 대해서는 대국민 서비스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 이행실적을 점검할 예정임.

〈표 III-75〉 2021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목표달성도 등급별 분포

구분	기관명
【우수】 (41개)	<p>(공기업)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수자원공사</p> <p>(준정부기관)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국가철도공단, 국립공원공단, 국민연금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도로교통공단, 독립기념관, 신용보증기금,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환경공단</p> <p>(기타공공기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립부산과학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울산과학기술원, 전쟁기념사업회, 코레일로지스(주), 한국과학기술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벤처투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한의학진흥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진흥공사</p>
【보통】 (95개)	<p>(공기업) (주)강원랜드, 대한석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가스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해양환경공단, 한국광해광업공단</p> <p>(준정부기관) 공무원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술보증기금,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시청자미디어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예금보험공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관광공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장학재단, 한국재정정보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p> <p>(기타공공기관) (재)국제원산지정보원, (재)우체국시설관리단,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한식진흥원, 수자원환경산업진흥원(주), 게임물관리위원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노사발전재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적십자사, 새만금개발공사,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영화진흥위원회, 예술의전당,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전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태권도진흥재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재단,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p>

〈표 III-75〉의 계속

구분	기관명
<p>【보통】 (95개)</p>	<p>한국산업은행,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잡월드,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환경보전협회</p>
<p>【미흡】 (104개)</p>	<p>(공기업) 주식회사 에스알,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p> <p>(준정부기관)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우체국물류지원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생태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안전관리원, 근로복지공단,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보육진흥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p> <p>(기타공공기관) (재)APEC기후센터,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주)공영홈쇼핑,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건설근로자공제회,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광주과학기술원, 국립광주과학관, 국립암센터,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식품안전정보원, 영상물등급위원회, 전북대학교병원, 재단법인 국악방송,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전략물자관리원, 제주대학교병원, 주택관리공단(주),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은행, 충남대학교병원,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유통(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해양조사협회</p>
<p>달성도 평가 제외 (4개)</p>	<p>(기타공공기관) 아동권리보장원, (재)축산환경관리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재단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p>

자료: 기획재정부, 「2021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2022. 4. 12.와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39.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항목의 공시자료(2022. 7. 26.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표 III-76〉 2021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요약(목표달성도)

(단위: 개)

구 분			조사대상	고객만족도 목표달성도		
				우수	보통	미흡
공 기 업	시장형	15	9	2	3	4
	준시장형	21	16	4	5	7
	소 계	36	25	6	8	11
중 정 부 기 관	기금관리형	13	13	3	5	5
	위탁집행형	81	79	11	30	38
	소 계	94	92	14	35	43
기타공공기관		220	123	21	52	50
합 계		350	240 (100.0%)	41 (17.1%)	95 (39.6%)	104 (43.3%)

자료: 기획재정부, 「2021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2022. 4. 12.와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39.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항목의 공시자료(2022. 7. 26.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 2021년 각 기관의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수준등급과 목표달성도를 기준으로 비교 하면 수준등급이 우수한 기관 중 3개 기관은 목표달성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수준등급이 우수한 기관 중 목표달성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국립광주과학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3개 기관은 조사의 절대점수는 높으나 해당 기관의 3개년 평균 실적을 기준으로 한 목표점수에는 미치지 못함.
- 수준등급이 미흡한 기관 중 목표달성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 기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준등급은 미흡이나 절대점수는 보통 수준인 기관은 3개 기관으로 (주)강원랜드,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재정정보원이 해당함.

〈표 III-77〉 2021년도 수준등급과 목표달성도 비교

(단위: 개)

수준등급	기관수 (240개)	목표달성도		
		우수	보통	미흡
우수	47 (19.6%)	26	18	3
양호	94 (39.2%)	9	49	36
보통	73 (30.4%)	6	25	42
미흡	26 (10.8%)	0	3	23

자료: 기획재정부, 「2021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2022. 4. 12.와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39.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항목의 공시자료(2022. 7. 26.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 2020년도 고객만족도 목표달성도와 2021년도 목표달성도를 비교해 보면, 전년도 등급을 유지한 기관이 61.1%(116개)를 차지하여 전반적으로 고객만족도 수준의 변화가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음(<표 Ⅲ-78>).
- 전년도와 동일한 등급을 유지한 기관 중 공기업은 11개, 준정부기관은 57개, 기타 공공기관은 48개임.
- 고객만족도 목표달성도가 2020년도에 비해 개선된 기관은 33개로 분석대상기관(190개)의 17.4%를 차지함.
 - 5개 공기업, 12개 준정부기관 및 16개 기타공공기관이 전년도보다 고객만족도 목표달성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고객만족도 목표달성도가 개선된 33개 기관 중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여수광양항만공사, 코레일로지스(주), 한국부동산원, 한국해양진흥공사는 2단계 상승함.
 - 이 외 27개 기관은 고객만족도 목표달성도가 전년 대비 1단계 상승함.
- 2020년도에 비해 고객만족도 목표달성도가 악화된 기관은 41개로 전체의 21.6%를 차지함.
 - 1개 공기업, 15개 준정부기관 및 25개 기타공공기관이 이에 해당함.
 - 이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해양조사협회는 2020년 '우수'에서 2021년 '미흡'으로 2단계 하락하였으며, 나머지 31개 기관은 1단계 하락함.
- 2020년도 대비 2021년도 고객만족도 목표달성도 변동 현황은 <표 Ⅲ-78>, <표 Ⅲ-79>와 같음.

〈표 III-78〉 전년 대비 2021년도 고객만족도 목표달성도 비교

(단위: 개)

구 분			2021년도 조사대상기관	2020년도 대비 목표달성도 개선수준			
				분석 대상기관	상승 (▲)	유지 (-)	하락 (▼)
공기업	시장형	15	9	6	1	5	0
	준시장형	21	16	11	4	6	1
	소 계	36	25	17	5	11	1
준정부 기관	기금관리형	13	13	13	1	11	1
	위탁집행형	81	79	71	11	46	14
	소 계	94	92	84	12	57	15
기타공공기관		220	208	89	16	48	25
전 체		350	325	190 (100%)	33 (17.4%)	116 (61.1%)	41 (21.6%)

주: 1. 기관 유형은 2022년 유형을 기준으로 구분함

2. 조사대상기관(325개)은 2022년 1월 지정된 공공기관 중 기획재정부 또는 주무부처가 실시한 2021년 고객만족도 조사를 수검한 기관임. 분석대상기관(190개)은 2022년 1월 지정된 공공기관 중 2020년 및 2021년 고객만족도 조사를 모두 수검한 기관 중 목표달성도 평가를 받은 기관임(2021~2022년 신규지정기관 및 지정해제기관, 2021년 고객만족도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기관, 2020~2021년 조사를 수검하였으나 목표달성도 평가에서는 제외된 기관 등은 불포함)

자료: 기획재정부, 「2021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2022. 4. 12.와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39.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항목의 공시자료(2022. 7. 26.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함

〈표 III-79〉 전년 대비 2021년도 고객만족도 목표달성도 변동 내역

구분	기관명
등급 상승 (33개)	(공기업)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부동산원, 해양환경공단
	(준정부기관)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국가철도공단,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신용보증기금,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환경공단
	(기타공공기관) (재)우체국시설관리단, 노사발전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영화진흥위원회,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코레일로지스(주),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해양진흥공사, 환경보전협회
등급 유지 (116개)	(공기업) 대한석탄공사,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준정부기관) 공무원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독립기념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표 III-79〉의 계속

구분	기관명
등급 유지 (116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청자미디어재단,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관광공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학재단,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기타공공기관) 중소기업연구원, (주)공영홈쇼핑, 수자원환경산업진흥(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건설근로자공제회, 게임물관리위원회, 광주과학기술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한적십자사, 대한체육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영상물등급위원회, 예술의전당,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울산과학기술원, 전략물자관리원, 주택관리공단(주),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은행,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문화번역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벤처투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은행,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향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급 하락 (41개)	(공기업) 한국도로공사 (준정부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안전관리원, 기술보증기금,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기타공공기관) (재)APEC기후센터, (재)국제원산지정보원, (재)예술경영지원센터, 한식진흥원,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 식품안전정보원, 재단법인 국악방송,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한국문화재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해양조사협회

주: 2022년 1월 지정된 공공기관 중 2020년 및 2021년 고객만족도 조사를 모두 수검한 기관을 기준으로 분석 (2021~2022년 신규 지정기관 및 지정 해제기관, 2021년 고객만족도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기관 등은 불포함)
 자료: 기획재정부, 「2021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2022. 4. 12.와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39.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항목의 공시자료(2022. 7. 26.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다.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²⁰⁴⁾

1)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개요

-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공공의료기관 및 국공립대학 등을 대상으로 매년 청렴도 측정을 실시함.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12조(기능),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및 제27조의3(조사·평가 결과의 공개)에 근거하여 청렴도 측정을 실시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동 근거에 따라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 기능,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 권한을 가짐.
 - 청렴도는 각 기관의 주요 대민·대관업무의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청렴도와 소속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청렴도, 그리고 정책고객평가로 구성됨.
 - 청렴도 설문조사는 전화조사와 온라인(이메일, 모바일)조사를 병행하며 평가자가 조사방식을 선택하여 응답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함.
 - 종합청렴도 점수는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점수를 가중 평균한 후,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반영함.
 - 정책고객평가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및 공직유관단체 I·II유형에 한해 조사하되, 종합청렴도에는 반영하지 않고, 기관의 청렴정책 수립·시행에 참고할 수 있도록 기관에 세부 결과를 제공함.
 - 2021년도 모형부터는 변화된 환경과 국민 눈높이를 반영하여 외부청렴도의 부패 경험 항목과 내부청렴도의 이해충돌방지 관련 부패인식 항목을 신설했으며,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에 대한 평가를 강화함.
- 청렴도 측정 대상 기관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공공기관, 공공의료기관, 국공립대학, 지방의회 등 크게 4가지 그룹으로 구분하여 측정을 실시함.²⁰⁵⁾

204) 국민권익위원회, 「202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 2021. 7., 「202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21. 12., 「2021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결과」, 2021. 12., 「2021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21. 12. 및 기획재정부, 「2022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22. 1. 28. 참고

205) 국민권익위원회, 「202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 2021. 7., 「202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21. 12., 「2021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결과」, 2021. 12., 「2021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21. 12. 및 기획재정부, 「2022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22. 1. 28. 참고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가 포함되며, 「공운법」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대부분은 이 중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함.
 -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의 경우, 법인격을 갖춘 공공의료기관이 대상이 되며, 「공운법」상 공공기관 중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국공립대학병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등이 그 대상이 됨.
 - 2021년도 모형에서는 측정 기관을 축소하여 감염병 전담병원인 지방의료원과 대학병원 중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치과대학병원은 측정 대상에서 제외함.
 -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의 경우, 국공립대학 및 관련 법인이 대상이 되며, 「공운법」상 공공기관 중 교육기능을 수행하는 4개 과학기술원²⁰⁶⁾이 그 대상이 됨.
 - 2021년도 모형에서는 시책평가 대상인 12개 국립대학과 취약기관으로 지적된 4개 과학기술원으로 한정하여 측정함.
-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2021년도 청렴도 측정 대상 기관은 총 592개 기관으로, 이 중 162개 기관이 「공운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함.

〈표 III-80〉 2021년도 청렴도 측정 유형별 대상기관 분포

(단위: 개)

청렴도 측정 유형		청렴도 측정 대상 기관	「공운법」상 공공기관 (2022년도 기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중앙행정기관	47	-
	지방자치단체	243	-
	교육청	90	-
	공직유관단체	212	145
지방의회		82	-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13	13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16	4
합계		703	162

주: 총 217개 공직유관단체를 측정했으나, (재)우체국시설관리단,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테크(주) 등 5개 기관은 유효 표본 수 부족으로 종합청렴도 산정 시 제외함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2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 2021. 7., 「202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21. 12. 및 기획재정부, 「2022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22. 1. 28.을 참고하여 작성

206)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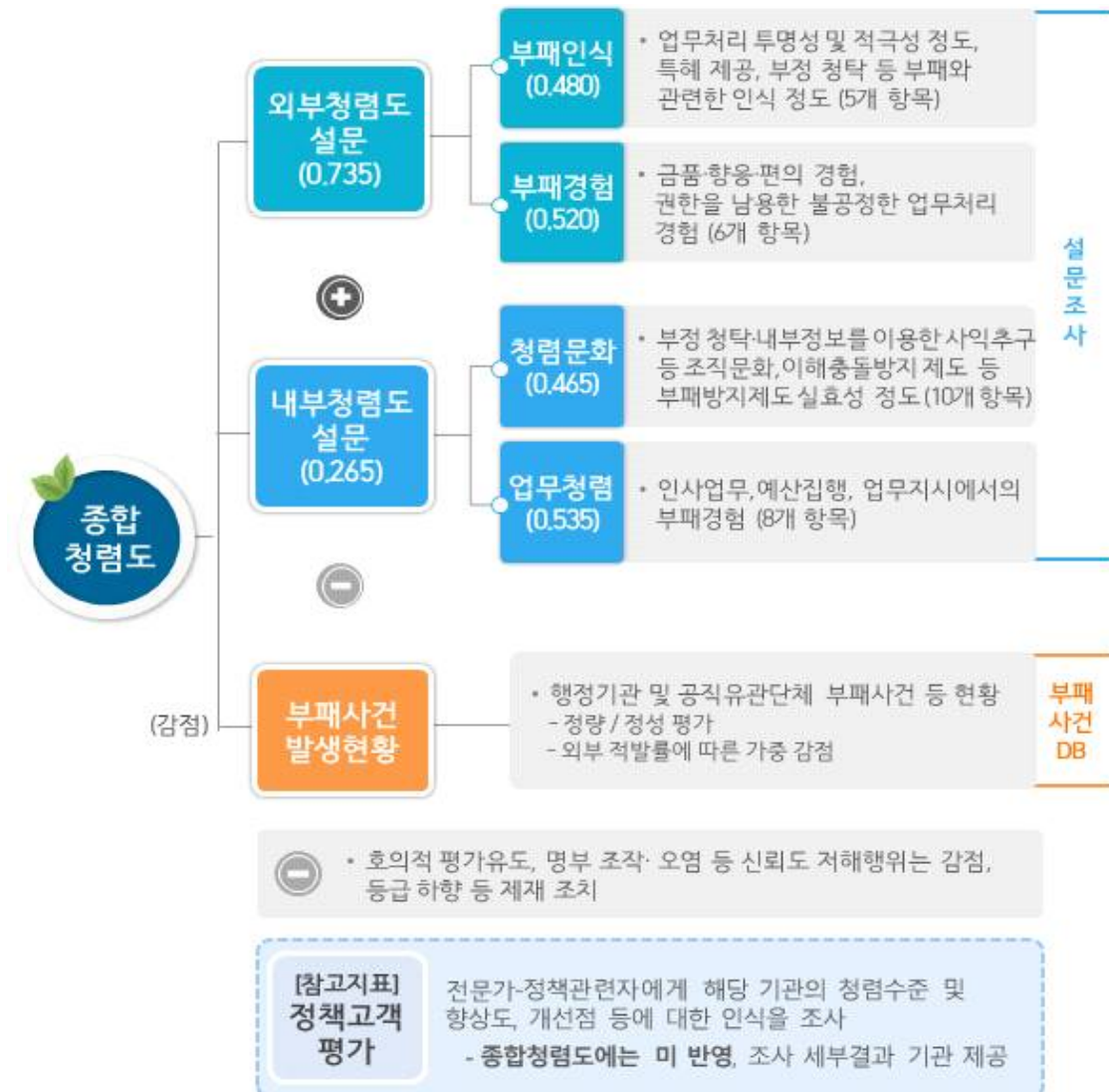
2) 2021년도 청렴도 측정 모형²⁰⁷⁾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은 설문조사 결과(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에 부패사건 발생 현황 감점을 적용하여 종합청렴도를 산출하며, 공공의료기관과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도 유사한 모델을 적용하되, 일부 기관 특성을 반영하고 있음.
- 청렴도 측정은 2002년 최초 시행 이후 두 차례(2008년, 2012년)의 개편을 통해 현재의 종합 청렴도 모형에 이르렀으며, 2020년도에는 기존에 종합 청렴도 산출 시 포함되었던 정책고객평가를 제외하는 등 일부 모형을 수정함.
 - 정책고객평가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I·II 유형에 국한하여 실시하되, 종합청렴도에는 반영하지 않고, 해당공공기관에 조사결과를 별도로 제공함.
- 종합청렴도 점수는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되, 부패사건 발생 현황에 대해서는 감점함.
 - 외부청렴도란 행정서비스의 고객인 국민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부패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대민업무일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민원인이, 대기관업무일 경우에는 상대 공직자가 평가자가 됨.
 - 내부청렴도란 소속직원이 내부고객의 입장에서 해당기관의 내부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진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내부 직원 등이 평가자가 됨.
- 202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은 부패관련 항목 신설 및 부패사건 감점 평가 강화 등 청렴도 제도 개편 추진에 따른 개편사항을 반영하였고, 측정범위를 합리화 하였으며, 소규모 기관에 대한 측정이 크게 줄어 기관유형 분류기준을 일부 조정하였음.
- 청렴도 측정 제도의 운영 성과와 제기된 의견 등을 망라하여 발표된 청렴도 측정 체계 개편방향에 따라 신규 측정항목을 발굴하고, 부패사건 감점 평가를 강화하였음.
 - 외부청렴도에 '권한을 남용한 부당한 업무처리 경험률' 항목을 신설하고, 내부 청렴도에 이해충돌방지 관련 부패인식 항목을 신설하는 등 환경변화와 국민의 눈높이를 반영한 신규 항목을 반영하였음.

207) 국민권익위원회, 「202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 2021. 7., 「202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21. 12., 「2021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결과」, 2021. 12., 「2021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21. 12. 및 기획재정부, 「2022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22. 1. 28. 참고

- 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유인할 수 있도록 경미한 부패사건은 정량평가, 고위직·조직적 부패사건은 정성평가를 통해 감점 평가를 강화하고, 기관장·고위직의 직무와 관련된 성 비위 사건을 신규 감점 대상으로 반영함.
- 기관·업무의 규모와 성격, 대국민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주요기관 위주로 측정하고,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여 측정이 곤란한 업무는 제외하였으며, 부패개연성이 있는 신규 업무를 발굴하는 등 측정범위를 합리화하였음.
 - 기관·업무의 성격,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행정기관은 전년과 같이 전수 측정하고, 공직유관단체는 일정규모 이상 주요기관을 측정함.
 - 도시·개발·시설관리·교통 관련 지방 공사·공단의 측정을 강화하였으며, 교육청의 학사운영 관련 업무는 전년에 이어 측정을 제외함.
- 공직유관단체 유형별 기관수가 보다 균등하게 분포될 수 있도록 공직유관단체 IV·V 유형의 기관규모 분류기준을 조정함.
 - 2020년 IV유형(정원 300명 이상 500명 미만), V유형(정원 300명 미만)에서 2021년 IV유형(정원 500명 미만)으로 기관유형 분류기준을 통합함.

[그림 III-34] 202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모형



주: 1. 종합청렴도 모형의 외부·내부 청렴도는 각 설문조사 결과를 의미함
 2. 공직유관단체 종합청렴도 산출 시에는 외부청렴도(0.763), 내부청렴도(0.237)를 가중합산함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2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21. 12.

□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은 계약, 환자진료, 내부업무, 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 등 설문조사 결과에 리베이트 등 부패사건 발생현황, 진료비 과다청구 현황을 감점 적용하여 종합청렴도를 산출함.

○ 2021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은 국립중앙의료원을 포함한 전체 공공의료기관 유형 내 등급 산정 방식으로 결과를 발표함.²⁰⁸⁾

208) 2020년은 44개 공공의료기관을 조사하여 국립대학병원 등(15개)과 국립·지방의료원(29개)으로 나누어 발표하였음

- 2021년도에는 설문 항목 신설을 통해 측정의 적절성을 제고 하였으며, 코로나19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공공의료기관의 상황을 고려하여 청렴도 조사를 진행함.
 -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상황을 반영하여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실효성 관련 항목을 신설하였고, 고위직·조직적 부패사건, 자체감사 등 자정활동이 미흡한 기관 등에 대한 감점 평가를 강화함.
 - 코로나19 확산으로 제기된 측정유예 의견에 따라 감염병 전담 병원인 지방의료원 등을 제외하고 금년 시책평가 대상이 되는 규모가 큰 13개 기관만 측정함.

[그림 Ⅲ-35] 2021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모형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21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21. 12.

-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은 일반 공공기관과 달리 강의·연구 등 내부 활동의 비중이 큰 대학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2012년도에 특화모형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음.
 - 과거의 청렴도 사업주기를 고려하여 4년제 국공립대학을 중심으로 측정하되 전문대학 및 교육대학은 부정기적으로 청렴도를 측정함.
 - 2018년도의 경우 교육대학을 측정 대상에 포함하였으나, 2019년도와 2020년도에는 4년제 국공립대학에 대해서만 청렴도 측정을 실시함.
 - 2021년도 청렴도 측정은 시책평가 대상인 12개 국립대학과 국회 등에서 취약기관으로 지적된 4개 과학기술원 등 16개 기관으로 한정하여 측정을 실시함.
 - 설문조사 결과는 계약, 연구, 행정, 조직문화제도 영역의 점수를 가중치에 따라 합산하고,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감점하여 종합청렴도를 산출함.
 - 계약영역은 대학과 계약업무를 경험한 입찰참가자를 포함한 외부민원인이 평가하며, 연구·행정·조직문화제도 영역은 교직원, 연구원, 조교 등 내부 구성원이 평가함.

- 2021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에서는 연고관계로 인한 특혜 제공을 항목에 반영하였고, 신규 항목을 발굴하여 변화된 부패환경을 반영하였으며, 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유인할 수 있도록 자정활동 미흡 기관 등에 대한 감점 평가를 강화함.
 - 기존 학사행정 항목은 '금품·향응·편의 수수'와 관련된 전통적 의미의 부패만을 반영하고 있어, 연고관계로 인한 특혜제공과 관련된 인식 항목을 신설함.
 - 연구 영역에 대학 연구활동 과정에서의 갑질 실태를 반영하고, 조직문화제도 영역에 이해충돌방지 관련 신규 항목을 반영함.
 - 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유인할 수 있도록 경미한 부패사건은 정량평가, 고위직·조직적 부패사건은 정성평가를 통해 감정 평가를 강화하고, 기관장·고위직의 직무와 관련된 성 비위 사건을 신규 감점 대상으로 반영함.

[그림 III-36] 2021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모형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21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결과」, 2021. 12.

3) 2021년도 청렴도 측정 대상²⁰⁹⁾

- 2022년도에 지정된 공공기관(350개) 중 2021년도 청렴도 측정을 수검한 기관은 총 162개 기관으로 전체 대비 46% 정도가 청렴도 측정의 대상이 됨.²¹⁰⁾
 - 36개 공기업, 69개 준정부기관 및 57개 기타공공기관이 청렴도 측정의 대상이 됨.
 - 162개 기관 중 145개 기관이 공직유관단체에 분류되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을 수검함.
 - 공공의료기관 및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의 대상이 되는 기관은 모두 기타공공기관에 해당함.

〈표 III-81〉 2021년도 청렴도 측정 대상 공공기관 분포

(단위: 개)

구 분		「공운법」상 공공기관 (2022년도 기준)	청렴도 측정 대상 기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공직유관단체)	공기업	36	36
	준정부기관	94	69
	기타공공기관		40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기타공공기관	220	13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기타공공기관		4
합계		350	162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2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21. 12., 「2021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결과」, 2021. 12., 「2021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21. 12. 및 기획재정부, 「2022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22. 1. 28. 참고

- 2021년도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수는 2020년도에 157개 기관에서, 2021년도 162개 기관으로 전년 대비 5개 증가함.
 - 기관·업무의 성격,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행정기관은 전년과 같이 전수 측정하고, 공직유관단체는 일정규모 이상 주요기관을 측정함.
 - 공기업은 전수, 준정부기관은 정원 300명 이상, 기타공공기관은 500명 이상 기관을 전수 측정했으며, 그 외 공직유관단체는 기존 대상기관 중 정원 500명 이상 기관을 측정하되, 2020년 청렴도 미흡기관은 정원규모가 작아도 지속 측정함.

209) 국민권익위원회, 「202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 2021. 7., 「202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21. 12., 「2021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결과」, 2021. 12., 「2021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21. 12. 참고

210) 공공기관의 유형 분류는 기획재정부의 「2022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22. 1. 28.에 따름

- 공직유관단체 중 11개 기관은 2020년 조사제외·면제 기관이었으나, 2021년 전수 조사대상 기준을 충족하여 측정대상에 포함됨.²¹¹⁾
 - 코레일유통(주)의 경우 2020년 조사제외기관이었고, 2021년 전수조사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측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측정대상에 포함됨.
- 공직유관단체 연구원 유형은 2020년부터 격년 측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2020년에는 조사를 수검하지 않아 25개 기관이 측정에서 제외되었으며, 2021년에는 전수 조사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6개 기관²¹²⁾을 제외한 19개 기관이 조사를 수검함.
- 국립대학병원 중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치과대학병원은 측정대상에서 제외됨.
 - 2020년 조사대상기관이었던 경북대학교치과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2021년 조사에서 제외되었으며, 2020년 조사면제기관이었던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은 2021년에는 치과병원에 해당하여 측정대상에서 제외됨.
- 한국예탁결제원의 경우, 2021년도 청렴도 측정을 수검하였으나, 2022년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하 분석에서는 제외함.

〈표 III-82〉 2020년 측정대상 공공기관 중 2021년 변동사항이 있는 기관

(단위: 개)

구분	해당 기관 수	내 용
조사제외 (측정대상 선정기준 미충족)	23	정원규모기준(준정부기관 정원 300명, 기타공공기관 정원 500명)미달로 조사제외 ²¹³⁾
조사제외 (대학병원 중 치과병원)	3	경북대학교치과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2022년 지정해제	1	한국예탁결제원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2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21. 12., 「2021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결과」, 2021. 12., 「2021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21. 12. 및 기획재정부, 「2022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 자료, 2022. 1. 28. 참고

211) 2020년 조사제외기관(9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주택관리공단(주),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체육산업개발(주), 대한법률구조공단,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2020년 조사면제기관(2개): 한국중부발전(주), 한국무역보험공사

212)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13)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노사발전재단, 농림수산물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영화진흥위원회, 정부법무공단,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벤처투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제정정보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투자공사, 한국특허전략개발원

- 청렴도 측정 결과는 유형 내 상대등급으로 산출되며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음.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공직유관단체는 다시 연구원, 기관규모(정원)에 따른 4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결과를 발표함.
 - 2021년도 청렴도 측정에서는 소규모 기관에 대한 측정 감소를 감안하여 IV·V 유형의 기관규모 분류기준을 통합하였음.²¹⁴⁾
 - 공직유관단체 I 유형(3,000명 이상), II유형(1,000명 이상~3,000명 미만), III유형(500명 이상~1,000명 미만), IV유형(500명 미만)
- 결과 발표 시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은 국립중앙의료원을 포함한 전체 공공의료기관 유형 내 등급 산정 방식으로 발표하고,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또한 유형구분 없이 하나의 유형으로 결과를 발표함.
- 그동안 청렴도 결과 발표 시 기관 등급과 함께 청렴도 점수가 발표되어 순위 위주의 보도 양산, 기관 간 지나친 경쟁유발로 인한 우수사례 공유 저해 등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2018년도부터는 청렴도 등급만 발표하고 있음.

〈표 III-83〉 2021년도 유형별 청렴도 측정 대상 공공기관

구분	유형	해당 공공기관명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공직유관 단체)	I (23개)	(공기업) (주)강원랜드,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PS(주) (준정부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환경공단 (기타공공기관) 대한적십자사,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II (38개)	(공기업) (주)한국가스기술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부동산원,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DN, 한국중부발전(주) (준정부기관) (재)우체국물류지원단, 국가철도공단, 국립공원공단, 기술보증기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도로교통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14) 'IV유형(300명 이상~500명 미만), V유형(300명 미만)'의 기준을 'IV유형(500명 미만)'으로 변경함

〈표 III-83〉의 계속

구분	유형	해당 공공기관명
공공 기관 청렴도 측정 (공직유관 단체)	II (38개)	(기타공공기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방기술품질원, 주택관리공단(주),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III (35개)	(공기업) 대한석탄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주택도시보증공사, 해양환경공단 (준정부기관)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공무원연금공단, 국립생태원, 국토안전관리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장학재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타공공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코레일유통(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IV (30개)	(공기업)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준정부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기타공공기관) 대한체육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환경보건협회
	연구원 (19개)	(기타공공기관) 국방과학연구소, 기초과학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화학연구원
공공 의료 기관 청렴도 측정	국립대학 병원, 국립의료원 등 (13개)	(기타공공기관)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부산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국공립 대학 청렴도 측정	대학교 (4개)	(기타공공기관)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주: 2022년도 공공기관 유형을 기준으로 함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2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21. 12., 「2021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결과」, 2021. 12., 「2021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21. 12. 및 기획재정부, 「2022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 자료, 2022. 1. 28. 참고

〈표 III-84〉 2021년도 청렴도 측정 대상 유형 변경 현황

구분	유형	해당 공공기관명
공공 기관 청렴도 측정 (공직유관 단체)	I	(편입:공공기관 신규지정)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II	(편입: 2020년 조사제외/2020년 조사면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주택관리공단(주),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중부발전(주)
	III	(편입: 2020년 조사제외/2020년 조사면제) 대한법률구조공단,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코레일유통(주)
		(편입: IV→III)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제외: 2022년 공공기관 지정해제) 한국예탁결제원
	IV	(편입: V→IV 유형구분기준상향) 대한체육회,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환경보전협회 (편입: 2020년 조사제외)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편입: 신규통합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²¹⁵)
		(제외: 2021년 조사제외)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투자공사 (제외: IV→III) 한국수산자원공단 (제외: V→IV, 2021년 조사 제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노사발전재단, 농림수산물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영화진흥위원회, 정부법무공단,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벤처투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연구원	(편입: 격년 측정으로 2020년도 조사 미 실시, 2019년 측정대상기관 25개 중 19개 기관이 2021년 측정 수검) (제외: 2021년 전수조사대상 기준 미 충족)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전문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공공 의료 기관 청렴도 측정	국립 대학병원 및 국립의료원 등	(제외: 2021년 조사제외) 경북대학교치과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공립 대학 청렴도 측정	4년제 대학	(변경 없음)

주: 공직유관단체 유형 V는 2021년부터는 유형IV와 통합되었고, 2021년에는 정원규모기준(준정부기관 정원 300명, 기타공공기관 정원 500명)미달은 조사에서 제외됨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2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21. 12., 「2021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결과」, 2021. 12., 「2021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21. 12. 및 기획재정부, 「2022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 자료, 2022. 1. 28. 참고

4) 2021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²¹⁶⁾

- 2021년도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등을 포함한 전체 공공기관은 10점 만점에 평균 8.27점으로 전년과 동일하였으며, 공공의료기관은 동일기관 기준으로 비교 시 10점 만점에 6.95점으로 전년 대비 0.05점 상승하였고, 국공립대학의 경우 동일기관 기준으로 비교 시 10점 만점에 7.36점으로 전년 대비 0.29점 하락함.²¹⁷⁾
 - 「공운법」상 공공기관이 대부분 속한 공직유관단체 유형의 종합청렴도는 8.51점으로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공직유관단체의 내부청렴도가 0.05점 상승한데 비해 외부청렴도는 전년 대비 0.02점 하락하여 종합청렴도는 전년 대비 0.02점 하락하였음.
 -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는 동일기관 기준으로 비교 시 내부업무, 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 점수가 하락하였으나, 계약 및 환자진료 점수가 상승하여 종합청렴도는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함.
 - 국공립대학 종합청렴도는 2015년 이래 5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2021년에는 동일기관 기준으로 비교 시 조직문화제도를 제외한 계약, 연구, 행정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점수가 하락하여 종합청렴도 점수가 전년 대비 하락함.

- 2021년도 공공기관, 공공의료기관, 국공립대학의 청렴도 측정 결과를 종합하여, 그 중 「공운법」상 공공기관을 선별하여 분석한 결과, 3등급을 받은 기관이 62개로 가장 많았음.²¹⁸⁾
 - 2021년도에 「공운법」상 공공기관 중 종합청렴도 1등급을 받은 기관은 4개 기관으로, 2020년도 결과와 동일함.

215)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의 통합 기관(2021. 12. 8. 지정)으로 두 기관모두 IV유형에 속함
 216) 국민권익위원회, 「202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21. 12., 「2021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결과», 2021. 12., 「2021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21. 12. 및 기획재정부, 「2022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22. 1. 28. 참고
 217) 공공의료기관 및 국공립대학 종합청렴도는 코로나19 확산 관련 측정 대상이 크게 감소하여, 이하 분석에서는 전년 점수와 유의미한 비교를 위하여 금년 측정기관 기준으로 동일 기관의 전년 점수를 환산한 수치를 사용하였음. 단순비교(전체기관비교) 시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는 0.46점 하락하였으며(7.41점 → 6.95점), 국공립대학 종합청렴도는 0.43점 하락하였음(7.79점 → 7.36점)
 218) 종합청렴도 등급 판정은 측정 대상기관 유형별로 다른 등급구간을 적용하는데, 종합청렴도 등급구간은 유형별로 유형내 기관의 종합청렴도 점수 평균과 표준편차를 활용하여 설정함(1등급이 최상위 등급이고, 5등급이 최하위 등급임)

〈표 III-85〉 2020년도 및 2021년도 종합청렴도 등급 분포 비교

(단위: 개)

구 분	「공운법」상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대상 공공기관	등급 분포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021년도	350	162	4	56	62	34	6
2020년도	350	157	4	42	68	36	7
증 감	-	+5	-	+14	△6	△2	△1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2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21. 12., 「2021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결과」, 2021. 12., 「2021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21. 12.,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20. 12., 「2020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결과」, 2020. 12., 「2020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20. 12. 및 기획재정부, 「2022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22. 1. 28.을 참고하여 작성

- 청렴도 측정 유형별로 등급 분포를 살펴보면, 공직유관단체 I~IV유형과 공공의료 기관 및 국공립대학 유형에서 등급별로 기관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
-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기관 정원을 기준으로 I~IV유형으로 구분함.²¹⁹⁾
 - 공직유관단체 I 유형에서 1등급을 받은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5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임.
 - 공직유관단체 II 유형에서 1등급을 받은 기관은 기술보증기금이며, 5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음.
 - 공직유관단체 III유형에서 1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으며, 동 유형에서 5등급을 받은 기관은 코레일유통(주)임.
 - 공직유관단체 IV유형에서 1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으며, 5등급을 받은 기관은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임.
 - 공직유관단체 연구원 유형에서 1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기계연구원이며, 5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음.
-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1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원자력의학원이며, 5등급을 받은 기관은 부산대학교병원임.
-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의 경우 1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으며, 5등급을 받은 기관은 광주과학기술원임.

219) 공직유관단체 I 유형(3,000명 이상), II유형(1,000명 이상~3,000명 미만), III유형(500명 이상~1,000명 미만), IV유형(500명 미만)

〈표 III-86〉 2021년도 청렴도 측정 유형별 종합청렴도 등급 현황

구분	기관명
공공 기관 청렴도 측정 (공직유관 단체)	<p>(1등급) 국민건강보험공단</p> <p>(2등급)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대한적십자사,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공사</p> <p>(3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가스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한국마사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철도공사, 한전KPS(주)</p> <p>(4등급) (주)강원랜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환경공단</p> <p>(5등급) 한국토지주택공사</p>
	<p>(1등급) 기술보증기금</p> <p>(2등급)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신용보증기금,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부동산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전KDN,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p> <p>(3등급) 국방기술품질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도로교통공단, 주택관리공단(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p> <p>(4등급) (재)우체국물류지원단, (주)한국가스기술공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가철도공단, 국립공원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체육산업개발(주)</p>
	<p>(2등급)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공무원연금공단, 국립생태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장학재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주택금융공사</p> <p>(3등급) 국토안전관리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예금보험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양환경공단</p> <p>(4등급) 대한석탄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p> <p>(5등급) 코레일유통(주)</p>

〈표 III-86〉의 계속

구분	기관명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공직유관 단체)	<p>IV</p> <p>(2등급)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p> <p>(3등급)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p> <p>(4등급) 대한체육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환경보전협회</p> <p>(5등급)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p>
공공 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p>연구원</p> <p>(1등급) 한국기계연구원</p> <p>(2등급)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p> <p>(3등급) 기초과학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p> <p>(4등급)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p>
국공립 대학 청렴도 측정	<p>국립 대학병원 및 국립의료원 등</p> <p>(1등급) 한국원자력의학원</p> <p>(2등급) 강원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p> <p>(3등급) 경북대학교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p> <p>(4등급) 전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p> <p>(5등급) 부산대학교병원</p>
	<p>국공립 대학</p> <p>(2등급) 대구경북과학기술원</p> <p>(3등급) 울산과학기술원</p> <p>(4등급) 한국과학기술원</p> <p>(5등급) 광주과학기술원</p>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2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21. 12., 「2021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결과」, 2021. 12., 「2021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21. 12. 참고

- 「공운법」상 공공기관 지정 유형에 따라 종합청렴도 등급의 분포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공기업의 청렴도 수준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공기업의 경우, 1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으며, 전체 측정 대상 공기업의 86.1%가 3등급 이상을 받아 청렴도 수준이 다른 유형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준정부기관의 경우, 3등급 이상을 받은 기관이 75.4%에 해당하며, 1등급을 받은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술보증기금으로, 이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년 연속 1등급을 받음.
 -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3등급 이상을 받은 기관이 68.4%를 차지하며 다른 유형에 비해 전반적으로 등급이 낮은 것으로 보이나, 2020년도의 66.7%에 대비하면 상승한 모습임.

- 최하위등급(5등급)을 받은 기관은 공기업 1개, 기타공공기관 5개 등 총 6개 기관이었음.
 - 공기업 중 5등급 기관은 전년 대비 1등급 하락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유일함.
 - 2020년도에 5등급을 받았던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21년도 측정에서 등급이 2계단 상승하여 3등급을 받음.
 - 준정부기관의 경우, 2020년에 5등급을 받았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수산자원공단은 모두 등급이 상승하여, 공공기관 유형 중 유일하게 최하위등급(5등급)을 받은 기관이 없음.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청렴도 등급이 3단계 상승하였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청렴도 등급이 각각 2단계 상승함.
 - 기타공공기관은 광주과학기술원, 부산대학교병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코레일유통(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5개 기관이 5등급을 받음.
 - 2020년에 5등급을 받았던 전남대학교병원, 한국과학기술원은 각각 1단계 상승하여 4등급을 받음.
 - 광주과학기술원은 5년 연속 5등급을 받았으며, 부산대학교병원,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각각 1등급 하락하여 최하위등급(5등급)을 받은 기관이 2개 증가하는 등 기관의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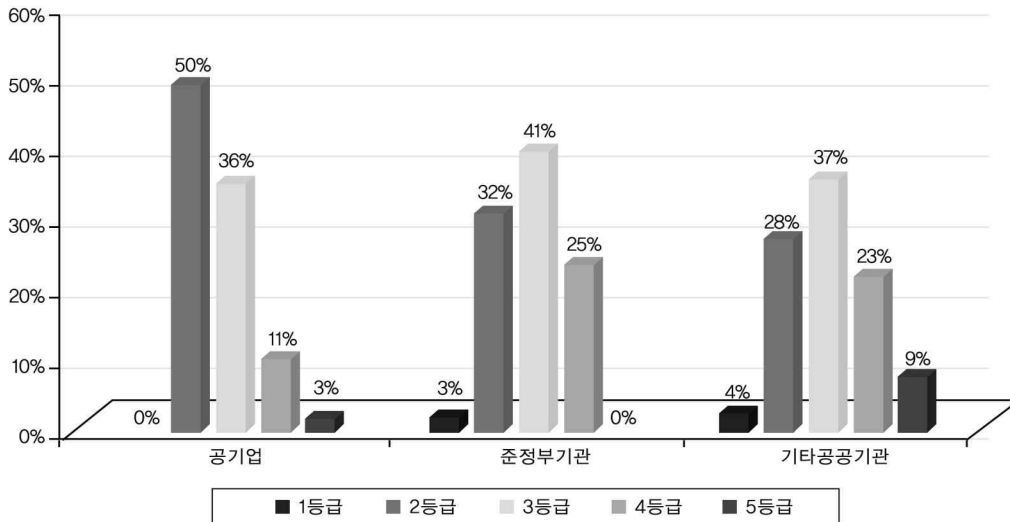
〈표 III-87〉 2021년도 종합청렴도 등급 분포 및 전년 대비 등급 개선수준

(단위: 개)

구 분	종합청렴도 등급						전년 대비 등급 개선수준				
	측정 대상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등급	5 등급	분석 대상	상승 (▲)	유지 (-)	하락 (▼)	
공 기 업	시 장 형 (15)	15	0	8	5	2	0	15	5	5	5
	준시장형 (21)	21	0	10	8	2	1	19	7	7	5
	소 계 (36)	36	0	18	13	4	1	34	12	12	10
준정부기관	기금관리 (13)	11	1	6	2	2	0	11	4	4	3
	위탁집행 (81)	58	1	16	26	15	0	56	20	27	9
	소 계 (94)	69	2	22	28	17	0	67	24	31	12
기타공공기관 (220)	57	2	16	21	13	5	49	14	21	14	
전 체 (350)	162 (100%)	4 (2%)	56 (35%)	62 (38%)	34 (21%)	6 (4%)	150 (100%)	50 (33%)	64 (43%)	36 (24%)	

주: 1. 공공기관이 수검한 청렴도 측정 종류(공공기관, 공공의료기관, 국공립대학 등)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개별조사에서 측정된 청렴도 등급을 기준으로 작성함
 2. 2022년 1월 지정된 공공기관 중 2021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측정을 모두 수검하고 점수결과를 공개한 162개 기관을 대상으로 함
 3. 2020년 미측정기관은 등급개선수준 분석대상에서는 제외함. 준시장형 공기업 중 주식회사 에스알, 기타공공기관 중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관리공단(주), 코레일유통(주), 학교법인한국폴리텍대학,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체육산업개발(주) 및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중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이에 해당함
 4. 2021년 신규지정기관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는 등급개선수준 분석대상에서는 제외함
 5.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한국광물자원공사(2020년 조사면제)와 한국광해관리공단(2020년 2등급)이 2021년 12월 통합한 신규지정기관으로 등급개선수준 분석대상에서는 제외함
 6. 기타공공기관 중 격년조사대상인 연구원 유형 및 작년 조사면제기관인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중부발전(주)는 등급 개선수준 분석 시 2019년 청렴도 등급과 비교하였음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2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21. 12., 「2021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결과», 2021. 12., 「2021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21. 12. 및 기획재정부, 「2022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22. 1. 28.을 참고하여 작성

[그림 Ⅲ-37] 2021년도 공공기관 유형별 종합청렴도 등급 분포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2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21. 12., 「2021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결과」, 2021. 12., 「2021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21. 12. 및 기획재정부, 「2022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 자료, 2022. 1. 28.을 참고하여 작성

- 유형별로 등급 상승 폭이 큰 기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공기업 중 한국지역난방공사는 5등급에서 3등급으로 전년 대비 등급이 2단계 상승하였음.
 - 준정부기관 중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5등급에서 2등급으로 등급이 3단계 상승하였으며, (재)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석유관리원은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수산자원공단은 5등급에서 3등급으로 각각 등급이 2단계 상승함.
 - 기타공공기관 중 국방과학연구소,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한적십자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4등급에서 2등급으로,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은 3등급에서 1등급으로 각각 등급이 2단계 상승함.

- 전년 대비 등급이 3단계 하락한 기관은 공기업 1개 기관이며, 2단계 하락한 기관은 기타공공기관 3개 기관이고, 전년 대비 1단계 등급이 하락한 기관은 공기업 9개 기관, 준정부기관 12개 기관, 기타공공기관 11개 기관 등 총 32개 기관임.
 - 공기업 중 대한석탄공사는 1등급에서 4등급으로 등급이 3단계 하락함.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은 격년측정기관으로, 2019년 대비 각각 2단계 하락함.

〈표 III-88〉 2021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등급 현황

구분	기관명
1등급 (4개)	<p>(준정부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술보증기금</p> <p>(기타공공기관)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p>
2등급 (56개)	<p>(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공항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전KDN</p> <p>(준정부기관)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공무원연금공단, 국립생태원,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기금,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장학재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주택금융공사</p> <p>(기타공공기관) 강원대학교병원, 국방과학연구소,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적십자사, 서울대학교병원, 중소기업은행,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p>
3등급 (62개)	<p>(공기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마사회,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전KPS(주), 해양환경공단</p> <p>(준정부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토안전관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도로교통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예금보험공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p> <p>(기타공공기관) 경북대학교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국방기술품질원, 기초과학연구원, 울산과학기술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주택관리공단(주), 충남대학교병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p>

〈표 III-88〉의 계속

구분	기관명
4등급 (34개)	<p>(공기업) (주)강원랜드, (주)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석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p> <p>(준정부기관) (재)우체국물류지원단, 국가철도공단, 국립공원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p> <p>(기타공공기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대한체육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전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환경보건협회</p>
5등급 (6개)	<p>(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p> <p>(기타공공기관) 광주과학기술원, 부산대학교병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코레일유통(주), 한국문화예술위원회</p>

주: 공공기관이 수검한 청렴도 측정 종류(공공기관, 공공의료기관, 국공립대학 등)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개별조사에서 측정된 청렴도 등급을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2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21. 12., 「2021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결과」, 2021. 12., 「2021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21. 12. 및 기획재정부, 「2022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 자료, 2022. 1. 28.을 참고하여 작성

□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를 부처별로 등급 분포와 등급 개선수준으로 구분하여 살펴 보면 <표 III-89>, <표 III-90>과 같음.

<표 III-89> 주무부처별 소관 공공기관의 2021년도 종합청렴도 등급 분포 및 전년 대비 개선 수준
(단위: 개)

구 분	종합청렴도 등급						전년 대비 등급 개선수준			
	소계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등급	5 등급	분석 대상	상승 (▲)	유지 (-)	하락 (▼)
기획재정부	2	0	2	0	0	0	2	0	2	0
교육부	12	0	4	5	2	1	12	6	3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1	2	10	10	8	1	31	10	12	9
외교부	1	0	0	0	1	0	1	0	0	1
행정안전부	1	0	0	1	0	0	1	0	1	0
문화체육관광부	7	0	2	1	3	1	6	1	3	2
농림축산식품부	5	0	1	2	2	0	4	1	2	1
산업통상자원부	30	0	16	10	4	0	29	12	9	8
보건복지부	10	1	2	5	2	0	9	3	5	1
환경부	7	0	1	1	5	0	7	1	4	2
고용노동부	7	0	2	4	1	0	5	2	2	1
여성가족부	1	0	0	1	0	0	1	1	0	0
국토교통부	16	0	3	9	2	2	12	4	5	3
해양수산부	9	0	4	2	3	0	9	3	5	1
중소벤처기업부	4	1	0	2	0	1	4	3	0	1
방송통신위원회	1	0	1	0	0	0	1	0	1	0
원자력안전위원회	1	0	0	1	0	0	1	0	0	1
금융위원회	6	0	4	1	1	0	6	1	4	1
공정거래위원회	1	0	0	1	0	0	1	0	1	0
국가보훈처	1	0	0	1	0	0	1	0	1	0
인사혁신처	1	0	1	0	0	0	1	0	1	0
경찰청	1	0	0	1	0	0	1	1	0	0
소방청	1	0	1	0	0	0	1	0	1	0
방위사업청	2	0	1	1	0	0	2	1	1	0
농촌진흥청	1	0	0	1	0	0	1	0	0	1
산림청	2	0	0	2	0	0	1	0	1	0
법무부	1	0	1	0	0	0	0	0	0	0
전 체	162	4	56	62	34	6	150	50	64	36

주: 1. 공공기관이 수검한 청렴도 측정 종류(공공기관, 공공의료기관, 국공립대학 등)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개별조사에서 측정된 청렴도 등급을 기재함
 2. 정부 부처 중 청렴도 측정 수검기관이 없는 부처는 제외하고 작성함
 3. 작년 미측정기관(10개) 및 2021 신규지정기관(1개)은 등급개선수준 분석대상에서는 제외하였으며, 격년조사 대상기관인 연구원(19개) 및 작년 조사면제기관(2개)은 2019년 청렴도 등급과 비교하였음
 4.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인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한국광물자원공사(2020년 조사면제)와 한국광해관리공단(2020년 2등급)이 2021년 12월 통합한 신규지정기관으로 등급개선수준 분석대상에서는 제외함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2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21. 12., 「2021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결과», 2021. 12., 「2021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21. 12. 및 기획재정부, 「2022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 자료, 2022. 1. 28.을 참고하여 작성

〈표 Ⅲ-90〉 주무부처별 소관 공공기관의 2021년도 종합청렴도 등급 현황

주무부처	기관명
기획재정부 (2개)	(2등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교육부 (12개)	(2등급) 강원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3등급) 경북대학교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4등급) 전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5등급) 부산대학교병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1개)	(1등급)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2등급)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3등급) 기초과학연구원, 울산과학기술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4등급) (재)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5등급) 광주과학기술원
외교부 (1개)	(4등급) 한국국제협력단
행정안전부 (1개)	(3등급)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문화체육관광부 (7개)	(2등급)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관광공사 (3등급) 한국콘텐츠진흥원 (4등급) 대한체육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체육산업개발(주) (5등급)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5개)	(2등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등급)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마사회 (4등급)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한국농어촌공사

〈표 III-90〉의 계속

주무부처	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30개)	(2등급)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중부발전(주), 한전KDN,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3등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PS(주) (4등급) (주)강원랜드, (주)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보건복지부 (10개)	(1등급) 국민건강보험공단 (2등급) 국민연금공단, 대한적십자사 (3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육진흥원 (4등급)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환경부 (7개)	(2등급) 국립생태원 (3등급) 한국수자원공사 (4등급) 국립공원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보전협회
고용노동부 (7개)	(2등급) 근로복지공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3등급)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4등급)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여성가족부 (1개)	(3등급)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토교통부 (16개)	(2등급)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공항공사, 한국부동산원 (3등급) 국토안전관리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관리공단(주),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한국철도공사 (4등급) 국가철도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5등급) 코레일유통(주),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양수산부 (9개)	(2등급)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3등급) 한국수산자원공단, 해양환경공단 (4등급)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표 III-90〉의 계속

주무부처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4개)	(1등급) 기술보증기금 (3등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5등급) 중소기업유통센터
방송통신위원회 (1개)	(2등급)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원자력안전위원회 (1개)	(3등급)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금융위원회 (6개)	(2등급)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3등급) 예금보험공사 (4등급) 한국자산관리공사
공정거래위원회 (1개)	(3등급) 한국소비자원
국가보훈처 (1개)	(3등급)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사혁신처 (1개)	(2등급) 공무원연금공단
경찰청 (1개)	(3등급) 도로교통공단
소방청 (1개)	(2등급)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방위사업청 (2개)	(2등급) 국방과학연구소 (3등급) 국방기술품질원
농촌진흥청 (1개)	(3등급)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산림청 (2개)	(3등급)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법무부 (1개)	(2등급) 대한법률구조공단

주: 1. 공공기관이 수검한 청렴도 측정 종류(공공기관, 공공의료기관, 국공립대학 등)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개별 조사에서 측정된 청렴도 등급을 기재함
 2. 정부 부처 중 청렴도 측정 대상이 없는 부처는 제외함
 3. () 안은 부처별로 202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대상 중 등급을 공개한 기관수를 의미함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2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21. 12., 「2021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결과», 2021. 12., 「2021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21. 12. 및 기획재정부, 「2022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 자료, 2022. 1. 28.을 참고하여 작성

라.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²²⁰⁾

1) 통합공시제도 개요

- 공공기관과 그 부설기관은 「공운법」 제11조 및 제12조에 근거하여 알리오시스템에 경영정보를 공시해야 함.
 - 2022년 9월 현재 경영공시 의무대상인 350개 공공기관과 20개 부설기관이 알리오시스템에 최근 5년간 경영정보를 공시 중임.

-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이하 '통합공시기준')」 제4조와 <별표1>에 의거하여 5개 대항목 하위에 총 41개 항목에 대한 경영정보를 공시하고 있음.
 - <표 III-91>과 같이 통합공시기준 <별표1>에 명시된 공시대상 항목과 항목별 공시기준은 「공운법」 제11조 제1항 1호에서 16호에 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있음.
 - 기획재정부는 공시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공시주기(정기공시/수시공시) 및 항목의 중요도(중요항목/기타항목)를 기준으로 공시항목을 구분함.
 - 통합공시 매뉴얼에서는 통합공시 항목(41개)을 5개 대항목²²¹⁾으로 구분하고 그 아래에 세항목과 세세항목을 두고 있음.
 - 5개 대항목에 대한 항목 체계와 공시주기 현황은 <표 III-92>와 같음.

220)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통합공시 매뉴얼, 전자문서 작성지침」, 2022. 3. 23., 「2021년도 통합공시 점검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22. 4. 8. 및 「21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 자료, 2022. 4. 8.을 참고하여 작성

221) 5개 대항목은 일반현황, 기관운영,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대내외·평가, 정보공개로 구성

〈표 III-91〉 공공기관 통합공시항목 관련 「공운법」 조항 및 주요 변동내역

대항목	구 분	관련 「공운법」 조항 (제13조 제항 각 호)	2021년 대비 변동사항
	공시항목명		
I. 일반현황	1. 일반현황	제1호	
	2. 임직원 수	제3호	
	3. 임원현황	제3호	
	4. 신규채용 현황	제3호	
	5. 임·직원 채용정보	제16호	
	6. 임원연봉	제3호, 제4호	
	7. 직원 평균보수	제4호	
	8. 기관장 업무추진비	제16호	
	9. 복리후생비	제4호	
	10. 그 밖의 복리후생 제도 등의 운영현황	제4호, 제16호	‘유가족특별채용’ 세항목 공시 제외
II. 기관운영	11. 안전관리 및 정보보호	제16호	· 항목명 변경 (구.안전관리 및 환경보호) · ‘개인정보보호’ 세항목 신설
	12. 환경보호	제16호	· 항목 신설 · 세항목 총 7개(222) (분리·이동 2개, 신설 5개)
	13. 사회공헌 활동	제16호	
	14. 인권경영		· 항목 신설
	15. 이사회 회의록	제9호	· 대항목 이동 (구.대내외평가) · 세항목 중 ‘기타자료’ 항목 공시 제외
	16.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현황	제16호	· ‘유연근무현황’ 세항목 공시 주기 변경 (정기(기타), 연 4회→1회)
	17. 임원 국외출장 내역	제16호	
	18. 노동조합 관련현황	제16호	
	19. 내부규정	제9호	· 항목명 변경 (구.정관 및 내부규정)
	20. 징계현황	제13호	
	21. 소송 및 법률자문 현황	제14호	

222) 환경보호 항목의 세항목: 온실가스 감축실적(분리/이동), 에너지 사용량(신설), 폐기물 발생량(신설), 용수 사용량(신설), 환경법규 위반 현황(신설), 저공해 자동차 현황(신설), 녹색제품 구매실적(분리/이동)

〈표 III-91〉의 계속

대항목	구 분	관련 「공운법」 조항 (제1조 제항 각 호)	2021년 대비 변동사항
	공시항목명		
Ⅲ.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22. 요약 재무상태표	제2호	
	23. 요약 손익계산서 (또는 요약 포괄 손익계산서)	제2호	
	24. 수입·지출현황	제1호, 제2호, 제4호	
	25. 자본금 및 주주현황	제2호	
	26. 장단기 차입금현황	제2호	
	27. 감사보고서	제2호, 10호	‘자체 감사부서 현황’ 세항목 신설
	28. 납세정보	제16호	
	29. 주요사업	제16호	
	30. 투자집행 내역	제16호	
	31. 투자 및 출자·출연 현황	제5호, 제16호	
	32. 경영부담 비용추계	제16호	
	33.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제15호	
	34. 12개 주요기관의 상세부채 정보	제16호	
	Ⅳ. 대내·외 평가	35. 경영평가 결과	제8호
36. 동반성장 평가결과			항목 신설
37. 청렴도 평가결과			항목 신설
38. 국회 등 외부평가			· 지적사항 관련 항목 통합 (국회 지적사항, 감사원/주무부처 지적사항, 경영평가 지적사항) · ‘경영혁신 사례’ 세항목 공시 제외
39.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제6호	
Ⅴ. 정보공개	40. 계약정보	제16호	
	41. 연구보고서	제16호	

주: 2021년 대비 변동사항은 2022년 2월 통합공시기준 개정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통합공시 매뉴얼, 전자문서 작성지침」, 2022. 3. 23.,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2. 2. 4.을 참고하여 작성함

〈표 III-92〉 공공기관 통합공시항목 구분(2022. 9월 기준)

(단위: 개)

구 분	항목별 하위 단위수준			공시주기(98개 세항목 기준)		
	항목	세항목	세세항목	정기공시		수시공시
				주요항목	기타항목	
	41	99	126	21	56	21
I. 일반현황	1	1	1	0	1	0
II. 기관운영	20	56	82	13	33	10
III.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13	28	29	8	13	6
IV. 대내외평가	5	8	8	0	6	2
V. 정보공개	2	6	6	0	3	3

주: 공시주기는 99개 세항목 중 세세항목 간의 공시주기가 상이한 1개를 제외한 98개 세항목을 대상으로 구분함
 - 26-2. 퇴직임·직원 재취업현황 세항목의 세세항목 중 '퇴직임원 재취업현황'은 수시공시에 해당하고 '퇴직직원 재취업현황'은 정기공시(주요항목)에 해당되어 분석에서 제외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통합공시 매뉴얼, 전자문서 작성지침」, 2022. 3. 23.을 참고하여 작성함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관련 정책 현안과 국회·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공운법」 제11조 및 통합공시기준을 개정하고 공시항목과 항목별 공시 기준을 정비해 왔으며 최근 3년간 주요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020년 2월에는 통합공시기준 제12조(정의), 제14조(불성실공시 사후조치 등) 및 <별표2> 불성실공시에 대한 별점기준을 개정하여 공시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기관의 공시담당자 개인에 대한 페널티를 완화함.²²³⁾

- 불성실공시 유형을 세분화하여 위반 수준에 따른 별점을 차별화하기 위해서 통합공시기준 제12조를 개정하여 기존에 포괄적으로 정의되었던 '허위공시'는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단순 과실(경과실)에 의한 수정은 '공시 오류'로 별도로 구분함.

- 그리고 세분화된 불성실공시 유형에 따라 <별표2>의 불성실공시에 대한 별점 기준도 정비하여 기존의 단순했던 허위공시 별점체계(4단계)를 허위공시와 공시 오류로 구분하여 각각 2단계의 별점체제로 개편함.

- 기관 공시담당자 개인에 대한 페널티 완화를 위해 통합공시기준 제14조를 개정하여 종전의 불성실공시기관²²⁴⁾ 전체에 요구하던 기관 담당자 인사조치를 연간

223)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통합공시 개선방안(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2020. 2. 26.

224) 연간 별점 40점 초과 기관

- 별점 중 고의·중과실에 의한 별점이 50% 초과하는 불성실공시기관에만 요구하기로 기준을 완화함.
- 이 외에 공시 정보의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해 1인당 복리후생비 공시 기준을 일원화²²⁵⁾하고 경영평가 조치결과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²²⁶⁾ 공시시기를 종전 차년도 1분기 정기공시에서 당해 연도 4분기 정기공시로 변경함.
 - 또한 2017년부터 기금계정의 공시기준이 국가회계기준으로 완전 변경됨에 따라 종전의 재정상태표 기준의 작성을 폐지하고 요약재정상태표로 작성 기준을 일원화함.
- 2020년 12월에는 공시 우수기관 및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기관의 부담이 큰 공시항목의 별점 기준을 개선하여 경영공시 품질을 제고하고자 통합공시기준을 개정함.²²⁷⁾
- 공공기관 및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기 위해서 기타공공기관의 ‘우수공시기관’ 지정요건을 완화²²⁸⁾하고, 전년 대비 별점이 50% 이상 개선된 기관은 ‘공시향상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했으며, 우수공시기관과 공시향상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관련 추가 인센티브 추가²²⁹⁾ 및 담당자 인센티브 지급 근거²³⁰⁾를 마련함.
 - 경영공시 별점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기관의 공시부담이 큰 ‘임직원 채용정보’ 항목의 별점을 50% 축소(3점 → 1.5점)하고 공시건수가 많은 수시항목의 공시 변경 별점을 공시건수에 비례해서 부과²³¹⁾하기로 함.
 - 그 외에도 신규지정 공공기관은 공시 숙련도 가 낮음을 감안하여 우수공시기관과의 1:1 멘토링 제도를 도입하여 제공하고, 당해 연도 통합공시 점검결과에

225) 상시근로자수 기준으로 1인당 복리후생비 산출(1인당 복리후생비=복리후생비/상시근로자수)

226) 알리오시스템 ‘35.경영평가 지적사항’ 항목에 당해 연도 실시한 경영평가의 지적사항을 3분기에 공시하고, 이에 후속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공시하고 있음

227)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통합공시 개선방안(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2020. 12. 8.

228) 기타공공기관에 한해 우수공시기관 및 공시향상기관 지정 시 기간 기준을 3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되 기타 공공기관 중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은 3년 기준을 유지함

229)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평가 시 ‘국민소통’ 지표(계량, 1점)를 통해 통합공시 점검결과를 반영하는 것에 추가하여 우수공시기관에 한해 2021년도 경영실적평가부터 ‘혁신노력 및 성과’ 지표(비계량, 1점)를 통해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공시향상기관에 대해서는 공시점검 관련 경영실적평가 득점(최대 1점 이내)에 최대 0.05점까지 추가 배점할 수 있도록 개선함

230) 우수공시기관의 담당자에 대한 표창 등 기타 지원이 가능하도록 통합공시기준 개정

231) 입찰정보 항목과 임직원 채용정보 항목에 한해 공시변경에 따른 별점 체계를 공시 건수(두 항목의 공시 건수 합계)에 따라 차별화하기 위해 공시 건수 100건 이하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별점 0.1점 부과, 101~1,000건은 별점 0.05점 부과, 1,001~5,000건은 0.025점 부과, 5,000건 이상은 0.01점 부과로 개편함

- 따른 후속조치 시 불성실공시기관 또는 기관주의 대상기관 지정에서 면제해주기로 함.
- 또한 단일 오류로 인해 한 공시항목 하위의 여러 세항목에서 허위공시나 공시 오류가 발생한 경우 1회만 벌점을 부과하기로 함.
- 2021년 2월에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구현과 정보이용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통합공시 항목의 신설 및 조정을 추진함.²³²⁾
- '기타정보공개' 항목을 '사회공헌활동'으로 변경하여 하위 세항목에 '봉사활동 실적'을 신설하고 '연간 출연 및 증여' 항목에 있었던 '증여'를 '기부'로 명칭 변경하여 이동시킴.
 - 종전의 '안전관리' 항목을 '안전관리 및 환경보호' 항목으로 항목명을 변경하고 '안전경영책임보고서', '녹색제품 구매 실적', '온실가스 감축 실적' 등 3개 세항목을 신설했으며, 기존 세항목 '사고현황', '안전관리 책임자'는 '안전경영책임 보고서'에 포함시켜 공시하도록 개편함.
 -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기존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현황' 항목에 '가족돌봄 휴가 및 휴직'과 관련된 4개 세항목을 추가함.
 - '복리후생비' 항목의 세세항목인 '보육비'에 포함되어 있던 '직장어린이집 운영비'를 별도 공시항목으로 분리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현황' 항목의 세항목으로 이동시킴.
 - 정부업무평가 및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지표에 반영되고 있으나 알리오시스템을 통해 공시하지 않았던 혁신조달 구매실적과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을 '계약정보' 항목의 세부항목으로 신설하여 공시하도록 함.
 - 정보이용자의 편의성 제고 측면에서 유사 공시내용을 통폐합하고 일원화하기 위해 재무정보 관련 공시항목²³³⁾, 내·외부 감사 관련 공시항목²³⁴⁾, 기타항목²³⁵⁾ 등을 정비함.

232)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2021. 2. 26.
 233) '투자 및 출자현황', '연간 출연 및 증여' 및 '경영부담비용 추계' 등 3개 공시항목을 통해 공시되던 '출자·출연'과 '보증' 관련 공시내용을 정비
 234) 종전 '감사보고서' 및 '이사회의회의록 및 내부감사결과' 등 2개 공시항목에 나누어 공시하던 내·외부감사결과를 '감사보고서' 항목에서 일원화하여 공시
 235) '신규채용현황' 항목에서 공시하던 유연근무 현황을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현황' 항목에서 공시하고 '그밖의 복리후생제도 등의 운영현황' 항목에서 공시하던 노조 관련 공시내용을 '노동조합 관련현황' 항목에서 공시하기로 함

- 2022년 2월에는 지속가능한 성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공공기관의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ESG 공시항목을 대폭 추가함.²³⁶⁾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에너지 사용량, 폐기물 발생량, 용수 사용량 등 '환경보호' 항목을 대폭 확대함.
 - 정보보호·인권·상생협력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여 공공기관이 사회적 포용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도록 함.
 - 공공기관의 윤리경영 진단에 필요한 '자체 감사부서 현황' 및 '청렴도 평가 결과' 공시항목을 추가하여 조직 자체적 반부패·청렴활동 쇄신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뒷받침 하도록 함.
- 2022년 2월에는 ESG 공시항목 확대와 더불어 실효성이 약화된 항목을 폐지하고 유사 항목은 통합 및 재조정 하는 등 전체 항목을 재검토 함.
 - 통합공시 항목 중 사실상 자율 공시로 운영 중인 유기족 특별채용, 이사회 회의록 외 기타자료, 경영혁신사례 등 3개 항목은 공시에서 제외함.
 - 국회, 감사원/주무부처, 경영평가 지적사항을 통합하고, 경영실적·감사직무실적 평가결과를 통합함.
 - 국민들의 통합공시 항목에 대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 항목 수가 많은 기관운영(20개)과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13개) 항목에 대한 중분류를 신설함.
- 기획재정부는 알리오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공시정보의 품질 관리를 위해 통합 공시기준 제10조(공시정보의 확인·검증)에 따라 통합공시점검을 실시하여 공시정보 및 첨부자료의 정확성, 충분성, 적시성 등을 확인 및 검증하고 있음.
- 2006년 알리오시스템 구축과 2007년 최초 통합공시 이후 공시항목이 꾸준히 증가하고 공공기관 경영정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짐에 따라 알리오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형태의 공시정보의 품질 관리가 중요해짐.
- 이에 기획재정부는 공시정보에 대한 검증 및 점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공시 품질 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을 꾸준히 추진함.
 - 2013년 추진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부채, 복리후생 관련 공시정보가 알리오시스템을 통해 성실히 공시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2014년 초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최초 실시됨.

236) 기획재정부, 「통합공시를 통해 공공기관의 ESG 경영 선도」, 보도자료, 2022. 2. 4.

- 2015년에는 불성실공시에 대한 사후조치 기준을 개선하여 불성실공시를 공시 불이행, 허위공시, 공시변경으로 유형화하고 공시유형별로 위반수준에 따라 별점을 달리 부과하도록 별점체계를 전면 개편함.
- 2016년에는 종전의 처벌위주 점검 체계를 개선하고자 통합공시기준에 우수 공시기관 선정근거를 명문화하고 우수공시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시작함.²³⁷⁾
- 2018년에는 우수공시기관의 선정기준²³⁸⁾을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신규 공공기관 공시담당자 교육 실시, 정부-공공기관 공시담당자 간 Q&A코너 개설, 공시 미흡 기관 현장 컨설팅 실시 등 공시품질 개선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함.
- 2019년에는 종전까지 연 1회 실시하던 공시점검을 연 2회로 확대하여 공시 오류의 신속한 수정을 위해 노력함.
- 2020년에는 공시점검에 따른 기관 공시담당자 인사조치가 과도하여 담당자의 사기가 저하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담당자 개인에 대한 인사조치 요건을 강화하고 불성실공시 유형을 세분화하여 위반수준에 따른 별점 체계를 정비함.
- 그리고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공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공공기관과 신규 지정 공공기관²³⁹⁾을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 매뉴얼 교육, 멘토 지정 등 공시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함.²⁴⁰⁾
- 2021년에는 국민이 직접 공시 오류를 점검하는 제도를 신설하여 국민 100인으로 구성된 '온라인 점검단'이 공시·통계 정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제도개선 사항 제안할 수 있도록 함.
- 2022년에는 전체교육 외에 신규지정·소규모·불성실 기관에 대한 상시 교육과정을 신설해 교육을 강화했으며, 공시오류 사례집 발간 및 동영상 매뉴얼을 제작해 기관의 학습기회를 확대 지원함.²⁴¹⁾
- 또한, 공시 담당자를 위한 Q&A 커뮤니티를 신설하고, 공시 우수기관과 미흡 기관 간 멘토-멘티 매칭을 확대하는 동시에 멘토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기관 간 소통을 활성화시킴.

237) 2015년에는 우수공시기관에 대한 명문화된 근거 규정은 없었으나, 우수공시기관은 선정하여 발표하였음

238) ('16년) 무벌점기관 → ('17년) 무벌점기관이면서 최근 3년간('15~'17년) 별점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기관

239) 2020년 상반기 통합공시 점검('20. 3. 31.) 결과에 따라 총 25개 공공기관이 선정됨

240) 기획재정부, 「기재부, 공공기관 공시 역량 강화지원 프로그램 시행」, 보도자료, 2020. 6. 17.

241)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2022. 2. 4.

- 통합공시기준 제13조(불성실공시 별점부과)에 따라 공공기관이 불성실공시를 하는 경우 항목의 중요도 및 과실 정도에 따라 별점을 달리 부과함.
- 2020년 2월 통합공시기준 개정에 따라 불성실공시를 미공시(고의·중과실/경과실), 허위공시, 공시오류, 지연공시, 공시변경 등 5개 유형으로 분류함.
 - ‘허위공시’는 사실과 다른 경영정보를 고의나 중과실로 공시하여 외부에 적발된 경우로 한정하고 단순과실에 의한 수정은 ‘공시오류’로 분류하여 별점을 부과하도록 유형을 세분화함.
- 위반 수준은 중과실과 경과실로 구분되는데, 중과실은 공시 오류로 인해 해당 항목의 의미상 변동을 가져오는 경우이며, 경과실은 공시항목의 내용에 실질적인 변화를 주지 않는 기재 오류를 의미함.
 - 수치 입력의 오류, 특별한 사유가 없는 미공시 등은 중과실에 해당하며 단순한 계산의 실수, 첨부파일 오류나 매뉴얼이 모호한 경우 해석상 오류 등은 경과실 사례로 볼 수 있음.
- 최근 경영공시 별점기준의 합리화를 위해 2020년 12월 통합공시기준 개정을 통해 ‘임·직원 채용정보’ 항목과 ‘입찰정보’ 항목과 같이 기관 부담이 큰 공시항목에 한해 별점 기준을 달리 적용하도록 함.
- 구체적인 불성실공시에 대한 별점기준은 통합공시기준 <별표2>에서 정하며 이를 요약하면 <표 III-93>과 같음.

〈표 III-93〉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별점 부과 체계

구분	정기공시				수시공시		
	주요항목		기타항목		고의·중과실	경과실	
	고의·중과실	경과실	고의·중과실	경과실			
불성실공시 유형	미공시	5점	3점	3점	1.5점	3점	
	지연공시	-				1~2.5점	
	허위공시	5점	-	3점	-	3점(1.5점)	-
	공시오류	-	3점	-	1.5점	-	1.5점(0.75점)
	공시변경	0.5점				0.1점(0.1점×1/조정계수)	

주: 1. 지연공시는 수시공시 항목에만 적용되며 공시시한 위반수준(위반일)에 따라 별점을 차등 적용함
 (1주일 이내 1점, 1주일 초과~1개월 이내 1.5점, 1개월 초과~6개월 이내 2점, 6개월 초과 2.5점)
 2. 수시공시항목인 ‘임·직원 채용정보’ 항목에 한하여 허위공시와 공시오류에 대해 ()의 별점을 적용함
 3. 수시공시항목인 ‘임·직원 채용정보’ 항목과 ‘입찰정보’에 한하여 공시변경에 대해 ()의 별점을 적용하며
 조정계수는 상기 2개 항목의 공시건수의 합계에 따라 달리 적용함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통합공시 매뉴얼, 전자문서 작성지침」, 2022. 3. 23.,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2. 2. 4.를 참고하여 작성

- 통합공시기준 제14조(불성실공시 사후조치 등)에 따라 점검결과 별점이 부과된 기관에 대해서는 별점 정도에 따라 정기공시 후 1년 이내에 사후조치로 ‘기관주의’ 조치,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 및 관련자 인사조치 등을 실시함.
- 연간 누적별점이 20점을 초과한 기관의 경우 ‘기관주의’ 조치의 대상이 되며, 연간 누적별점이 40점을 초과한 기관이거나 2년 연속 별점 20점을 초과하고 전년 대비 별점이 증가한 기관은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됨.
- ‘기관주의’ 조치를 받은 기관과 ‘불성실공시기관’은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불성실공시 예방교육을 받아야 함.
- ‘불성실공시기관’은 알리오시스템에 불성실공시기관 지정 내역이 3개월 간 게시되며 전체 별점 중 담당자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별점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담당자 인사조치를 요구받게 됨.

〈표 III-94〉 통합공시 점검 별점에 따른 사후조치

구분	지정요건	사후조치
불성실공시기관	· 연간 40점 초과 · 2년 연속 연간 별점 20점 초과하고 전년 대비 증가	· 개선계획서 제출 및 불성실공시 예방 교육 · 알리오에 지정 내역 게시 · 고의·중과실 별점이 50%이상 시 관련자 인사조치 요구
기관주의	· 연간 20점 초과	· 개선 계획서 제출 및 불성실공시 예방 교육

자료: 기획재정부, 「21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2. 4. 8.

- 이외에도 ‘우수공시기관’은 알리오시스템에 게시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경영실적평가에 점검결과를 반영함.
- 2021년도 통합공시점검부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우수공시기관’ 선정기준을 차별화함.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우, 최근 3년 간 별점이 0점이거나 2년 연속 별점이 하락하고 점검연도에 별점이 0점인 기관은 ‘우수공시기관’으로 지정하고 알리오시스템에 해당 기관 명단을 공개함.
 - 기타공공기관²⁴²⁾은 최근 2년간 별점이 0점이거나 점검연도에 별점이 0점이면 ‘우수공시기관’으로 지정됨.

242) 단,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은 기타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3년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음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제15조3항)

- 3년 연속(기타공공기관은 2년 연속) 무벌점기관의 경우 차기 점검 1회에 한해 점검 대상에서 제외함.
- 최근 3년(기타공공기관은 최근 2년) 간 벌점이 전년 대비 50%이상 감소된 경우 ‘공시향상기관’으로 지정함.
- 공기업·준정부기관은 통합공시 점검결과를 경영실적평가 계량지표에 반영(가중치 1점)하여 평가함.
 - 기타공공기관은 주무부처에 점검결과를 통보하여 주무부처가 시행하는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권고함.
 - 기획재정부는 2020년 12월 통합공시기준 개정을 통해 우수공시기관과 공시향상기관에 경영실적평가 상 인센티브를 강화²⁴³⁾한 바 있는데, 이는 2022년 실시하는 2021년도 경영실적평가부터 적용됨.

〈표 III-95〉 우수공시기관과 공시향상기관 지정 요건 및 사후조치

구분	지정요건		사후조치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우수공시기관	3년 연속 무벌점	2년 연속 무벌점	· 차년도 공시점검 면제 · 알리오에 지정 내역 게시 · 경영실적평가에 반영 또는 주무부처에 통보
	2년 연속 벌점 하락 & 점검연도 무벌점	점검연도 무벌점	· 알리오에 지정 내역 게시 · 경영실적평가에 반영 또는 주무부처에 통보
공시향상기관	최근 3년간 벌점이 전년 대비 50% 이상 감소	최근 2년간 전년 대비 벌점 50% 이상 감소	· 주무부처에 통보

자료: 기획재정부, 「21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2. 4. 8.

2) 2021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

기획재정부는 2021년 경영공시 의무 대상인 348개²⁴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도 통합공시점검을 실시함.

243)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평가 시 ‘국민소통’ 지표(계량, 1점)를 통해 통합공시 점검결과를 반영하는 것에 추가하여 우수공시기관에 한해 2021년도 경영실적평가부터 ‘혁신노력 및 성과’ 지표(비계량, 1점)를 통해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공시향상기관에 대해서는 공시점검 관련 경영실적평가 득점(최대 1점 이내)에 최대 0.05점까지 추가 배점할 수 있도록 개선함

244) 2021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350개 기관 중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은 2021년 9월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통합되었고, 아시아문화원과 한국예탁결제원은 2022년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되었으나 한국예탁결제원은 이번 통합공시점검 대상에 포함됨.

- 2021년도 점검부터는 공공기관 공시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점검 횟수를 매년 2차례에서 3차례로 확대해 실시함.
 - 기관이 제출한 공시내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토대로 노무법인과 회계법인이 공동으로 서면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항목의 중요성과 과실 정도에 따라 별점을 부과함.
 - 1차 점검은 2021년 5~8월, 2차 점검은 2021년 11~12월, 3차 점검은 2022년 1~3월에 실시됨.
 - 통합공시점검 41개 항목 중 노무 항목 11개와 재무 항목 12개 총 23개 항목이 점검 항목으로 지정됨.
- 이번 점검에서는 일반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시 점검을 위해 온라인 점검단을 처음으로 구성하여 공시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함.
- 또한, 공시품질 향상을 위한 기관의 자발적 노력을 권장하고 공시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최초로 공시향상기관을 지정함.

〈표 III-96〉 2021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항목

노무항목(11개)	재무 항목(12개)
임직원 채용정보, 복리후생비, 안전관리 및 환경보호, 내부규정, 임직원수, 신규채용 현황, 직원 평균보수, 그 밖의 복리후생제도, 노동조합 관련현황,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현황	요약 재무상태표, 요약 손익계산서, 투자 및 출자·출연 현황, 감사보고서, 이사회회의록, 장단기 차입금현황, 수입·지출현황, 납세정보 현황, 감사원/주무부처 지적사항, 사회공헌 활동

주: 점검 항목 수는 1차 10개, 2차 7개, 3차 6개 항목으로 밑줄 친 항목은 1차~2차 또는 2차~3차에 걸쳐 2회 점검한 항목임
 자료: 기획재정부, 「21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2. 4. 8.

- 2014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통합공시점검에 따른 별점 현황과 사후조치 결과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III-97>과 같음.
- 2021년도 점검결과에 따르면, 평균별점(3.9점)과 사후조치 대상기관의 수가 통합공시점검이 최초로 실시된 2013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나타남.
 - 2013년도부터 2021년도 점검까지 평균별점과 사후조치 대상기관 수는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18년도 점검에서는 공시점검 2회 실시, 점검 대상항목 확대²⁴⁵⁾ 및 채용정보 중점 점검의 영향으로 별점과 사후조치 대상기관 수가 다소 증가함.

- 불성실공시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은 2013년 통합공시점검을 실시한 이래 처음으로 해당되는 기관이 없었음.
- 우수공시기관 수는 2014년도 3개에서 2018년도 35개로 꾸준히 증가하다 이후 감소했으나 2021년도에는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우수공시기관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35개로 다시 증가함.
- 점검 대상기관이 2020년 331개에서 2021년 348개 증가하고 점검항목도 2020년 19개에서 2021년 23개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공공기관 전체 평균별점 뿐만 아니라 공시 위반건수²⁴⁶⁾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2021년 1월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당초 350개였으나 2021년도 연중 발생한 한국광해광업공단 출범(구. 한국광물자원공사와 구. 한국광해관리공단 통합)과 구. 아시아문화원 해산을 반영하여 점검 대상기관이 348개로 조정됨.

〈표 III-97〉 공공기관 통합공시 별점 현황(2014~2021년)

(단위: 개, 점)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소계	공기업	준정부	기타
점검 대상	296	311	319	329	335	331	331	348	36	94	218
평균 별점	21.3	10.8	9.5	7.4	8.2	7.5	6.4	3.9	2.1	2.8	4.6
우수공시기관	3	16	18	22	35	22	15	35	4	8	23
공시향상기관	-							21	-	-	21
사후조치대상	151 (51.0%)	43 (13.8%)	26 (8.2%)	20 (6.1%)	27 (8.1%)	20 (6.0%)	8 (2.4%)	2 (0.6%)	-	-	2
불성실공시기관	22	8	3	3	7	4	2	-	-	-	-
기관주의	129	35	23	17	20	16	6	2	-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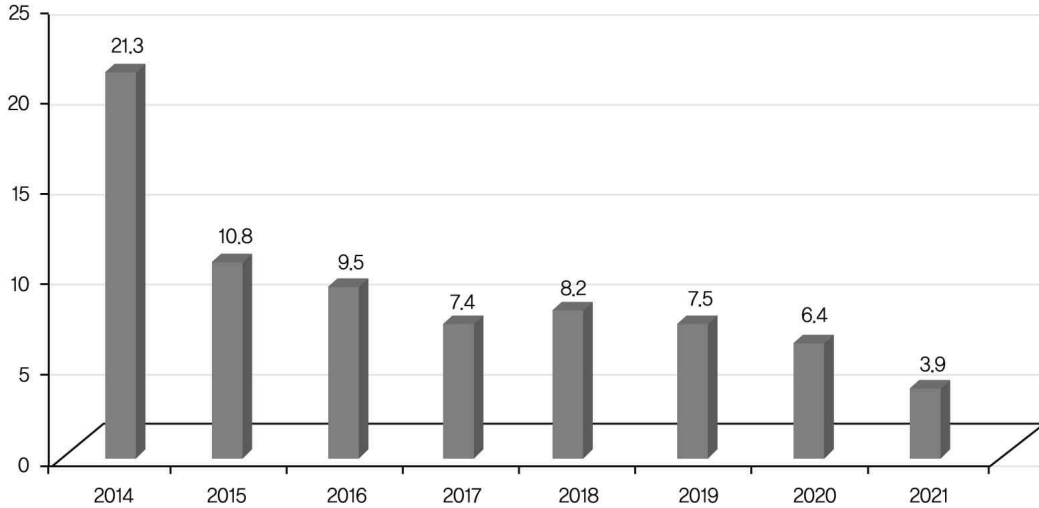
주: 1. 2014년도 기관주의 및 불성실공시기관의 수는 2014년 당시 별점기준으로 지정된 사후조치 대상기관이 아닌 2015년도에 개정된 별점 기준을 적용한 결과임
 2. 공공기관 유형은 해당연도 공공기관 지정결과를 기준으로 함
 3. 공시향상기관 선정은 2021년도 점검부터 실시함
 자료: 기획재정부, 「2017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2018. 3. 21. 및 「21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2022. 4. 8.을 참고하여 작성

245) (2017) 14개 항목 점검 → (2018) 18개 항목 점검

246) 공시 위반건수: (2018년) 1,184건 → (2019년) 852건 → (2020년) 920건 → (2021년) 547건

[그림 III-38] 공공기관 통합공시 평균 벌점(2014~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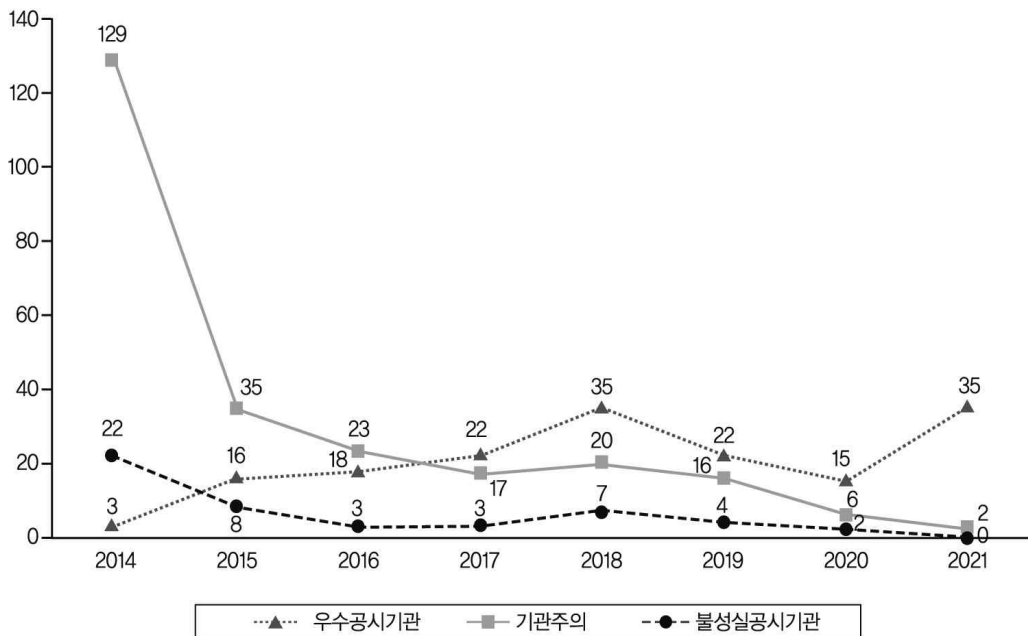
(단위: 점)



자료: 기획재정부, 「2017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18. 3. 21. 및 「21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2. 4. 8.을 참고하여 작성

[그림 III-39]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현황(2014~2021년)

(단위: 개)



자료: 기획재정부, 「2017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18. 3. 21. 및 「21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2. 4. 8.을 참고하여 작성

- 2021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에 따르면, 총 35개 기관이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알리오시스템과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우수공시기관임을 공시함.
 - 우수공시기관 중 최근 3년 연속으로 무벌점인 기관은 한국조폐공사, 한전KDN 등 2개 기관이며, 최근 2년 연속으로 무벌점인 기관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투자공사, 한국특허정보원으로 4개 기관임.
 - 2021년도부터 기타공공기관은 점검연도에 무벌점이기만 하면 우수공시기관으로 지정함에 따라 전체 우수공시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

- 2021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에 따르면, 불성실공시기관 및 기관주의 등 사후조치 대상기관은 총 2개 기관임.
 - 불성실공시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은 없었으며 전년 대비 2개 기관이 감소함.
 - 기관주의 조치 대상인 기관은 (재)축산환경관리원, 수자원환경산업진흥(주) 등 2개 기관으로 전년 대비 4개 기관이 감소함.
 - (재)축산환경관리원은 2020년 39.1점에서 2021년 23점으로 벌점이 크게 감소했으나 수자원환경산업진흥(주)는 2020년 2.5점에서 2021년 24점으로 벌점이 크게 증가함.

〈표 III-98〉 2021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

구 분	판단기준	기관명	후속조치
우수 공시 기관 (35개)	3년 연속 무벌점 (2개)	(공기업) 한국조폐공사, 한전KD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년도 점검면제 ▪ 경영실적평가 반영 또는 주무부처 통보 ▪ 알리오시스템에 게시 및 담당자에 대한 표창 등 지원
	2년 연속 무벌점 (4개)	(기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투자공사, 한국특허정보원	
	2년 연속 벌점 하락&3년 차 무벌점 (10개)	(공기업) 한국중부발전(주), 한국토지주택공사 (준정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실적평가 반영 ▪ 알리오시스템에 게시 및 담당자에 대한 표창 등 지원

<표 III-98>의 계속

구 분	판단기준	기관명	후속조치
우수 공시 기관 (35개)	점검연도 무별점 (19개)	(기타)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재외동포재단,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무부처 통보 ▪ 알리오시스템에 게시 및 담당자에 대한 표창 등 지원
공시향상 기관 (21개)	최근 2년간 전년 대비 별점 50% 이상 감소	(기타)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중소기업연구원, (주)공영홈쇼핑,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국토연구원, 노사발전재단,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울산과학기술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전략물자관리원, 코레일유통(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문화재단,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항공안전기술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무부처 통보 ▪ 알리오시스템에 게시 및 담당자에 대한 표창 등 지원
불성실공시기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선계획서 제출 ▪ 공시책임자 교육 ▪ 고의·중과실 별점 50% 이상시 인사조치 ▪ 알리오시스템 및 기관 홈페이지 게시
기관주의		(재)축산환경관리원, 수자원환경산업진흥(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선계획서 제출 ▪ 공시책임자 교육

주: 공공기관 유형은 2021년도 공공기관 지정결과를 기준으로 함
 자료: 기획재정부, 「21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2. 4. 8.

□ 2021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에 따른 별점 구간별 기관 분포를 살펴보면, <표 III-99>와 같음.

○ 2021년도 점검대상인 348개 기관 중 별점 0점인 기관은 57개(16.4%)이고 사후조치 대상이 되는 별점 20점 초과²⁴⁷⁾ 기관은 2개(0.6%)임.

- 대부분 공공기관(260개, 74.7%)은 별점 0점 초과~10점 이하 구간에 분포함.
- 과거에는 공공기관 유형에 따라 별점 분포 형태가 다르게 나타났으나 최근에는 유형과 상관없이 유사한 형태를 보임.
- 각 유형에서 별점 0점 초과~10점 이하 구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는 별점 0점, 별점 10점 초과~20점 이하 구간 순으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다만 기타공공기관은 별점 0점인 기관의 비중(10.6%)보다 별점 10점 초과 20점 이하 구간에 해당하는 기관의 비중(11.9%)이 다소 더 큰 것으로 나타남.

〈표 III-99〉 2021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 별점 분포 현황

(단위: 개, %)

구 분	소계	0점	0점 초과 ~ 10점 이하	10점 초과~ 20점 이하	20점 초과~ 30점 이하	30점 초과~ 40점 이하	40점 초과
공기업	36 (100)	11 (30.6)	24 (66.7)	1 (2.8)	0 (-)	0 (-)	0 (-)
준정부기관	94 (100)	23 (24.5)	69 (73.4)	2 (2.1)	0 (-)	0 (-)	0 (-)
기타공공기관	218 (100)	23 (10.6)	167 (76.6)	26 (11.9)	2 (0.9)	0 (-)	0 (-)
합계	348 (100)	57 (16.4)	260 (74.7)	29 (8.3)	2 (0.6)	0 (-)	0 (-)

주: 1. () 안은 비중 표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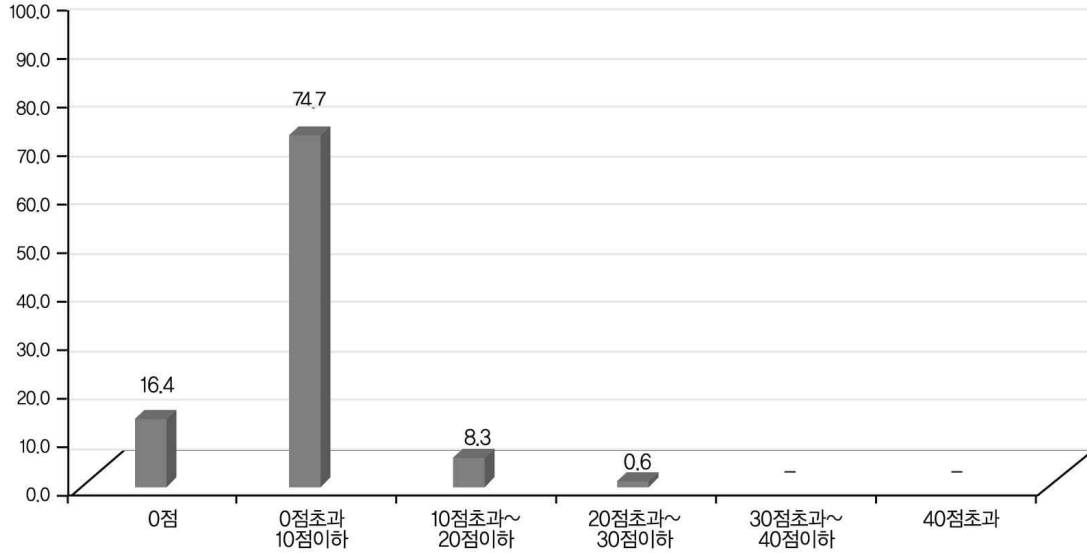
2. 2년간 별점이 20점을 연속 초과하여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된 결과에 대해서 해당 표를 통해서는 파악할 수 없음

3. 공공기관 유형은 2021년도 공공기관 지정결과를 기준으로 함

자료: 기획재정부, 「2021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21. 1. 29. 및 「21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2022. 4. 8.을 참고하여 작성

[그림 III-40] 2021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 별점 분포 현황(전체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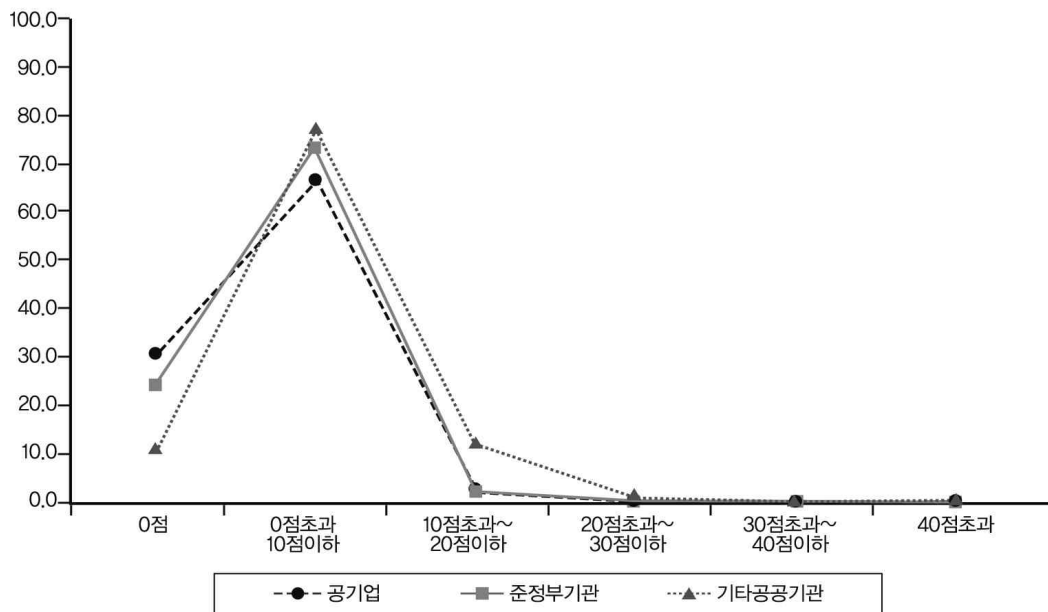
(단위: %)



자료: 기획재정부, 「2021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21. 1. 29. 및 「21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2. 4. 8.을 참고하여 작성

[그림 III-41] 2021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 별점 분포 현황(유형별)

(단위: %)



자료: 기획재정부, 「2021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21. 1. 29. 및 「21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2. 4. 8.을 참고하여 작성

□ 부처별 산하 공공기관의 별점 구간별 분포를 살펴보면 <표 III-100>과 같음.

<표 III-100> 주무부처별 소관 공공기관의 2021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 별점 분포

(단위: 개)

구 분	소계	0점	0점 초과~ 10점 이하	10점 초과~ 20점 이하	20점 초과~ 30점 이하	30점 초과~ 40점 이하	40점 초과
기획재정부	4	2	2	0	0	0	0
교육부	22	2	17	3	0	0	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7	7	38	2	0	0	0
외교부	3	1	2	0	0	0	0
통일부	2	0	2	0	0	0	0
법무부	3	0	2	1	0	0	0
국방부	3	0	2	1	0	0	0
행정안전부	3	1	1	1	0	0	0
문화체육관광부	31	4	25	2	0	0	0
농림축산식품부	12	0	11	0	1	0	0
산업통상자원부	39	12	26	1	0	0	0
보건복지부	27	6	19	2	0	0	0
환경부	12	2	9	0	1	0	0
고용노동부	12	5	5	2	0	0	0
여성가족부	5	2	3	0	0	0	0
국토교통부	28	3	23	2	0	0	0
해양수산부	17	1	15	1	0	0	0
중소벤처기업부	11	0	10	1	0	0	0
국무조정실	25	2	19	4	0	0	0
방송통신위원회	2	0	2	0	0	0	0
원자력안전위원회	3	0	3	0	0	0	0
금융위원회	8	3	5	0	0	0	0
공정거래위원회	2	1	1	0	0	0	0
인사혁신처	1	1	0	0	0	0	0
국가보훈처	3	1	1	1	0	0	0
관세청	1	0	1	0	0	0	0
방위사업청	2	0	1	1	0	0	0
문화재청	1	0	1	0	0	0	0
산림청	4	0	2	2	0	0	0
농촌진흥청	1	0	1	0	0	0	0
특허청	5	1	3	1	0	0	0
식품의약품안전처	4	0	3	1	0	0	0
기상청	3	0	3	0	0	0	0
경찰청	1	0	1	0	0	0	0
소방청	1	0	1	0	0	0	0
합계	348	57	260	29	2	0	0

자료: 기획재정부, 「2021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21. 1. 29. 및 「21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2022. 4. 8.을 참고하여 작성

- 2021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에 따르면, 전체 통합공시점검 대상기관 348개 중 57개 기관이 전년도에 비해 후속조치 수준이 개선된 반면 13개 기관은 후속조치 수준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후속조치 수준이 전년 대비 1단계 개선된 기관은 27개 기관으로, 2020년도 점검 결과상 사후조치대상이 아니었다가 2021년도 점검결과상 공시향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이 21개 기관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2021년도 점검부터 공시향상기관을 신설함에 따라 1단계 개선된 기관의 수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함.
- 전년 대비 후속조치 수준이 2단계 이상 개선된 기관은 30개 기관으로 이 중 28개 기관은 사후조치대상이 아니었다가 우수공시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임.
 - 28개 기관 중 기타공공기관이 18개 기관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는 2021년도부터 기타공공기관의 우수공시기관 지정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우수공시기관인 기타공공기관의 수가 2020년 9개에서 2021년 23개로 크게 증가했기 때문임.
- 후속조치 수준이 전년 대비 1단계 하락한 기관은 13개 기관으로, 2020년도에는 우수공시기관이었으나 2021년도에는 사후조치대상이 아니게 된 기관이 11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표 Ⅲ-101〉 2021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 전년 대비 변동 현황

구 분	기관명
개선된 기관 (57개)	<p>[사후조치대상 아님 → 공시향상기관(21개)]</p> <p>(기타공공기관: 21개)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주)공영홈쇼핑,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국토연구원, 노사발전재단,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울산과학기술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전략물자관리원, 코레일유통(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문화재단,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항공안전기술원</p>
	<p>[기관주의 → 사후조치대상 아님(6개)]</p> <p>(기타공공기관: 6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산업연구원, 전남대학교병원, 한국저작권보호원</p>

〈표 III-101〉의 계속

구 분	기관명
개선된 기관 (57개)	<p>[사후조치대상 아님 → 우수공시기관(28개)]</p> <p>(공기업: 2개) 한국중부발전(주), 한국토지주택공사</p> <p>(준정부기관: 8개)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p> <p>(기타: 18개)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재외동포재단,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투자공사,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p>
	<p>[불성실 공시기관 → 사후조치대상 아님(2개)]</p> <p>(기타공공기관: 4개) 국립중앙의료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p>
하락한 기관 (13개)	<p>[우수공시기관 → 사후조치대상 아님(11개)]</p> <p>(공기업: 1개) 한국가스공사</p> <p>(준정부기관: 3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산업단지공단</p> <p>(기타공공기관: 7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코레일관광개발(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p>
	<p>[사후조치대상 아님 → 기관주의(2개)]</p> <p>(기타공공기관: 2개) (재)축산환경관리원, 수자원환경산업진흥(주)</p>

주: 공공기관 유형은 2021년도 공공기관 지정결과를 기준으로 함
 자료: 기획재정부, 「2020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1. 4. 9. 및 「21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2. 4. 8.을 참고하여 작성을 참고하여 작성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17년 7월 이후 공공부문 상시·지속업무 종사 비정규직 199,538명 정규직 전환」, 보도자료, 2021. 3. 5.
- _____, 「2018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준수율 82.1%」, 보도자료, 2019. 2. 28.
- _____, 「2021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22. 2. 24.
- _____, 「공공부문 1단계 기관 정규직 전환 추진실적자료(8차)」, 2022. 3. 4.
- _____,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 매뉴얼」, 2020. 12.
- 관계부처합동, 「2019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2020. 7. 24.
- _____, 「제4차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2022. 5.
- 국민권익위원회,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20. 12.
- _____, 「2020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20. 12.
- _____, 「2020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결과」, 2020. 12.
- _____, 「202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21. 12.
- _____, 「202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 2021. 7.
- _____, 「2021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21. 12.
- _____, 「2021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결과」, 2021. 12.
- 국토교통부, 「'기상청+3개 공공기관' 대전 이전 확정」, 보도자료, 2021. 10. 25.
- _____, 「2021년 지역발전 추진실적 및 2022년 추진계획」, 2022. 4. 26.
- _____, 「2021년도 공공기관별 지역인재 채용실적(혁신도시법 제29조의2)」, 2022. 2. 11.
- _____,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방안」, 보도자료, 2021. 6. 7.
- _____, 「철도공사·수자원공사 등 21개 기관에서도 지역인재 뽑는다」, 보도자료, 2020. 5. 27.
- 국회예산정책처, 「2022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중점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분석보고서, 2021. 10.
- 기획재정부, 「'14~'18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도자료, 2014. 9. 22.
- _____, 「'15~'19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도자료, 2015. 9. 16.
- _____, 「'16~'20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도자료, 2016. 9. 2.
- _____, 「'17~'21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도자료, 2017. 8. 30.
- _____, 「'18~'22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도자료, 2018. 8. 31.

- _____, 「'19~'23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도자료, 2019. 9. 2.
- _____, 「'21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2. 4. 8.
- _____, 「'22~'26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주요내용」, 보도자료, 2022. 8. 31.
- _____, 「14개 재무위험기관 재정건전화계획을 반영한 '22~'26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보도자료, 2022. 8. 31.
- _____, 「2016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기본계획(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16. 7. 1.
- _____, 「2017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18. 3. 21.
- _____,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19. 6. 20.
- _____, 「2018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기본계획(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18. 8. 24.
- _____,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0. 6. 19.
- _____, 「2020~2024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주요 내용」,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0. 8. 26.
- _____,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보도자료, 2021. 6. 18.
- _____,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 수정 및 향후 조치계획(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1. 6. 25.
- _____, 「2020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1. 4. 9.
- _____, 「2021~2025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주요 내용」,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1. 8. 26.
- _____,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보도자료, 2022. 6. 20.
- _____,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2. 6. 20.
- _____,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실시계획」,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2. 3. 3.
- _____,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보도자료, 2022. 4. 29.


- _____, 「2021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보도자료, 2022. 4. 12.
- _____, 「2021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기본계획(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1. 7. 29.
- _____, 「2021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계획」,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1. 12. 29.
- _____, 「2021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최종 확정」, 보도자료, 2022. 5. 4.
- _____, 「2021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21. 1. 29.
- _____, 「2021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 2020. 12. 8.
- _____, 「2021년도 안전관리등급 평가 착수」, 보도자료, 2022. 1. 26.
- _____, 「2021년도 통합공시 점검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22. 4. 8.
- _____, 「2022년 정부 출자주식 배당금 2조 4,541억 원 확정」, 보도자료, 2022. 5. 31.
- _____, 「2022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22. 1. 28.
- _____, 「2022년도 공공기관 지정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2. 1. 28.
- _____, 「202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2021. 12. 8.
- _____,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방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1. 8. 31.
- _____,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 보도자료, 2021. 8. 31.
- _____, 「공공기관 윤리경영 표준모델 구축방안(중간보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1. 8. 31.
- _____, 「공공기관 윤리경영 표준모델 확정 - 핵심위험 맞춤형 통제방안 등으로 공공기관 윤리문화 강화 추진 -」, 보도자료, 2021. 12. 12.
- _____, 「공공기관 윤리문화 확립을 위한 윤리경영 표준모델」,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1. 12. 8.
- _____,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0. 6. 5.
- _____,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강화방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2. 6. 3.
- _____, 「공공기관 재무위험기관 14개 선정」, 보도자료, 2022. 6. 30.
- _____, 「공공기관 채용비리 엄중 제재 및 상시감독체계 구축」, 보도자료, 2018. 9. 18.
- _____, 「공공기관 통합공시 개선방안(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0. 2. 26.
- _____, 「공공기관 통합공시 개선방안(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0. 12. 8.
- _____, 「공공기관 통합공시 매뉴얼, 전자문서 작성지침」, 2022. 3. 23.
- _____,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2. 2. 4.

- _____,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1. 2. 26.
- _____,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2020. 12. 29.
- _____,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1. 4. 9.
- _____,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보수지침 일부개정안」, 2021. 10. 1.
- _____,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보수지침 전면개정안」, 2018. 3. 8.
- _____, 「기재부, 공공기관 공시 역량 강화지원 프로그램 시행」, 보도자료, 2020. 6. 17.
- _____,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보도자료, 2022. 7. 29.
- _____,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보도자료, 2016. 6. 14.
- _____, 「자율·책임·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보도자료, 2022. 8. 18.
- _____, 「재무위험 공공기관 선정·집중관리제도 도입」, 보도자료, 2022. 6. 3.
- _____,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도 추진계획」,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22. 6. 30.
- _____, 「정부, '21~'25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국회제출」, 보도자료, 2021. 8. 31.
- _____, 「통합공시를 통해 공공기관의 ESG 경영 선도」, 보도자료, 2022. 2. 4.
- _____,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수정)』, 2021. 10.
- _____, 『2021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평가 편람』, 2021. 12.
- _____, 『2022 기금현황』, 2022. 7. 5.
-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공공기관 현황 편람』, 2021. 11.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 - 425호)」, 행정예고안, 2022. 5. 24.
- 한국석유공사, 「2021년~2025년 한국석유공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2021. 8.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부 “러시아 특별경제조치 대상에 한국기업 없어…영향 제한적”」, 정책뉴스, 2022. 5. 13.,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1585>, 검색일자: 2022. 8. 26.
- 『정책주간지 공감』, 「“물가 충격”… 대통령이 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 정책뉴스, 2022. 7. 10., <https://gonggam.korea.kr/newsView.do?newsId=GAJpWdCEwDDGJ000>, 검색일자: 2022. 8. 26.
-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홈페이지, <http://innocity.molit.go.kr>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시스템), <http://www.alio.go.kr>



부 록

- 부록 1.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현황
- 부록 2. 공공기관 일반현황
- 부록 3. 「국가재정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 현황
- 부록 4. 2021년도 기관 경영실적 평가지표체계

부 록 1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현황(350개, 2022. 1월 현재)

(단위: 개)

주무부처	공기업(36)		준정부기관(94)		기타공공기관(220)
	시장형(15)	준시장형(21)	기금관리형(13)	위탁집행형(81)	
기획재정부 (4)		한국조폐공사 (1)		한국재정정보원 (1)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2)
교육부 (22)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1)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2)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부설기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19)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47)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우체국물류지원단,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부설기관: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부설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10)	(재)우체국시설관리단,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광주과학기술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기초과학연구원(부설기관: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대구경북과학기술원(부설기관: 한국뇌연구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부설기관: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부설기관: 녹색기술센터), 한국과학기술원(부설기관: 고등과학원, 나노융합기술원, 한국과학영재학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부설기관: 세계김치연구소),

주무부처	공기업(36)		준정부기관(94)		기타공공기관(220)
	시장형(15)	준시장형(21)	기금관리형(13)	위탁집행형(81)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47)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부설기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부설기관: 안전성평가연구소) (37)
외교부 (3)				한국국제협력단	(1)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2)
통일부 (2)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
법무부 (3)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3)
국방부 (3)					국방전직교육원,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3)
행정안전부 (3)				한국승강기안전공단	(1)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
문화체육관광부 (31)		그랜드코리아레저(주) (1)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2)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관광공사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세종학당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예술의전당, 재단법인 국악방송,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포럼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5)

주무부처	공기업(36)		준정부기관(94)		기타공공기관(220)
	시장형(15)	준시장형(21)	기금관리형(13)	위탁집행형(81)	
농림축산식품부 (12)		한국마사회 (1)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5)	(재)축산환경관리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식진흥원 (6)
산업통상자원부 (41)	(주)강원랜드,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11)	(주)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DN, 한전KPS(주) (6)	한국무역보험공사 (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12)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전MCS(주),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11)
보건복지부 (28)			국민연금공단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부설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서울요양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육진흥원 (8)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이동권리보장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단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 (19)

주무부처	공기업(36)		준정부기관(94)		기타공공기관(220)
	시장형(15)	준시장형(21)	기금관리형(13)	위탁집행형(81)	
환경부 (12)		한국수자원공사 (1)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4)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자원환경산업진흥원, 한국상하수도협회, 환경보전협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7)
고용노동부 (12)			근로복지공단 (1)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4)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7)
여성가족부 (5)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3)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
국토교통부 (28)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2)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식회사 에스알,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7)		국가철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안전관리원,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6)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립항공박물관, 새만금개발공사, 재단법인 건설기술교육원, 주택관리공단(주),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항공안전기술원 (13)
해양수산부 (17)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2)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해양환경공단 (3)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4)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부설기관: 극지연구소,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해양진흥공사 (8)
중소벤처기업부 (11)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3)	(주)공영흡쇼핑,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 (6)

주무부처	공기업(36)		준정부기관(94)		기타공공기관(220)
	시장형(15)	준시장형(21)	기금관리형(13)	위탁집행형(81)	
국무조정실 (25)					건축공간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부설기관: 육아정책연구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부설기관: KDI국제정책대학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25)
방송통신위원회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		시청자미디어재단 (1)	
원자력안전위원회 (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통계기술원 (3)
금융위원회 (7)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4)	서민금융진흥원 (1)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2)
공정거래위원회 (2)				한국소비자원 (1)	한국공정거래조정원 (1)
국가보훈처 (3)				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	88관광개발(주) (1)
인사혁신처 (1)			공무원연금공단 (1)		
식품의약품안전처 (4)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1)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3)

주무부처	공기업(36)		준정부기관(94)		기타공공기관(220)
	시장형(15)	준시장형(21)	기금관리형(13)	위탁집행형(81)	
관세청 (1)					(재)국제원산지정보원 (1)
방위사업청 (2)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2)
경찰청 (1)				도로교통공단 (1)	
소방청 (1)				한국소방산업기술원 (1)	
문화재청 (1)					한국문화재단 (1)
산림청 (4)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3)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1)
농촌진흥청 (1)				한국농업기술진흥원 (1)	
특허청 (5)				한국특허전략개발원 (1)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정보원(부설기관 특허정보진흥센터) ²⁴⁸⁾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4)
기상청 (3)				한국기상산업기술원 (1)	(재)APEC기후센터,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2)

248) 한국특허정보원은 「발명진흥법」 제20조의3에 따라 민법상 재단법인에서 법정법인으로 전환하였으며 부설기관인 구.특허정보진흥센터는 2022. 8. 4.일자로 한국특허정보원으로 부터 분리하여 「민법」상 재단법인 형태(독립법인)의 한국특허기술진흥원으로 신규 출범함

부 록 2 공공기관 일반현황(2022. 1월 기준)²⁴⁹⁾

1 공기업(36개)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1] 시장형 공기업(15개)						
(주)강원랜드	산업통상 자원부	상법 및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1998.06.29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낙후된 폐광지역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 전과 폐광지역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 함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kangwonland.high1. com
부산항만공사	해양 수산부	항만공사법	2004.01.16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부산항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 중심기 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 지함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 (중앙동6가)	www.busanpa.com
인천국제공항공사	국토 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1999.02.01	인천국제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 및 관 리운영하고 세계적인 공항전문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원활한 항공운송과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www.airport.kr
인천항만공사	해양 수산부	항만공사법	2005.07.11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 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인천 항을 경쟁력있는 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www.icpa.or.kr

249) 2022년 1월 지정 공공기관(350개)과 그 부설기관(20개)을 포함(2022. 8. 4일자로 독립법인(한국특허기술진흥원)으로 전환된 구. 특허정보진흥센터 포함)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가스공사	산업통상 자원부	한국가스공사법	1983.08.18	가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한 국민생활 편익과 공공복리 향상에 기여함	대구광역시 동구 침단로 120	www.kogas.or.kr
한국공항공사	국토 교통부	한국공항공사법	2002.03.02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관리·운영하고, 항공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항공수송을 원활하게 하 고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복지의 증진 에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www.airport.co.kr
한국남동발전(주)	산업통상 자원부	상법 및 (舊)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 관한법률	2001.04.02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및 이와 관련되 는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함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 123번길 32(충무공동)	www.koenergy.kr
한국남부발전(주)	산업통상 자원부	상법 및 (舊)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 관한법률	2001.04.02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창출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 여함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4층, 30~35층	www.kospo.co.kr
한국동서발전(주)	산업통상 자원부	상법 및 (舊)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 관한법률	2001.04.02	전력자원의 개발과 발전 및 이와 관련 되는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함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95	www.ewp.co.kr
한국서부발전(주)	산업통상 자원부	상법 및 (舊)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 관한법률	2001.04.02	전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전기사용 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게 하여 전력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함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중앙로 285	www.iwest.co.kr
한국석유공사	산업통상 자원부	한국석유공사법	1979.03.03	석유자원의 개발, 석유의 비축, 석유유 통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석유수급의 안정을 도모 함과 아울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05	www.knoc.co.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수력원자력(주)	산업통상 자원부	상법 및 (舊)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 관한법률	2001.04.02	친환경, 고품질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우수기술의 공유를 통해 국가 에너지 경쟁력과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기 여하고자 함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불곡로 1655	www.khnp.co.kr
한국전력공사	산업통상 자원부	한국전력공사법	1961.07.01	전원개발을 촉진하고 전기사업의 합리 적인 운영을 기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 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www.kepco.co.kr
한국중부발전(주)	산업통상 자원부	상법 및 (舊)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 관한법률	2001.04.02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및 이와 관련되 는 사업 등 안정적 전력공급을 목적으 로 함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북로 160(대천동)	www.komipo.co.kr
한국지역난방공사	산업통상 자원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9조	1985.11.01	효율적인 집단에너지 공급을 통해 기후 변화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 지절약 및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에 기 여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368	www.kdhc.co.kr

[2] 준시장형 공기업(21개)

(주)한국가스기술공사	산업통상 자원부	상법 및 한국가스공사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1993.05.27	천연가스 생산기지 및 전국 주배관망 등 천연가스 설비의 예방점검과 책임정 비를 통해 천연가스의 안전하고 안정적 인 생산·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1227	www.kogas-tech.or.kr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문화체육 관광부	상법 및 카지노 영업허가	2005.09.06	외국 관광객 유치증진 및 외화획득증대, 한국카지노 산업의 투명성 및 국제 경 쟁력 제고, 이익금의 관광인프라 구축 및 주주 가치의 극대화와 사회공헌활동 을 통한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610	www.grandkorea.com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대한석탄공사	산업통상 자원부	대한석탄공사법	1950.11.01	석탄광산의 개발을 촉진하고 석탄의 생산·가공·판매 및 그 부대사업을 운영하게 하여 석탄의 수요와 공급을 안정시킴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강원도 원주시 배울로 85	www.kocoal.or.kr
여수광양항만공사	해양 수산부	항만공사법	2011.08.19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여수항과 광양항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대로 465	www.ygpa.or.kr
울산항만공사	해양 수산부	항만공사법	2007.07.05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울산항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71 울산항마린센터	www.upa.or.kr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국토 교통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6조	2002.05.15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함으로써 국가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에 이바지 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4 (영평동)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엘리트빌딩	www.jdcenter.com
주식회사 에스알	국토 교통부	상법 및 철도사업법 제5조	2013.12.27	이용자의 고속철도 서비스 선택권 확대와 합리적 경쟁을 통한 철도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56길 12	www.srail.or.kr
주택도시보증공사	국토 교통부	주택도시보증법 제16조	1993.04.24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과 주택도시보증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www.khug.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광해광업공단	산업통상 자원부	한국광해광업공단법	2021.09.10.	체계적인 광해관리와 광물자원산업의 육성·지원으로 지역 및 국민경제 활성화와 자원안보에 기여함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199	www.komir.or.kr
한국도로공사	국토 교통부	한국도로공사법	1969.02.15	도로의 설치 및 관리와 이에 관련된 사업을 통해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이바지함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www.ex.co.kr
한국마사회	농림축산 식품부	한국마사회법	1949.09.29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말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과 여가선용을 도모함	경기도 과천시 경마공원대로 107	www.kra.co.kr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방송통신 위원회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2012.05.23	광고판매 대행, 방송광고 균형발전, 방송통신광고 진흥사업 및 방송광고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태평로1가 25)	www.kobaco.co.kr
한국부동산원	국토 교통부	한국부동산원법	1969.04.25	부동산 시장의 조사·관리 및 부동산의 가격 공시와 통계·정보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 부동산 시장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와 부동산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www.reb.or.kr
한국수자원공사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법	1967.11.16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관리하여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www.kwater.or.kr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	산업통상 자원부	상법	1975.10.01	친환경 에너지 기술을 기반으로 미래 에너지산업을 선도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269 (울곡동)	www.kepco-enc.com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조폐공사	기획재정부	한국조폐공사법	1951.10.01	은행권, 주화, 국·공채, 각종 유가증권 및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할 특수제품의 제조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67	www.komsco.com
한국철도공사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법	2005.01.01	철도운영에 관한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철도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www.korail.com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2009.10.01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공급, 도시의 개발·정비, 주택의 건설·공급·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27-2)	www.lh.or.kr
한전KDN	산업통상자원부	상법	1992.01.23	전력사업과 관련된 시스템 통합(SI) 및 시스템운영(SM) 사업 수행,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수행, 지능형 전력망(Smart-Grid) 관련 사업 수행 등을 목적으로 함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61	www.kdn.com
한전KPS(주)	산업통상자원부	상법	1984.04.01	발전·송전 등 전력설비 성능과 신뢰도 제고로 전력의 안정적 공급 및 전력산업 발전에 기여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11	www.kps.co.kr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	2008.01.21	해양환경의 보전·관리·개선 및 해양오염방제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깨끗하고 풍요로운 해양환경을 조성하여 미래 녹색실현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www.koem.or.kr

② 준정부기관(94개, 부설기관 4개 별도)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1]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13개)						
공무원연금공단	인사 혁신처	공무원연금법 제1조 및 제4조	1982.02.01	공무원의 퇴직,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	www.geps.or.kr
국민연금공단	보건 복지부	국민연금법 제24조	1987.09.18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만성동)	www.nps.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 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1995.05.01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신속공정한 보상과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보험시설의 설치운영 및 근로 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수행으로 근로 자 보호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울산광역시 중구 중가로 340	www.comwel.or.kr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 기업부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	1989.04.01	기술보증제도를 정착·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원활히 하고, 나아가 지역균형발전 및 국민경 제의 균형적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3	www.kibo.or.kr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조	1974.01.11	사립학교 교직원이 퇴직, 사망 및 직무상 질병, 부상, 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 여를 지급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 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 여하고자 함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45 (빛가람동)	www.tp.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문화체육 관광부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	1989.04.20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문화센터	www.kspo.or.kr
신용보증기금	금융 위원회	신용보증기금법	1976.06.01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있는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7	www.kodit.co.kr
예금보험공사	금융 위원회	예금자보호법 제3조	1996.06.01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30	www.kdic.or.kr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 기업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	1979.01.17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기반을 확충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30 (충무공동)	www.kosmes.or.kr
한국무역보험공사	산업통상 자원부	무역보험법 제37조	1992.07.07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4 (서린동)	www.ksure.or.kr
한국언론진흥재단	문화체육 관광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2010.02.01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건전한 발전과 읽기문화 확산 및 신문 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www.kpf.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1962.04.06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부실자산의 정리 촉진과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등의 지원,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재산의 관리·처리업무 등을 수행함으로써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www.kamco.or.kr
한국주택금융공사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2004.03.01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통화와 주택금융 신용보증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1229-1) 부산국제금융센터	www.hf.go.kr

[2]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81개, 부설기관 4개)

(재)우체국물류지원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법 제32조	1980.08.26	안전·신속정확한 우편물류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편익 증진에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76	www.pola.or.kr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법 제32조	1930.12.03	우편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우정문화를 창달함으로써 우정사업 발전과 국민 문화 생활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83 (영등포동 7가)	www.posa.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2000.07.01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의 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보장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 (반곡동)	www.hira.or.kr
국가철도공단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법	2004.01.01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www.kr.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국립공원공단	환경부	국립공원공단법	1987.07.01	국립공원 등의 자연생태계, 자연문화경관 및 지형·지질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국립공원 등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하고 여유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22 (반곡동)	www.knps.or.kr
국립생태원	환경부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3.10.28	생태와 생태계 조사연구전시 및 대국민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올바른 환경의식 함양에 기여하고자 함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금강로 1210	www.nie.re.kr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2000.07.01	건강보험사업과 장기요양사업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국민보건 및 사회보장을 증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www.nhis.or.kr
(부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3조 및 제62조	2000.03.03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에 대한 요양,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00	www.nhimc.or.kr
(부설) 서울요양원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8조,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3조 및 제70조	2014.11.1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개발 및 급여비용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장기요양 서비스 수준 향상과 장기요양 기관의 표준모델을 제시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강남구 현릉로 590길 50 (세곡동 520번지)	www.서울요양원.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국제방송교류재단	문화체육 관광부	민법 제32조	1996.04.10	방송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통해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올바른 이해와 우호 친선 도모하고, 방송영상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지원해 방송 영상광고 산업의 진흥 및 문화예술의 선양에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351	www.arirang.com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 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육성법 제16조	2002.12.30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신기술 심사지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토교통기술 발전·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www.kaia.re.kr
국토안전관리원	국토 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법	2020.12.10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하안전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 보장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함	경상남도 진주시 예나로 128번길 24	www.kalis.or.kr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축산 식품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	2012.05.23	농업 인적자원의 육성, 농식품농촌 정보화의 촉진, 농촌 문화의 가치 확산 및 홍보, 농업경영체의 역량 제고, 농산물의 안전정보 제고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세종특별자치시 국제연구원 5로 19 (반곡동 772-3)	www.epis.or.kr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림축산 식품부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8조	2009.10.02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기획·관리 및 평가의 효율적 지원을 목적으로 함	전라남도 나주시 교육길 45 (빛가람동 352-1)	www.ipet.re.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구.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촌 진흥청	농촌진흥법 제33조	2009.09.07	정부,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민간 등의 농업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산업적 진흥을 목적으로 함	전북 익산시 평동로 457 (송학동 381)	www.koat.or.kr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산업통상 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1962.06.21	무역 진흥과 국내의 기업간의 투자 및 산업 기술 협력의 지원, 해외전문인력의 유치 및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정부간 수출계약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서초구 현릉로 13	www.kotra.or.kr
도로교통공단	경찰청	도로교통법 120조	1954.02.12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홍보·연구·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등을 통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의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예방하고자 함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2 (반곡동)	www.koroad.or.kr
독립기념관	국가 보훈처	독립기념관법	1986.08.20	국난극복사와 국가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전시·조사·연구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민족정신을 북돋우며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독립기념관로 1	www.i815.or.kr
서민금융진흥원	금융 위원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2016.09.23	서민의 금융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4, 그랜드센트럴 9~12, 14층	www.kinfa.or.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 기업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2014.01.01	소상공인 육성, 전통시장·상점가 지원 및 상권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흥동) 대림빌딩 2~3, 11, 16, 18층	www.semash.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시청자미디어재단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제90조의2	2015.05.15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을 위해 시청자 미디어 교육체험홍보, 미디어 교육 확대와 미디어 격차 해소, 시청자 방송참여 활성화 지원, 공정한 미디어 환경 조성 등의 사업을 통해 국가 미디어 사업에 이바지 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4길 4, 3~5층	www.kcmf.or.kr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2005.09.01	연구개발특구 혁신생태계 육성과 공공 기술 사업화 촉진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27-5	www.innopolis.or.kr
(재)우체국금융개발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법 제32조	1966.04.30	우체국금융 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우체국예금보험 사업의 향상발전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동2로 6(당산동4가)	www.posid.or.kr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국토교통부	민법 제32조	1997.12.23	건설기계에 대한 검사와 성능평가 등을 통한 안전기술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54	www.kcesi.or.kr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26조	2009.08.24	정보통신산업의 효율적 지원과 진흥기반 조성을 통해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정통로 10	www.nipa.kr
(부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27조의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8조	2014.03.31	국가 SW정책 중앙연구소로서 SW를 활용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사회혁신을 도모하는 정책대안 수립에 기여하고자 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12번길 22 글로벌R&D센터 A동 4층	www.spri.kr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	2002.01.22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정보화 경영을 효율적으로 촉진함으로써 경영혁신과 생산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세종특별자치시 집현중앙로 79	www.tipa.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창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	2019.10.24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고 기술기반 예비창업자의 창업을 촉진시켜 창업기업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97 캐피탈타워 5층	www.kised.or.kr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법 제36조	2001.07.27	축산물의 품질향상과 유통의 원활 및 가축개량의 촉진을 통하여 국내산 축산물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에 기여하고자 함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1	www.ekape.or.kr
한국가스안전공사	산업통상자원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	1974.01.11	가스안전기술의 개발 및 가스안전관리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가스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가스안전산업 발전에 기여함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90	www.kgs.or.kr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여성가족부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	2015.01.01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가족서비스 전달 체계 지원으로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가족역량 강화 도모에 기여하고자 함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충무로3가, 남산스퀘어) 지상 21, 24층	www.kihf.or.kr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의3	2014.07.29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수립의 지원과 사업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30-80 보건복지행정타운 10층	www.khealth.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고용정보원	고용 노동부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	2006.03.31	고용·직업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인력의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의 작성, 고용관련 통계의 작성·보급 등 위탁받은 업무와 그 밖에 고용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함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태정로 6	www.keis.or.kr
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의2	1967.12.21	과학기술문화의 창달과 창의적 인재육성 체제의 구축을 지원함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 (역삼동, 과학기술회관 2관)	www.kofac.re.kr
한국관광공사	문화체육 관광부	한국관광공사법	1962.06.26	한국관광공사는 관광진흥, 관광자원 개발, 관광산업의 연구개발 및 관광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훈련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10	kto.visitkorea.or.kr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1999.04.22	교육과 학술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제작·조사·수집하고, 교육정보제공체제를 구축·운영함으로써, 교육 및 학술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여 국가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 (동내동) KERIS 빌딩	www.keris.or.kr
한국교통안전공단	국토 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법	1981.07.01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및 교통체계 운영·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안전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 (울곡동)	www.kotsa.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국제협력단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법	1991.04.01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여성, 아동, 장애인, 청소년의 인권 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협력대상국과의 경제 협력 및 우호협력관계 증진,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함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www.koica.go.kr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12조	1977.07.01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지원, 공간정보와 지적제도에 관한 연구, 기술 개발 및 지적측량 등 수행을 목적으로 함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20	www.lx.or.kr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상청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	2009.12.30	기상산업의 진흥 발전, 기상정보의 활용 촉진 및 유통을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가산업·경제발전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35 (충정로 2가, 충정빌딩)	www.kmiti.or.kr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보건복지부	민법 제32조 및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2005.12.27	노인일자리 개발·보급사업, 조사사업, 교육·홍보 및 협력사업, 프로그램 인증 평가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함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하늘마을로 106	www.kordi.or.kr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	1967.12.01	농수산물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사업을 통하여 수급을 안정시키고, 식품산업을 육성하여 농어업인의 소득 증진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빛가람동)	www.at.or.kr
한국농어촌공사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2000.01.01	환경친화적인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규모 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의 증대 및 농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www.ekr.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통상 자원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	1970.05.19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을 위 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 진하기 위해 설립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코리아디자인센터	www.kidp.or.kr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전파법 제66조	1972.07.21	전파의 효율적 관리 및 방송통신전파 의 진흥 및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으 로써 국민의 전파이용 기회 확대와 방 송통신전파 진흥에 기여함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0	www.kca.kr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구.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건 복지부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2007.04.04	보건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등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해당 업무 종사자 등에 게 전문성을 높이는 교육기회를 제공 하고, 보건복지분야의 발전을 도모하 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www.kohi.or.kr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 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1999.02.06	보건산업의 육성·발전과 보건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 으로 수행함으로써 보건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 바지함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www.khidi.or.kr
한국보육진흥원	보건 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제8조	2009.12.23	효과적인 보육관련 사업 수행을 통한 보육의 질 향상과 체계적인 보육정책 지원을 통한 영유아와 부모, 보육교직 원 등 수요자의 만족에 기여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45 주연빌딩 3,4,5,6층	www.kcpi.or.kr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국가 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1981.11.02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진료와 중상이 자에 대한 의학적·정신적 재활 및 직업 재활을 행하여 그 자립정착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40 (반곡동)	www.bohun.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	2009.12.07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지원 및 법령에 의해 위탁받은 사업을 합리적으로 수행하여 공정하고 효과적인 사회보장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www.ssis.or.kr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청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9조	2016.04.18	국민에게 다양하고 체계적인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기여함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121, 2층(둔산동 아너스빌)	www.fowi.or.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8조	2009.05.04	산업기술혁신 촉진 및 산업기술혁신 관련 정책 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2-7, 12-14, 16-17층	www.kiat.or.kr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9조	2009.05.04	산업기술개발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업기술의 혁신을 통한 산업경쟁력과 국가 혁신역량 제고에 기여함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	www.keit.re.kr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	1997.01.10	산업단지의 조성 및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과 기업체의 산업활동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실현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통하여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www.kicox.or.kr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1987.12.09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가 재해예방에 힘쓰도록 하여 국민 경제발전에 기여함	울산광역시 중구 중가로 400	www.kosha.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 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법	1982.03.18	근로자의 평생학습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자격검정, 숙련기술 장려사업 및 고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통해 산업인력 양성 및 수급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	울산광역시 중구 중가로 345 (교동)	www.hrdkorea.or.kr
한국석유관리원	산업통상 자원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	1983.11.1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유통관리, 연구개발, 시험조사 등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서 위탁 또는 지정받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석유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일반의 이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안양관교로 1207	www.kpetro.or.kr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방청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	1977.06.01	소방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소방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소방제품 및 위험물 시설에 대한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대국민 소방안전에 기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함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331	www.kfi.or.kr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 위원회	소비자기본법 제33조	1987.07.01	소비자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www.kca.go.kr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산림청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4	2017.05.17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위해 기후 및 식생대별로 조성한 국립수목원을 운영·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3층	www.koagi.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수산자원공단	해양수산부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	2010.11.18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고 어장관리 및 기술을 연구개발·보급하는 등 수산자원 관리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함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이동길 4	www.fira.or.kr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관리법 제55조	2016.07.01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업과 승강기 안전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안전한 생활과 행복 실현을 목적으로 함	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 102	www.koelsa.or.kr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7.02.13	식품·축산물의 안전관리인증과 그와 관련된 종합적인 지원 사업 및 그 밖에 식품·축산물의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함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5로 156	www.haccp.or.kr
한국에너지공단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5조	1980.07.04	에너지효율향상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및 산업육성으로 온실가스 저감을 유도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23(우정동)	www.energy.or.kr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법 제13조	2009.05.04	에너지기술개발 및 에너지기술 혁신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 친화적인 국가에너지 수급구조 실현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14	www.ketep.re.kr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법	2009.06.26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 인력의 양성 및 활용을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학술 및 과학 기술 진흥과 연구역량 제고에 기여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www.nrf.re.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부설)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한국연구재단 정관 제18조의3	2014.04.01	ICT R&D 기획 및 전략수립, 기술개발, 인력양성, 기반조성, 기술사업화 등 전 주기 지원을 통한 정보통신기술 및 산 업진흥을 목적으로 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548	www.iitp.kr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산업통상 자원부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18조	2009.01.01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18조에 따라 방 사성폐기물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함 으로써 방사성폐기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천길 19	www.korad.or.kr
한국인터넷진흥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2009.07.23	정보통신망의 고도화와 안전한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와 관련한 국제 협력· 국외진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임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www.kisa.or.kr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청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	2012.01.26	산림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실 용화와 임산물의 생산유통정보제공 등을 통한 산림소득증대 및 산업화 촉 진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www.kofpi.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 노동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1990.09.01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59(구미동)	www.kead.or.kr
한국장학재단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2009.05.07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 고등교육 장학지원 제도 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국가와 사회 가 필요로 하는 인재의 육성에 기여함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신암동)	www.kosaf.go.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재정정보원	기획재정부	한국재정정보원법	2016.07.01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정책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재정 업무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수출 등 국제협력 강화를 통해 재정정보화에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남대문로 5가)	www.fis.kr
한국전기안전공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	1974.06.07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점검 및 전기안전에 관한 연구·홍보 등을 통해 전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함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안전로 111	www.kesco.or.kr
한국전력거래소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사업법 제35조	2001.04.02	전력시장의 공정한 운영과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을 추진함으로써 전력산업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25	www.kpx.or.kr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능정보화기본법 제12조	1987.01.30	지능정보사회 관련 정책의 개발과 국가기관등의 지능정보사회 시책 및 지능정보화 사업의 추진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53	www.nia.or.kr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여성가족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2조	1993.02.15	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올바른 인격 형성과 조화로운 성장을 목적으로 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9 센텀사이언스파크	www.kyci.or.kr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조	2010.08.18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에 필요한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47 진양빌딩 2, 5층	www.kywa.or.kr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1조	2009.05.07	콘텐츠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도모하고, 콘텐츠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전라남도 나주시 교육길 35	www.kocca.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특허청	발명진흥법 제55조의2	2012.12.21	정부 및 민간의 연구개발 과정에 고도의 지식재산 전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식재산 연계 사업을 통해 연구개발 성과를 극대화함으로써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와 국가 발전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8층	www.kista.re.kr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2019.07.01	해양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및 해양교통체계 운영·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함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7	www.komsa.or.kr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1998.01.01	해양수산인력의 교육기술훈련 등을 통한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 도모에 기여함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67 (동삼동)	www.seaman.or.kr
한국환경공단	환경부	한국환경공단법	2010.01.01	환경오염방지·환경개선·자원순환촉진 및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 국가발전에 이바지함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종합환경연구단지	www.keco.or.kr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2009.04.08	환경기술의 개발·지원, 환경산업 육성과 친환경생활 확산을 통한 국민의 환경복지 서비스 향상 및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15	www.keiti.re.kr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	2005.11.16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등의 기획·관리·평가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및 해양수산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 60 동원에프앤비빌딩 8~10층	www.kimst.re.kr

③ 기타공공기관(220개, 부설기관 16개 별도)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사)남북교류협력 지원협회	통일부	민법 제32조	2007.05.18	정부 위탁업무 수행 및 정책건의, 남북 교류협력 관련 조사·연구 및 분석 등을 통한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지원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97, 고려대연각센터빌딩 601호	www.sonosa.or.kr
(재)APEC기후센터	기상청	민법 제32조	2005.06.09	아·태지역의 기후변화 및 변동의 파급 효과를 경감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이상기후 감시 및 최적의 기후예측정보를 생산함으로써 아·태지역의 번영 실현에 이바지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7로 12	www.apcc21.org
(재)국제원산지정보원	관세청	민법 제32조	2010.01.22	자유무역협정 및 원산지 관련 연구·조사·정보 보급 확대 등을 통하여 우리 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국민 경제발전에 기여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05번길 8	www.origin.or.kr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문화체육 관광부	민법 제32조	2006.01.12	예술유통의 활성화와 예술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예술현장의 자생력 제고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57길 (연건동) 홍익대학교 대학로캠퍼스 교육동 12층	www.gokams.or.kr
(재)우체국시설관리단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민법 제32조	2000.11.23	우정사업조직에 속한 부동산의 효율적 관리·운영으로 우정자산의 적극적 활용 및 가치향상을 도모, 우정시설의 최적화와 국민의 우체국 이용편의 및 우정사업 종사자에 대한 복지증진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변역로 2(구의동) 동서울우편물류센터 4층	www.poma.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재)일제강제동원 피해자지원재단	행정 안전부	민법 제32조 및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희생자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2014.06.03	일제강제동원 피해·희생자 추모사업 및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한 문화·학술·조사·연구 등 피해구제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603호	www.fomo.or.kr
(재)축산환경관리원	농림축산 식품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제38조의2	2015.05.08	친환경적인 가축사육환경 조성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통한 이용촉진을 효율적으로수행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7층(나성동, 한림프라자)	www.lemi.or.kr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 * 2022년 신규 지정 기관	보건 복지부	민법 제32조	2019.09.24.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표준 마련 및 표준의 적용에 대한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품질향상을 통한 환자안전 및 환자 진료의 연속성 지원 등 보건의료정보와 관련된 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36	www.k-his.or.kr
(주)공영흡소평	중소벤처 기업부	상법	2015.03.05	중소기업 상품 및 농축수산물의 홍보와 판로개척을 지원함으로써 합리적 소비문화와 국민경제 견인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현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34 (상암동)	www.gongyoung.kr
수자원환경산업진흥(주) * 구.(주)워터웨이플러스	환경부	상법	2011.04.26	벧길경관유지·관리, 마리나 운영, 강문화관 운영·관리 및 관광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함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아라옥로 270번길 74	www.kweco.or.kr
88관광개발(주)	국가 보훈처	상법 및 보훈기금법 제7조 제6항	1987.07.30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에 소요되는 보훈기금 증식사업의 일환으로 건설된 88골프장을 운영·관리하기 위해 설립됨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석성로 521번길 169(청덕동)	www.88countryclub.co.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농림축산 식품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	2003.06.27	효율적인 가축방역과 축산물 위생관리 및 수입식용축산물 검역을 통해 축산물의 위생·안전성을 향상시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양축농가의 소득 증대 및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1	www.lhca.or.kr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병원	교육부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	1997.05.07	치의학에 관한 연구와 진료를 하게 함으로써 치의학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구강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강원도 강릉시 죽현길 7	www.gwnudh.or.kr
강원대학교병원	교육부	국립대학병원설치법	2000.05.18	고등교육법에 의한 의학, 치의학 및 간호학 등에 관한 교육, 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강원도 춘천시 백령로 156	www.knuh.or.kr
건설근로자공제회	고용 노동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1997.12.09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퇴직공제사업,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사업 및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사업 등을 실시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설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09 국제빌딩 10층	www.cw.or.kr
건축공간연구원	국무 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2020.11.20	건축과 도시공간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국민 복리의 향상과 국가 및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7~9층	www.auri.re.kr
게임물관리위원회	문화체육 관광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2013.12.23	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행심 유발 또는 조장을 방지하며 청소년을 보호하고 불법 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	www.grac.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경북대학교병원	교육부	국립대학병원설치법	1907.02.10	고등교육법에 의한 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발전을 도모 하고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30	www.knuh.kr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교육부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	2016.06.01	고등교육법에 의한 치의학 및 치의학 관련 학문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치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175	www.knuhdh.kr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교육부	국립대학병원설치법	1987.02.21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 79	www.gnuh.co.kr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2005.07.01	경제·인문사회분야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국가의 연구사업 정책의 지원 및 지식산업발전에 이바지 함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A) 3,4,8,9층	www.nrc.re.kr
(부설) 육아정책연구소(250)	국무조정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관 제4조의2 및 한국교육개발원 정관 제5조의2	2005.09.30	국가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육아정책개발 관련 연구업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유아교육과 보육의 발전을 위한 합리적 정책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육아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함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9층	www.kicce.re.kr

250) 육아정책연구소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승인을 받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교육개발원이 공동으로 설립한 부설기관임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토 교통부	민법 32조	2019.11.2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성과 심사와 공간정보 품질관련 정책 및 연구 개발 등을 통해 공간정보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양산로 91, 1209호, 1404호(당산동3가, 리드윈센터)	www.siqms.or.kr
과학기술일자리 진흥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민법 제32조	2012.12.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연구 개발 사업성과의 활용·확산을 지원하여 과학기술 진흥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13(충정로3가) 삼창빌딩 7층, 10층	www.compa.re.kr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87.01.05	과학기술 및 관련 혁신에 대한 제반문제를 연구·분석함으로써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인프라동(B동) 5,6,7층, 연구지원동(A동) 3층	www.stepi.re.kr
광주과학기술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광주과학기술원법	1993.11.17	첨단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 과학기술인재 양성, 국책 연구개발을 위한 기초·응용연구, 국내외 산학연과의 공동연구 및 광주첨단과학산업기지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함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	www.gist.ac.kr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2014.06.30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의 연구사업 정책의 지원 및 지식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A) 5,6,7층	www.nst.re.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보건복지부	민법 제32조	2011.12.27	생명윤리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 연구 및 교육 등을 실시하여 의생명과학 및 그 기술의 발전 과정에서 안전하게 연구, 개발, 이용될 수 있는 제도적 여건 조성과 관리를 추구하고, 연명의료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장하는 등 생명윤리정책 구현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함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3, DB 다동빌딩 4,5,8층	www.nibp.kr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교육부	평생교육법 제19조	2008.02.15	평생교육법 제19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4	www.nile.or.kr
국립광주과학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2013.07.23	과학기술 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여 전시·교육함으로써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35	www.sciencecenter.or.kr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환경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2015.06.03	국가 생물주권의 조기 확보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함	경상북도 상주시 도남2길 137	www.nnibr.re.kr
국립대구과학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2013.06.24	과학기술 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여 이를 보존·전시하며, 각종 과학기술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과학기술 지식을 보급함으로써 과학기술 문화를 창달하고,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며,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증진에 기여함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테크노대로 6길 20	www.dnsm.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문화체육 관광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5조	2004.07.20	문화유산의 보존·계승 및 이용촉진과 박물관문화·예술사업 추진을 통해 국 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증진하고 편익 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www.nmf.or.kr
국립부산과학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2015.07.13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증진에 기여하고 과학기술 문화를 창달, 과학 기술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여 이를 보존·전시하며 동남권 지역의 과학문 화 확산 기반을 조성하고 학교 밖 과 학교육 활성화에 기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동부산관광6로 59	www.sciport.or.kr
국립암센터	보건 복지부	암관리법 제27조	2000.03.22	암관리법에 따라 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암환자의 진료 등을 수행함으 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323	www.ncc.re.kr
국립중앙의료원	보건 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0.04.02	공공의료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이고, 수준 높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육성 하여 공공의료를 선도하게 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과 국가 보건의료의 발전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45	www.nmc.or.kr
국립항공박물관	국토 교통부	국립항공박물관법	2019.12.23	항공문화와 항공산업의 유산을 발굴· 보존·연구 및 전시함으로써 항공문화 의 진흥과 항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177(공항동)	www.aviation.or.kr
국립해양과학관	해양 수산부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설립)	2020.05.20	해양과학에 관한 자료의 수집, 보존, 전시,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각 종 해양과학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 여 해양에 관한 이해를 증진하고 해양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해양과학길8	www.kosm.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국립해양박물관	해양수산부	국립해양박물관법	2015.04.20	해양문화와 해양산업의 유산을 발굴·보존·연구 및 전시함으로써 해양문화의 진흥과 해양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45	www.mmk.or.kr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5.04.20	해양생물자원의 수집·보존·전시 및 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해양생물자원의 보전 및 해양수산업발전에 기여함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 101번길 75	www.mabik.re.kr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환경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2020.08.21	생물자원과 그 다양성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전시·교육 등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국가 생물주권의 확보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함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도안길 99	hnibr.re.kr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법	1970.08.06	국방에 필요한 병기·장비 및 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연구·개발 및 시험과 이에 관련되는 과학기술의 조사·연구 및 시험 등을 담당하고 민·군기술 협력사업과 민간장비의 시험·평가 지원 사업을 수행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우체국 사서함 35호	www.add.re.kr
국방기술품질원	방위사업청	방위사업법 제32조	2006.02.02	국방과학기술 및 군수품에 관한 기술 기획, 연구와 기술 정보의 확보, 유통, 관리, 품질보증업무 및 이와 관련된 연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국방력의 강화와 자주 국방의 완수에 기여하고자 함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20(충무공동)	www.dtaq.re.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국방전직교육원	국방부	국방전직교육원법	2015.01.01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교육과 취업지원을 함으로써 전역예정군인의 원활한 재취업과 사회복귀에 기여함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대로 83(창곡동)	www.moti.or.kr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림축산식품부	식물방역법 제29조의2	2012.02.22	미국, 캐나다, 칠레 및 뉴질랜드 등으로 출항하는 선박에 대한 아시아메미나방(AGM)검사 및 증명서 발급으로 국내 수출산업을 지원하고,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위탁받은 식물검역 및 방제 업무를 통해서 국내 농업 및 자연생태계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제903호	www.ipab.or.kr
국토연구원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78.10.04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함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반곡동)	www.krihs.re.kr
기초과학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2011.11.21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연구 및 기초과학 기반 순수 기초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창조적 지식 및 원천기술 확보와 우수 연구인력 양성에 기여하고자 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55 (도룡동 3-1)	www.ibs.re.kr
(부설) 국기수리과학연구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의2 및 기초과학연구원 정관 제37조의2	2005.10.01	전문적인 수학연구를 통해 수학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수학을 기반으로 과학기술 및 산업과의 연계강화를 목적으로 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689번길 70	www.nims.re.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노사발전재단	고용노동부	민법 제32조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2007.04.05	노사공동 사업을 통한 노사자율의 상생적인 노사관계 발전 도모, 노사공동의 고용안정, 전직지원, 노사관계 관련 업무의 전문적 수행, 우리나라와 외국의 노사관계 제도, 관행에 대한 국제적 상호 이해 촉진과 민간노동 외교 활성화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www.nosa.or.kr
농업정책보협금융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63조의2	2004.05.19	정부의 농업정책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 및 감독함으로써 농식품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CCMM빌딩 2층	www.apfs.kr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2004.09.07	첨단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식기반산업 및 첨단과학 분야를 연구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함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테크노중앙대로 333	www.dgist.ac.kr
(부설) 한국뇌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뇌연구촉진법 제17조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정관 제3조	2011.12.14	뇌 분야에 관한 연구 및 그 이용과 지원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고 뇌 분야에서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발전시킴을 목적으로 함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61	www.kbri.re.kr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보건복지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2010.12.14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의 상호 협력에 의한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연구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함으로써 단지를 세계적인 의료연구개발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국내 의료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88	www.kmedihub.re.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89.12.29	대외경제정책과 관련한 문제를 조사·연구·분석함으로써 국가의 대외경제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반곡동)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www.kiep.go.kr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무부	법률구조법 제8조	1987.09.01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 변호 등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법률복지 증진에 이바지함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2로 26	www.klac.or.kr
대한장애인체육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	2005.11.25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 진작을 위한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종목별 경기단체, 장애유형별 체육단체 및 시·도 지회를 지원·육성하고 유형별 장애인체육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며 우수한 경기인을 양성하여 국위선양 및 국제스포츠 교류활동을 통한 국제 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벨로드롬 1층	www.koreanpc.kr
대한적십자사	보건복지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1905.10.27	제네바협약의 정신과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따른 적십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적십자 정신의 이상인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 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하고자 함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50	www.redcross.or.kr
대한체육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1920.07.13	체육운동 범국민화로 국민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 우수한 경기자 양성으로 국위선양에 기여하며 올림픽의 원칙과 가치 확산, 스포츠를 통한 국제친선과 세계 평화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문화(올림픽컨벤션)센터	www.sports.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동북아역사재단	교육부	동북아역사재단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2006.09.22	동북아시아 역사문제 및 독도 관련 사항에 대한 장기적·지속적·종합적 연구 및 분석을 실시하고, 체계적·전략적 정책을 개발하며, 홍보·교육활동과 교류·지원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바른역사인식을 공유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 및 번영의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NH농협생명빌딩 서관	www.nahf.or.kr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행정 안전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2001.11.12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	경기도 의왕시 내손순환로 132	www.kdemo.or.kr
부산대학교병원	교육부	국립대학병원설치법	1956.11.01	고등교육법에 의한 의학·치의학·한의학·약학·간호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함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79	www.pnuh.or.kr
부산대학교치과병원	교육부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	2011.09.01	치의학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함으로써 치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함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	www.pnudh.co.kr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2010.09.27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 및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 7, 4·5·14층	www.koreahana.or.kr
산업연구원	국무 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76.01.07	국내외의 산업·기술에 관련된 각종 동향과 정보를 신속히 수집·조사하고 연구하여 이와 관련된 국가의 정책수립에 이바지하고 이를 널리 보급·활용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과 국제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세종특별자치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www.kiet.re.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새만금개발공사	국토 교통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2	2018.09.21	새만금사업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 진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	www.sdco.or.kr
서울대학교병원	교육부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1978.07.15	서울대학교병원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간호학 및 약학 등에 관한 교육, 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발전을 도 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www.snuh.org
(부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육부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제3조 및 서울대학교병원정관 제4조	2003.04.15	서울대학교병원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간호학 및 약학 등에 관한 교육, 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발전을 도 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 82	www.snubh.org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교육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2004.09.01	치의학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함 으로써 치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 민의 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www.snudh.org
세종학당재단	문화체육 관광부	국어기본법 제19조의2	2012.10.24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및 한국문화 보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2 서초평화빌딩 7, 11, 12층	www.ksif.or.kr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환경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000.07.22	수도권매립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 로써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 물의 적정처리와 자원화를 촉진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함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순환로 170 (백석동)	www.slc.or.kr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의약품 안전처	식품위생법 제67조	2009.06.25	식품안전정보를 수집·분석·제공하고, 식품이력추적관리 사업 등을 전문적이 고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가 식 품안전관리 향상과 국민의 안전한 식 생활에 기여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36, 5층, 11층(원남동, 보령빌딩)	www.foodinfo.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벤처 기업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	2000.08.07	17개 신용보증재단의 공동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도모, 재보증업무 수행을 통한 지역경제발전 및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13, 나라키움대전센터 15층 (월평동)	www.koreg.or.kr
아동권리보장원	보건 복지부	아동복지법 제10조의2	2019.07.16	아동정책 및 아동복지 관련 사업을 종합적·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아동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아동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71 5~7층	www.ncrc.or.kr
에너지경제연구원	국무 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86.09.01	에너지 시장 및 산업의 국내외 환경변화를 조사·분석하고 에너지 정책 연구를 포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가 에너지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5-11	www.keei.re.kr
영상물등급위원회	문화체육 관광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	1999.06.07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을 연령별로 등급분류함으로써 영상물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 1, 3층	www.knrb.or.kr
영화진흥위원회	문화체육 관광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1973.04.03	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30 (우동)	www.kofic.or.kr
예술의전당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예술진흥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	1987.01.07	문화예술의 창달과 국민의 문화향수 기회의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공간의 운영과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406	www.sac.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보건복지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2010.12.15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함으로써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세계적인 의료연구개발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국내 의료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로 123	www.kbiohealth.kr
울산과학기술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울산과학기술원법	2007.09.13	국가의 첨단과학기술 혁신과 지역산업의 기술·지식 발전을 주도할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산업계와의 협동연구, 외국과의 교육·연구 교류, 기술의 이전·사업화의 촉진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 함	울산광역시 울주군 유니스트길 50	www.unist.ac.kr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보건복지부	의료법 제58조의 11	2010.10.26	의료기관 인증 및 평가 통합, 환자안전 활동 지원 등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보건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과 환자안전 수준 제고를 통하여 국민 건강을 유지·증진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길 10, 10층	www.koiha.or.kr
재단법인 건설기술교육원	국토교통부	민법 제32조	1978.04.18	국가기간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그에 필요한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사업(위탁교육 등 포함)을 대행함으로써 산업발전에 기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88	www.kicte.or.kr
재단법인 국악방송	문화체육관광부	민법 제32조	2000.02.14	방송을 통해 국악 및 한국전통문화예술을 국민에 홍보·보급·교육함으로써 국악의 진흥을 도모하는 한편, 한국전통문화예술의 발전 및 지역문화복지향상에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4길12 7, 10~12층	www.igbf.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재단법인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중소벤처 기업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2008.02.19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 촉진으로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제고 및 경제력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 전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www.debc.or.kr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보건 복지부	민법 제32조	2017.06.27	인체조직의 채취, 가공 및 분배 등을 공익적으로 수행하여 조직의 적절한 수급과 안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의 향상에 이바지함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62번길 37, 1006호	kptb.kr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산업통상 자원부	민법 제32조	2006.12.26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에너지복지를 지 속적 으로 확충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에 이바지하고, 에너지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홍보, 국제 협력 등의 사업을 통하여 에너지산업의 발전과 진흥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홍로 152	www.koref.or.kr
재단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보건 복지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2	2019.07.16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 요한 사업 수행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35, 충정빌딩 9층, 10층	www.kdissw.or.kr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보건 복지부	민법 제32조	2017.04.01	뇌사 또는 사망자의 숭고한 기증 정신 을 바탕으로 윤리적이고 안전한 기증 의 관리를 수행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 과 의학 발전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6 국민연금공단충정로사옥 5층	www.koda1458.kr
재외동포재단	외교부	재외동포재단법	1997.10.30	재외동포들의 민족적 유대감 유지와 거주국의 모범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함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55	www.okf.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전남대학교병원	교육부	국립대학병원설치법	1993.03.27	고등교육법에 의한 의학, 치의학 및 간호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	광주광역시 동구 계봉로 42	www.cnuh.com
전략물자관리원	산업통상 자원부	대외무역법 제29조	2007.06.05	전략물자의 수출입업무와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트레이드타워 16층	www.kosti.or.kr
전북대학교병원	교육부	국립대학병원설치법	1994.07.04	고등교육법에 의한 의학, 치의학 및 간호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www.jbuh.co.kr
전쟁기념사업회	국방부	전쟁기념사업회법 제3조	1989.01.31	전쟁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하고, 전쟁의 교훈을 통하여 전쟁 예방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는 데에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용산동 1가 8)	www.warmemo.or.kr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무 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85.02.04	국내·외의 정보화 및 정보통신·방송분야의 정책·제도·산업 등에 관한 각종 정보를 수집·조사·연구하고 이를 보급·활용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정보통신정책의 수립과 국민경제의 향상에 이바지함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정통로 18	www.kisdi.re.kr
정부법무공단	법무부	정부법무공단법	2008.02.15	국가 등의 소송 그 밖의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합법성을 확보하여 국민을 위한 법치행정의 구현에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8길 12	www.kgls.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제주대학교병원	교육부	국립대학병원설치법	2001.11.01	고등교육법에 의한 의학, 치의학 및 간호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 및 제주지역의 보건·의료사업에 이바지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란 13길 15	www.jejunuh.co.kr
주택관리공단(주)	국토교통부	상법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 제2항	1998.09.28	정부의 공기업 경영혁신계획에 의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주택관리 및 임대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함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 137 (충무공동 225-8)	www.kohom.or.kr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	1995.12.21	중소기업제품 판매시설의 설치와 운영, 도·소매, 홍보·전시, 통신판매·전자상거래 등 중소기업 판로지원 종합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309(목동)	www.sbdc.or.kr
중소기업은행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은행법	1961.08.01	중소기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신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9 (을지로2가, 50번지)	www.ibk.co.kr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본법 제25조의2	2004.07.01	「중소기업기본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 중소벤처기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 연구, 평가를 통해 이와 관련된 국가의 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고, 이를 널리 보급·활용하게 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제경쟁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 1가길 77	www.kosi.re.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차세대수치예보 모델개발사업단	기상청	민법 제32조	2020.09.01	시·공간 통합형수치예보모델을 개발함으로써 기상재해 및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35 파크스퀘어 4F	www.kiaps.org
충남대학교병원	교육부	국립대학병원설치법	1972.07.01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 282	www.cnuh.co.kr
충북대학교병원	교육부	국립대학병원설치법	1991.07.20	「고등교육법」에 의한 의학, 치의학, 간호학, 약학 등에 관한 교육 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	www.cbnuh.or.kr
코레일관광개발(주)	국토교통부	상법 및 (舊)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	2004.08.11	철도 인프라와 민간관광 전문경영 노하우 접목을 통한 고품격 서비스 제공으로 철도 부기수의 창출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78	www.korailtravel.com
코레일네트웍스(주)	국토교통부	상법 및 (舊)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	2004.09.21	철도인프라를 활용한 부대수의 창출 및 사업다각화로 철도 경영개선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69(한강로 2가 391) 용산푸르지오써밋 13층, 14층	www.korailnetworks.com
코레일로지스(주)	국토교통부	상법 및 (舊)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	2003.12.31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등 국가물류장에 발생 시 적극적 대응 조치를 통한 물류대란 최소화 및 철도수송의 약점인 일관수송 (Door-to-Door) 서비스 구축으로 고객편의 및 철도수송량 증대를 목적으로 함	경기도 의왕시 오봉로 175	www.koraillogis.com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코레일유통(주)	국토 교통부	상법 및 (舊)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6조	2004.12.02	철도 역사 구내영업과 광고사업의 체계 적인 개발운영을 통해 철도고객의 니즈 충족 및 한국철도공사 수익경영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12	www.korailretail.com
코레일테크(주)	국토 교통부	상법 및 (舊)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6조	2004.12.09	안정적인 철도시설물 유지관리 및 KTX 차량 등 정비 외주화 위탁업무 수행으로 철도공사 인력효율화와 경영 개선에 기여함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476	www.korailtech.com
태권도진흥재단	문화체육 관광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2005.07.01	태권도원 조성·운영 및 태권도 진흥에 기여함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태권도원	www.tpf.or.kr
통일연구원	국무 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91.02.02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제반 사항 을 체계적으로 연구·분석하여 국가의 통일 및 대북정책 수립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www.kinu.or.kr
학교법인한국폴리텍	고용 노동부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39조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6조	1998.02.05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기능기술 자, 기능장 등 기술·기능인력을 양성하 고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 산학협 력사업, 지역산업인력개발 및 취약계층 직업능력개발·교육 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함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	www.kopo.ac.kr
한국개발연구원	국무 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71.03.11	국내외 경제사회 현상에 관한 종합적 연구 및 이에 관련된 사업을 수행함으 로써 국가의 경제정책 수립과 경제발 전에 이바지함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263	www.kdi.re.kr
(부설) KDI국제정책대학원	국무 조정실	한국개발연구원 정관 제4조	1997.12.05	개발 및 공공정책, 공공관리 분야 국 내외 전문인력 양성 및 관련 연구·자 문과 국내외 기관과의 교육·연구 협력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함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263	www.kdischool.ac.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83.06.11	건설 및 국토관리 분야의 원천기술 개 발과 성과 확산을 통해 건설산업 발전 과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국가경제·사 회 발전에 기여함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	www.kict.re.kr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고용노동부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2020.10.05	노사관계 당사자, 고용노동 관련업무 종사자, 국민에 대한 고용노동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을 폭넓게 하고 고용노동 관련업무 종사 자의 전문성 및 노동관계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제고하여 노사갈등을 예방 하고 건전한 노사관계를 정립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경기도 광주시 봉골길 229(문형동)	www.keli.kr
한국고전번역원	교육부	한국고전번역원법	2007.11.23	고전문헌을 수집·정리·번역함으로써 한국학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전통 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1로 85	www.itkc.or.kr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	문화체육 관광부	민법 제32조	2010.04.01	창의적인 공예문화, 디자인문화, 전통 생활문화의 확산과 진흥을 통하여 한 국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경쟁력 을 강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53 해영회관 4~5층	www.kcdf.or.kr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 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	2007.12.03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 해를 자율적인 조정을 통해서 신속하 게 해결하고 새로이 발생하는 산업분 야 및 거래행태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 해 법집행의 효율성을 지원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상공회의소회관 9층	www.kofair.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	1999.02.01	과학기술 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체계적인 조사·분석·평가와 예산의 배분·조정, 과학기술 국제협력 등에 관한 연구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과학기술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39	www.kistep.re.kr
(부설) 국가과학기술 인력개발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관 제3조	2007.11.01	과학기술인력의 자기개발과 변화·혁신에 필요한 교육 제공 및 조사·연구를 통해 국가R&D 투자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4길 45	www.kird.re.kr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66.02.10	국가과학기술을 선도하는 창조적 원천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그 성과를 확산함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14길 5	www.kist.re.kr
(부설) 녹색기술센터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정관 제32조의2	2013.02.01	녹색기술 연구개발 정책수립과 녹색기술 관련 국가 간 연계·협력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17층	www.gtck.re.kr
한국과학기술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원법	1971.02.16	깊이 있는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국가적 중·장기 연구개발과 국가과학기술 저력 배양을 위한 기초·응용연구를 하며, 다른 연구기관이나 산업계 등에 대한 연구지원을 목적으로 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www.kaist.ac.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부설) 고등과학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원법 제3조의2 및 한국과학기술원 정관 제44조	1996.10.01	창조적이고 선도적인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 연구를 수행하고 나아가 우 리나라 기초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할 미래형 과학기술인력을 효율적으로 양 성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85	www.kias.re.kr
(부설) 나노종합기술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한국과학기술원법 제3조의2, 한국과학기술원 정관 제44조	2004.05.04	산업계·학계 및 연구계의 나노기술 관 련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공동활용, 전 문인력의 양성, 연구성과의 실용화 및 기업의 창업 지원을 목적으로 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www.nmfc.re.kr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 한국과학기술원법 제3조의2 및 제14조의3, 한국과학기술원 정관 제44조	1990.09.07	과학기술 혁신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학적 재능이 뛰어난 영재 조기 발굴 및 능력과 소질에 적합한 체계적 교육 실시를 목적으로 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관문로 105-47	www.ksa.hs.kr
한국과학기술정보 연구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62.01.01	국가 과학·기술 정보 분야의 전문 연 구기관으로서 국가 과학기술 진흥과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45	www.kisti.re.kr
한국교육개발원	국무 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72.08.30	한국 교육이 당면한 제반 문제 해결과 미래 교육을 위한 종합적·과학적 연구 를 수행하고 혁신적 교육체제를 개발 함으로써 교육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국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 로 함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교학로 7	www.kedi.re.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98.01.01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을 연구·개발하며 각종 교육평가를 연구·시행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 및 국가 교육 발전에 이바지함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교학로 8	www.kice.re.kr
한국교통연구원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87.08.25	교통·물류 정책과 기술에 관한 종합적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교통 정보 및 데이터를 수집·분석·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발전에 기여함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인프라동	www.koti.re.kr
한국국방연구원	국방부	한국국방연구원법	1987.03.02	군사전략, 군사력 건설 및 자원관리 등 국방정책 전반을 체계적으로 연구·분석함으로써 합리적인 국방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37	www.kida.re.kr
한국국제교류재단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법	1991.12.30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각종 교류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국제적 우호친선 증진을 목적으로 함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55	www.kf.or.kr
한국국제보건 의료재단	보건복지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2006.08.18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 등에 대한 보건의료지원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 재능빌딩 6~8층	www.kofih.org
한국기계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76.12.30	기계분야의 연구개발, 성과확산, 신뢰성평가 등을 통해 국가 및 산업계의 발전에 기여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56	www.kimm.re.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 노동부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52조의2,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6조	1991.11.02	고급기술·기능인력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이론과 현장실기 및 학습조직화 능력을 겸비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인력개발담당자 및 실천공학기술자의 양성」에 기여함	충청남도 천안시 병천면 충절로 1600	www.koreatech.ac.kr
한국기초과학지원 연구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88.08.01	국가과학기술발전의 기반이 되는 기초 과학 진흥을 위한 연구 시설·장비 및 분석과학기술 관련 연구개발, 연구지원 및 공동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69-148	www.kbsi.re.kr
한국나노기술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2003.12.23	나노소자, 화합물 반도체분야의 연구개발 및 지원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나노 기술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관련 산업발전에 기여함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9	www.kanc.re.kr
한국노동연구원	국무 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88.05.09	고용·노동과 관련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연구·분석하고, 이와 함께 고용·노동·사회정책을 개발하며, 국민인식을 제고함으로써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를 지향함을 목적으로 함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www.kli.re.kr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무 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78.04.01	농촌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관한 종합적인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www.krei.re.kr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민법 제32조	1993.02.04	데이터 산업의 성장과 데이터의 사회적 활용 증대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사회의 혁신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길 42 부영빌딩 7~8층	www.kdata.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국토 교통부	상법	2019.05.09	유료도로 이용료 수납 및 이에 관련된 콜센터와 교통방송 제공 등을 통해 이용고객의 편의 증진에 기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57번길 11 2층	www.exservice.co.kr
한국도박문제예방 치유원 * 구.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문화체육 관광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	2013.08.28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와 관련한 예방 및 치유·재활 사업과 활동을 하여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건전한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173 남산스퀘어 8층	www.kcgp.or.kr
한국등산·트레킹 지원센터	산림청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2008.07.21	건강한 등산·트레킹문화의 확산과 국민의 등산·트레킹활동 지원에 이바지함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상로67(비래동)	www.komount.or.kr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산업통상 자원부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 41조	2010.06.24	지능형 로봇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능형 로봇산업 관련 정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함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77	www.kiria.org
한국문학번역원	문화체육 관광부	문학진흥법 제13조	1996.05.06	체계적인 한국문학의 번역·출판과 해외 홍보 및 교류를 통하여 한국문학의 발전 및 세계화에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112길 32(삼성동)	www.ltikorea.or.kr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기본법 제11조의2	2002.12.04	문화예술의 발달, 문화산업 및 관광진흥을 위한 연구, 조사, 평가 추진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www.kcti.re.kr
한국문화예술교육 진흥원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0조	2005.02.03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역량 강화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효율적 지원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76, YTN 뉴스퀘어 11~12층	www.arte.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	2005.08.26	훌륭한 예술이 우리 모두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으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이가 창조의 기쁨을 공유하고 가치 있는 삶을 누리게 함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40	www.arko.or.kr
한국문화재단	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제9조	1980.04.01	우리의 문화재를 보호·보존하고, 전통 생활문화를 창조적으로 계발하여 이를 보급, 활용함으로써 우수한 우리의 민족 문화를 널리 보전 선양함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06(삼성동)	www.chf.or.kr
한국문화정보원	문화체육 관광부	민법 제32조	2002.12.23	문화의 가치가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문화정보화 관련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을 지원함으로써 창의적 지능정보사회의 기반 구축 및 문화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6층/8층	www.kcisa.kr
한국문화진흥 주식회사	문화체육 관광부	상법 제288조	1984.01.24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함	경기도 광주시 삼지곡길 95 (삼동)	www.newseoulgolf.co.kr
한국발명진흥회	특허청	발명진흥법 제52조	1994.12.26	발명진흥사업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발명가의 이익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업계의 기술혁신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www.kipa.org
한국법무보호 복지공단	법무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1953.03.05.	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 지원 및 재범방지 활동을 통해 안전한 공동체를 구현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함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2로 40 산학연유치지원센터 3층	www.koreha.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법제연구원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90.07.30	국내외 법제 및 관련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조사·분석하는 등 입법연구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입법정책을 지원하고 법률 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함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15	www.klri.re.kr
한국벤처투자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의 1	2005.06.29	창업자,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의 성장 발전을 위한 투자의 촉진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한국벤처투자빌딩	www.kvic.or.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70.07.20	국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인구·사회·경제 상황을 조사하고 연구·분석하며, 사회정책 및 사회보장제도를 수립·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로 발전하는 데 이바지함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www.kihasa.re.kr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9조	2008.12.23	의약품·의료기기·의료기술의 임상적 안전성·유효성 및 경제적 효과 등에 관한 과학적 근거를 분석·제공하여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하고, 보건의료정책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하여 건강보험 및 의료재원 투자의 합리성 제고를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보건복지행정타운 3~5층	www.neca.re.kr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1992.04.20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제도를 전문적·객관적으로 운영하고 국내의 시험제도에 대한 조사·연구·개발을 통하여 우수한 보건의료인을 배출함으로써 국가 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45	www.kuksiwon.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사학진흥재단	교육부	한국사학진흥재단법	1989.12.04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및 경영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사학교육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대구광역시 동구 혁신대로 345	www.kasfo.or.kr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1952.02.15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고 각종 사회복지사업과 활동을 협의 조정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14 (공덕동)한국사회복지회관 5층	www.bokji.net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0조	2010.12.31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새마을금고빌딩(6~8층)	www.socialenterprise.or.kr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1조	1966.04.13	기술혁신성과물에 대한 시험평가 및 이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함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0 (충무공동)	www.ktl.re.kr
한국산업은행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법	1954.04.01	산업의 개발·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관리함으로써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4	www.kdb.co.kr
한국상하수도협회	환경부	수도법 제56조	2002.01.21	회원 간 소통과 교류를 통해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급하여 공공복리증진, 물산업 발전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 244(대림동 651-5)	www.kwwa.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85.02.01	생명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및 공 공인프라 구축·운영을 통해 국가생명 과학기술, 산업 발전 및 국가·사회현안 해결에 기여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25	www.kribb.re.kr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89.10.1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근 거로 생산기술 분야의 산업원천 기술 개발 및 실용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지원 및 성과확산 등을 통해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함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양대기로길 89	www.kitech.re.kr
한국세라믹기술원	산업통상 자원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9조의2	2009.05.04	세라믹 연구개발, 시험·분석·평가, 기술 지원 및 정책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여 세라믹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함	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 101	www.kicet.re.kr
한국수자원조사 기술원	환경부	민법 제32조	2017.12.20	건전한 물 순환과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 물관련 재해 피해 최소화 등에 필요한 정확하고 공정한 수자원 기초 자료의 생산·분석·제공 및 이와 관련된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함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9 킨텍스 제2전시장 오피스동 11층(1103~1105호),12층	www.kihs.re.kr
한국수출입은행	기획 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법	1976.07.01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8	www.koreaexim.go.kr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 진흥원	농림축산 식품부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의2	2011.02.25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 및 관리와 참여기업·기관들의 활동 지원을 추진함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국가식품로 100	www.foodpolis.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식품연구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87.12.31	식품 분야의 연구개발, 공익가치창출, 성과확산 및 기술지원 등을 통해 국가 산업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농생명로 245	www.kfri.re.kr
(부설) 세계김치연구소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김치산업진흥법 제13조 및 한국식품연구원 정관 제31조의2	2010.01.01	김치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을 종합적 으로 수행하여 국가기술혁신을 주도하 고, 국내김치산업을 식품산업의 대표적 인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는 데 기여함	광주광역시 남구 김치로 86 (임암동)	www.wikim.re.kr
한국양성평등교육 진흥원	여성 가족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	2003.03.05	양성평등교육 및 성인지 교육을 효율 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진흥시킴 으로써 우리사회의 남녀 차별적 의식 과 관행을 개선하고, 성별에 관계없이 개인의 능력과 소질을 계발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기반의 조성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25	www.kigepe.or.kr
한국어촌어항공단	해양 수산부	어촌·어항법 제57조	1994.03.30	어촌 및 어항의 개발 및 관리, 어장의 효율적인 보전 및 이용, 관련 기술의 개발·연구, 관광 활성화 등을 효율적으 로 수행하기 위함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53 한라시그마벨리 12층	www.fipa.or.kr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77.09.07	에너지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및 성과 확산 등을 통해 국가 성장동력 창출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52	www.kier.re.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에너지정보 문화재단	산업통상 자원부	민법 제32조	1992.03.25	원자력, 신재생, 석탄, LNG 등 전력사업 및 에너지와 관련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보의 보급 확산을 통하여 국민의 에너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증진을 도모하고 에너지문화를 진흥시킴으로써 사회의 공익에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부순환로 1418	www.keia.or.kr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육성재단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2013.01.04	여성과학기술인력 육성·지원 활성화 및 제도·환경 개선을 통해 우수 여성과학기술인재를 양성·활용하여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 한국과학기술회관 2관 6층	www.wiset.or.kr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 가족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	2019.12.19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을 예방·방지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등 우리 사회의 여성인권 향상을 위한 제반 활동을 통해 성평등 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가 보호되는 사회실현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50 센트럴플레이스 3층	www.stop.or.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무 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83.04.21	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한 국가의 성평등 정책 수립과 국민 행복의 향상에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25	www.kwdi.re.kr
한국영상자료원	문화체육 관광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1974.01.18.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관계 문헌·음향자료 등 영상자료의 수집·보존·전시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예술적·역사적·교육적인 발전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컴북로 400	www.koreafilm.or.kr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문화체육 관광부	예술인 복지법 제8조	2012.11.19	재단은 예술인의 복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발전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1, 2층	www.kawf.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1990.02.14	원자력의 생산 및 이용에 따른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 보전에 기여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62	www.kins.re.kr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제7조의2	2012.11.06	원자력과 방사선 안전에 관한 정책과 제도 개발을 지원하고 관련 연구사업 및 국제협력을 기획, 관리하여 원자력·방사선 안전기반 조성에 이바지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4번길 49	www.kofons.or.kr
한국원자력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59.02.03	원자력의 연구·개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여 학술의 진보, 에너지 확보 및 원자력의 이용을 촉진하는데 기여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989번길 111	www.kaeri.re.kr
한국원자력의학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 제13조의2	1963.12.17	방사선 등의 의학적 이용 및 연구개발 업무와 암 진료, 국가적인 방사선비상 진료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 및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75	www.kirams.re.kr
(부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원자력의학원 정관 제32조의2	2010.07.16	정부의 과학기술진흥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이용확대와 핵심연구기능의 지방분산 정책시행 방사능 재난시 현장 비상진료기능 및 원전의 사회적 수용성 확대에 기여함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좌동길 40	www.dirams.re.kr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제6조	2006.06.30	원자력통제 전문기관으로서 원자력 활동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통하여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기여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418	www.kinac.re.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의료기기안전 정보원	식품의약품 안전처	의료기기법 제42조	2012.05.18	국내·외 신개발 의료기기 동향 및 임상정보 등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기술 지원 등으로 의료기기 산업을 육성하고 의료기기 안전관리 향상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마리오타워 305호	www.nids.or.kr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	보건복지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2012.04.09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110 (남대문로 5가) 서울시티타워 20층	www.k-medi.or.kr
한국의약품안전 관리원	식품의약품 안전처	약사법 제68조의3	2012.01.06	의약품 등으로 인한 부작용 및 품목허가정보·품목신고정보 등 의약품 등의 안전과 관련한 각종 정보의 수집·관리·분석·평가·제공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69번길 30 4~6층	www.drugsafe.or.kr
한국잡월드	고용 노동부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의2	2011.11.03	청소년 및 청년 등에게 다양한 직업세계에 대한 탐색과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건전한 직업관 형성과 직업선택 지원에 기여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수서로 501	www.koreajobworld.or.kr
한국장애인개발원	보건 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	1989.04.28	장애인복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평가 및 정책개발, 복지진흥, 자립지원 등을 수행함으로써 장애인 복지발전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5층	www.koddi.or.kr
한국재료연구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76.12.30	소재분야의 연구개발, 성과확산, 시험평가, 기술지원 등을 통해 국가 소재 연구개발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국가 소재산업 발전 및 국가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함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97	www.kims.re.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저작권보호원	문화체육 관광부	저작권법 제122조2	2016.09.30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지원 및 집행, 저작권 보호와 관련한 사항 심의, 저작권 침해실태조사 및 저작권보호기술 연구 등의 수행을 통하여 저작권산업 발전과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서울산업진흥원 4층, 9층, 10층	www.kcopa.or.kr
한국저작권위원회	문화체육 관광부	저작권법 제112조	2009.07.23	저작권과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에 관한 분쟁을 알선·조정하며, 권리자의 권익증진 및 저작물등의 공정한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함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5 층	www.copyright.or.kr
한국전기연구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76.12.29	전력·전기 관련 연구개발, 시험·인증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가 전력·전기산업 발전에 기여함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불모산로 10번길 12	www.keri.re.kr
한국전력국제원자력 대학원대학교	산업통상 자원부	고등교육법 제4조 및 제30조	2011.09.19	전력 및 원자력산업분야의 글로벌 리더십을 갖춘 실무형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저탄소·녹색성장을 선도하여 세계적인 에너지변화 흐름에 앞장서며, 국제적 인적 네트워크를 육성하여 한국 원전의 해외수출에 이바지함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해맞이로 658-91	www.kings.ac.kr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76.12.30	정보, 통신, 전자, 방송 및 관련 융합기술 분야의 핵심·미래기술의 연구개발, 성장동력 창출 및 성과확산을 통해 국가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18	www.etri.re.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제품안전관리원 * 2022년 신규 지정 기관	산업통상 자원부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2	2018.09.21.	제품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기업이 안전한 제품을 제조·유통하도록 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350, 3~4층	www.kips.kr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무 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92.07.15	조세·재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분석함으로써 국가의 조세·재정·공공기관의 운영 관련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www.kipf.re.kr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특허청	발명진흥법 제55조의2	2020.08.05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지원 사업을 통한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와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www.koipa.re.kr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특허청	발명진흥법 제51조	2005.12.09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국내외 분쟁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세우고 국내외 지식재산권의 동향 분석과 신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연구를 통해 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와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3, 9층	www.kiip.re.kr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48.09.13	국내외 육상·해저 지질조사, 지하자원의 탐사·개발·활용, 지질재해 및 지구환경변화 대응 연구개발 및 성과확산을 통해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에 기여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24	www.kigam.re.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97.09.10	직업교육훈련정책 및 자격제도에 관한 연구와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직업교육훈련의 활성화 및 국민의 직업능력 향상에 기여함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반곡동)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www.krivet.re.kr
한국천문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74.09.13	천문우주과학의 연구개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를 확산하여 천문우주과학의 국가적 발전을 달성하고자 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776	www.kasi.re.kr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96.03.02	철도, 대중교통, 물류 등 공공교통 분야의 연구개발 및 성과확산을 통해 국가 및 산업계 발전에 기여함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월암동)	www.krri.re.kr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89.06.17	청소년의 올바른 인성 함양과 잠재력 계발, 청소년의 디지털·글로벌 역량 강화, 청소년 인권과 참여를 위한 사회환경 개선, 소외계층 청소년 복지·지원 등의 정책 개발에 필요한 기초연구와 정책연구를 통하여, 미래사회의 새로운 국가발전 동력 창조에 기여함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www.nypi.re.kr
한국체육산업개발(주)	문화체육관광부	상법 및 국민체육진흥공단 정관 제55조	1990.07.25	88 서울올림픽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복합문화 및 스포츠·레저공간 제공으로 국민건강과 행복 증진, 다양한 수익사업 운영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역도경기장	www.ksponco.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6조	2012.07.27	출판문화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육성하고 출판문화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흥함으로써 국가 지식경쟁력 강화에 기여함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중동로 63	www.kpipa.or.kr
한국탄소산업진흥원 * 2022년 신규 지정 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2021.03.02.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육성·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탄소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에 이바지함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10-11	www.kcarbon.or.kr
한국투자공사	기획재정부	한국투자공사법	2005.07.01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의 운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여 금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0 스테이트타워 남산 17,18,19층	www.kic.kr
한국특허정보원 * 2022. 8. 4 일자로 법정법인화	특허청	발명진흥법 제20조의3	1995.07.07	산업계, 연구소, 학계 등에 국내·외 지식재산권 및 기술정보 등을 효율적으로 정보화하고 보급함으로써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술 발전에 기여함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37, 5층(둔산동, KDB빌딩)	www.kipi.or.kr
(부설) 특허정보진흥센터(251) * 2022. 8. 4 이전 기준	특허청	(부설기관:특허정보진흥센터) 한국특허정보원 정관 제35조	2011.07.15	산업계, 연구소, 학계 등에 국내·외 지식재산권 및 특허기술정보 등을 효율적으로 보급하고 조사·분석·제공하여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및 기술발전에 기여함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48번길 48(탄방동) 8층	www.pipc.or.kr
		(독립법인:한국특허기술진흥원) 민법 제32조	2022.08.04	지식재산 심사행정을 종합지원하고, 지식재산 활용·확산을 선도하여 국가 산업 기술 경쟁력 제고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		www.kipro.or.kr

251) 한국특허정보원 부설기관인 특허정보진흥센터는 2022년 8월 4일자로 「민법」상 재단법인 형태의 독립법인(한국특허기술진흥원)으로 전환하여 신규 출범함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75.12.24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으로서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및 이와 관련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그 성과를 보급함으로써 국가 경제발 전과 과학기술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67	www.kriss.re.kr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육부	민법 제32조	1978.06.30	한국문화의 심층연구와 교육을 통하여 한국학을 진흥하고, 나아가 미래 한국 의 좌표를 탐구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	www.aks.ac.kr
한국한의학진흥원	보건 복지부	한의학육성법 제13조	2019.06.12	한의학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과 한의 약 기술 개발 및 산업진흥을 통해 국 민 건강증진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	경상북도 경산시 화랑로 94 (갑제동)	www.nikom.or.kr
한국한의학연구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94.08.06	한의학 이론 및 기술, 한의의료행위 등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그 성과를 확산함으로써 관 련 산업의 육성 및 국민보건향상에 이 바지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672	www.kiom.re.kr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89.10.10	항공우주과학기술영역의 새로운 탐구, 기술선도, 개발 및 보급을 통하여 국 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기여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69-84	www.kari.re.kr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해양 수산부	항로표지법 제41조	2018.07.18	항로표지에 관한 기술개발 및 항로표 지 관련시설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함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13-9 다올비즈니스센터 601호~ 603호	www.katon.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 수산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2012.07.01	해양과 해양수산자원의 체계적 연구와 개발, 관리와 이용 및 해양분야 우수 전문인력 양성으로 국가해양과학기술 발전과 국제적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함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85	www.kiost.ac.kr
(부설) 극지연구소	해양 수산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4조 및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정관 제46조	2004.04.16	남·북극이 갖는 정치적·경제적 중요성 증대에 따른 극지활동의 확대와 국제 수준의 극지연구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26	www.kopri.re.kr
(부설)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해양 수산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4조 및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정관 제46조	2013.10.28	선박해양플랜트 분야 원천기술 개발, 응용 및 실용화 연구 등 종합연구역량 확보를 통하여 국가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국제 표준을 선도하는 창조적 연구를 수행하고자 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312번길 32	www.kriso.re.kr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무 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97.04.18	해양, 수산, 해운, 항만 및 그와 관련된 물류 산업의 발전과 이와 관련된 제부문의 과제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연구·개발하고, 각종 동향과 정보를 신속히 수집·분석하여 이를 널리 보급·활용하게 함으로써 국가발전 및 국민편익 증진에 이바지함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www.kmi.re.kr
한국해양조사협회	해양 수산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2006.01.31	해양조사에 관한 기술·제도의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해양에 관한 자료를 수집·제공을 위함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70, 1305호 (호서대벤처타워)	www.khra.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진흥공사법	2018.07.05	해운기업들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 해운산업의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우리나라의 해운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2로 38, 씨1동 7층(우동, 해운대아이파크)	www.kobc.or.kr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국토교통부	해외건설 촉진법 제28조의2	2018.06.08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사업 발굴, 개발, 금융지원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살기 좋은 지구촌 건설에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50층 (여의도동, Three IFC)	www.kindkorea.or.kr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2020.11.20.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수행하여 국가 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69-148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www.kfe.re.kr
한국행정연구원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91.09.27	행정체제의 발전과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관련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정책 수립과 행정 분야 발전에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	www.kipa.re.kr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89.03.16	범죄의 실태와 원인 및 그 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연구함으로써 국가의 형사정책수립과 범죄방지에 이바지하며, 법무분야에 대한 실증적·종합적인 분석·연구를 통해 법무정책의 수립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www.kicj.re.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화학연구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76.09.02	화학 및 관련 융·복합 기술분야의 연구개발과 공공인프라 서비스를 통해 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가·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41	www.kRICT.re.kr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화학연구원 정관 제32조의2	2002.01.01	화학·바이오 등 각종 물질에 대한 안전성평가연구, 관련 기술개발, 산학연 지원 등을 통한 국가산업 발전 및 국민보건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41	www.kITOX.re.kr
한국환경연구원	국무 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93.01.29	환경과 관련된 정책 및 기술의 연구개발과 환경영향평가의 전문성, 공정성 제고를 통하여 환경문제의 예방과 해결에 기여함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B동 8층~11층	www.kei.re.kr
한식진흥원	농림축산 식품부	한식진흥법 제16조	2010.03.10	한식, 식문화 및 한식산업의 진흥과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18	www.hansik.or.kr
한전MCS(주)	산업통상 자원부	상법	2019.03.25	한국전력공사가 위탁하는 전력서비스 사업을 영위함	전라남도 나주시 상야1길 7, 506호(빛가람동, 예가람타워)	www.kepcomcs.co.kr
한전원자력연료 주식회사	산업통상 자원부	상법	1982.11.11	고품질의 안전하고 경제적인 연료를 생산·공급함으로써 국가 에너지 자립에 이바지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989번길 242(덕진동)	www.knfc.co.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항공안전기술원	국토 교통부	항공안전기술원법	2013.04.19	항공안전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항공 사고 예방에 관한 인증·시험·연구·기술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하고 항공산업 발전에 이바지함	인천광역시 서구 로봇랜드로 155-11	www.kiast.or.kr
환경보전협회	환경부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	1978.10.06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교육·홍보 및 생태복원 등을 수행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유지시켜 국민생활 향상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320-2 YD빌딩 4, 6, 8층	www.epa.or.kr

부 록 3 「국가재정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 현황(2022년 기준, 68개)²⁵²⁾²⁵³⁾
① 사회보험성 기금(6개)

기금명	설치근거	설치연도	주무부처	관리방식	
				직접관리	위탁관리
고용보험기금	고용보험법 제78조	1995년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
공무원연금기금	공무원연금법 제76조	1960년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
국민연금기금	국민연금법 제101조	1988년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군인연금기금	군인연금법 제47조	1960년	국방부	국방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53조의2	1974년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	-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	2002년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

252) 기획재정부, 『2022 기금현황』, 2022. 7. 5.을 참고하여 작성

253) 밑줄 친 기금은 공공기관이 직접 또는 위탁관리 하는 기금으로 총 36개임

② 금융성 기금(8개)

기금명	설치근거	설치연도	주무부처	관리방식	
				직접관리	위탁관리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 제1조	1989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4조	1972년	금융위원회	농협중앙회	-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7조	1985년	금융위원회	-	한국은행
무역보험기금	무역보험법 제30조	1969년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보험공사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0조	1994년	기획재정부	신용보증기금	-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법 제1조	1976년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기금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3	2003년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5조 및 제59조의2	1987년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	-

③ 사업성 기금(49개)

기금명	설치근거	설치연도	주무부처	관리방식	
				직접관리	위탁관리
과학기술진흥기금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	1992년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한국연구재단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1972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
국민건강증진기금	국민건강증진법 제22조	1995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
국민체육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계정)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	1972년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
국민체육진흥기금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	1972년	문화체육관광부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	-	한국도박문제예방 치유원
국유재산관리기금	국유재산법 제26조의2	2011년	기획재정부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제교류기금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3조	1991년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	-
국제질병퇴치기금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제3조	2017년	외교부	-	한국국제협력단
군인복지기금	군인복지기금법 제1조	1996년	국방부	국방부	-
근로복지진흥기금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	1993년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
금강수계관리기금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2002년	환경부	금강수계관리위원회	-

기금명	설치근거	설치연도	주무부처	관리방식	
				직접관리	위탁관리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2002년	환경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
남북협력기금	남북협력기금법 제3조	1991년	통일부	-	한국수출입은행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4조	1966년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어업재해보험기금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1조	2005년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기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	농협경제지주
농지관리기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	1981년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어촌공사
대외경제협력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3조	1986년	기획재정부	-	한국수출입은행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	1973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문화재보호기금	문화재보호기금법 제3조	2010년	문화재청	문화재청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28조	2009년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4조	2000년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기금명	설치근거	설치연도	주무부처	관리방식	
				직접관리	위탁관리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3조	2011년	법무부	법무부	-
보훈기금	보훈기금법 제1조 및 제3조	1981년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공탁법 제28조	2016년	대법원	법원행정처	-
사학진흥기금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7조	1989년	교육부	한국사학진흥재단	-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 촉진기금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7조의2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석면피해구제기금	석면피해구제법 제24조	2011년	환경부	환경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2015년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수산발전기금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46조	1999년	해양수산부	-	수협중앙회 (수산발전기금 사무국)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7조	1967년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
양성평등기금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1996년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
언론진흥기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언론진흥재단	-
영산강·섬진강수계 관리기금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2002년	환경부	영산강섬진강수계 관리위원회	-

기금명	설치근거	설치연도	주무부처	관리방식	
				직접관리	위탁관리
영화발전기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2007년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	원자력진흥법 제17조	1996년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한국연구재단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원자력진흥법 제17조	2016년	원자력안전위원회	-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응급의료기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9조	1994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
임금채권보장기금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	1998년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9조의11	2017년	국토교통부	-	손해보험협회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 기금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2004년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수산물식품 유통공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68조	1991년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
전력산업기반기금	전기사업법 제48조	2001년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전력공사 (전력기금산업단)
정보통신진흥기금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41조	2005년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한국방송통신전파 진흥원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	1981년	국토교통부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명	설치근거	설치연도	주무부처	관리방식	
				직접관리	위탁관리
<u>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u>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	1978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
<u>지역신문발전기금</u>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13조	2004년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언론진흥재단
청소년육성기금	청소년기본법 제53조	1989년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
축산발전기금	축산법 제43조	1974년	농림축산식품부	-	농협경제지주 (축산발전기금사무국)
한강수계관리기금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1999년	환경부	한강수계관리위원회	-
<u>기후대응기금</u> (※2022년 신설 기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제69조	2022	기획재정부	-	한국환경공단

4 계정성 기금(5개)

기금명	설치근거	설치연도	주무부처	관리방식	
				직접관리	위탁관리
공공자금관리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	1994년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공적자금상환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3조	2003년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복권기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1조	2004년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양곡증권정리기금	양곡관리법 제25조	1994년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외국환평형기금	외국환거래법 제13조	1967년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부 록 4 2021년도 기관 경영실적 평가지표체계²⁵⁴⁾²⁵⁵⁾²⁵⁶⁾²⁵⁷⁾

① 공기업 유형의 지표 및 가중치

범주	평가지표	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55)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6	
	- 전략기획	2	2	
	- 경영개선	2	2	
	- 리더십	2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5	19	6
	- 일자리 창출	6	4	2
	-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4	3	1
	- 안전 및 환경	5	5	
	-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	2	3
	- 윤리경영	5	5	
	3. 업무효율	5		5
	4. 조직·인사·재무관리	7	4	3
	- 조직·인사 일반	2	2	
	(삶의 질 제고)			
	- 재무예산 운영·성과	5	2	3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1)
	5.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5	5.5	3
	- 보수 및 복리후생	3.5	3.5	
- 총인건비관리	3		3	
- 노사관계	2	2		
6. 혁신과 소통	3.5	2	1.5	
- 혁신노력 및 성과	2	2		
- 국민소통	1.5		1.5	
소 계	55	36.5	18.5	
주요사업 (45)	주요사업 계획·활동·성과를 종합평가	45	21	24
합 계		100	57.5	42.5

254) 기획재정부,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수정)』, 2021. 10.

255) 평가지표체계는 평가유형(공기업, 위탁집행형, 기금관리형, 강소형)에 따라 평가지표와 지표별 가중치가 다르게 구성

256) 「공운법」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이 아닌 기관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결측 처리

257) 기관별 협업·혁신·시민참여 우수사례의 성과반영은 2021년도에 선정된 과제의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그 성과가 우수한 기관은 최대 1점의 범위 내에서 점수를 차등가산하고, 우수 협조기관의 경우 기여도에 따라 차등가점을 부여(최대 0.3점)

②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상소형)의 지표 및 가중치

범주	평가지표	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45)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6	
	- 전략기획	2	2	
	- 경영개선	2	2	
	- 리더십	2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3	17	6
	- 일자리 창출	5	3	2
	-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	2	1
	- 안전 및 환경	5	5	
	-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	2	3
	- 윤리경영	5	5	
	3. 조직·인사·재무관리	4	3	1
	- 조직·인사 일반 (삶의 질 제고)	2	2	
	- 재무예산 운영·성과	2	1	1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5	5.5	3
	- 보수 및 복리후생	3.5	3.5	
	- 총인건비관리	3		3
	- 노사관계	2	2	
5. 혁신과 소통	3.5	2	1.5	
- 혁신노력 및 성과	2	2		
- 국민소통	1.5		1.5	
	소 계	45	33.5	11.5
주요사업 (55)	주요사업 계획·활동·성과를 종합평가	55	24	31
	합 계	100	57.5	42.5

③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의 지표 및 가중치²⁵⁸⁾

범주	평가지표	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50)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6	
	- 전략기획	2	2	
	- 경영개선	2	2	
	- 리더십	2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3	17	6
	- 일자리 창출	5	3	2
	-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	2	1
	- 안전 및 환경	5	5	
	-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	2	3
	- 윤리경영	5	5	
	3. 조직·인사·재무관리	9	3	6
	- 조직·인사 일반 (삶의 질 제고)	2	2	
	- 재무예산 운영·성과	2	1	1
	-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	5		5
	4.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5	5.5	3
	- 보수 및 복리후생	3.5	3.5	
	- 총인건비관리	3		3
- 노사관계	2	2		
5. 혁신과 소통	3.5	2	1.5	
- 혁신노력 및 성과	2	2		
- 국민소통	1.5		1.5	
소 계	50	33.5	16.5	
주요사업 (50)	주요사업 계획·활동·성과를 종합평가	50	24	26
합 계		100	57.5	42.5

258) 한국언론진흥재단은 평가유형은 강소형 유형이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므로 기금관리형 유형의 평가지표 체계를 적용

연구총괄

- 변민정 (공공기관연구센터 공공정책부 정책사업팀장)

분야별 집필진

- 강혜진 (공공기관연구센터 경영평가부 평가지원팀 연구원)
- 고승희 (공공기관연구센터 경영평가부 평가지원팀 연구원)
- 광원욱 (공공기관연구센터 경영평가부 평가연구팀 연구원)
- 서은혜 (공공기관연구센터 공공정책부 공공정책2팀 연구원)
- 선혜경 (공공기관연구센터 공공정책부 정책사업팀 연구원)
- 송경호 (공공기관연구센터 공공정책부 정책사업팀 선임연구원)
- 양다연 (공공기관연구센터 경영평가부 경영컨설팅팀 연구원)
- 오윤미 (공공기관연구센터 공공정책부 정책사업팀 선임연구원)
- 유승현 (공공기관연구센터 공공정책부 정책사업팀 선임연구원)
- 이 슬 (공공기관연구센터 공공정책부 정책사업팀 선임연구원)
- 임미화 (공공기관연구센터 공공정책부 공공정책1팀 선임연구원)
- 정예슬 (공공기관연구센터 공공정책부 공공정책2팀 선임연구원)
- 최슬기 (공공기관연구센터 공공정책부 공공정책1팀 연구원)

문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044-414-2306)

이 보고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홈페이지
(<https://www.kipf.re.kr/soe/>)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2022 공공기관 현황편람

발행일 : 2022. 11.

발행처 : 기획재정부

(044) 215-551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044) 414-2306

인쇄 : 일지사(044-865-6971)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2022 공공기관 현황판람

